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사업 풀씨연구회 1기



목차

풀씨연구회 소개	3
환경교육교재연구회	5
지역생활환경운동연구팀	23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쏘아올린 탄소중립 공정전환 모임(난쏘공)	39
K-넷제로 수호단	47
보건정책 살펴보는 사람들의 모임(보살회)	55
문과문	67
글로벌 그린인프라 포레스트팀	109
7G	115
라틴아메리카 지속가능한개발 및 인권 연구회	121
그린워싱연구회	145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 커뮤니케이션(ESC)	161
전문성 향상을 위한<기상전문방송인 연구모임>	167
언론과환경포럼	177
E4P(Energy transition for Peace)	199
평화새싹	231

풀씨연구회 소개

1. 사업목적

- 환경·안전·보건 분야 소규모 연구모임 활성화
- 젊은 연구자들의 학술정보 교류와 연구 협동 기회 제공
- 사회적 난제에 대한 대안 논의 활성화

2. 지원개요

- 분야 : 환경, 안전, 보건 분야
- 대상 : 5인 이상의 연구자로 구성되어 연 6회 이상의 모임을 하는 소규모 연구모임
- 형태 : 발제비, 회의비 등 모임 경비 지원
- 예산 : 연구모임별 최대 300만 원(연간 최대 20개 팀 지원)
- 기간 : 2021.3.1. - 2021.11.30

3. 사업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지원접수	2.15(월)~2.21(일) 24:00	
사업설명회	2.4.(목) 14:00~16:00	온라인 진행
심사	2.22(월)~25(목)	
선정 결과발표	2.26(금)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오리엔테이션	3.4(목) 14:00~16:00	사업 및 교부정산 안내
연구모임 기간	3.1~11.30(총 9개월)	
연구보고회	11.16(화)	제3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12.2(목)까지	

4. 1기 풀씨연구회 명단

NO	연구모임명	주제
1	환경교육교재연구회	생태시민성을 기반으로 한 환경교육의 의미와 환경교재로의 구체화 가능성
2	지역생활환경운동연구팀	생활협동조합의 환경운동 연계 사례 연구와 향후 과제
3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아올린 탄소중립 공정전환 모임 (난쏘공)	탄소중립의 취약계층 포용과 공정 전환을 위한 과제
4	K-넷제로 수호단	넷제로(탄소중립)을 위한 조세 등 사회구조 개편 방안
5	보건정책 살펴보는 사람들의 모임 (보살회)	코로나19상황에서 사회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와 보건의로 정책 및 이행과의 연관성
6	문과문	문학과 문화 텍스트에서 환경, 안전, 보건과 몸의 서사 찾기
7	글로벌그린인프라포레스트팀 (Global Greeninfra For愛SDGs Team)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도시공원 등 그린인프라의 활용 전략
8	7G	아세안 5개국 환경·안전·보건 분야 ODA 사업 및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분석
9	라틴아메리카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권연구회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 개발과 인권
10	그린워싱연구회	그린워싱 사례 연구 및 가이드 라인
11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커뮤니케이션(ECS)	재생에너지 사례를 통한 환경 커뮤니케이션 분석
12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상전문방송인 연구모임〉	기상전문방송인이 만드는 〈기상캐스터 가이드라인〉
13	언론과 환경 포럼	환경, 보건 기사 전문성 제고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자들의 환경언론포럼
14	E4P (Energy transition for Peace)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현황 및 이슈 분석
15	평화새싹	한반도 환경협력 사례분석과 발전 방향

환경교육교재연구회

본 연구모임은 환경교육 교재 개발에 필요한 이론과 철학을 구상하고 교재 개발의 쟁점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환경교육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환경교육 교재 또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환경교육 교재는 ‘환경’이 교과로서의 역사가 짧아 공신력 있는 교재의 양이 적고 시대적 사안과 주제에 따라 단기간에 완료되는 교재 개발 프로젝트들이 수행되면서 교재가 구현하는 교육의 원리나 철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다. 본 연구회는 기존 교재화 연구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환경교육의 중요한 지향점 중 하나인 생태시민성의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교육 교재로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총 8회 연구모임 진행)

팀장 방윤영 서울 미아초(환경교육 전공)
팀원 문희수 경기 덕이중(환경교육 전공)
팀원 안새롬 서울 세검정초(환경교육 전공)
팀원 이다혜 서울 언주초(환경교육 전공)
팀원 정한나 경기 영덕초(환경교육 전공)

생태시민성 기반 환경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시론

1. 서론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시작된 환경교육은 이후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며 변화되어 왔다. 초기 환경교육에서는 당면한 환경문제를 자연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접근이 우세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문제들이 대두되고 환경인식이 분화됨에 따라 환경교육의 접근법과 주제, 초점 등이 다양해졌다(Sauvé, 2005). 이처럼 환경교육의 목적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변적이다.

환경교육이 수행되는 데에는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환경교육 교재 또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그런데 환경교육의 접근법과 주제, 초점 등이 무수히 다양하다면 환경교육 교재나 프로그램은 무엇에 기반하여 개발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환경교육 연구에서 진지하게 고민되지 않았다. 환경교육은 교과로서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 누적되어 온 교재 연구나 사례가 타 교과에 비해 많지 않고, 시대적 사안과 주제에 따라 단기간에 완료되는 교재 개발 프로젝트들이 수행되면서 교재가 구현하는 교육의 원리나 철학에 대한 논의는 다소 생략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적 과정을 위해 적절한 교재화 연구 및 교재 개발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질문의 답을 생태시민성(ecological citizenship)에서 찾고자 했다. 생태시민성은 환경교육 분야에서 꾸준히 주목받아 온 개념이다. 생태시민성은 그 개념 자체가 갖는 유용함뿐만 아니라, 그간 환경교육에서 학습자의 친환경 행동을 ‘어떤 방법’을 통해 이끌 것인지에 집중한 반면 친환경 행동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고가 부족하였기에 이를 보완할 이론적 자원으로도 주목받는다(김희경과 신지혜, 2012). 생태시민성은 행동의 이행뿐만 아니라 관계성의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생태시민성은 개인의 사적 실천 영역을 시민의 활동 영역으로 보며, 권리나 의무, 생태발자국의 영향이 국경을 초월함을 인식하고, 이를 개인의 이익이나 계약이 아닌 공동선이나 정의와 같은 가치와 덕성에 기반하여 지속해간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생태시민성의 특징은 실천의 이행에서 관계성의 이해로 나아가고자 하는 환경교육의 새로운 필요를 담아내기에 적절하다.

기존 환경교육 교재화 연구는 생물다양성(구나경, 2012), 에너지(천은주와 최돈형, 2008), 기후변화(김호범 외, 2015), 황사(천종숙 외, 2008)와 같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하거나, 환경소양(이성희 외, 2007; 남경희와 이성희, 2010; 장미정 외, 2018)이나 환경감수성(전수옥, 2004), 환경탐구(이두곤, 2006; 허진숙과 이두곤, 2008) 등을 목적하는 경우가 많아 생태시민성의 관점에서 진행된 교재화 연구는 드물다.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에 생태시민성을 접목하는 몇몇 시도에서도 생태시민성의 원리가 어떤 방식으로 교재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미흡하다. 생태시민성의 관점에서 환경교육의 교육 내용이 어떻게 설정될 수 있고 어떻게 교재로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접근법과 주제, 초점을 가진 환경교육이 적용할만한 관계성의 원리를 생태시민성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환경교육 교재 연구에서 생태시민성에 기반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할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이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시민성을 기반으로 한 환경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둘째, 생태시민성의 관점에서 구성된 환경교육 내용은 어떻게 교재로 구현될 수 있는가? 설정 가능한 환경교육 내용과, 이를 교재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질문을 구체화하고 그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생태시민성에 기반한 환경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생태시민성과 환경교육, 그리고 환경교육 교재

1. 생태시민성

환경교육에서 시민 참여와 시민 육성은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으나, 시민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되어 왔다. 환경 관련 이슈나 쟁점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던 시기에는 책임있는 환경행동(Hungerford & Volk, 1990)과 같은 시민적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차츰 개별 환경문제 해결을 넘어 그 문제를 야기한 사회구조적인 측면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환경문제의 성격 자체가 기존의 국가와 영토 경계를 넘어 전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하며 시민의 개념 역시 보다 확장되어가고 있다.

생태시민성은 오늘날 요구되고 있는 이러한 시민의 개념을 적절히 담아내고 있다. Dobson(2003)은 시민성의 개념에 환경문제를 담아내기 위해 전통적인 시민의 개념을 넘어서는 후기세계시민주의 시민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생태시민성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그에 따르면 생태시민성은 첫째, 시민의 이익을 전제하는 계약적인 성격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한 비호혜적 성격의 의무와 책임, 둘째, 공간적·시간적으로 지속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생태발자국을 고려하는 비영토성, 셋째, 시민성의 활동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활동이 공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적 영역 중시, 넷째, 생태시민성의 동기로 작용하는 정의, 배려 등의 덕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진다. 박순열(2010a)은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인간 뿐 아니라 비인간생물종을 포함한 생태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김병연(2011)은 생태시민성의 특징이 상호연계성과 상호의존성과 같은 관계성에 기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시민성의 특성은 환경교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생태적 사고를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의 개념을 구현해내기 위해 적절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시민성과 생태적 사고를 연계하려는 노력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생태시민성(ecological citizenship; Smith, 1998; Dobson, 2006), 지속가능성 시민성(sustainability citizenship; Barry, 2006), 녹색 시민성(green citizenship; Dean, 2001), 환경 시민성(environmental citizenship; Dobson, 2007) 등의 개념을 발달시켰다(김찬국, 2013). 그 중에서도 생태시민성 개념은 환경사회학 및 교육학 연구자들에 의해 국내에 적극적으로 소개되었고(박순열, 2010a; 김병연, 2011; 심광택, 2012; 김소영과 남상준, 2012) 이후 한국 생태시민성 유형이나 특성을 탐색하는 등 한국적 맥락의 논의까지 이어졌다(박순열, 2010b; 김희경, 2018).

2. 환경교육에서의 생태시민성 논의

생태시민성 개념을 접목한 환경교육 연구는 한편으로는 생태적 삶이나 생태 운동에서 생태시민의 학습을 조명하려는 시도로(김희경, 2012; 조미성과 윤순진, 2016; 방윤영, 2019),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주제 및 프로그램에 생태시민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하거나 개발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김희경과 신지혜, 2012; 김정화, 2015; 백지혜, 2015; 박우용, 2020). 전자의 경우 시민들의 일상적 삶에서 생태시민성 형성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후자는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실천에서 생태시민성의 구현을 고민함으로써 환경학습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에 두 연구 흐름은 생태시민성에 기반한 환경교육 연구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교육 교재에 생태시민성을 접목하는 시도에 있어 생태시민성의 원리가 어떤 방식으로 교재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미흡한 실정이다. 중등 환경 교과서에 생태시민성 요소가 적용된 정도를 파악한 연구(김희경과 신지혜, 2012), 공정여행·무역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학습자의 생태시민성 요소별 증진 효과를 확인한 연구(백지혜, 2015), 생태시민성을 환경교육에 적용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생태발자국’의 활용을 제안한 연구(김정화, 2015),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이 생태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박우용, 2020) 등 일련의 연구들은 생태시민성에 기초한 환경교육 교재의 구성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 유형, 학교급 간, 학습자 간 차이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지극히 제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생태시민성이라는 관점이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어떤 쟁점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¹⁾

한편, 김희경과 신지혜(2012)는 고등학교 ‘환경과 녹색성장’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생태시민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생태시민성 교육에 대한 인식과 당위성이 교육과정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교과서에는 생태시민성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채 내용 요소가 나열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생태시민성 기반의 교재 연구에 있어서 생태시민성의 특성 및 전체적인 지향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생태시민성 기반 환경교육 교재 개발 연구

교재 개발 연구 또는 교재화(教材化) 연구는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아이디어, 내용, 방법 등을 탐구·선정하고 가치있다고 여겨지는 교육 철학에 근거해 교재 즉, 교육 자료를 구성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다. 허진숙과 이두곤(2008)은 교재화 연구를 “교육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나 소재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적인 관점으로 탐구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 모형을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교재화 연구에서는 특정 개념이나 소재를 선택한 후 교육내용을 탐구하고 체계화하는 방식 외에도 다양하게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식을 정교화할 수 있다. 또한 교재화 연구에는 교육내용만이 아니라 교육방법, 교육철학 등을 발전시키는 작업이 포함되며, 교재화 이론이나 모형을 고안하는 것과 같은 이론적 작업뿐만 구체적인 사례를 개발하는 실천적인 작업도 포괄한다.

교재화 연구는 여타 교육 연구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라 교육 연구 및 실천과 공진화하는 연구 영역이다. 예컨대 환경교육계에서 다루어진 다종다양한 논쟁들, 즉 환경교육의 목표와 전략, 환경교육에서 다루는 환경의 범주와 개념, 합리주의/낭만주의 철학, 환경에 대한(about)/환경 안에서(in)/환경을 위한(for) 교육 등의 논쟁들(Robottom & Hart, 1993; Sauv , 2005; 이재영, 2012)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연구에서부터 교실 수준에서 교사가 재구성하는 교육 실천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스며들어 교과서를 포함한 각종 교육 자료를 고안하는 작업에 반영된다. 다른 한편으로 환경교육 교재화 연구와 실천이 만들어내는 일련의 흐름은 하나의 교육 패러다임을 형성하기도 한다.

환경교육 교재화 연구 중 생태시민성에 기반한 연구로는 백지혜(2015)의 연구와 박우용(2020)의 연구 등이 있다. 백지혜의 연구는 중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공정무역과 공정여행에 관한 책읽기, 공정여행 체험하기, 공정여행 프로젝트 활동의 단계적 과정을 실시한 후, 학생들이 각 과정을 어떠한 경험과 의미로 받아들이는가를

1) 예컨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민주주의 교육으로 곧바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복잡다단한 역사와 다양한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교육을 구성, 조직하기 위해 어떤 의미로든 개념적 조정이 불가피하다. 개념적 조정이 불가피하기에 그 개념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이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무엇으로 보면서 교육내용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선별적 논의가 요구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세심하게 다루는 작업도 필요하게 된다.

Dobson이 제시한 생태시민성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공정여행에 관한 과정별 생태시민성 함양의 가능성과 특징을 탐색하고자 한 것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시민성의 형성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일상적 소비 장소인 동네에서 실행한 결과 형성된 생태시민성이 사적영역에서 의식과 실천의 변화를 지속하고 확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우용의 연구는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하여 활동 전과 후의 생태시민성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것으로, 고등학생이 생태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인 ‘지식과 이해’, ‘책임’, ‘정의’, ‘지속가능성’, ‘참여’ 중 일부 영역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생태시민성에 기반하여 환경교육이 구체적으로 구현될 가능성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생태시민성과 교재(혹은 교육 프로그램)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적극적으로 조명하고 있지 않으며 생태시민성의 교재화(혹은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고 있다.

한편, 김희경과 신지혜(2012)는 고등학교 ‘환경과 녹색성장’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생태시민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교재화 연구는 아니지만 교재 분석 기준을 일반적인 내용 체계가 아닌 생태시민성이라는 특정한 관점에 두었으며 생태시민성을 토대로 한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교재화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얻기에 유용하다. 2009년 개정된 고등학교 ‘환경과 녹색성장’의 교육과정과 인정 교과서 4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태시민성 교육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과는 달리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생태시민성의 기본 개념을 골고루 다루지 못하고 있고, 생태시민성의 요소들을 단순 나열하거나 파편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이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생태시민성에서 요구되는 가치에 있어서 교과서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정리해보면, 교과서에는 생태시민성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채 내용 요소 나열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특정 요소에 치우치거나 혹은 누락되어 있었으며 이는 생태시민성 교육의 지향점을 제대로 실행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교재화 연구 분석에서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표의 중점과 실제 교재에서의 중점이 일치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태시민성의 적용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태시민성 기반의 교재화 연구에 있어서 생태시민성의 특성 및 전체적인 지향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구성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III. 연구 방법과 과정

이 연구는 생태시민성에 기반한 환경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교재화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²⁾ 이 연구에서는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 요구되는 교육내용 선정과 그 교육내용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선정된 교육내용을 교재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매개체로서 핵심질문에 대해 논의한다. 이 핵심질문이 교재로 구현되기까지는 교재의 종류와 형식, 교재 활용의 시공간적 맥락, 학습자의 수준, 교재에 활용 가능한 사건, 사례, 소재, 발문의 구성과 배치 등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나 이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

첫 번째 연구질문인 ‘생태시민성을 기반으로 한 환경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구되어 온 생태시민성 개념(Dobson, 2003; 2006)에서 교육내용을 도출하고 그 교육내용의 가치를 ‘내용 모형’(이흥우, 2010)에 기대어 논의하였다. 두 번째 연구질문인 ‘생태시민성의 관점에서 구성된 환경교육 내

2) 교재화 연구는 교재를 고안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철학,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여 교재 개발에 직접적인 함의를 주는 작업, 실제 고안된 교재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추후 교재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 교재를 고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작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용이 어떻게 교재로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교육내용과 교재의 매개체로서 '핵심질문'(Wiggins & McTighe, 2005)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핵심질문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대기(오염), 쓰레기, 에너지,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한 교육에서 고안하고, 이러한 핵심질문들이 생태시민성을 기반으로 한 환경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에서 학교 환경교육용 교재로 발간해 '환경일기장'의 개발·연구진의 일부가 별도의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생태시민성에 근거한 환경교육 교재화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수행된 연구 또한 하나의 학급 또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연구로 이루어져 생태시민성을 기반으로 한 환경교육 교재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부재했다. 따라서 교재 개발·연구진은 교재를 개발하는 동시에 이론적 토대를 논의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이 연구 결과는 개발된 교재에도 반영되었다. 이후 교재를 3년에 걸쳐 개정하면서 이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이 연구의 결과 중 핵심질문 사례들은 2021년 '환경일기장'의 초등학교 고학년용에 활용된 핵심질문의 일부를 재검토하고 수정한 것이다.

IV. 생태시민성 기반 환경교육의 내용과 구현

1. 교육내용 및 교육내용의 가치

생태시민성 기반 환경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을 교육내용으로 삼을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생태시민성 기반 환경교육이 학습자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를 명료화해야 한다. 생태시민성에 기반하여 환경교육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생태시민의 안목이라 할 수 있다. 이 생태시민의 안목은 무수한 현실과 현상들 속에서 생태적 관계를 바라보고 그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다.

생태시민의 안목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생태시민의 특징을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다. 비영역성, 성찰성, 공동체성 등이 그것이다. 먼저, 비영역성은 시간적·공간적 비영역성 뿐 아니라 비인간 생물종·자연과 같은 대상에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생태시민성 기반 환경교육 내용으로서의 비영역성은 나와 가족, 주변의 이웃을 비롯하여 나아가 지구적 수준에서의 이웃,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비인간 생물종, 자연 등으로 고려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비영역적인 관계와 영향의 범위는 특정한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호혜적인 책무를 갖게 된다.

다음으로 성찰성은 자신의 관계적 네트워크나 일상적 결정을 확인하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의 구조적 측면을 보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안목을 뜻한다. 성찰성에 대해 김병연(2011)은 지구상의 수많은 사건의 관계적 네트워크 속에서 학습자 주체의 위치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일상적 결정과 행위를 모니터하고 제한하는 것, 김찬국(2013)은 문제의 이면에 있는 현재의 체제에 대한 성찰적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강조점이 모두 포함된 성찰성을 교육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성은 스스로를 개별 시민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김희경(2018)이 우리나라 생태시민성의 특성 탐색을 위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생태시민은 관계를 중시하고 이에 기반한 공동체에 높은 가치를 두는 '공동체 내 시민'이라고 하였듯이, 생태시민성이라는 지향점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의 내용에서는 기존의 생태시민성에 논의되어 온 개별 시민의 성장에서 한 발 나아가 공동체성에 기반한 가치관 형성 및 삶의 지속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생태시민성 개념에서 보완할 점으로 지

적되어온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실천을 넘어 사회적 참여로 (Kennedy, 2011; 조미성과 윤순진, 2016) 실천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비영역적, 성찰적, 공동체적 안목을 환경교육에서 ‘왜’ 구현해야 하는가? 이는 교육 목표에 대한 질문인데, 이 연구에서는 ‘목표 모형’ 대신 ‘내용 모형’(이홍우, 2010)를 따라 교육 목표를 교육내용의 가치라고 보면서 이 질문에 답한다.

사실 많은 교육 논의에서는 교육 활동 이후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설정한다. 국내 환경교육 교재 연구에서도 그 영향력을 지속하고 있는 교육목표 분류는 Tyler(1949)와 Bloom et al(1956) 등을 거치며 발전해온 이른바 ‘목표 모형’(이홍우, 2010)에 근거한다. 교육계에서 고전적인 교육과정 모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목표 모형’은 교육과정이 ①교육목표의 설정 → ②교육내용의 선정 및 조직 → ③교수·학습 → ④평가로 구성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모형이다. 여기서 교육목표는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사고, 감정, 행동 등의 변화로서 평가의 대상이기에 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육목표를 상세화하고 분류,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이홍우, 2010; 김정래, 2016). Bloom et al(1956)의 『교육목표 분류학』은 교육에서 의도된 학습자의 사고, 감정, 행동 변화가 평가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분류·진술한 작업이었으며, 이후 개선된 신(新) 교육목표분류학(Anderson & Krathwohl, 2001) 또한 ‘목표 모형’의 철학을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다.

‘목표 모형’은 확인 가능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목표를 진술하며 이는 평가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지만, 반면 교육 결과로 관찰·평가될 수 있는 학습자의 변화에 집중함으로써 목표의 분리와 단절이 발생하고,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및 교수·학습과 같은 교재의 다른 측면들이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만 취급되는 한계를 가진다.

‘목표 모형’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환경교육 교재화 연구는 ‘목표 모형’의 한계를 내재한다. 첫째, 교육 결과로 관찰·평가될 수 있는 학습자의 변화가 교육목표로 설정됨으로써 갖는 한계다. 평가를 염두에 두고 분류된 인지, 태도·가치, 기능, 참여 등의 목표를 통해 실제로는 분리되기 힘들고 늘상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분리시켜 각 목표 영역에 배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감정과 태도는 매우 복잡한 인지 과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Goodwin et al., 2001) 환경감수성이나 환경태도 등은 인지적 목표와는 별도의 목표로 취급될 수 있다. 또 중첩되거나 상호전제하는 목표 영역들에 대하여, 한 영역의 강조가 다른 영역에 대한 소홀함을 의미한다는 제로섬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교육목표 분류학에 입각한 환경교육 교재 분석 연구들은 대체로 목표의 편중을 지적하고 목표 간 균형을 주장한다(강혜진, 2009; 전재원과 남상준; 2018). 둘째, 교재화의 중심에 교육목표가 위치하면서 다른 측면들(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및 교수·학습)은 선결정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취급되는 한계다. ‘목표 모형’에서 교육내용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당화되기 때문에 선정된 교육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교육적으로 가치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생략되기 쉽다. 가령 황사를 주제로 한 환경교육 교재화 연구에서 황사의 발생원인, 황사 속 유해 물질, 황사의 영향, 황사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교육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은 ‘황사에 대하여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었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천중숙 외, 2008). 이는 황사의 발생원인, 황사 속 유해 물질, 황사의 영향, 황사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이 교육내용으로서 가치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와 같은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치로운 것으로 고려되었는지가 생략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이 교육목표에 준거하는 것 이상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태시민’이 특정한(혹은 합의 가능한) 기준이나 단계,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이홍우(2010)가 제시한 ‘내용 모형’을 참고할 수 있다. ‘내용 모형’에서 교육목표란 학습자가 도달할 수 있는 특정한 상태가 아니라 교육 내용의 가치를 뜻한다. 즉, 교육을 통해 도달 가능한 종착지가 아니라 교육 내용이 가지는 가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내용 모형’에 근거하여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교육 내용이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잠정적 답한다는 의미다. 생태시민성에 기반한 환경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생태시민성 기반 환경교육이 어떤 점에서 가치로운가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생태시민성 기반 환경교육의 내용으로 설정한 비영역적, 성찰적, 공동체적 안목은 교육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가?

전지구적인 생태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민이 요구되며 생태시민성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비영역성, 성찰성, 공동체성 등 생태시민의 안목을 기르는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적 가치(혹은 외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조명될 가능성이 있다. 외재적 가치에 집중한 환경교육은 환경교육 스스로가 갖는 가치, 즉 내재적 가치를 간과하기 쉽고 문제해결적 측면을 담지하는 절차적 지식 및 실천의 강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이두곤, 2006; 양영희와 이두곤, 2013), 생태시민성 기반 환경교육 또한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으로 오롯이 가치지워지는 것은 위험하다. 생태시민의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의 가치는 특정 환경 이슈나 생태 위기 현상에 대응하는 문제해결적 측면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경교육의 외재적 가치보다 내재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환경교육을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는 위치로 위치시키는 것 또한 위험하다. 교육은 사회를 직조하는 여러 사회적 과정 중 하나이며, 교육만의 특정한 원리와 기능도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기 때문이다(한승희, 2019). 따라서 생태시민성 기반 환경교육의 가치는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로 분리하며 논의하기보다는, 즉 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외재적 가치와 그 반대항으로서 학습의 고유한 가치를 독립시키기보다는, 환경문제와 함께 살아가는(living with) 학습자의 삶의 맥락에서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경험과 성장, 좋은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교육의 가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생태시민성 기반 환경교육은 현재의 생태위기를 중요한 맥락으로 삼는 교육이며, 생태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사회를 구성해내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다. 그러나 생태위기의 해소 여부가 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교육의 유일한 가치도 아니다.

비영역적, 성찰적, 공동체적 안목이 갖는 교육적 가치는 학습자가 볼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비영역적, 성찰적, 공동체적 안목을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는 나와 가족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것을 물론, 비인간 생물종, 자연 등 비인간 존재로 범위를 확장하여 환경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그림 1). 이는 구체적인 행동 지표 설정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상적 인식과 실천 속에서 구현되고 재구성되며 성장해가는 것이다. 즉 이는 단순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도구적인 측면에서의 적용도 아니며, 생태적이고 확장적인 사고에 기반하여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전체적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해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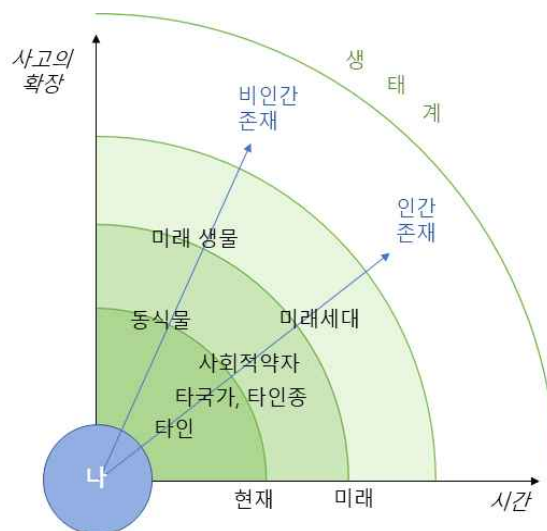


그림 1. 생태시민성에 기반한 안목의 확장

2. 교육내용의 구현

추상화된 교육내용을 교재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매개가 필요하다. 핵심질문, 개념, 명제 등이 이 매개에 해당한다. 예컨대 비영역성을 교육내용으로 삼는다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비영역성의 뜻을 알고 이해하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영역적인 안목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끔 교육한다는 것이다. 영역을 가로지르는 사고 및 윤리를 요하는 질문들이나 영역성을 탈피한 개념들(예를 들어, 생태계, 가상수(virtual water; Allan, 2012), 친족(kinship; Haraway, 2015) 등)은 학습자가 비영역적인 안목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내용을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듯이, 교육내용과 교재의 매개 또한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다. 핵심개념을 교재 주제로 삼을 것인지, 핵심질문을 통해 교육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 핵심명제를 도출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교재를 구성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다. 핵심질문, 개념, 명제 등은 교육내용을 담아내고, 교육내용을 구체화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릇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내용을 교재에 구현하는 도구로서 핵심질문을 택했다. 핵심질문이란, 교과나 교육과정의 중심에 놓이거나 교과의 탐구와 심층적 학습을 촉진시키는 질문으로 학생들의 사고와 탐구를 자극하며 더 많은 질문을 이끌어내서 학습자들이 탐구하게 해주는 출입구로 작용하는 질문이다(강현석과 이지은, 2016: 93).³⁾ 이는 교육현장 또는 학습상황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발문(發問)과 달리, 교육내용 혹은 교육활동의 가치를 담아내는, 교육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질문이다(강현석과 이지은, 2016: 92). 적절한 핵심질문을 통해 구성된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탐구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사고하게 하기에(서은정, 2018: 248) 교육내용을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는 핵심질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핵심질문의 개발은 핵심개념이나 명제를 고안하는 작업에 비해(허진숙과 이두곤, 2008; 장미정 외, 2018) 진행된 바가 거의 없다. 아래에서는 생태시민성 기반 환경교육의 내용으로서 비영역성, 성찰성, 공동체성 등을 교재로 구현하기 위해 어떤 핵심질문이 개발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대기(오염) 주제 교육에서 가능한 핵심질문

[대기오염 주제]

- 대기오염이 심할 때 나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야외 활동이 많은 직업군 또는 대기오염에 취약한 사람 또는 동물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겠는가?
- 어떻게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면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겠는가?

[미세먼지 주제]

-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소, 공장이 많아지면 미세먼지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미세먼지와 화석연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소, 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은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 발전소, 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의 입장은 어떠하겠는가?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공동의 규칙(정책, 법, 규범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3) 강현석과 이지은(2016)은 핵심질문을 본질적 질문으로 표기하고 있고, 서은정(2018), 주세형과 남가영(2019) 등은 핵심질문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Wiggins와 McTighe(2005)가 제시하는 essential questions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맥락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의미상 구분을 두지는 않으나 이 연구에서는 핵심질문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표기한다.

대기 또는 대기오염을 주제로 한 교육에서는 대기오염이 심할 때 나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할지, 야외 활동이 많은 직업군 또는 대기오염에 취약한 사람과 동물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지 등이 핵심질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고려할 대상을 ‘나’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이 많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 ‘대기오염에 취약한 사람 및 동물’까지 확장함으로써 비영역적으로 대기오염을 사고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다. 또 대기오염의 영향을 일반화, 추상화시키는 대신 대기오염에 대해 서로 다르게 영향받는 서로 다른 집단들을 구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며, 대기오염의 영향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생태적, 사회적 구조에 대한 성찰을 도울 수 있다.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고려할 대상을 확장하여 사고해 보고,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다양한 사람 및 동물들이 놓여있는 사회적, 생태적 구조를 성찰하게끔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주제다. 2013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후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미세먼지 교육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면서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교재들(영상, 책자 등)이 고안된 바 있다(교육부 외, 2019; 환경부, 2019). 이 교재들은 대체로 미세먼지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미세먼지의 정의),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미세먼지의 발생원), 미세먼지로 인해 인간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건강·보건학적 영향), 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비영역성, 성찰성, 공동체성 등을 교육내용으로 삼는다면,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교육에서 가능한 핵심질문은 미세먼지의 정의, 발생원, 건강·보건학적 영향과 대응으로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소, 공장, 자동차가 많아지면 미세먼지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처럼 미세먼지와 화석연료의 관계를 묻는 질문은 발전소, 공장, 자동차 등을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초국적·초지역적 시스템의 일부로 바라보게끔 돕는다. 나아가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소, 공장 주변의 주민은 어떤 피해를 입겠는지, 그 주민의 입장은 어떠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은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고려할 대상을 구체화시키고, 다른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다른 존재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이끄는 데에 초점이 있다.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민 ‘개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 질문에 비해, 다양한 입장과 상황을 가진 사람들과 비인간 생물종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무엇을 고려하며 어떻게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을지 묻는 질문은 그 초점을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동시킬 수 있다. 공동체 내의 다양한 입장과 상황을 가진 사람들과 비인간 생물종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다른 지역 주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거나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 동물들의 하루를 생각해보는 등 다른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질문과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 필요한 공동의 규칙(예컨대 정책, 법, 규범 등)이 무엇일지, 어떻게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며 대기오염을 줄여갈 수 있을지 등을 질문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핵심질문이 될 수 있다.

나. 쓰레기 주제 교육에서 가능한 핵심질문

[쓰레기 배출·처리 주제]

-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지역과 다량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역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 쓰레기 수출 국가와 쓰레기 수입 국가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바다 쓰레기 주제]

- 바다 동물과 미래 사람들은 바다 쓰레기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 바다 쓰레기로 인해 영향 받는

바다 동물과 미래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하겠는가?

쓰레기 주제 교육에서 가능한 핵심질문은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지역과 다량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역이 구분되는 문제, 국가 간 쓰레기 수출입 문제에 대한 질문이다. 쓰레기 주제 교육에서는 미래세대 측면에서 비영역성을 구현할 수 있다. 현재 쓰레기 수출입으로 피해를 보는 국가의 국민이나 해양 동물에서 나아가 미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함으로써 시공간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 배출로 인한 집단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사회적 구조에 대한 성찰을 유도할 수 있다. 쓰레기 문제로 피해를 주는 집단과 피해를 받는 집단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 사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또는 국가 간 문제에 대하여 사고하게끔 함으로써 ‘공동체성’을 구현할 수 있다. 쓰레기 문제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문제임을 명시함으로써 초점을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에너지 주제 교육에서 가능한 핵심질문

[에너지 생산 주제]

- 석탄화력발전에 대하여 발전소 인근 주민 및 미래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하겠는가?
- 핵발전에 대하여 발전소 인근 주민 및 미래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하겠는가?

[에너지 이동 주제]

-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 소비하는 양보다 전기를 적게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전기를 어떻게 얻겠는가?
- 에너지를 소비량보다 적게 생산하는 지역, 에너지를 소비량보다 많이 생산해야 하는 지역, 고압 송전탑을 세워야 하는 지역 등의 입장은 어떠하겠는가?

에너지 생산을 다루는 교육에서는 기존 에너지 생산 방식이 발전소 인근 주민이나 미래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들의 입장은 어떨지 등이 핵심질문이 될 수 있다. 에너지를 주제로 한 교육은 대개 에너지의 의미를 알고,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의 유한성(희소성)과 고갈 가능성을 이해하고, 에너지 생산 시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이 발생하며 따라서 대체 에너지원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왔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가환경교육센터, 2019). 이에 비해, 석탄화력발전과 핵발전에 대하여 발전소 인근 주민 및 미래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은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고려할 대상의 범위를 지역 주민, 미래세대 등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걱정 없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에 주로 관심을 갖는 에너지 ‘관리’ 관점에서, 에너지 생산 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에너지 ‘정의’ 관점으로 초점을 이동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핵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에너지 생산의 문제가 현세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현재’의 에너지 수요 및 에너지 이용 효율성에 초점을 둔 질문들로 에너지 교육을 구성한다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어떤 에너지 생산 방법을 다루더라도 현재의 에너지 관련 상황이나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자만을 고려하기 쉬우므로 시공간적으로 영역성에 갇힐 수 있다. 이에 현세대를 넘어 미래의 존재들까지 고려의 대상을 확장하는, 시간적 비영역성을 구현할 수 있는 질문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고려는 현재의 내가 미래의 누군가와 특정한 사회적 계약 관계를 맺기 때문이 아니라 비호혜적인 책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비영역적 윤리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중요하다. 석탄화력발전과 핵발전의 부산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은 그 예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이동을 다루는 교육에서 가능한 핵심질문은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소비하는 양보다 전기를 적게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전기를 어떻게 얻겠는지 등이다. 이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을 탐구하거나 환경오염 없이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고민하기보다는, 생산된 에너지가 이동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한다. 즉,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 집중된 대규모 발전소에서 대량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고압송전탑을 통해 대도시로 공급하는 구조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에너지를 소비량보다 적게 생산하는 지역, 에너지를 소비량보다 많이 생산해야 하는 지역, 에너지 이동을 위한 지역(고압 송전탑을 세워야 하는 지역 등) 각각의 입장을 가능하게 하는 질문도 가능하다. 이 질문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환경 쟁점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정하고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정당화하는 (찬반)토론에서 구현하려는 것과 다를 수 있다. 고려의 대상을 확장하면서 다양한 상황과 입장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것에 무게를 둔 질문이기 때문이다.⁴⁾ 시민 개개인에서 나아가 공동체 내 시민으로서 현상을 바라보게끔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라. 먹거리 주제 교육에서 가능한 핵심질문

[먹거리 생산·이동 주제]

- 먹거리의 생산과 이동 과정에서 어떻게 폐기물이 발생하는가?
- 먹거리의 생산과 이동 과정에서 어떻게 생태발자국이 발생하는가?

먹거리 주제 교육에서 가능한 핵심질문은 먹거리의 생산과 이동에서 어떻게 폐기물 또는 생태발자국이 발생하는가이다. 이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이 특정 시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비영역성을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비영역적 사고가 대기오염과 같은 명시적인 월경성 문제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먹거리가 생산·이동되는 과정에서 무수한 공간들을 가로질러 관계가 형성됨을 드러냄으로써 사고의 비영역적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마. 기후(변화) 주제 교육에서 가능한 핵심질문

[이상기후 주제]

- 이상기후 현상(폭염, 한파 등)이 발생하면 이상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거나 이상기후에 취약한 사람 또는 동물은 누구인가? 이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겠는가?

4) 2015개정 중학교 환경 교육과정에서 에너지 주제 교육의 성취기준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핵발전, 고압송전탑 등 우리나라 에너지 이용에 관한 쟁점을 조사하고 토론한다’이다. 에너지 관리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환경 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다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핵심질문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토론 교육을 통해 어떤 교육내용을 구현하고자 하는냐에 따라 교육의 의미와 가치는 상이할 수 있다. 예컨대 환경쟁점에 대한 토론이 생태적 효율성, 합리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비영역성과 성찰성, 공동체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기후난민 주제]

- 기후난민은 어떤 문제를 겪는가? 기후변화로 인해 집이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겠는가?
- 특정 지역이나 국가는 왜 기후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기후 또는 기후변화 주제 교육에서는 이상기후, 기후난민을 주제로 한 교육이 가능하다. 이상기후를 주제로 한 교육에서는 이상기후 현상(폭염, 한파 등)이 발생할 때 이상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거나 이상기후에 취약한 사람 또는 동물은 누구인지,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겠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다. 많은 기후변화 교육 및 교육 연구에서 기후변화의 현상, 원인, 영향, 대응 방안 등을 교육내용으로 채택해 왔던 것과 달리(권주연과 문윤섭, 2009; 김미란과 김찬국, 2014; 박종근외, 2010) 이러한 질문은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나 생존에 큰 영향을 받는 대상(비인간 생물종, 기후 취약계층, 기후난민, 미래세대 등)이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고려할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비영역성을, 불균등하게 영향받게 되는 사회적, 생태적 구조를 검토하게 함으로써 성찰성을 구현한다.

또 기후난민을 주제로 하는 교육에서는 기후난민은 누구이며 어떤 문제를 겪는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기후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후난민의 입장은 어떠할지 등이 핵심질문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거주지, 직업, 생계 등에서 큰 변화를 겪고 이주를 해야 하는 난민은 시공간과 종(種)을 가로지르며 발생한다. 이들을 고려함으로써 비영역성을 구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들과 무관하지 않은 나의 위치, 기후난민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생태적 구조, 나아가 기후난민 수용을 둘러싼 갈등 구조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성찰성을 구현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환경교육이 행동의 이행에서 관계성의 이해로 나아가는 데에 생태시민성 개념이 유용하다고 보고 생태시민성 기반 환경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생태시민성 기반 환경교육은 생태적 관계를 바라보고 그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른다는 교육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안목은 비영역성, 성찰성, 공동체성이라는 세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를 구현하는 핵심질문을 고안하여 환경교육 교재로 구체화할 가능성을 탐색했다.

생태시민성은 전지구적인 생태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며 생태성을 회복해가려는 새로운 유형의 시민(박순열, 2010; 김병연, 2011)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생태시민성이 환경교육에 있어서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조명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생태적 사고를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이 된다는 것은 특정 환경 이슈나 생태 위기 현상에 대응하는 문제해결적 측면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으며, 생태시민성 교육 자체에 담지된 교육적 가치를 통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생태시민성을 기반으로 무엇을 했거나 안 했는가가 아니라 생태시민의 안목을 갖추어가는 과정에서의 학습자의 성장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태시민성 교육을 통해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실천과 사고방식 속에서 장소, 시간, 대상을 초월한 확장성을 경험하고 자신의 일상을 비롯하여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는 ‘성장’의 발걸음을 떼었다면 생태시민성 교육은 충분히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육활동의 문제해결적 가치를 경시하고자 함이 아니며, 그간 환경교육의 흐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조명되어 온 문제해결적 성격을 넘어서 환경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확장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생태시민성 교육에 있어서 기존의 문제해결적 가치를 넘어 생태시민성 자체의 교육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교재화 연구는 환경교육에서 ‘새로운 유형의 시

민'에 대한 논의인 생태시민성 연구에 걸맞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생태시민성의 개념적 한계 및 관련 논의의 쟁점이 상당 부분 생략된 채 교재를 개발하고 연구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첫째, 미래세대로의 확장의 경우 미래세대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미래세대를 불특정한 다수로서 인식하는 것과 구체적인 실체로서 인식하는 것은 현세대가 느낄 수 있는 책임감에 있어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원과 환경을 언젠가 이용하게 될 미래세대로 인식하기보다는 미래세대를 하나의 이해관계자로 부각시켜 현재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로서 인식의 확장시키는 것은 비영역성이 단순히 고려해야하는 대상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 비영역적으로 고려의 대상을 어떻게 확장하는가는 환경문제와 함께 이로 인해 야기되는 어떠한 사회문제를 조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충분히 다루어진 공간적 확장과 비인간 생물종에 대한 확장에 비해, 시간적 확장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래 세대나 미래 환경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핵심질문은 미래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안목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생태적 구조에 대한 성찰을 도울 수 있다.

셋째, 생태시민성에 기반한 환경 교육내용과 그 핵심질문들이 나와의 관계성을 파악하거나 실천적 측면을 모색해보는 활동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지 나와는 다른 존재의 입장을 고려해보는 것만으로는 공동체를 인식하고 관련 가치관을 지속하며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참여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교육내용과 핵심질문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혜진(2009). 초등 환경교육 관련 교사용 지도서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12). 중학교 환경과 녹색성장: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경남대학교산학협력단(2019). 침묵의 재난 미세먼지 초등용(3~6학년). <https://schoolsafekr/post/view?id=775>
- 구나경(2012). 초등학교 생물다양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내용분석 및 교재화 연구: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국가환경교육센터(2019). 아하, 이런게 에너지구나! https://www.keep.go.kr/portal/141?search_mode=true&action=read&action-value=546f508d9b9a542cce5916a890bbd25&page=21
- 권영락, 이재영, 김찬국, 안재정, 서은정, 남윤희, 박은화, 최소영, 안유민(2016). 2015개정 환경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 환경교육, 29(4), 363-383.
- 권주연, 문윤섭(2009). 기후변화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개발. 환경교육, 22(1), 68-82.
- 김미란, 김찬국(2014). 환경교과서의 기후변화 교육 내용 체계 및 내용요소 재구조화. 환경교육, 27(2), 150-160.
- 김병연(2011). 생태 시민성 논의의 지리과 환경 교육적 함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221-234.
- 김소영, 남상준(2012). 생태시민성 개념의 탐색적 논의: 덕성과 기능 및 합의기제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25(1), 105-116.
- 김정화(2015). 생태발자국의 의미를 활용한 생태시민성 함양 환경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찬국(2013). 생태시민성 논의와 기후변화교육. 환경철학, 16, 35-60.
- 김찬국, 최돈형(2010). 우리나라 기후 변화 교육의 방향에 관한 고찰. 환경교육, 23(1), 1-12.
- 김희경(2012). 생태시민성 관점에서 본 에코맘과 교육적 함의. 시민교육연구, 44(4), 55-75.
- 김희경(2018). 우리나라 생태시민성의 특성 탐색을 위한 경험적 연구. 환경교육, 31(1), 23-34.
- 김희경, 신지혜(2012). 생태시민성 관점에서의 환경교과 분석: 고등학교 '환경과 녹색성장'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1), 125~141.

- 남경희, 이성희(2010). 초등환경교재 환이랑 경이랑 함께 가꾸는 초록 서울 개발 및 환경소양도 검증. 사회과교육, 49(1), 15-26.
- 박순열(2010a). 생태시티즌십(ecological citizenship) 논의의 쟁점과 한국적 함의. 환경사회학연구 ECO, 14(1), 167-194.
- 박순열(2010b). 한국 생태시티즌십(ecological citizenship) 인식유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환경사회학연구 ECO, 14(2), 7-52.
- 박종근, 정철, 손미희, 육혜경(2010). 중등학생들의 기후소양 함양을 위한 교수자료 개발 및 현장적용에 관한 연구. 학교교육연구, 5(2), 221-237.
- 박진희, 장남기(1994). 정의적 영역 중심의 고등학교 환경 교재 개발. 환경교육, 6, 63-99.
- 방윤영(2019). 에코웨딩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생태시민성과 지속가능소비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지혜(2015). 생태시민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중학생의 공정여행 경험이 갖는 의미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정(2014). 환경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과 인식론적 관점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은정(2018). 환경교육과정. 교육과학사.
- 심광택(2012). 지속가능한 사회과 목표 설정: 생태적 다중시민성. 사회과교육, 51(1), 91-107.
- 안새롬, 윤순진, 이찬희, 홍종호(2019). 북한의 기후변화 교육: 기후변화 교육의 남북 협력을 위한 탐색적 연구. 환경교육, 32(1), 1-16.
- 양재식, 남상준(2003). 환경교육 교재의 적합성 분석. 환경교육, 16(2), 65-73.
- 이두근. (2006). 탐구 중심 환경교육의 개념과 의미. 환경교육, 19(1), 80-89.
- 이미애, 문윤섭, 황은자(2008). 학교 실내 공기질 관련 초등환경교육 교재 개발. 환경교육, 21(4), 40-66.
- 이재영(2012). 한국환경교육의 흐름 2: 체험에서 참여로. 공주: 공주대학교출판부.
- 이홍우(2010). 교육과정 탐구(증보판). 서울: 박영사.
- 장미정, 임수정, 정철, 홍선옥, 이종명(2018). 해양환경소양과 핵심역량에 기초한 초등학교 해양환경교육 교재 개발. 환경교육, 31(2), 153-166.
- 전수옥(2004).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환경감수성 함양을 위한 환경교육교재 개발 연구: 자연환경 영상 및 사진 자료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재원, 남상준(2018). Bloom의 신 교육목표분류학에 기초한 초등 환경 교재의 수업 목표 분류 및 분석 연구. 환경교육, 31(3), 259-273.
- 정혜원, 김찬국(2018). 초등 환경교육을 위한 교과 통합적 접근 분석틀 개발 및 적용. 환경교육, 31(3), 210-223.
- 조미성, 윤순진 (2016). 에너지전환운동 과정에서의 생태시민성 학습: 서울시 관악구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공간과 사회, 26(4), 190-228.
- 천은주, 최돈형(2008). 초등학교 교과서의 신재생 에너지 교육 내용 분석 및 교재 개발. 환경교육, 21(1), 70-81.
- 최돈형(2008). 교육관에 기초한 학교환경교육의 목적 고찰: 이홍우와 장상호의 교육관을 중심으로. 교원교육, 24(4), 395-406.
- 허진숙, 이두근 (2008). 환경교육적 탐구를 통한 유역 중심의 물 환경교육 교재화 연구. 환경교육, 21(4), 25-39.
- 환경부(2019).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초등 1~2학년용 AR을 이용한 미세먼지 대응 교육 자료.
- Allen, T. (2011). Virtual Water: Tracking the Threat to Our Planet's Most Precious Resource. [류지원 역 (2012). 보이지 않는 물 가상수. 동녘사이언스]
- Anderson, L. W., & Krathwohl, D. R., (Eds.). (2001). A Taxonomy for Learning, Teaching, and Assessing: A Revision of Bloom'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강현석, 강이철, 권대훈, 박영무, 이원희, 조영남, 주동범, 최호성 역(2005). 교육과정 수업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류학: Bloom 교육목표분류학의 개정.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Barry, J. (2006). Resistance is fertile: from environmental to sustainability citizenship. Environmental citizenship, 21.
- Dean, H. (2001). Green citizenship.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5(5), 490-505.
-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 Dobson, A. (2003). Citizenship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obson, A. (2006). Ecological citizenship: A defence. Environmental Politics, 15(03), 447-451.
- Dobson, A. (2007). Environmental citizenship: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15(5), 276-285.
- Goodwin et al. (2001). Passionate Pilitics. [박형신, 이진희 역(2012). 열정적 정치. 한울.]
- Haraway, D. (2015). Anthropocene, Cpaitalocene, Plantationocene, Chthulucene: Making Kin, Environmental Humanities, 6, 159-165. [김상민 역(2019).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세, 툴루세: 친족 만들기. 문화과학, 97, 162-173.]
- Hungerford & Volk (1990). Changing learner behavior through environmental educ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1(3), 8-21.
- Kennedy, E. H. (2011). Rethinking ecological citizenship: the role of neighbourhood networks in cultural change. Environmental Politics, 20(6), 843-860.
- Robottom, I. M., & Hart, E. P. (1993). Paradigms and the ideology of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ch 2), Research in environmental education: Engaging the debate. Geelong, Victoria; Deakin University Press.
-
- Sauvé, L. (2005). Currents in Environmental Education: Mapping a Complex and Evolving Pedagogical Field. Canadi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0(1), 11-37.
- Simmons, B., McCrea, E., Shotkin, A., Burnett, D., McGlauflin, K., Osorio, R., Prussia, C., Spencer, A., & Weiser, B. (2004) Guidelines for Excellence Nonformal EE Programs. NAAEE.
- Smith, M. J. (1998). Ecologism: towards ecological citizenship. US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Tyler, R. W. (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UNESCO, (1977),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Education, UNESCO, Tbilisi.
- Wiggins, G. & McTighe, J. (2005). Understanding by design(2nd ed.). Alexandria, VA :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강현석, 이원희 허영식, 이자현, 유제순, 최윤경 역(2008). 거꾸로 생각하는 교육과정 개발-교과의 진정한 이해를 목적으로. 서울: 학지사].

향후 연구활용 계획

연구내용을 정리하여 환경교육학회지에 투고하여 생태시민성 기반 환경교육 교재 개발 연구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며, 팀원 중 일부는 환경부의 교재 제작 사업에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연구내용에 기반한 핵심 질문 개발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생활환경운동연구팀

본 연구모임은 한국 사회에서 생협들의 환경운동과 관련된 지역 시민운동 사례는 현장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체계적으로 연구 발표된 적은 없으며 특히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에 대한 협동조합의 공헌과 관련된 연구는 해외 사례 외에는 국내 사례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현재 생활협동조합들이 지역 사회의 환경운동을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SDGs 목표에 근접하게 달성하는지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고 정량분석을 거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총 7회 연구모임 진행)

팀장 이병욱 안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팀원 김준하 윤미향 국회의원 보좌관
팀원 박그린 사회적기업 나눔스토어 대표
팀원 이미옥 아이쿱협동조합 지원센터 이사
팀원 조인숙 양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팀장

생활협동조합의 지역 환경 운동 연계 활동과 환경적 가치

1. 서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서의 협동조합 시초에 대한 시각은 이론적 성격에 따라 기원을 달리하지만 그 정신은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두레와 조선시대의 계와 향약이라는 것에 대한 것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근대 협동조합의 시초는 1907년 지방금융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⁵⁾ 금융조합은 화폐정리 사업, 납세선전 등 일제 총독부의 사업을 대항한 측면이 많고, 일제 총독부의 철저한 지도 아래 운영되는 등 관계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했으며 1918년에 도(道)연합회를 만들어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1933년에는 전국 단위 조선금융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대규모 은행조직으로 바뀌면서 생산자협동조합적 성격을 완전히 상실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지금은 협동조합 정신을 기초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능동적인 민간협동조합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관계협동조합에 대항하여 민간 차원의 자생적인 협동조합 운동이 전개되었고 문헌상으로 확인된 최초의 자생적 민간협동조합인 1920년 설립된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YMCA가 설립한 농촌협동조합, 천도교의 조선농민사가 추진한 농민공생조합, 일본유학생들의 협동조합운동사가 추진한 농촌조합 등 크게 세 갈래로 전개되었는데 해방 후 협동조합운동이 좌익계열의 전국농민조합총연맹과 우익계열의 대한독립농민총연맹 산하 농민후생조합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또한 1952년 당시 농림부장관의 주도로 사단법인 농촌실행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각 시군으로부터 선발된 농협지도자를 육성하여 조합 설립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하향식 농협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들, 농민들 스스로 자주적인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농민단체들은 농협민주화운동을 중요한 활동 과제로 내걸고, 1990년대 시민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다양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비자공동구매협동조합은 일제하부터 시작되어 간헐적이고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설립된 이후 사업체로서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그 뜻을 이어받아 1980년대 후반에 유기농산물의 공동구매사업에 특화된 생협 조직들이 최근까지 가장 대중적 규모로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생협들인 한살림, iCOOP생협, 두레생협, 여성민우회생협(행복중심) 등 네 갈래의 생협들은 2020년 말 현재 공급액이 2조 3803억원에 달하고 조합원은 289만 명에 이르고 있다⁶⁾. 이처럼 한국의 생협들은 앞서 제시한 바, 다양한 배경 하에서 발전해왔는데 1980년대 이후 환경, 생태, 생명사상에 기초한 환경농산물의 직거래활동으로 시작되었고 오늘날 생협운동이 환경농산물 직거래단체로 인식되어진 배경에는 1980년대 초반 생환경, 생태, 생명사상의 영혼을 받은 도시지역 환경 생태 운동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생협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생산자본과 유통자본의 횡포로 양질의 생필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공동 구매하는데 있으나 한국의 생협은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생협운동의 발전과 달리 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안전한 농산물의 구매, 환경을 살리는 농업의 지원, 직거래

5) 국가기록원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모태가 되는 금융조합은 한말 일제가 지방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1907년에 각 지방에 설립한 지방금융조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당시 지방금융조합은 정부로부터 자금을 대어받아 소액의 농업경영자금을 취급하는 것에 그쳤으나, 이 기관이 1912년부터 조합원의 예금을 받고 1918년에는 새로운 금융조합령에 의거 도시금융조합과 촌락금융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 은행업무도 취급하기 시작한다. 이 말단금융조합은 각도금융조합연합회(1933년 이후 금융조합연합회)를 통해 조선식산은행과 연계하여 일제 식민지시대에 농촌 및 도시의 주요한 말단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 업무는 물론 일제의 각종 정책사업을 맡거나 지원하였다.

6) 2020년 국회에서 열린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발표 자료

등) 활동이 전개되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으며 지금도 그 활동의 정신은 동일하다.

따라서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의 정신인 환경, 생태, 생명사상은 생태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기본 골간을 이루는 사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더 깊숙이 환경문제를 일상이나 교육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환경운동의 계기가 되었으며 환경농업운동 및 생협운동과 연관되어 실천적으로 전개되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환경시민운동은 그 특성상 개별적 실천보다는 지역공동체적실천이 전제될 때 올바르게 전개될 수 있었다.

2. 연구의 목적

2000년대 초 생활협동조합의 성격이 전세계에서 대안경제 활동으로 주목받았던 것은 경제불황의 극복이나 고용 문제해결을 넘어 최근에는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두레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들이 ‘플라스틱프리 제로 웨이스트’(Plastic Free , Zero waste 지구를 지키는 소비자·생산자 선언)을 진행한 것처럼 환경 문제에도 대안적 성격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협 활동을 통해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 오염요인이 야기한 기후변화 및 팬데믹 등의 사태에 대응하며, 친환경농업의 생산·소비를 통한 보다 나은 미래의 조성을 도모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의 지역 환경운동 재조명은 그래서 필요성이 충분하다. 특히 생협의 역사 속에서 강원도 원주지역 생협처럼 1972년 남한강유역에 내린 홍수로 많은 지역이 수해를 입자 외국기관의 원조를 받아 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해지역에 대한 구호활동과 협동운동을 지도, 지원하기 시작하여 많은 활동가들이 농촌지역의 협동사업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2021년 현재까지도 원주생협이 환경 복지 운동으로써의 소비자조합원이 가입하기 시작하여 환경활동가 및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생협으로 모델을 설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모델의 정립이 대두됨을 보여준 사례처럼 생협들의 환경운동과 관련된 지역 시민 운동 사례는 현장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체계적으로 연구 발표된 적은 없으며 특히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협동조합의 공헌과 관련된 연구는 해외 사례 외에는 국내 사례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ICA 창립 125주년,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25주년 서울 대회는 이같은 생활협동조합 정체성과 SDGs의 관계를 협동조합 7번째 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고 UN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SDGs를 채택하기 20년 전에도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은 원주의 생협 사례처럼 지속가능한 성장을 언급했던 것을 볼 때 현재 생활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의 환경운동을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SDGs 목표에 근접하게 달성할 수 있는지, 이미 얼마만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코자 하는 사례기반 연구를 통해 사회공헌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에 앞장서 온 생협의 시민 환경 운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협동조합의 역사

인간은 역사 속에서 수렵사회를 거쳐 농경 사회로 오는 동안에 개인에서 집단으로, 효율을 위한 선택을 했고 자연스레 농경사회에서는 집단생활을 통한 나눔과 이익공유에 대한 형태를 습득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자본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공동체가 시장의 역할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을 강화시키기 위

한 법적 제도적 강제장치로 인해 파괴되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엔클로저운동에서 이런 초기 자본주의 체제의 강제성과 폭력성을 명확히 보여주며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산과정에서는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고, 생활은 공동체가 파괴된 도시에서 개별적으로 살아가도록 방치되었다. 이렇게 비인간적인, 또는 비사회적인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대안으로 공장의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운동, 노동자들이 술을 절제해야 한다는 금주운동, 자본가들에 대해 협상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노동조합운동, 노동자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차티스트운동 등과 함께, 아예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로버트 오웬의 뉴하모니 공동체 운동 등이 탄생하였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협동조합으로 인정받고 있는 로치데일협동조합의 1943년 노동조합운동의 동맹파업이 실패에 따른 노동자들이 생산과 소비를 통합하는 협동조합사회의 아픈 결과⁷⁾였다.

영국에서의 로치데일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삶을 위한 협동조합 역사 속에서 1844년 12월, 28명의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으로 출발, 1866년에는 조합원수는 50배, 자본금은 400배로 늘어났고, 1851년에는 매일 새로운 점포를 열었고 이를 소비자협동조합의 시작이 되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유럽 전역에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전파되어 이들 나라들은 각각 자본주의의 성숙 정도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달라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중요한 내용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협동조합 운동은 앞서 말한 관제 위주의 역사 속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공생하는 방법론과 노동과 인권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진 지역운동에 기인되는 한국 내 생협이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든 협동조합이고, 농협을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협동조합이 시작될 때에는 그 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한국 역사 속에서 지금과 같은 생협이 생기게 된 것은 한국의 역사와 경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한국 사회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이나 현재와 같은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소비자협동조합은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 출현했다고 볼수 있으며 명칭도 소비조합 또는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약칭 ‘생협’)으로 바뀌게 되었다.

2. ‘생활협동조합’의 환경분야 성과 고찰 선행연구 분석

생활협동조합 분야의 기존 연구는 다양하지만 환경운동과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진다. 첫째로는 생협 조합원들의 신뢰자본이 지역환경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점에 주목한 것이고 또 하나의 관점은 생협운동의 정신에 깃든 생명운동과 지역 환경운동 네트워크를 통해 바라본 시각이다.

특히 지역 내 조합원인 소비자가 생협 참여를 통해 단순히 물품 이용에 그치지 않고 조직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 공공이슈(지역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협력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생협운동을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규정지은 권미영(2010) ‘생협회원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협력에 관한 연구’는 신뢰자본의 측면이 조합원 사이에 지역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7)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개인’에서 ‘공동체’로 넘어오는 지구의 역사가 자본주의로 인한 공동체가 붕괴되고 노동자 개인의 몫으로 남은 비인간적인 형태를 타개하기 위한 인간 본성의 자발적 움직임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조합원들의 신뢰자본과 지역환경운동 영향
① 권미영(2010) '생협회원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협력에 관한 연구'
② 조완형(2009) '생협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상'
③ 허미영(2008) '생협의 대안적 소비문화의 성격과 그 함의'
④ 허남혁(2009) '생협 생산자 조직의 생산-소비관계 변화'
⑤ 오귀복(2007)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특징 분석'
⑥ 조완형(2007) '생협 조합원의 행태 및 특성 분석'

또한 윤병선(2010)은 '대안농업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에서 생협운동을 농민이 주도하는 대안농업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유기농업운동, 생협운동, 지역먹거리운동의 성장과정과 현황을 고찰하였는데 이같은 생협운동이 농민이 주도하는 대안농업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유기 농업운동, 생협운동, 지역 먹거리 운동의 성장과정과 현황을 고찰하고 있으며 지역로컬 환경 운동성의 대안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한 선행연구 등이 있다.

대안농업과 생명운동, 지역환경운동 네트워크
① 김용우(2010) '생명운동과 생활협동조합'
② 정규호(2012)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③ 윤병선(2010) '대안농업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④ 김흥주(2008) '풀무생협 생산자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⑤ 김흥주(2008) '친환경농업 생산조직과 생산자의 특성 및 대안 가능성'

제 3 장 생활협동조합의 환경운동 흐름

1. 생활협동조합과 지역운동

남강 이승훈 선생은 1907년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용동촌에 오산학교를 설립하였고, 고당 조만식 선생은 세 차례 오산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1920년 200명 규모의 조선물산장려회, 1933년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였는데 밝맑 이찬갑 선생은 오산학교 재학 중 자치조직인 용동 자면회 조직, 1928년과 1938년 일본 도쿄와 치바현, 시즈오카를 방문하여 소비조합 연구한 후 귀국하여 오산 소비조합 활동을 시작하였다. 충남 홍성지역은 생협운동의 전통이 강한데, 바로 이 이찬갑 선생으로 인해 지역 생협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며 1972년 풀무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 1980년 풀무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재발족한 후, 1999년 생협법 시행으로 풀무생활협동조합으로 재창립하게 되었다⁸⁾. 따라서 2020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맞은 홍성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홍성군의 흥동면에 '지역 환경운동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이 유기농업과 공동체 의식이었다. 도시와 농촌이 건강한 먹을거리로 더불어 사는 도농(都農)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풀무생협은 유기농생산자회, 쌀작목반, 유기농야채작목반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대대로 살아오고 농사지어온 땅이 죽는 환경문제와 농사를 직업으로 살아온 주민들이 기계화에 밀려 고향을 등지고 망연자실하는 상황에서 지역 풀무생협은 지역 농민 스스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생활공동체였다. 뿐만 아니라 1970, 80년대의 민주주의가 사라진 역사 속에서 조합원이 출자역

8) ICOOP 협동조합연구소 편저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과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고 참가하는 비영리 조직을 스스로 결성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에 민주주의의 식을 갖는 생활정치의 지역 운동에도 큰 힘이 발휘되었다. 이처럼 지역 생활협동조합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든 현재의 리빙랩 활동과 유사성을 가진다.

강원도 지역은 원주(교구)에서 시작된 수재지역 지원사업과 신용협동조합운동을 진행하면서 쌓은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으로 강원도 평창의 신리소비자협동조합과 함께 지역 운동을 위한 비영리단체로서의 자본주의의 허점과 모순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고 지역민을 위한 교육, 개발주의자들의 유기농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정치성에 대한 논란 등에 선두주자 역할을 하였다.

2. 생활협동조합과 환경운동

이처럼 대한민국 생활협동조합의 역사는 지역 환경운동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해외의 협동조합처럼 연합회 성격을 먼저 띄고 지역에 나아갔다면 한국 생협들은 다양한 배경 하에서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탄생,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지역에서 처음에 출현한 생협은 신협이 전개해온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직거래에서 탄생한 생협인 바른생협인데 두레생협연합조직은 바른생협을 중심으로 하여 출발하였고 신협운동가들이 일본에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배우고 지역신협의 도움을 받아 생협을 설립하면서 생협중앙회를 결성하고, 1990년대 후반에 수도권사업연합이라고 하는 사업연합조직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 조직이 나중에 노동운동에서 시작한 일부 지역생협과 종교운동에서 시작한 일부 단체생협 등과 공동으로 두레생협연합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1970년대부터 지역환경운동, 농민운동,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들이 1988년 한살림을 조직하고 초창기부터 생산자와 소비자가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통하여 한 집 살림하듯 더불어 살게 되면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이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도시지역에서 소비자를,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유기농 생산자를 조직해 왔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생활재 공동구매협동조합 중에서 2008년부터 공급액이 가장 많은 생협인 ICOOP생협은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의 활동가들이 1990년대에 들어와 설립한 지역생협들에 뿌리를 두고 있고 진보정당 운동을 시도하던 활동가들이 1988년과 1992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운동의 대중적 기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생협운동을 통한 대중조직의 건설을 꿈꾸면서 서울과 인천, 울산, 창원 등 대도시에 생협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ICOOP생협은 “나와 이웃 그리고 지구환경을 위한 소비가 생협 소비의 본질”이라고 보고 ‘서민에게 유기농산물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과 조직의 혁신을 이루어내어 혁신은 조합비제도와 구매대행제, 그리고 조합원으로부터의 목적 차입금의 실시 등 조합원관계의 혁신, 사업의 집중과 조직의 분화를 기치로 시도된 조합과 연합사업조직과의 관계 혁신, 조직의 분화를 통한 권한과 책임의 제고를 목표로 한 연합조직의 혁신 등으로 추진되었다. 에코생활협동조합은 환경운동연합 부설조직으로 2002년 설립, 환경과 사람이 건강한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고 소비자협동조합으로서 개인의 영리가 아닌 조합원 전체의 생활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처럼 생활협동조합의 특성이 1980년대 이후 환경, 생태, 생명사상에 기초한 환경농산물의 직거래활동으로 시작되었고 오늘날 생협운동이 환경농산물 직거래 단체로 인식되어진 배경에는 1980년대 초반 환경, 생태, 생명사상의 고민을 가지고 지역 활동을 펼쳐온 도시지역 환경 생태 운동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생협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생산자본과 유통자본의 횡포로 양질의 생필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공동 구매하는데 있으나 한국의 생협은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생협운동의 발전과 달리 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안전한 농산물의 구매, 환경을 살리는 농업의 지원, 직거래 등) 활동이 전개되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으며 지금도 그 활동의 정신은 동일하다.

특히 원주지역은 이러한 생협의 정책적 환경 운동이 생협을 통해, 또 협동조합의 연대를 통해 드러난 곳으로 ‘원

주 협동조합운동협의회’와 시민환경운동이 정책으로 발휘된 지역이다. 2005년 원주의 대기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변화시키고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원주 차없는 거리 문화축제를 진행하고 2007년 GMO FREE ZONE 원주지역 시민들과 소비자 모임을 결성, 2009년 원주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는 등 2009년 원주, 강원지역 골프장 개발 반대 운동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환경 정책에 대한 의제를 도출, 정책으로 승화시킨 지역이다. 이처럼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의 정신인 환경, 생태, 생명사상은 생태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기본 골간을 이루는 사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더 깊숙이 환경문제를 일상이나 교육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환경운동의 계기가 되었으며 환경농업운동 및 생협운동과 연관되어 실천적으로 전개되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었고 이같은 환경시민운동은 그 특성상 개별적 실천보다는 지역공동체적 실천이 전제될 때 올바르게 전개될 수 있었다.

3. 생활협동조합과 유기농업운동⁹⁾

한국의 유기농업운동은 1970년대 녹색혁명 당시, 농업 생산에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다투입을 전제로 하는 다수확품종을 보급한 정책에 저항하며 발생하였는데 유기농업 생산자는 다투입의 증산정책에 반발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념적 행동으로 여겨져 정권의 탄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생산자는 스스로 ‘정농회’(1976년)나 ‘한국유기농업협회’(1978년) 등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를 설립하여 정기적으로 유기농업기술과 사상을 교육하면서 유기농업 대중화에 기여했다. 당시 친환경농산물 판매는 직거래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유통 기능을 생산자가 주도한 직거래였던 시기여서 1980년대를 이르러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나타나기 이전이었으므로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 판매 그 자체가 유기농업운동이고 생산자는 판매활동과 동시에 농산물이 지닌생명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한편 유기농산물의 소비자는 주로 농업문제나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회원이었는데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형태는 판매를 위한 유통체계가 성립되지 않은 채 수확기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계절 행사나 일회적인 판매에 불과하였고 직거래의 취급 품목도 저장성 있는 곡류나 농산가공품에 국한되었는데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담당할 소비자 측의 주체가 나타난 것은 1985년 이후부터이며 유기농업 생산자들이 판매를 위해 도시에 판매장을 만들어 소비자를 조직하거나 종교단체나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가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추진하는 생협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4. ‘생활협동조합’법을 통해 바라본 지역 사회 운동 조건

현재 생협이 경제사업으로 취급하는 품목은 주로 친환경농산물과 환경상품인데 1998년 생협법이 제정될 당시, 정부는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주요 사업으로 활동해 온 생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이 생협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제공함에도 생협법의 경제사업 영역이 농산물과 그 가공품, 환경용품으로 제한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협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0조(사업의 종류)’에 따라 부가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음.

1.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재활용품, 재생용품 및환경친화용품 등을 말한다)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가공 공급하는 사업

9) 정은미,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14권 2호 2006년 자료 발췌

2. 생활에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3. 생활 개선 및 교육,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4. 제1호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한 2010년 생협법이 개정되어 농수축산물과 환경물품으로 제한된 취급 품목이 폐지되었는데 1980년대의 시민단체 및 시민운동, 지역운동에서 도시빈민운동, 농민운동 등이 단순한 대응투쟁만으로는 빈민과 농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반성 속에서 1990년대부터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을 확대하면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 한국사회에 부각됐고 협동조합이 조합원 확대를 통해 하나의 가치를 확대할수 있음에 생협운동이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되었음을 볼 때 단순히 친환경농산물 소매업으로 한정지은 것은 옳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거 생협이 지역운동에 연계되었다.

법령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8113호	2021. 4. 20.	2021. 4. 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1516호	2021. 3. 2.	2021. 3.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514호	2018. 12. 31.	2019. 1. 1.



제 4 장 '생활협동조합'의 지역 환경 거버넌스 연대 활동 사례 결과

1. '양천 아이쿱생활협동조합'과 지역환경 운동 연계 사례

'양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양천아이쿱)'은 2021년 현재 창립 22주년을 맞이했으며 양천아이쿱생협의 전신은 별내생협¹⁰⁾이다. 최근 조합원들의 지역 환경운동의 첫걸음이 양천 아이쿱이 주도가 되어 2016년 8월 8일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총회로 첫 결실을 맺었는데 추진위원회에는 강서아이쿱생협, 양천아이쿱생협, 인드라망생명공동체, 한살림서울서부지부, 행복중심서울서남생협, 양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등 강서구, 양천구의 생협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생협 조합원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가 되어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것을 약속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초창기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분들은 그 동안 탈원전운동과 밀양송전탑 반대투쟁, 안전한 먹거리운동, 환경생태운동 등에 연대했던 사람들

10) 1997년 사명감과 운동성을 갖춘 실무자가 조합원 중심의 준비위원회를 꾸리면서 생협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규모가 작아 경영이 열악했으나 양천지역의 별내생협과 강서지역의 어깨동무생협 조합원 120명이 '강서양천생협'으로 통합하여 힘을 키웠다. 초기 63명의 조합원 규모에서 4천명이 넘는 조합원 규모로 성장하는데 20년이 걸렸다. 대중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 규모와 면모를 갖추었으며 사업적으로는 매장을 통해 조합원 규모가 커졌고, 지역 환경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조합원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여 단순히 소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위해서 지역 환경 운동의 주체로써 조합원이 소비만을 목적으로 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조합원 교육을 추진 중임.

이다.

따라서 양천 아이쿱 등 생협의 조합원이 대다수 환경운동을 했던 활동가들로서 특히 양천아이쿱이 만들어지고 양천구의 지역 환경 운동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국내 1호 크라우드 펀딩형 시민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보유하게 되었고 소셜벤처 루트에너지와 손잡고, 루트에너지가 자체 개발한 재생에너지 전문 커뮤니티 펀딩 플랫폼을 통해 발전용량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위한 펀딩 상품을 만들어 모집을 시작했다. 총 사업비 1억8000만원 전액을 양천 지역 주민과 시민의 투자를 받아 조달한 것으로 이를 주도하는데 양천 아이쿱 등 지역 생협들의 조합원 50% 이상이 참여했으며 지역 내에서 공기업과 지역주민, 생활협동조합이 함께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첫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양천아이쿱 지역환경 교육 연계 활동



▲시민 태양광 사업

2. '논산 한살림'과 지역환경 운동 연계 사례

전국에 70만 소비자 조합원을 둔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과 함께 국내 3대 생협으로 한살림은 2020년 공동실천 의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채택하고, 공동실천 목표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를 설정했으며 2020년 10월에는 제9차 한살림연합 정기 이사회에서 전 조직의 2021년 사업계획에 기후위기 대응 의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고 2021년에는 한살림연합 미래기획본부 내 '기후위기 대응팀'을 새로 꾸렸다. 한살림 창립 당시부터 '쓰고 버리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되살림의 가치를 생각하며 되살림운동을 활동, 2020년 한 해만 회원 생협에서 판매한 총 118만4130개 유리병 제품에서 41만5490개 공병이 돌아와 회수율 35.1%를 기록했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5가지 생활 실천을 약속하는 '기후위기 하이파이브 캠페인'을 진행하여 텀블러와 손수건을 사용하고, 한 달에 하루 1시간 소등하는 등 지역민들과 환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상시 구성중이다.

2020년 '15회 2020 대한민국환경대상'에 지자체 대상에 논산시가 수상했는데 대부분 중소도시가 그렇듯 인구 소멸의 위험, 국토균형 발전을 이유로 무분별한 공단 입지와 개발 사업으로 인해 환경생태계가 변질되는 것에 몸살을 앓았던 논산시에 환경오염 기후변화 제고와 시민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중심에 한살림이 주도가 되었다. 논산지역 한살림의 생명살림운동은 2017년도에 시작되었으나 논산 지역에 생명살림운동과 도농직거래운동의 확산을 위해 논산매장을 개장하였고, 먹거리교육과 결합한 생명살림운동을 빠르게 진행하였는데 2019 생명살림운동과 더불어 지역연대를 통해 지역살림을 실천하고자 논산지역위원회를 창립,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의 모토 아래 생산자조합원과 소비자조합원간 직거래운동을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생활실천운동도 함께 하고 있다. 지역 내 옷되살림운동을 통해 모인 옷을 지역내에서 판매(귀농귀촌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앞장서는 날’,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나눔장터’ 참가)하여 자원순환운동을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활동을 진행 중이며 특히 논산지역 지역민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꾸준히 5년간 식생활교육강좌를 진행 중이다.

<p>[1강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이해] GMO식품은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음. 농업생산성을 높이지도 못함. 재배와 반입을 금지하는 국가의 증가추세, 한국은 GMO수입량이 많은 국가(많은 가공품에 GMO옥수수과 콩 사용). GMO표시제에 대한 개선 필요함. GMO를 피할수 있는 생활습관</p> <p>[2강 식생활 총론(쌀, 전통장, 육식관련 식생활 바로알기)] 쌀 자급률의 감소로 인해 국내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음. 지금의 식량자급률이 지속될 경우 국가간 식량의 무기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음. 전통발효음식의 우수성 확인. 육식으로 인한 환경오염, 탄소배출 증가 그리고 건강악화문제가 있음.</p> <p>[3강 식품첨가물의 이해] 식품첨가물의 안정성, 논란의 확인. 식품첨가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활실천방법</p> <p>[4강 가까운 먹을거리] 수입식품으로 인한 탄소발자국 증가와 환경문제 인식. 가까운 먹을거리(로컬푸드)와 텃밭활동이 주는 유익함에 대한 이해</p>

특히 지역의 청년과 청소년들에게는 가까운 먹을거리(글로벌 푸드 시스템)에 대한 이해, 공장식축산시스템의 확산으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과 그로 인한 슈퍼박테리아의 발생, 유기농업실습, 방사능과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 성장호르몬, 내분비교란물질에 대한 이해, 제철요리를 이용한 친환경요리실습 등을 통해 먹거리와 환경의 연관성을 보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논산에서의 지역 환경운동 거버넌스의 중심에 서있는 한살림 논산은 오늘도 슬로푸드를 통한 농촌살림의 식문화적 접근, 기후변화와 생태철학에 대한 이론교육,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식문화에 대한 제안 등을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육식과 환경에 대한 영화<잡식가족의딜레마> 공동체 상영과 감독과의 만남 등을 통해 환경운동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중이다.



▲논산 한살림 환경 교육 포스터

3. 괴산지역의 ‘한살림’과 ‘아이쿱’의 지역환경운동 사례

충북 괴산군은 지역 차원에서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 경인증단지확대(402ha→500ha), 친환경 벼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유기농업 전환 손실보전 장려금 지급 등 관행농가의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유기농업 공영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살림과 함께 업무협력을 통해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추

진할 계획이며 한살림이 주도하여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기에 가능했고 특히 지역 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업의 첨단화, 자동화를 목표로 미래식품산업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한살림을 필두로 공공급식통합지원센터를 준공하여 학교급식과 서울 등 대도시 공공급식에 괴산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아이쿱 또한 괴산지역에 ‘괴산자연드림파크’를 만들었는데 100만㎡(약 30만평) 넓이의 땅은 생산공장과 물류센터, 연구시설과 숙박시설은 물론 각종 문화시설(영화관과 레스토랑, 카페)이 조성되었는데 지난 2018년 3월 문을 연 괴산자연드림파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이 조성한 ‘친환경 유기식품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로써 2007년 아이쿱과 괴산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11년 만에 거둔 성과이다. 괴산자연드림파크 조성에 지금까지 들어간 투자금만 1644억원. 현재 46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아이쿱 측은 2022년까지 지역 일자리 1300개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로써 2014년 전남 구례의 130만㎡(약 40만평) 면적의 땅에 들어선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이어 괴산자연드림파크가 문을 열면서, 2007년 아이쿱이 괴산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한 아이쿱의 ‘클러스터’ 구상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2014년 먼저 실현됐는데 괴산지역의 환경운동성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농촌지역의 환경운동은 생산자 방식의 농업 보존 환경 운동이었는데 이제는 소비자 환경 운동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괴산아이쿱 소비자후기운동 그린워킹 운동은 지역민과 함께 주변 주요도로 및 쌍천 주변에서 그린워킹(쓰레기 줍기) 활동 등 괴산군민과 함께하는 지역 환경운동으로 크게 발생되었는데 괴산아이쿱생협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그린 워킹(쓰레기 주우면서 걷기)을 매달 실천하고, 친환경 괴산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괴산군민 모두 그린 워킹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면서 초중 고등학교, 각 사회단체, 부녀회 등에서 그린 워킹 활동을 하면 괴산아이쿱이 기프몰, 간식, 티셔츠를 후원하고 있다. 이같은 소비자후기운동은 NO플라스틱 캠페인 그린워킹을 통해 농어촌 지역 환경운동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



▲괴산 아이쿱 환경 활동



▲한살림 괴산 연수원 조감도

4. 홍성 ‘여성민우회 생협(행복중심)’과 환경운동 사례

여성민우회생협은 1989년 안전한 밥상과 좀 더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자연 속에서 살기를 꿈꾼 여성 220명이 모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시작했는데 행복중심생협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난 2011년부터 조합원의 참여로 ‘협동복지기금’을 모아 지역사회의 단체와 개인들의 모임을 지원하고 있는데 ‘협동복지’란 혼자서, 알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생활의 문제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거들고 돕는 자발적 복지시스템을 말하고 이를 정부의 최소한의 복지, 획일적 복지와는 달리 협동복지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느낀 당사자들이 직접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함께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실현 중이다. 특히, 창의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의 문제, 지역의 환경 문제, 복지시스템을 실현하고자 우리 사회의 작지만 의미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여성주의에서의 환경운동 담론을 펼치고 일상 생활 속에서의, 주부의 입장에서 환경운동을 연계, 생활재를 공급하기 시작한 90년대 말부터 우유곽재사용휴

지, 재사용식용유로 만든 비누 등 여성민우회 생협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재활용 생활재들을 공급하며 자원순환을 시작했다. 행복중심생협 동북생협 등 매장에는 장바구니를 비치하고 조합원들이 대여, 반납해 비닐 사용을 줄이도록 하고 있는데 생협이 공급하는 생활재의 포장재 환경기준을 확립한 것은 2006년 생활재 선정원칙을 개정하면서 부터인데 이를 위해 내부 환경위원회를 두고 내부 환경위원회에서 재활용 효율이 높은 포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애고 단순포장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음료나 우유 용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종이나 병 재질로 바꿀 수 있는지, 과일 박스는 100% 종이로 공급할 수 있는지, 반투명한 페트병 대신 투명한 페트병에 담긴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홍성 풀무생협은 우리나라 1호 협동조합으로 풀무학교(충남 홍성읍 홍동면) 교실 반 칸에서 문방구와 생필품 판매로 시작해서 10년 뒤, 1969년 3월 2일 풀무소비자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는데 홍동지역 부녀반을 중심으로 1980년 5월 20일 풀무학교 강당에서 주민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풀무소비자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렸으며 2013년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충남도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후, 검증된 친환경 생활재를 판매하기 위해 행복중심생협 연합회에 가입했고 여성민우회 때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기에 친환경 로컬푸드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2020년 6월 기준 홍성군 27곳의 어린이집과 학교급식센터에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소비촉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공무원과 학부모들에게 친환경 급식의 우수성을 알려 큰 호응을 얻었으며 농림부 주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유통부문’에 선정되어 내포신도시에 100여평 규모의 매장을 오픈했다. 이러한 홍성 풀무생협의 역사에는 행복중심이 연계되어 지역 환경운동을 공동으로 추구했는데 1990년대 중반 오리농업이 들어 오면서 홍동면이 전국 최대 유기농업단지로 부상하자 1990년대 말 공산품 판매를 중단하고 유기농산물을 도시에 공급하는 생산자협동조합으로 전화에서 기인된다. 2002년 홍동면 금평리에 배밭 4500평을 매입 건평 160평 쌀 저장창고를 짓고 건조기, 사이로 시설 등을 갖췄는데 논 150만 평, 밭 35만 평의 유기 필지를 확보하고 행복중심생협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지역 환경운동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조합원 1000명, 직원이 14명으로 늘어나며 사업이 커졌고 현재 풀무생협은 군내 어린이집의 절반이 넘는 28개 어린이집 1152명 원아들의 친환경급식 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풀무생협 준공식 사진



▲행복중심 지역 환경 활동

5. 부평 ‘두레생협’과 지역 거버넌스 환경운동 사례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21년 슬로건이 ‘기후위기 대응’으로 두레생협은 친환경 인증제도도 마련되지 않았던 시절부터 약 20년간 생산자와 함께 화학첨가물을 배제한 먹거리와 친환경 농산물을 조합원에게 전달해왔지만 기후위기가 점차 심해지면서 먹거리 생산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실제로 지난 2020년 여름 기후 문제로 국내 참깨 생산량 급감을 경험했다. 이에 기후위기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조합원 23만명과 함께 자원순환운동

을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시작하여 2019년부터 먼저 두레생협은 두레교육활동센터를 중심으로 ‘자원순환 운동’을 펼치고 있다. 환경을 위한 일상 속 작은 실천 운동을 표방하고 3년간 지속 추진 중인 1탄 ‘MY BOX 캠페인’은 평소 집에서 사용하는 아이스팩스를 활용해 스티로폼 박스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으로 2021년에는 포장재 개선방향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제대로 버립니다’로 잡았고 ‘최소한으로 만들기’위해 13개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운영하고, 이들 매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포장재와 쇼핑백, 포장박스를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프리(Plastic Free)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두레생협은 자체 자원순환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아이스팩 재사용 프로젝트를 진행, 두레생협과 인천 부평구청,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인천환경연합 등과 MOU를 체결하고, 아이스팩 수거함을 참좋은두레생협 부평점과 푸른두레생협 부평점 두 곳에 비치하고 있다. 부평 관내에서 수거된 아이스팩은 자활센터에서 세척 및 살균한 후 재사용되며 총 4만개의 아이스팩을 수거했는데, 참좋은두레생협 부평점 및 푸른두레생협 부평점에서 부평구 관내 22개 동행정복지센터, 부평구청, 부평구의회,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6개교 등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되었고 생협이 지역사회와 손 잡고 아이스팩 재사용에 참여하는 정책을 이끌어냈다.



▲두레생협 아이스팩 재사용 보도자료 및 매장

제 5 장 ‘생활협동조합’의 지역 환경 거버넌스 연대 시사점

한국의 협동조합은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으로 조합원의 실익 제고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나, 협동조합 기본 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원칙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UN이 인정하는 NGO 중에 가장 규모와 역할이 큰 NGO에 속한다. 따라서 과거 소비자와 생산자 연대에서 이제는 지역사회 연대 조직의 생활협동조합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나 기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3섹터 활동의 시민단체들은 자발적이고 민주적이며 사회의 공익을 위해 기여한다는 특징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역운동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서 사례를 들어 조사한 생협이 지역 환경 운동으로 연계된 사례와 그동안 한국사회가 가진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 운동의 전환이 자연스레 지역의 생협들에게로 옮겨온 사례가 다양하다. 하지만 생협들의 환경운동과 관련된 지역 시민운동 사례는 현장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체계적으로 연구 발표된 적은 없으며 특히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에 대한 협동조합의 공헌과 관련된 연구는 해외 사례 외에는 국내 사례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생협들이 해외의 협동조합과 가지는 가장 특이한 사례로써 한국의 환경운동이 기존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나 풀뿌리 시민조직에서 지역 환경 문제를 정책으로 대두시켰다면 생협에서의 활동은 협동조합이 가지는 특수한 공동체 거버넌스 확대로 조합원 교육, 조합원 호라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생활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의 환경운동을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SDGs 목표에 근접하게 달성할 수 있는지, 이미 얼마만큼 달성하고 있는지 사례기반으로는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같은 생협에서의 지역사회 환경운동성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 측정을 위해서는 SDGs와 연계된 지표를 마련하고 정량분석을 거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두각된다. 예를 들어 공공재나 환경재 등 비시장적 재화의 가치평가를 통해 생협들의 환경 교육과 관련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방법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활용하여 기존의 생협이 활동한 환경적 가치,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방법¹¹⁾들도 제시해 본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 생협이 내세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90%로 이는 모두 일본 정부가 내세운 목표 26%와 80%보다 높은 수치이며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치를 반영한 것으로 과학자들의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어버린 기후위기에 사회공헌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에 앞장서 온 생협의 시민 환경 운동성이 기반이 된 것으로 이미 한국 사회에서 반백년 넘게 자리 잡은 생활협동조합이 지역 환경운동과 연계된 SDGs를 달성하려면 무엇을 더 잘해야 하는지 분석하는 초석으로 심도 깊은 후속 연구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민석, 최현석, 박병준(2011), 「환경경영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 김성오, 2012, 「협동조합은 고용친국을 보장하는가」, <생협평론> 제 8호.
- 김아영, 2012, 「여성의 참여와 도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원칙과 실천전략」, <생협평론> 제 8호.
- 녹색성장위원회 발간자료(2012), 「지속가능한발전 목표(SDGs) 논의 대응 및 발전방안 연구」 (사)한국정치사상학회.
- 소규호, 2016,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개발 성과 및 중장기 추진 전략」, 제 11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창조포럼: 농림축산업 기후변화 대응전략, 2016년 10월 28일.
- 신호진, 2012, 「협동조합과 일다운 일의 만남」, <생협평론> 제 8호.
- 아이쿱생협, 2018, 「2018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2018년 12월)
- 아이쿱생협, 2019, 「2018년 세이프넷 공동연차보고서」(2019년 4월)
- 아이쿱생협, 2019, 「2018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사업총괄보고」(2019년 4월)
- 아이쿱생협, 2019, 「2019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대표자회의 자료집」(2019년 1월)
- 유현정, 이은희, 차경욱(2013), 「소비자의 친환경소비 및 친환경정보 요구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9(2013. 12) 제 8권 4호, pp.107-110.
- 유환용(2003), 「기업의 환경경영전략 및 그 실천방안에 관한 소고」
- 이기훈, 최선(2004),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그리고 지속가능성 경영」, 환경경영연구 제2권 제1호,
- 장종익, 2017,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의 성과와 혁신과제」, 협동조합기본법시행 5년 평가와 향후 혁신과제 국회토론회 자료집(2017년 11월 28일)
- 장종익, 2018, 「제4차 산업혁명과 협동조합 4.0 시대의 도래 : 플랫폼협동조합과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등장」, <한국협동조합연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7, 「농업의 4차 산업혁명, 다시 주목받는 정밀농」, <심층리포트>(2017년 12월)
- 정학균·김창길, 2015,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 <농정포커스>제 115호.
- 통계청, 「지역소득」, 매년.
- 티머시 미첼, 「탄소민주주의」(생각비행, 2017년)
- 하승우, 2012, 「살리지 못하면 죽는다: 유럽 탈협동화 경향이 주는 교훈」, <살림이야기> 제17호.
- 하승우, 2013,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흐름과 비판적 점검」, <문화과학>.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매년.

11) 현재 환경부의 1년 환경교육 예산은 300억이 넘는다. 하지만 아이쿱 자연드림의 조합원 환경교육 예산은 이미 300억 이상임으로 이에 대한 분석, 가치평가의 필요성도 제기해 본다.

- 한살림 30년 비전위원회, 2017, 「한살림, 새로운 30년의 비전을 묻다: 한살림 30년 비전 제안 보고서」 (2017.01)
- 한살림, 2019, 2018년 한살림 연차보고서
- 한살림, 2019, 2018년 전국한살림 조합원의식조사 결과분석보고서
-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 매년.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5, 「기후변화와 소비자협동조합」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5-04)
- Bontis, 1998; Edvinsson and Malone, 1997; Sveiby, 1997; Kaplan and Norton, 1992
- Forbes, (2016 March), 'IRIS Tackles 'Metrics Gap' To Help Entrepreneurs and Investors Measure Triple Bottom Line', <http://www.forbes.com/sites/annefie>
-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Haugh, Helen (2005)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 in Reg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2(4): 346-357

향후 연구활용 계획

- 사회적기업학회 연구논문 발표 (2021년 12월 10일 고려대)
- 서울사이버대학교 협동조합경영 교안 활용 (2022년 1학기)
-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학술지 발표 (2022년 6월 중)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지원 자료 제출 (2022년 6월 중)
- 한양대학교 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특강 자료 활용 (2022년 1학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쏘아올린 탄소중립 공정전환 모임 (난쏘공)

본 연구모임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전환에 대해 학술정보 교류 및 연구협동을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난제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총 7회 연구모임 진행)

팀장 김해동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팀원 김규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교수
팀원 박소은 연세대 대학원 대기과학과 석사과정
팀원 안지연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팀원 최세영 연세대 대학원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우리나라의 기후 취약계층 추정 및 심각도 분석

1. 서론

EU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에 따라 미국이 탄소중립이라는 기조를 진행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계획은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로 다음의 3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제구조 저탄소화, 둘째,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셋째,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公正)전환인데 여기서, 공정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을 의미한다. 즉, 탄소중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후 취약계층의 사회적 포용 개념을 의미한다.

그러나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에 있어 기후 취약계층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파악할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빈곤 문제를 어떤 식으로 포용할지는 사회적으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탄소중립 정책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고 화력발전 및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요금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8년 만에 인상한 바 있다.

에너지는 생활 필수재이며 특히, 하계와 동계에 냉난방을 위해 꼭 필요함. 따라서 에너지요금가격 상승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적정 수준의 냉난방을 못하는 에너지빈곤(energy poverty)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적정 수준의 냉난방 지출을 하지 못하는 기후 취약계층 가구는 동하계에 발생하는 온열질환 등을 비롯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되는데, 에너지 비용상승으로 인하여 기후 취약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위해서 기후 취약계층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추정할 수 있는지 개별 가구의 건강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론

본 연구는 탄소세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에너지가격 상승이 기후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기후 취약계층을 어떤 식으로 정의할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새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을 정의하는 지표를 확장하여 탄소중립 공정전환과정에서의 기후 취약계층을 정의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도 어떤식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정의할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에너지빈곤층을 정의하고 그 규모를 추정한 연구로는 진상현 외(2010), 신정수(2011), 이건민(2015), 윤태연·박광수(2016) 등이 있다. 진상현 외(2010), 신정수(2011), 이건민(2015)는 초기연구로, 해외에서 사용된 에너지빈곤 추정방법론을 소개하고 최소에너지 등의 개념으로 에너지빈곤층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윤태연·박광수(2016)은 기존에 제시된 에너지빈곤 지표를 정리하고,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에너지빈곤율을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지표가 에너지빈곤층인지 여부인지를 판별할 뿐 해당 부분을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지표는 전무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방법론들의 경우, 개별 가구의 건강상태 및 에너지효율성 등을 반

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함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 취약계층 가구를 지표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제안하고자 한다.

Charlier & Legendre(2019)는 에너지효율성 측면, 에너지빈곤의 비용측면, 난방제약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FPI(Fuel Poverty Index)를 개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지표를 아래와 같이 EPI(Energy Poverty Index)제안하고자 한다.

$$EPI = \sqrt[3]{I_C \times I_P \times I_R}$$

여기서 C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소비량, P는 가구의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 R은 가구의 건강상태 점수를 의미한다.

기존연구의 경우 특정 기준 이상은 아예 빈곤층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에너지빈곤층 정의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지표를 점수화한다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 또한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가구의 건강상태 혹은 식료품비 점수를 반영하여, 개별 가구의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라도 점수화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개별 가구의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국내 데이터로는 해당 부분을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주관적 건강상태 항목 및 우울증 척도 항목 혹은 식료품비 지출액을 활용하여 건강상태를 추정하고자 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표의 경우, 가구별로 점수 구간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빈곤 차상위 계층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기존의 지표는 대부분 연료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을 정의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 연료비를 원하는 수준으로 지출하지 못하는 가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후 취약계층 지표와 기존에 개발된 지표들을 비교 분석하여, 본 지표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신정수, 2011, 『한국의 에너지 빈곤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1-18.
- 윤태연·박광수, 2016, 『에너지빈곤층 추정 및 에너지 소비특성 분석』, 기본연구보고서, 16(2).
- 이진민, 2015, “한국 에너지빈곤 정의의 비판적 검토 및 대안적 접근,” 비판사회정책, 48, pp.248-284.
- 진상현·박은철·황인창, 2010, “에너지빈곤의 개념 및 정책대상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9(2), pp.161-314.
- Charlier, D. & Legendre, B. 2019.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Fuel Poverty.” The Energy Journal, 40(2).

연구모임 결과 및 향후 연구활용 계획

- 2020년 등장한 개념인 탄소중립의 공정전환 부분에 관하여 처음으로 젊은 연구자 모임을 진행하였음. 특히,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인원으로 구성된만큼 서로 다른 연구분야에서 바라보는 탄소중립 공정전환에 대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었음
 - 탄소중립 공정전환은 단순히 하나의 전공에서 다루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본 모임에 속한 경제학, 대기과학, 기계공학, 도시행정학과 등의 다양한 전공의 젊은 연구자들 간의 연구협력이 매우 중요하였음
- 국내·외 탄소중립 사례분석 및 선행연구 정리를 통한 우리나라 탄소중립 공정 전환의 문제점 및 대안 제시를 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미국 및 EU의 탄소세 관련 정책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음
 - 또한, 주요국가에서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취약계층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정리하였음
- 본 연구모임에서는 탄소중립 내에서도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공정전환 이슈에 대하여 기초 조사를 진행하였음
 - EU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에 따라 미국이 탄소중립이라는 기조를 진행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2월「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였음. 구체적으로, 해당 계획은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로 다음의 3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제구조 저탄소화, 둘째,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셋째,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公正)전환인데 여기서, 공정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을 의미함. 즉, 탄소중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후 취약계층의 사회적 포용 개념을 의미함.
 - 그러나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에 있어 기후 취약계층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파악할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임. 이와 같은 에너지빈곤 문제를 어떤 식으로 포용할지는 사회적으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임
 - 탄소중립 정책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고 화력발전 및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단기간에는 에너지요금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특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8년 만에 인상한 바 있음.
 - 적정 수준의 냉난방 지출을 하지 못하는 기후 취약계층 가구는 동하계에 발생하는 온열질환 등을 비롯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되는데, 에너지 비용상승으로 인하여 기후 취약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겪을 수 있음.
- 최종적으로 본 연구 모임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위해서 기후 취약계층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표 개발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최종적으로 본 연구모임은 처음에 목표한 바와 같이, 국내의 어떤 데이터가 공정전환 이슈를 잘 설명할수 있는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선정하여, EPI라는 세부지표를 개발하여 추후 기후변화 취약계층 논의에 있어서 기초를 닦았다는 면에서 학술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음

- 본 연구모임에서는 탄소세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에너지가격 상승이 기후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기후 취약계층을 어떤 식으로 정의할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새로 제안하고자 하였음. 또한,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을 정의하는 지표를 확장하여 탄소중립 공정전환과정에서의 기후 취약계층을 정의하였음.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도 어떤식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정의할지 연구는 상당히 이뤄진 바 있음(진상현 외, 2010; 신정수, 2011; 이건민, 2015; 윤태연·박광수, 2016)
-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지표가 에너지빈곤층인지 여부인지를 판별할 뿐 해당 부분을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지표는 전무하였음.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방법론들의 경우, 개별 가구의 건강상태 및 에너지효율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함에 따라서 본 연구 모임에서는 기후 취약계층 가구를 지표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제안하였음.
- Charlier & Legendre(2019)는 에너지효율성 측면, 에너지빈곤의 비용측면, 난방제약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FPI(Fuel Poverty Index)를 개발하였는데, 본 연구 모임에서는 해당 지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지표를 아래와 같이 EPI(Energy Poverty Index)를 최종적으로 제안하였음. 또한 본 연구 모임에서는 이를 에너지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지표인 TPR과 비교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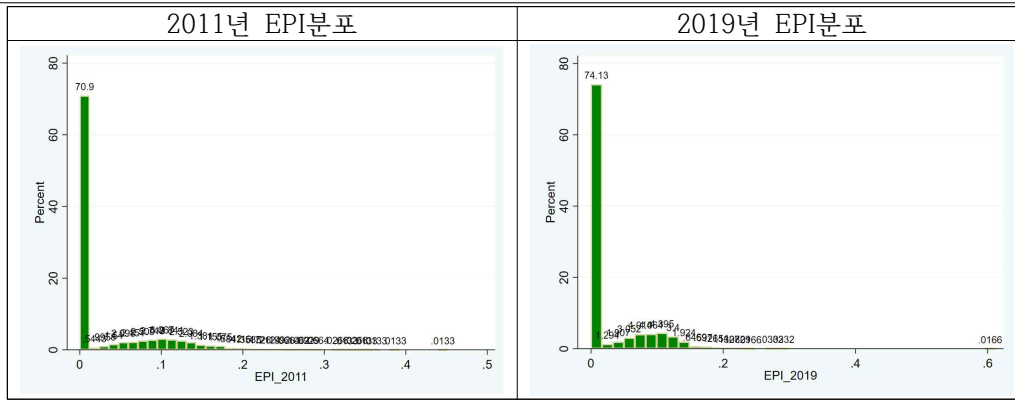
$$EPI(energy\ Poverty\ Index) = \sqrt{I_C \times I_P}$$

$$I_C = \frac{C - Min(C)}{Max(C) - Min(C)}$$

$$I_P = \frac{P - Min(P)}{Max(P) - Min(P)}$$

여기서 C : 단위 면적당 에너지소비량,
 P : $|Max(균등화\ 소득, \text{균등화 기준 중위소득 } 60\%) - \text{균등화 기준 중위소득 } 60\%|$
 W : 가구의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균등화 소득 = $\frac{\text{(월 가구소득)}}{\sqrt{\text{가구 인원수}}}$

- 한국복지패널 자료로 2011, 2019년 추정된 EPI 분포는 아래와 같음. 각 연도에서 0의 값을 가지는 비중인 70.9%, 74.13%로 점차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가구소득 관련해서,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가구가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즉,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인 에너지취약계층 가운데 소득 측면의 에너지빈곤 문제는 완화가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EPI분포가 점차 평균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즉, EPI 기준에서 에너지빈곤 심각도가 심한 가구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는 2015년 이후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사업 등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존연구의 경우 특정 기준 이상은 아예 빈곤층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에너지빈곤층 정의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지표를 점수화한다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 또한 같이 분석할 수 있음.
- 본 연구 모임에서 정리한 2가지 주요내용인 (1)기후변화 취약계층 정의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셋 및 (2)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기후변화 EPI지표 개발 등의 내용을 2021년 환경학술포럼에서 발표를 하였음. 본 연구모임은 해당 내용의 참신성 및 구체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추후 본 내용을 확장하여 정식 논문화를 진행하고자 논의하였음.
- 다만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에서 제안한 EPI의 차상위계층을 기준 중위소득 60%로 설정하고, 해당 기준의 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파악하지 않았음. 추후, 이러한 소득 기준선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EPI지표의 경우 가구별로 점수를 산출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점수 구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정의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작업까지는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EPI는 에너지 사용량에 집중하여 측정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표임.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추후,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정의 및 지표개발에 대한 학술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탄소중립 공정전환 분야에서 각 연구원이 전문성을 쌓고 논문게재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K-넷제로수호단

본 연구모임은 다양한 배경을 토대로 한 보다 넓은 시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청년 연구모임으로 이 모임을 통해 2050 넷제로를 위한 한국형 넷제로 달성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총 12회 연구모임 진행)

팀장 손가영 성신여대
팀원 박희정 유통사 근무
팀원 이지우 건국대
팀원 이한별 건국대
팀원 이혜정 한양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형 정책 방안 연구

: 분산에너지, 기후금융, 탄소세, 그린도시 분야를 중심으로

1. 서론

지난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처음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여 지난 7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나리오 3개 안 중 2개 안이 탄소중립을 이루지 못하는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1개 안에도 탈석탄 등 에너지전환에 대한 비전이 담기지 않아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실정이다.

그러나 지구 온도를 1.5°C 상승 이내로 억제하는 것은 전지구적 기후위기를 저지할 수 있는 인류의 마지노선이며,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지상목표이다. 특히, 전 세계가 COVID-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사상 초유의 의료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EU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이란 원칙 하에 ‘녹색 회복 (Green Recovery)’을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K-넷제로 수호단은 청년들의 시각에서 분산에너지, 그린도시, 탄소세, 기후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시민 연구를 진행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형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2. 본론

1) 분산에너지

에너지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우리나라는 RPS, 한국형 FIT 등을 통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계통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요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기차DR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 전기차, ESS 등 분산된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가상발전소 (VPP; Virtual Power Plant)가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가상발전소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호주, 미국, 유럽과 다른 발전환경을 갖기 때문에 해외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

(1) 따라서, 우리나라의 발전환경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해 한국형 가상발전소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 ① 해외 사례의 대부분인 수요자원을 관리하고 특정 커뮤니티 내 전력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인 수요형 VPP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거주 형태인 ▲대단지 ▲도시 ▲아파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을 선정해 아파트 면적에 따른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해 가상의 수요형 VPP 개념도를 그려보았다.
- ② 분산에너지원을 통합 관리하고 계통 안정성을 증대할 수 있는 형태인 공급형 VPP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자체별 전력 수급 현황을 비교하고 기술 수준을 적용해보았다.

(2) 또한, 가상발전소의 최종 형태인 혼합형 VPP로 나아가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전기사업법 전면 개정 ▲전력소매시장의 전면 자유화 ▲전력시장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① 현행 전기사업법은 기저전원의 역할을 하는 중앙집중형 발전을 바탕으로 해 간헐성과 분산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보편화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따라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전력수급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② 현재 우리나라의 소매전력시장은 한국전력의 독점 아래에 있다. 이러한 독점 구조는 전기소매사업의 유연화와 이해관계자의 시장 참여를 막기 때문에 전력소매시장을 전면 자유화해야 한다.

③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전력시장은 에너지 시장에 국한된다. 제한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전력시장을 다양화해야 한다.

2) 기후금융

자본의 이동은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는데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므로, 기후금융은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문이다. 따라서 범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대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녹색금융 추진 TF를 구성하는 등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권의 능동적인 기후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후금융 현황과 한계 및 문제점을 ESG 투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을 고찰했다.

(1) 우리나라의 ESG 투자 규모는 ESG 펀드 3,869억 원('20.6월 기준), ESG 채권 상장잔액 82.6조 원('20.12월 기준)으로 시장의 절대적 규모는 작지만, 최근 규모 증가 및 자금 유입 추세가 가속화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 그러나, 국내 ESG 투자 시장은 초기단계로 관련 제도 정립, 정책 및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ESG 투자 시장은 크게 4가지 문제점을 가지며, 이러한 문제점은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제공할 가능성을 초래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의 ESG 정보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상태로, 현재 상장사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비재무성 자료가 충분히 공시되고 있지 않다. 이는 평가대상 기업 전체에 대한 평가 불가와 연속적 평가 불가로 이어진다.

② 통일된 ESG 평가 기준 부재로 투자사 또는 신용평가사마다 다른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사용하여 ESG 등급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동일 기업에 대한 ESG 등급이 투자사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③ 기후금융 및 녹색금융의 '친환경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린 금융상품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존재하며, 이는 그린워싱 ESG 금융상품 출시를 야기한다.

(3) 따라서,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고 기후금융 상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든 상장사의 신속한 정보공시 ▲녹색의 정의 재정립 ▲표준화된 ESG 평가기준 마련 ▲기후금융/녹색금융 상품 정보 제공 플랫폼 통합이 필요하다.

3) 탄소세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써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회적 외부 비용을 내재화하는 교정세(corrective tax)의 형태로 탄소세를 도입했고, 최근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탄소세 도입이 요구되고 있지만, 새로운 조세 도입에 대한 저항과 다양한 사회적 논란이 대두되어 한국판 탄소세 도입에 진통이 예상된다.

(1)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과 관련하여 크게 4가지(▲과세 범위 및 세율, ▲세목(稅目), ▲소득 역진성(逆進性),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실효성)의 쟁점이 제기됐는데,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한국판 탄소세 방안을 모색했다.

① 조세제도의 기본원리인 효율성과 형평성에 근거하여 한국판 탄소세는 ▲탄소배출량의 비중, ▲탄소배출량의 산정 가능 여부, ▲배출권거래제와의 조화 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② 초기의 한국판 탄소세는 탄소배출량의 비중이 높은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부터 시작해야 하며, 향후 과세 범위는 2050 LEADS의 대다수 부문으로 점차 확대·적용해야 한다.

③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등의 지원으로 세수의 일정 부분을 활용한다면 탄소세 도입에 따른 소득 역진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그리고 기존의 우리나라 에너지세제는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량제 체계를 택하고 있어 물가 변동에 따른 실효세율을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하여 탄소세 도입 이전에 먼저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을 선행해야 한다.

① 국내 에너지 사용 비중을 고려했을 때 수송용보다 발전용 에너지에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하고, 연료별 소비 비중에서도 석유보다 석탄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등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원에 실질적인 세 부담을 가중하여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② 또한, 일몰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계획대로 폐지하고 탄소세와 통합하여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복잡한 국내 에너지 과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4) 그린도시

도시는 탄소 배출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도시 체계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중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도시를 관통하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 대한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환은 자전거 중심의 도로 체계 개편을 포함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는 3가지의 문제(▲자전거도로의 연결성 부족, ▲자전거전용도로의 부재, ▲자동차 중심의 도로 체계)가 존재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한다. 자전거 이용률은 자전거 도로 보급률과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만큼,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의 보급 및 질의 향상이 필요하다. 자전거가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가 어떻게 구획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유동인구가 많고 자동차 중심의 도로 체계를 가진 강남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여 강남구의 자전거 도로를 계획해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전개했다.

(1) 연구 방법은 ArcGis라는 GIS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권 분석, 도로망 구축 등을 진행했다. 또한 도시가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스케치업(SketchUp) 프로그램을 통해 강남구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등고선, 도로, 건물을 분류하고 레이어 그룹화 분리하여 도시 조감도를 만들었다.

(2)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도로 체계 개편을 위해 도로 다이어트를 실행, 출인 차선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자전거의 이용 편의성 및 안전을 고려하여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로 전환할 것을 전제로 자전거 도로를 계획했다.

(3) 자전거 도로를 계획할 때는 ▲기존 자전거 도로와의 연결성 ▲대중교통과의 연결성 ▲상업지구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였다.

① 자전거를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어야 한다.

② 강남구 자전거 이용 패턴을 분석해본 결과(1-12월까지의 대여 이력) 상위 10개 반납 및 대여 대여소가 지하철역 근처의 대여소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지하철역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전거 사용자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③ 자전거는 레저용이 아닌 일반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사람들이 쇼핑센터나, 음식점과 같은 상업지구에도 쉽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3. 결론

1) 분산에너지

발전환경의 특성상 한국형 가상발전소의 초기 모델은 공급형VPP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발전량과 전력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통망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해 혼합형 VPP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혼합형 VPP 도입을 위해 전력소매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과정에서 상승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반발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제도를 개편하면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경우 빠른 에너지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한다.

2) 기후금융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유입 확대와 금융 상품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상장사들의 정보공시가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녹색금융 상품의 정의가 재정립되고, 표준화된 ESG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즉 금융소비자가 기후금융 상품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보 제공 플랫폼의 통합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련 제도 및 규제 마련을 토대로, 기후금융의 목적인 저탄소 산업으로의 자본 이동이 보다 성공적으로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3) 탄소세

한국판 탄소세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교정세의 성격을 지닌 간접세의 형태로 도입해야 하며, 도입 이전에 기존의 에너지세제 개편을 선행함으로써 초기의 탄소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원 전체를 과세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 특정 에너지원에 과세 범위를 국한하지 않고 각 에너지원의 탄소배출과 사회적 외부 비용에 비례하여 세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설계해야 탄소세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린도시

강남구 자전거 사용 이력을 분석해 본 결과 상위 10개 대여소 중 4개가 테헤란로의 지하철역 인근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스케치업을 통해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의 왕복 10차로 도로를 8차로로 줄여 양측에 양방향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고, 수목을 통해 인도와 구분을 한 조감도를 제작하였다. 나아가 자전거 인프라, 지하철, 상업지구와 연계성이 높은 연속적인 자전거 도로를 고안함으로써 단순 레저가 아닌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자전거 도로 설계로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향후 자전거 도로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정책 형성 등의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분산에너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년 12월, 『공급형 가상발전소(VPP)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선화,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2019년 10월, 『국내발전소 VPP 제도 및 현황』
- 김영산, 한국경제연구원, 2017년 5월, 『전력소매시장 자율화 도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의 변화와 영향 분석: 해외 전력소매시장 개방 사례 연구』
- “[초점] ”우리보다 앞선 일본은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 나가나“”, 에너지데일리, 2021년 3월 12일
- 구자열, 홍혜빈, 한진경영연구원, 2021년 3월, 『[21-9호] 일본 수급조정시장 개설과 VPP 사업 확대 전망 외』

[기후금융]

-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2018년 8월, 『국내 ESG 투자 시장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과제』, 주간금융브리프 27권 16호, 15-17
- 류정선, 금융투자협회, 2020년 6월,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 윤지아, 자본시장연구원, 2020년 10월, 『ESG 채권 시장 현황 및 전망 보고서』
-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2020년 11월, 『국내 ESG 펀드의 현황 및 특징 분석』, 이슈보고서 20-28
-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2021년 5월, 『ESG 평가 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 이슈보고서 21-09
- 금융위원회, 2021년 2월,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
- “[초점]탄소중립은 기후금융에 달렸다①”, 에너지데일리, 2021년 5월 24일

[탄소세]

- “유럽의 코로나19 출구전략은 ‘녹색회복’”, 시사저널, 2021년 1월 28일
-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계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2019년 11월, 『에너지세계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
- 이동규, 김승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년 12월, 『우리나라 에너지세의 분배효과 연구』
- 송민경,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2018년 7월, 『에너지 과세 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계분석실 세계분석1과, 2021년 7월, 『NABO FOCUS 제34호 탄소세 논의 동향』
- 강만옥 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년 12월, 『에너지세계의 환경친화적 개편 및 지속가능한 환경재정체계 구축방안 연구』
-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자원화전략실, 2019년 10월, 『국내외 탄소세 도입 현황 및 분석』
- “ESG와 탄소세”, TAX WATCH, 2021년 1월 14일

[그린도시]

- 김용진,이경환,안건혁, 2008, 『자전거 통근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분석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국도시계획학회지 도시설계』, 9(1), 19-34
- “[단독] 강북 따릉이가 더 위험한 이유…#서울자전거도로맵”, 한국경제, 2018년 3월 13일
- “[단독]나무 심고, 녹색 식물 활용…'혁신' 없는 그린인프라”, 아시아경제, 2020년 5월 28일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50 탄소중립”,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1562>,(2021년 3월 24일)
- “[미래포럼] 그린스트리트, 도시가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경뉴스, 2017년 5월 19일
- 박효석, 오규식, 이상현, 2014, 『도시 그린인프라 확충에 따른 탄소저감 증진효과 분석 서울시를 대상으로』, 『도시행정학보』, 27(4), 1-23
- 백승현,한동엽,진홍성, 2011, 『자전거도로의 경사기준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노선 선정』, 『한국측량학회지』, 29(6), 553-559
- 서울정책브리핑, “강남개발계획”, <https://seoulsolution.kr/ko/content/%EA%B0%95%EB%82%A8%EA%B0%9C%EB%B0%9C%EA%B3%84%ED%9A%8D>,(2021년 3월 24일)
- 서울특별시, 2015, 『건강한 물순환 도시 이야기』, 1-155
- “서울 자전거도로 확 늘린다”, 한겨레, 2020년 6월 15일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통근통학 통계”, <https://data.seoul.go.kr/dataList/228/S/2/datasetView.do>,(2021년 5월 12일)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도로 현황(폭원별) 통계”, <https://data.seoul.go.kr/dataList/259/S/2/datasetView.do>,(2021년 5월 12일)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 <https://data.seoul.go.kr/dataList/276/S/2/datasetView.do>,(2021년 5월 12일)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이력 정보”, <http://data.seoul.go.kr/dataList/OA-15182/F/1/datasetView.do>,(2021년 5월 12일)
- 서울특별시, 2016,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1-189
- ““오라클내리락’강남은 울퉁불퉁하다”, OhmyNews, 2017년 12월 02일
- 윤주환 외 5인, 2009,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한국형 그린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도시 물 순환체계 중심으로』, 환경부, 1-133
- 임현섭, 2020,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도로계획을 위한 투자평가 방향』, 국토연구원, 1-42

- “[조경논단] 그린뉴딜시대, 그린인프라 전략과 사업”, 조경뉴스, 2020년 10월 11일
- 현경학, 2017, 『스마트시티 그린인프라 시스템 개발 방향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1-43
- 환경부 공식 블로그, “청주시 그린스트리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esns&logNo=110159788654>,(2013년 2월 15)

향후 연구활용 계획

K-넷제로 수호단이 진행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형 정책 제언’에 관한 연구는 언론의 기고문 형식으로 내년 대선과 관련하여 청년시민단체가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방향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도시 재생 사업 공모,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현존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현실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정책 살펴보는 사람들의 모임(보살회)

본 연구모임은 정기적으로 지역보건현안을 논의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모임이며 “모두의 건강을 위해 작동하는 보건체계”를 목표로 한다.

(총 6회 연구모임 진행)

팀장 조상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팀원 김미지 경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촉탁의
팀원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
팀원 김영수 경상남도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팀원 김진환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팀원 박유경 강원대병원 예방의학과 임상조교수
팀원 정승민 강원대병원 예방의학과 임상조교수

COVID-19 상황에서 지역의 일선 관료/연구자의 활동 경험 분석 : 지역에 하달되는 중앙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숲과나눔의 지원으로 2021년 3월부터 COVID-19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지역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각자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연구모임을 운영함. 연구모임을 통해 활동과정에서 공유한 현장 경험을 개념화하여 프레임워크를 만든 후, 실제 지역보건의료정책 사례 분석에 적용하여 지역보건 정책집행과정과 중앙-지역의 상호작용에 관한 단서를 얻음.

WHO에 의하면 건강 정책(Health policy)이란 국제, 국가, 지역 수준의 건강 목표를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결정, 계획,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임. 흔히 건강정책을 논의함이고 하면 의료전달체계, 진료비 보장방식 등의 내용(content)을 다루는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 건강정책 연구란 과정(process)과 권력(power)을 다루며 이는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행위를 뜻함.

한국 지역보건의료정책에는 하향식으로 전파할 수 있는 수직구조가 존재하여 상당수의 정책이나 사업이 지침의 형태로 보건복지부, 질병청에서 도청, 보건소, 보건지소로 전해지고 있음. 10% 남짓에 불과한 공공병원 병상은 수도권,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정책과 사업을 실천에 옮길 인력, 시설, 재정이 보건과 의료를 막론하고 부족함을 상징. 지역의 자원 부족은 지역간 불평등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지역간 불평등은 또 다시 자원 부족을 일으키는 환류도 존재함.

현재 COVID-19와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의심할 여지 없는 보건의료정책 분야 최우선 의제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많지 않고 이는 “K-방역”이라고 불리는 중앙집권적 보건정책의 성과로 알려져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대규모 유행 클러스터가 상대적으로 개발된 정도가 낮은 지역의 콜센터, 종교 시설, 정신과 폐쇄병동,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발생함은 사실은 기존의 중앙의 하향식 보건정책이 지역불평등을 포함한 기존 사회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도록 만들.

2. 연구 방법

1) 구성원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개방코딩-축코딩 수행, 맥락과 기제, 결과에 따라 구조화

본 모임의 분석자 1인이 나머지 구성원 6인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역 일선 관료/연구자의 활동 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함. 인터뷰 내용은 구성원이 인지하는 지역 관료/연구자와 기관의 역할,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생긴 어려움, 구성원과 중앙 정부의 관계, 소속기관과 중앙 정부의 관계, 대안과 제언 총 다섯 부문을 구성함. 수집한 인터뷰 내용을 범주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 비교 분석법을 사용하여 자료의 주된 내용을 개념화하고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범주화 한 뒤 이들의 상호관계를 도출하는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 절차를 거쳐 근거이론을 탐색함. 분석 내용은 모임의 오프라인 워크샵에서 구성원 전체의 확인과 검증을 거쳐 1차적으로 수정 보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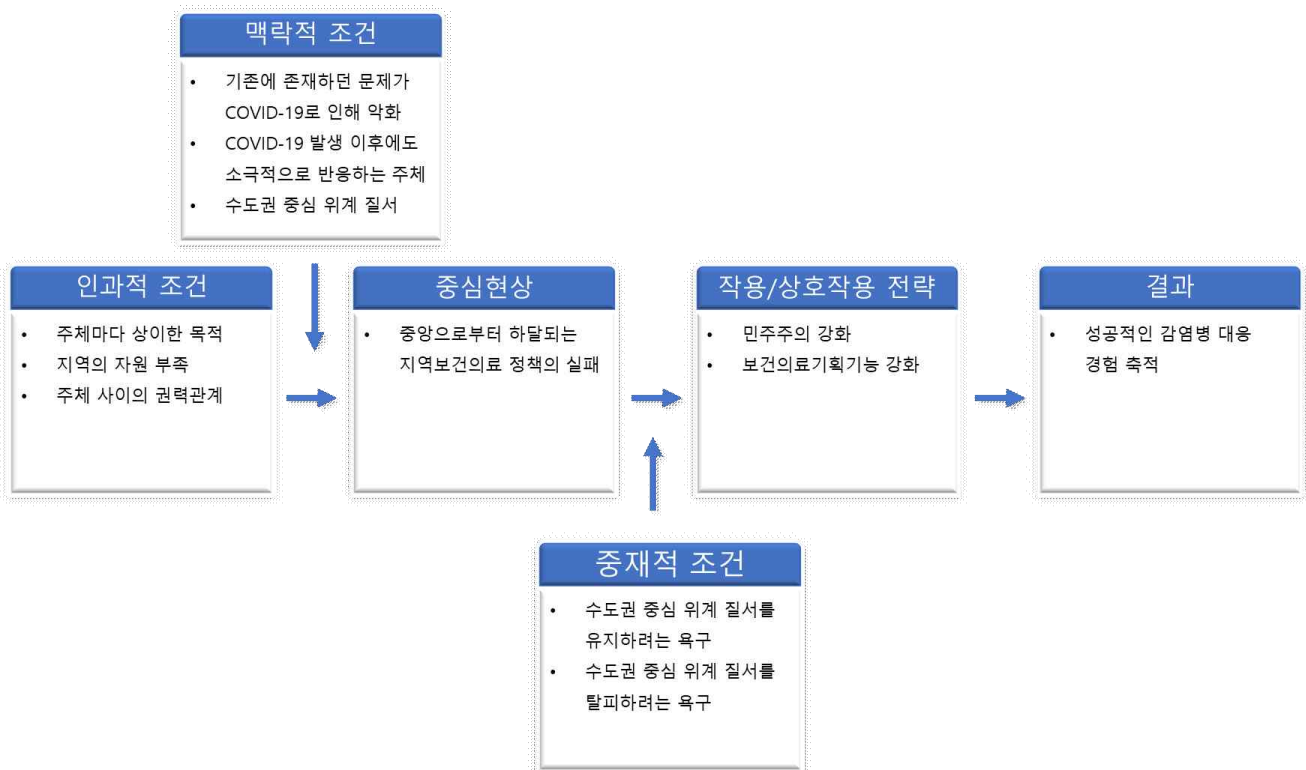
2)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지역보건의료정책 사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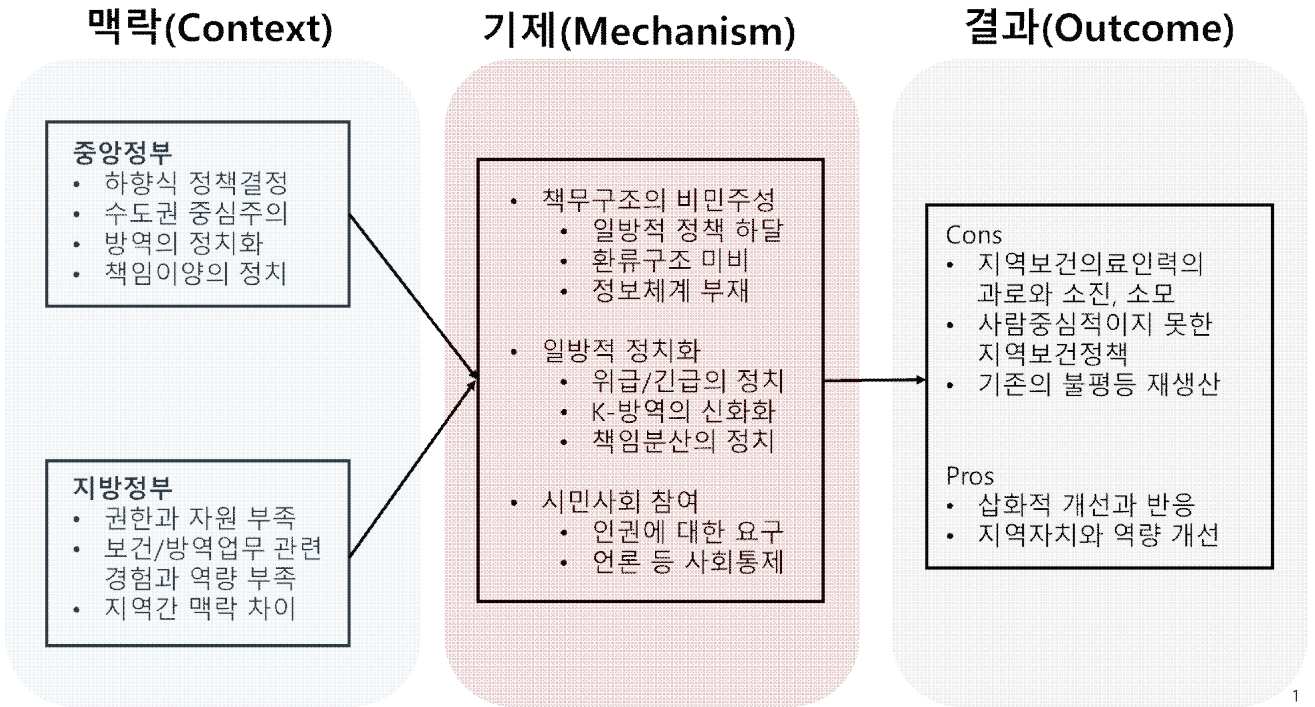
실재론적 평가는 과학적 사실주의에서 비롯된 연구에 대한 이론 중심 접근법으로, 연구가 복잡하고 개방적인 시

시스템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존의 사회적 맥락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는 평가 수단을 제공함. 인터뷰 내용을 코딩하여 얻어진 개념어들과 연관구조를 기반으로 구성원들의 워크숍을 거쳐 작성된 레임워크는 실재론적 접근의 결과로 맥락, 기제 및 결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더 다듬어질 여지가 있는 초기 형태의 이론으로 분석에 활용됨. 사례 분석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이유, 왜 일부 사람에게만 작동하는지 등의 현상을 가능한 많이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됨. 사례분석의 대상 사례는 모임 구성원이 COVID-19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일과 모임 구성원이 실무를 담당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집하여, 토론을 거쳐 지역보건의로 현장에서 가장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 세 건을 선정함

3. 연구 결과

1) 프레임워크 도출





1

2) 사례 분석

가. 의사소통지원판(AAC)

a. 경과

- ①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타지역 선별진료소, 예방접종센터의 AAC 활용 사례 언론 노출
- ② 장애인 당사자의 도입 제안
- ③ 현황 파악(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보건복지부 공문 및 AAC 자료 발송 확인
-> 지침은 “활용 권고” 수준. 안산시, 마포구 등 언론노출 지역 담당자 면담. 경남도 보건소, 감염병지원단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과다로 AAC 활용 신경쓰기 어렵다고 답변함.
- ④ 장애인권익옹호협의회 회의 소집(마산장애인복지관,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⑤ 업무분담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창원시, 경남도 협조 요청), 장애인복지관(AAC 활용 모니터랑),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애인 의사소통 어려움 관련 현황조사, 미니연구 및 언론제보), 삼별초(전반적인 업무 모니터링 및 현황조사를 위한 장애인 섭외)

b. 결과

- ① 창원시 3개 보건소 AAC 설치 및 활용 : 장애인권익옹호협의회가 직접 AAC 제작 전달 및 활용을 촉구한 결과
- ②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례 조사(장애인·치매 노인·이주민 관련 14개 기관 소통약자들을 면담) 보고서 발간,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김찬기 인턴
- ③ 언론 보도 :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4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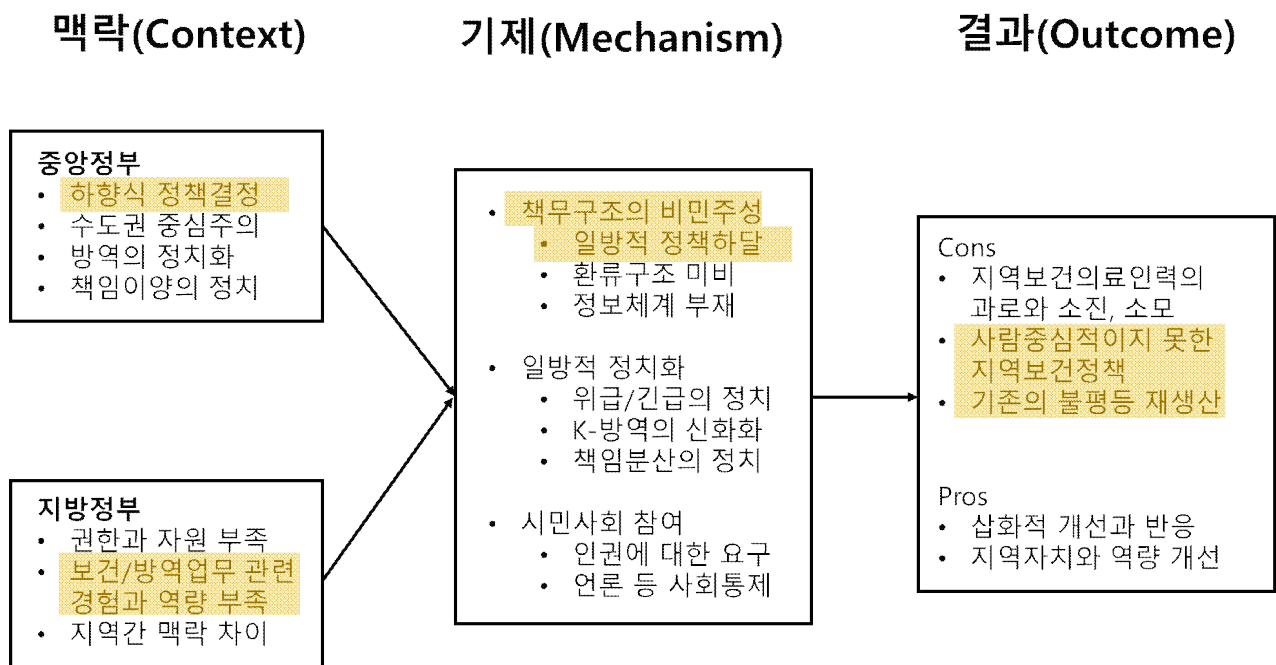
c. 향후 계획

- ① 창원시 외 경상남도 지자체 보건소 선별진료소, 예방접종센터에서 AAC 활용 촉구
- ② 보건소 뿐 아니라, 의료기관, 관공서(주민센터, 경찰서 등)도 AAC 활용 홍보
- ③ 장애인권익옹호협의회에서 제안하는 장애인 건강 관련 활동 지원

d. 함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여러 장애인 당사자, 지원단체가 요구하여 중앙(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과 같은 지침이 만들어져 지방정부에 하달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지침상의 제안사항들은 강제실시가 아닌 “권고” 수준이기에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음. 중앙의 지침은 지방정부에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전국 지자체 중 극소수만이 이러한 지침을 이용하여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돕고 있었음. 지방정부 공무원은 장애인 건강에 대한 “책무성”이 없었고, 중앙정부도 지침을 내렸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음.

다만, 일부 지역에서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 단체, 장애인 지원단체, 공공보건의료단체 등이 모인 시민 거버넌스가 작동하여 관련 지침을 확산하고 시행시키는 작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거버넌스가 없는 소도시, 군지역은 아직도 AAC를 활용하는 곳이 없음. 지방정부가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압박하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의 거버넌스를 시민들이 구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함. 이에 의식있는 언론의 도움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하향식으로 결정된 정책이 지역보건의료 현장에 전달되었으나 지방정부는 업무 관련 경험과 역량이 부족해 중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중앙정부 지방정부 어디도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문제제기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무구조의 비민주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일방적인 정책하달, 그리고 그에 따른 환류구조도 미비했음을 알 수 있음. 그 결과로 취약한 인구집단을 누락하는 사람중심적이지 못하며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능하지 않는 정책이 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음.

나. 재택치료 본격 도입

a. 경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25일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와, 델타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른 전파력 향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발표함. 주된 방역 수단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확진자 수 중심 의료대응에서 중환자 발생, 의료대응 역량,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

정부는 현재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를 전담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재택과 입원의 완충 역할로 전환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택치료를 전체 경증 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임을 밝힘. 노령, 중증, 조절되지 않는 기저질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거나 집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재택치료는 코로나19 치료와 격리를 오직 병원만이 담당하던 코로나19 초기 대응 시점에서 병상자원 활용을 위해 분화한 생활치료센터와 유사한 맥락과 지향을 가지는 자원 운영의 효율화 전략임. 초창기의 대안이었던 생활치료센터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공무원 그리고 한정된 공간 자원을 정부주도 하에 동원하는 모델로 무한정 지속할 수 없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경증 환자 관리 요령이 자리 잡은 현재 최소한도의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군에게 필요한 자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한국에서 재택치료가 가능함을 시험하여 근거를 마련한 주요 주체는 임승관 단장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으로, 재택치료 도입 시 종전보다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함. 경기도는 2021년 3월 2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사업을 시작했고 2021년 10월까지 4812건의 재택치료 실적이 발생함. 이 중 91.7%인 4202명이 재택치료의 범위 안에서 치료가 종결되었고, 생활치료센터로는 0.9%인 41명, 병원으로는 7.4%인 337명만이 이송됨. 재택치료로 격리와 의료가 분리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공백을 통제하기 위해 단기진료센터 모델을 116명에게 시험한 결과 66.4%인 77명이 폐렴 발생이 확인되었음에도 전담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16.4%인 19명에 불과함.

한편,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68세 남성이 급격한 상태 악화로 이송 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소방재난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이에 재택치료 중이라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급차 방역조치, 병상확보 등의 과정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되어 재택치료 확대를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되묻는 여론이 조성됨. 이후 서울시는 24시간 응급콜, 이송 핫라인을 도입하고 전담 구급대를 20대에서 48대로 2배 이상 늘렸으며 전담 TF와 자치구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조치를 취함.

b. 문제제기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로 이어지는 방역 수단 변화의 흐름은 감염병에 맞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흔히 사람들이 이번 사태에서 ‘과학기술’이라고 뭉뚱그려 불렀던 의료기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급격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입원치료와 감염, 사망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백신의 존재 자체로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의료기술과 상관없어 보이는 공간적 격리가 잘 작

동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 방역 기술임. 방역에 사용되는 의료 기술 또한 입원의료기 작동하도록 병상과 주거 자원을 동원하고 백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효능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접종을 받도록 만드는 것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 의사결정을 어떤 사람들이 누구 이야기를 듣고 할 것인지 같은 누가 봐도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제 묶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을 것임.

재택치료 확대의 목표가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만 있음이면 이는 잘못된 지향임. 앞으로 정부가 응답해야 할 사례의 숫자인 확진자 수는 얼마든지 다시 증가할 수 있는데, 재택치료로 사람들의 자원을 빌려 공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정부의 책임을 줄이는 것으로 여겨지면 곤란함. 이 같은 기조는 재택치료의 가능성은 일찍이 시험되고 있었으나 4차 유행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여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가내 대가족이 생기고 나서야 재택치료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정황이 있어 우려할만함.

정부는 재택치료 확대를 서두르기 앞서 인프라가 충분하지 점검해야 함. 충분한 인프라 준비 없이 재택치료를 확대하면 의료체계의 과부하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응할 수 없음.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막는 조치는 필요한 의료체계의 구성요소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연계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연습하는 것을 포함함.

재택치료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하는 방역전략의 전략의 핵심 가치는 자원 이용의 효율성임. 여기서 효율성의 목표는 번아웃 된 인력을 보호하고, 감염자 폭증에 대비해 유휴 자원을 확보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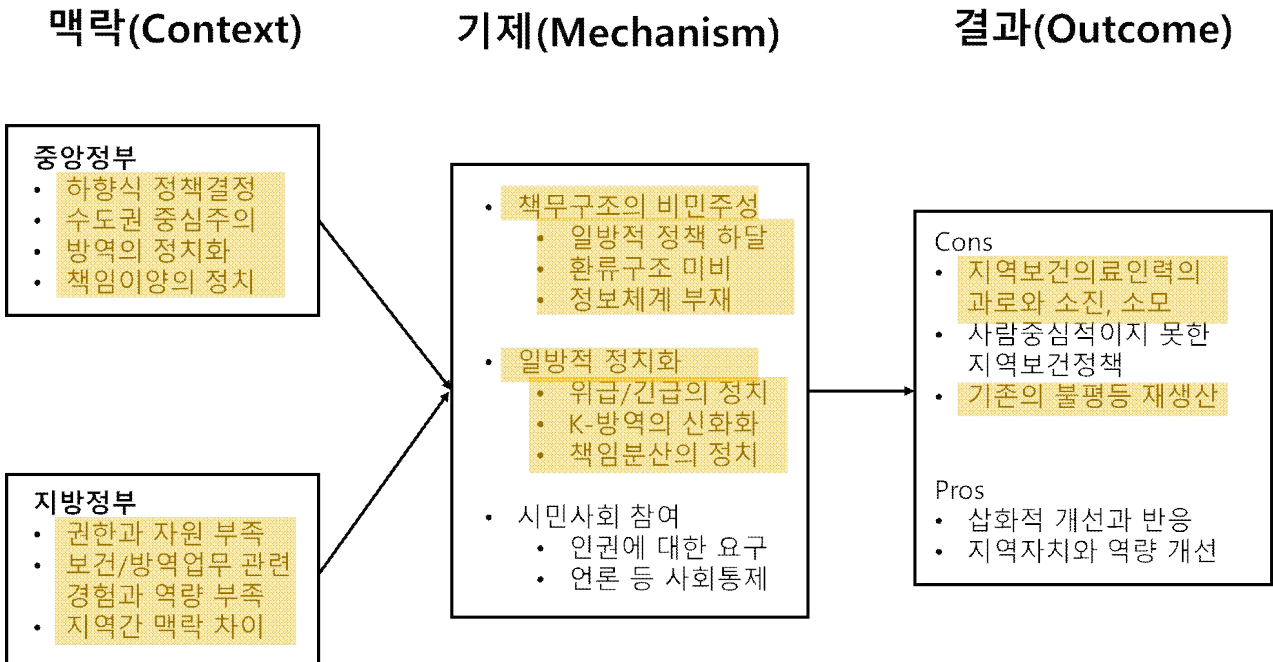
효율성이란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만드는 것임. 주된 목표 이외에 다른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면 추가 자원이 필요한데, 추가 자원 투입은 최소한의 투입이 될 수 없음. 그러므로 만약 포괄성, 다양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삼으면 자연스럽게 높은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효율성을 주된 가치로 삼는다는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부차적으로 간주하는 요소들을 배제하겠다는 선언임. 이러한 요소 중 중요한 가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함. 재택치료는 청소년·여성 쉼터에서 지내는 사람과 일상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고려하고 있는가? 집이 없는 사람에게 재택치료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많은 경우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효율성은 한정된 자원을 알맞게 배분하는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음. 하지만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방역대책은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의 구조를 공고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 정책에서 기존 기저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 의도는 그 자체로 정치적이며 체계적인 불평등을 재생산함. 따라서 효율성을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은 그 자체로 차별적임. 포괄성, 포용성, 다양성, 사람중심성을 기본 원칙으로 준수하는 효율성만이 도구적인 의미가 있음.

실험적인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공공보건 정책개입을 인구집단 수준으로 확대(scale up)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공공보건 정책개입 사례를 다룬 문헌을 분석한 결과 정책 개입 수단의 확대는 위 그림과 같이 이론적 토대, 효과 검증, 현실 세계 시험, 확산의 단계로 구성되나 현실 사례에서 반드시 모든 단계를 거치는 않으며, 검증 단계를 생략할 때에 따르는 이익과 위험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함이고 주장함. 또한, 정책의 확대는 기회주의적으로 이뤄지거나, 재정이 충당되었을 때, 혹은 숙의에 따라 재정이 확보되었을 때 결정되며, 거버넌스, 리더십, 자원, 전문성, 개입을 촉진하는 적절한 연결 기전과 책임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반 인구집단의 수용가능성과 정책 효과의 근거가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현재 한국의 재택치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꾸준히 정책을 선도하던 주체가 확진자 수 대비 비교적 소규모의 인구집단에서 효과성을 입증한 상황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구글 트렌드 검색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논의는 4차 유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21년 8월에 한국에 처음 등장하여 이제 세 달 남짓 지났으며 아직 어떤 자원이 준비되고 확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정황상 한국의 재택치료 확대 실시는 기회주의적인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치료센터 운영도 최소한의 자원을 이용하여 주먹구구

식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급격한 확장에 따른 부작용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일부 재택 치료가 사실상 방기가 아니냐는 언론의 문제제기 또한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3

재택치료 도입은 영향 받는 인구의 규모가 더 큰 문제고, 영향을 미치는 맥락과 기제 또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전 사례와 비교해볼만한 부분은 수도권 중심주의와 정치화.

재택치료는 전국이 공유하는 경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이 전달되었을 때 지방정부가 신속 정확히 반응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일부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봐야하는데, 지방정부는 모든 영역에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수 있는 이유는 책무구조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위급하고 긴급함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임. 그 결과 인력의 소진과 불평등 악화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음.

다. 코로나19로 인한 필수의료서비스 사업 중지

a. 경과

모임 구성원 중 한 명이 작년 9월 서울의 한 젠더연구자로부터 경남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코로나 때문에 중지됨은 이야기를 들었음. 경남에서 도의 건강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미처 알고 있지 못한 것이었음.

자료를 통해서 경남 어느지역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운영되는지 확인함. 경남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의령군, 산청군, 함양군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운영되고 있었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임산부 혹은 가임여성보다 비가임 여성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고령 여성이 다수 거주하는 시골지역의 인구구조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임.

○ 2019년 지역별 세부 실적

(단위 : 회, 명)

지역별	진료횟수	검진인원(연인원)			
		계	임산부	가임	비가임
총계	148	2,077	549	385	1,143
의령군	52	689	190	120	379
고성군	2	46	11	24	11
산청군	45	602	174	125	303
함양군	49	740	174	116	450

○ 2020년 지역별 세부 실적

(단위 : 회, 명)

지역별	진료횟수	검진인원(2020.08.31기준)				
		계	임산부	가임	비가임	임산배우자
총계	68	1,141	193	199	713	36
의령군	34	638	90	129	405	14
산청군	25	282	103	49	109	21
함양군	9	220	-	21	199	-

3개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현황을 확인함. 실제로 중단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함양군이었음. 코로나에 대한 지역의 대응은 매우 강력함. 군 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다수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중단되었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였음. 확진자 발생 후 군청은 해당 사업의 중단을 지시했고, 보건소는 그 지시에 따라 사업을 중단함.

보건소 담당자에게 필수의료서비스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공되어야 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 함. 담당자는 근거자료가 있음면, 보건소장을 설득해 본다고 함. 영국과 미국의 지침으로 만든 자료를 제시함. 담당자는 그 자료를 이용해서 보건소장을 설득했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은 다시 시작됨.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의 산전진찰 원칙(요약)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2020.9.17.)

□ 원칙0.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에도 필수의료는 중단없이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정부는 책임성을 가져야 하며, 미리 준비하고, 위기 발생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이 문서에서는 주로 산모의 산전진찰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넓은 범위의 여성건강 필수의료 서비스 모두가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에서 중단되지 않아야 함.

□ 원칙1. 산모는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도 평시와 같은 산전진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함.

□ 원칙2. 산모는 산전진찰 외에도 건강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 원칙3. 산모의 상태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일부 선택할 수 있음.

□ 원칙4. 취약계층에 대한 산전진찰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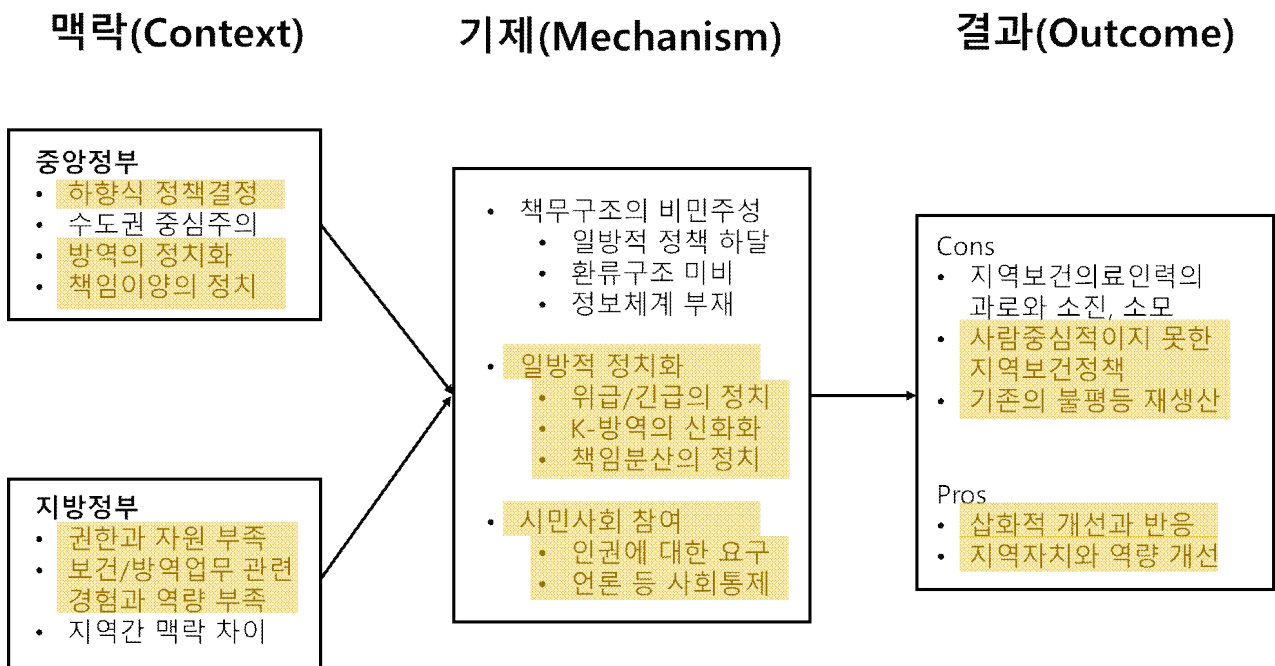
b. 함의

함양군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중단은 코로나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가진 지방정부가 대면접촉 최소화라는 정부의 방역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임. 아마도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자는 필수의료의 경우는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중단없이 제공되어야 함은 원칙을 알지 못했을 것임.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은 것

도 원인이겠지만, 지방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조연할 전문가가 없었던 것도 원인이었을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에 부담감을 느낀 함양군의 책임자들은 최대한 방어적으로 보건사업을 운영함. 결과적으로 건강서비스가 필요한 함양군의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받았을 것임.

다행히 외부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현황을 인지했고, 지역의 담당자가 현황을 파악하고 근거를 제공함. 제공한 근거에 따라 함양군은 생각보다 유연하게 반응하여 신속히 정책을 수정함.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바로 재개됨.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필수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단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을 것임.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도 내부에서 찾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곳은 없음. 경남 내부에 있는 기관들조차도 내부의 사례를 잘 알지 못함. 예를 들어, 병원이 없는 외딴 섬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들을 진료하는 경남의 병원선도 코로나로 인해 운영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는데, 이를 도의 건강정책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인지하지 못함. 불명확한 근거로 중단된 병원선으로 인해, 섬 주민들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함.



지역정부가 권한을 이용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례도 있으나, 확진자 수로 나타나는 코로나19 방역 통제에 자원이 필요하니 다른 사업을 중지한 것으로 보임. 확진자 수를 통제하는 K-방역의 중요성과 다른 필수의료서비스의 격화된 지위가 대비가 되는 사례. 또한 이 사례는 특히 시민사회집단의 참여를 통해서 사건에 대한 해결을 이끌어냈는데, 사건 해결을 넘어 이 경험이 역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있음

4. 토론

건강불평등, 만성질환,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보건의료체계 강화는 전 세계 건강정책 연구자들의 오래된 현재진행형 숙제지만,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도입 이후 많은 정부들이 작은 정부, 시장화, 민영화, 외주화를 지향하게 되었고, 겉보기에 문제가 없는데 돈을 벌지는 못할 망정 추가 자원을 들여야 하는 보건의료체계 강화는 변화를 위한 동력을 얻기 어려웠음.

다양한 정책이 건강에 관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건부 이외의 정부 조직은 건강 정책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국의 건강정책을 정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집단은 보건복지부이며 지역보건의료정책은 대체로 중앙에서 정해진 내용이 지침이 되어 지역 보건소에 하달되어 집행됨

신종 감염병인 COVID19 팬데믹이 만든 위기 상황은 보건의료체계를 분석해야 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지역에서 관련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지방 정부와 정책을 작성하고 하달하는 중앙정부 등 정부 행위자의 역할이 전에 없이 가시화되어 정부 조직의 역할과 실제 수행을 비판하고 의제화하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생긴 것으로 보임.

5. 결론

COVID-19 상황에서 종전부터 존재하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현장관료의 수도권 중심 위계질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핵심 주체들이 지역보건의료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맥락적 조건을 제공함. 지역 간 자원 불균형이나 장애로 인한 접근성 제약과 같은 기저의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이는 취약한 사람들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음

지역의 보건정책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이를 기술적으로 돕는 연구자들은 예산과 인력 부족, 업무 과중,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기준을 부과하는 중앙 정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음.

하향식 정책이 지속되는 데에는 방역과 보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환류되지 못하고, 불평등과 자원 격차를 고려하는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가운데 관료적 정책집행이 지속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지역에서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담당자들은 중앙의 지침을 준수하지만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자원과 권한이 부족한 경향을 보임. 시민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개선 여지가 있지만 지역에서 건강과 보건의 정치화 수준은 낮고, 수도권중심적 의사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칠 권력을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향후 지역보건 정책집행과정과 중앙-지역의 상호작용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고민이 필요함.

향후 연구활용 계획

일선의 관료와 연구자들은 예산과 인력 부족, 업무 과중, 지역 현실의 제약에 따른 정책 실현 가능성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중앙으로부터 하달되는 보건의료정책을 지역에 적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음. 효과적인 중재를 위해 맥락적 조건의 핵심 요소이기도 한 수도권 중심 위계질서를 해결해야 함. 문제 해결 전략으로 정책과정 참여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와 수요 파악, 자원 동원 등 보건의료 기획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 발생시 선제적인 대응으로 정부 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불평등의 악화를 예방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임. 풀씨연구회를 통해 수립된 모임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현장 활동과 상호 환류 체계는 중앙-지역 상호작용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 생산의 기반이 될 것임.

문과문

환경, 보건, 안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는 모두 직접적으로 ‘몸’과 관련되어 있다. 단순히 ‘인간’이 아닌 ‘몸’으로 결부시킨 것은 환경, 보건, 안전 모두 인간의 신체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몸이 아닌 ‘인간’이라고 규정하고 세 가지 키워드를 연결시켰을 때는 그 연구 폭이 넓으며, 또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몸’과 결부시켰을 때, 연구는 더 실체성을 가지게 된다. 이 실체성이 어떻게 문학과 문화 텍스트에서 환경, 보건, 안전이라는 개념 아래 형상화되는지 파악함으로써 본 연구모임을 통해 연구의 가치를 확보하려 한다.

(총 17회 연구모임 진행)

팀장 유현성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팀원 서동민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영화이론 석사과정
팀원 용석원 경동대 강사
팀원 이상우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팀원 이 인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팀원 정미경 건국대 문학예술치료학과 석사수료

문학과 문화 텍스트에서 환경, 안전, 보건과 몸의 서사 찾기

: 재난적 사태와 호모 사케르

1. 서론

본 연구는 숲과나눔에서 연구지원을 받아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수행한 연구 결과물들로 각 연구자들이 재난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안전, 보건, 환경이라는 세 가지 분야를 연구한 성과들을 모아놓았다.

‘재난’이라는 특수성

‘재난’은 환경, 보건, 안전에 직접적이며 개별적인 특수성을 나타나게 만드는 일정 현상과 상황이다. 이 특수성 속에서 환경, 보건, 안전은 서사화되며 일정 부분 의미를 탈색시키거나 획득하기도 한다. 특히 ‘재난’은 그 원인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사회적 재난, 인재 또는 자연적 재난으로 구분한다. 이때 환경은 보통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환경을 자연물로서 정의하고 바라본다면, 환경은 그저 변화할 뿐, 특정 결과물을 남기지 않는다.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보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재난적 상황을 맞이한 보건 실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안전 개념 역시도 더욱 확장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인간의 ‘생명’과 귀결되는 개념들이다. 이 3가지 개념들 모두 인간 존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인지하게 만드는 선형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재난의 발생은 이 선형적 틀을 재인지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기존에 충분히 사유하였다고 믿고 있었던 믿음에 균열을 내는 것이다. 이 균열을 봉합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나름의 서사성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재난’이 3가지 개념에 특수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계기와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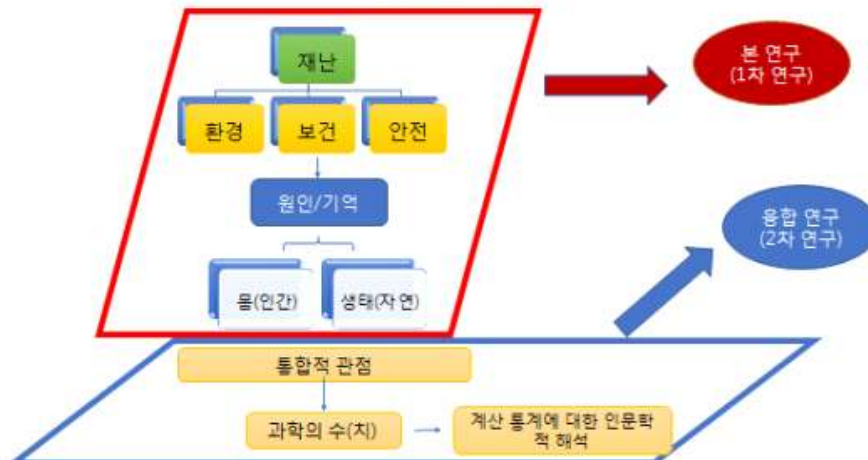
이렇듯, 연구 계기에 있어 재난적 상황의 초래는 3가지 개념에 큰 영향을 준다. 그리고 보통 환경, 재난, 환경/보건/안전, 몸이라는 서사적 종결을 맺게 된다. 즉 재난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서사로 규합하면서 하나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몸은 결과물로서 기록되는 생체물이다. 몸에 축적된 각종 오염 수치, 그리고 정신적인 기억들은 모두 재난이 만들어낸 서사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재난은 정치적 사건의 서사이다. 결론적으로 ‘서사’라는 관통 관점을 통해 우리는 몸의 서사라는 개념과 더불어 재난의 정치적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범주

연구 범주는 재난, 환경, 보건, 안전의 큰 개념들, 그리고 몸과 생태라는 하위 개념 연구가 1차 범주이다. 추후 이 연구가 지속될 경우 통합적 관점을 세워 융합 2차 연구, 과학자들과 함께 인문학자들이 그 의미를 밝혀 낼 수 있는 후속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론 : 연구 범주



재난의 개념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이 구분되어 있지만 본 연구 관점에서는 크게 구분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환경, 보건,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재난은 모두 인간에게 영향과 피해가 가는 사태이기 때문이다. 재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 1) 재난이란 자연, 사회의 복합적인 결과물로서 인간과 사회적 구성에 영향과 피해를 끼치는 사태와 현상을 지칭한다.
- 2) 재난은 일련의 서사적 관련성, 인과성이 존재하며 재난이 일어난 시점에서는 정치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이지 않지만 그 사후적 맥락에서 재난의 성격이 규정될 수 있다.
- 3) 재난의 결과는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재난에 대해서 자연은 변화할 뿐 결과적으로 남겨지지 않는다. 반면 재난의 결과물은 인간 사회의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일종의 결과물을 남긴다.

환경의 개념

환경은 내부와 외부의 입장에서 그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 1) 주체(내부)의 입장에서 환경은 주체가 노출된 주변부 또는 구조를 의미한다.
- 2) 외부의 입장에서 한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범주에서의 변화와 내부물의 위치 변동을 표시하는 것이 환경이다.

본 연구는 인간, 또는 호모 사케르란 개념을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1)의 의견에 맞춰 진행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1)의 개념을 주되게 사용하나, 환경, 보건, 안전이라는 유기적 관계성(인간 중심적 관계)에 따라 개념적으로 변동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자연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보건의 개념

보건은 인간의 사회적 활동 및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제시된 사회 보장성 개념으로 ‘건강’이라는 개념을 척도삼아 인간의 활동과 그 양식을 규정한다. 보건은 인간 사회에서만 쓰이는 개념이며 자연에서 보건 호근 건강이라는 개념은 사용되지 않는다. 특히 반려동물, 야생동물 보호의 경우 인간의 맥락에서 해석된 것일뿐, 자연의 입장에서보면 건강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은 또한 국가 정치적으로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생명 보장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생명 정치와 깊은 연동성이 있다.

안전의 개념

안전은 벌어지지 않는 일로부터의 현재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해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안전은 인간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의식장치이자, 이데올로기이며 울리히 벡이 말하는 위험사회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안전은 또한 인간의 영속성을 위해 국가가 선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존엄이다. 다만 안전은 아직 벌어지지 않는 미래적 사건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경향이 있다.

몸의 개념

재난의 관점에서 몸은 환경, 보건, 안전의 서사가 각인되고 기록되는 종이 형질의 생체물이다. 몸은 단순히 육체/신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신 역시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몸에 기록된 재난의 성격 형태들에 대해 일련의 서사성을 부여하며 몸의 기록이란 결국 몸에 축적된 과학적 수치, 혹은 재난에 대한 기억을 의미한다.

결론_재난적 호모 사케르들

호모 사케르는 법이 제외한 주체들, 난민 재난민 등이 그러한 존재이며 법적 예외 상태에 놓여진 주체들을 말한다. 재난적 호모 사케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이유는 재난의 정치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함에 있다. 재난은 그 당시 시점에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이지 않지만 사후 처리 문제에 있어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결국 환경 보건 안전은 모두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재난적 호모 사케르의 규정은 역으로 환경 보건 안전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살균사회 : 코로나 이후 환경 인식

유현성

코로나 이후의 환경과 우화들

코로나라는 펜데믹 사태에 우리의 첫 면역학적 반응은 다름아닌 우화적으로 사태를 받아드렸던 것이다. 코로나는 결국 인간의 오만으로 인해 탄생한 재앙이며 ‘신의 벌’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현대의 신화’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이런 우화화는 코로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환성적 봉합’이며 과학적 사실로 그것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이 ‘신의 벌’은 두 가지의 의미를 충족시킨다. 하나는 인간의 오만으로 인한 징벌로 이해하는 의미, 또 다른 하나는 이 ‘신의 벌’을 통해 나타나는 자연의 회복현상이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인간 활동이 줄어들면서 환경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자주 이슈로 다뤄져 왔다. 이것은 인간이 곧 ‘지구의 병균’, ‘지구의 오염물질’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시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재난적 상황을 우화화 했을 때 나타나는 신적 존재의 ‘징벌’은 곧 어떤 죄에 대한 벌이다. 환경보호자들도 이러한 우화화를 통해 자신들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징벌’이 단순히 인간을 벌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점이다.

즉 우화화된 코로나 사태의 ‘징벌’적 상징은 오히려 자연, 환경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간에 대한 자연의 멸滅함은 곧 자연에 대한 회복’을 의미한다. 이전의 전염병적 재앙들, ‘흑사병’은 코로나 사태와는 다르게 단순히 ‘신의 징벌’, ‘종말 이전의 단계’로 인식되어 왔다. 중세 시대에서 ‘자연’은 신의 영역이면서도 동시에 신이 ‘인간을 위해 창조해낸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의 징벌’이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었다. 하지만 ‘스페인 독감’과 같은 근대에 이르러 발생한 세계적 규모의 전염병의 경우 자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이 코로나 사태가 유발시킨 것은 다름아닌 ‘자연 환경’에 대한 인간의 변화된 인식이다. 그것은 자연을 ‘신적 존재’로 우화시킴과 동시에 자연 환경을 ‘과학적 존재’라는 양가적 측면을 동시에 받아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한에서 출발한 이 ‘코로나 사태’는 사실 발생 이유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이유를 차치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만 탐구하려 한다. 코로나 사태가 보여준 이 재앙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위험사회에 대한 면역학적 반응, 살균사회

인간이 오염을 인식한 것은 근대사회 이후였다. 위생과 안전, 보건이 강조되면서 문명이 생산한 오염 물질들을 ‘불결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배출하고 정화하는데 힘을 썼다. 초기 대응 형태는 그저 자신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나 자연에게 맡겨버리는 형태였다. 그런데 후기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생산해 낸 오염 물질들을 자연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자, 문명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세운다. 오염 물질 생산 빈도를 낮춘다거나, 오염 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 처리물들이 그것들이다.

울리히 벡은 (물론 과학 기술에 발전에 따른 위험성을 강조했지만) 이러한 양태로부터 오늘날 사회가 ‘위험사회’에 도달했다고 진단한다. 근본적으로 위험사회는 우리에게 환경 오염에 대한 경고를 내포하고 있다. 위험사회는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현대인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몰고 왔다는 것을 경고한다. 근대화 초기 단계에는 풍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근대화 후기로 갈수록 위험요소는

더욱 커지게 됐다. 즉 사고의 확률은 아주 낮지만 그 사고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재난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를 안전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살균사회이다. 과학제일주의로 파생된 이 ‘살균사회’는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오염 물질에 대한 살균 처리, 혹은 정화 처리를 통해 우리를 지키려는 사회 면역학적 반응이다. 살균사회는 자연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즉각적인 살균을 통해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는 구조다. 대표적 현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활용하지만, 그것에 대한 오염처리는 과학적으로 아주 불가능하다. 다만 그저 매립함으로써 그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우리는 이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재구해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살균사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바이러스라는, 생물학적 변종으로 인한 인간의 피해는 ‘살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자연의 ‘우발적 돌출’에 기대어 있기 때문이다. 자연적 발생에 대한 살균적 태도는 인간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어떠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이 자연적 발생에 대한 인간의 과거 자연에 대한 죄들은 이중적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하나는 우리가 자연을 간과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이 자연적 돌출에 대해 인간의 반성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편 이러한 ‘살균사회’는 어떻게 우리 사회의 면역학적 반응으로 자리잡았는가? 그것은 한병철이 말하는 ‘긍정사회’의 또 다른 형상으로서 나타난다. 과학기술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 곧 ‘살균사회’를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의 과학기술이 오염 물질을 살균, 정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양산하는 것이다. 과학에 대한 이러한 긍정은 또 다른 잉여물들을 창출해낸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살균 사회가 ‘위생’적 반응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 친화적이지도 않으며 자연 파괴적이다. 질병과 오염으로부터의 탈출은 인간에게 끊임없는 꿈이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오염 물질에 대한 살균력, 정화력은 매우 높아졌다. 그것은 ‘깨끗하다’라는 인간적 개념으로부터 온다. 깨끗함은 우리에게 ‘면역’을 선사해 주지 않는다. 자연은 ‘깨끗’이라는 개념과 멀다. 그곳은 온갖 세균과 박타리아, 그리고 더러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자연이 인간이 인식하는 ‘오염’ 더러움으로부터 선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순환 구조이다. 배설물은 땅에 묻혀 영양분이 되고, 그 영양분을 받아 식물이 자라고 식물은 초식동물이 섭취하며 그 동물은 육식동물이 먹고 그 육식동물은 배설을 통해 다시 땅에게 돌려준다. 자연은 이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자연적 돌출인 ‘코로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균이나 자연에 속하지 않는 중복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의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살균적 반응이 처음엔 드러났지만 이후에는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접하게 됨으로서 우화화, 혹은 신화화된다.

자연은 절대적으로 ‘깨끗하다’는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연은 오히려 더럽고 위험하며 복잡한 구조를 가진 영역이다. 우리가 자연을 깨끗이! 라는 슬로건은 매우 인간중심적인 사고다. 자연은 순환의 구조를 통해 개별적 생명들이 이동하고 빈자리를 채우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연을 하나의 거대한 순환구조물로 파악한다면 이 ‘자연적 돌출’은 그 순환계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식이 순환구조물, 프렉탈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 돌출에 대한 해석을 우화로서 의미화시킬 수밖에 없다. 한편 살균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교리는 바로 ‘더러움’이다. 더러움은 위생학적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살균사회는 인간의 ‘건강’ 몸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면역학적 반응이다. 살균은 자신이 생산한 오염물로부터 인간적 혹은 문명적인 반응이다. 그런데 이와 다른 사회적 반응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자연 친화적 사회’이다. 자연을 하나의 회복해야 할 무엇으로 보고 자연을 가이아적인 시각으로 보는 태도이다. 이는 오염 물질의 방출 빈도를 낮추거나, 자연이 해결할 수 있는 오염 물질로 변환하는 인간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가이아적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대안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자연이 문명의 이기로 생산된 오염물질들을 자연 정화의 구조로 편입시키려는 사고관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이아적 태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을 ‘인간의 이기로 오염된, 회복해야 할 무엇’으로 보는 태도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을 ‘회복해야 하는 몸’으로 보는 태도다. 우리 인간은 병균이며, 이 병균으로 인해 자연이 ‘아파’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가이아적 태도는 자연이

모든 것을 받아드릴 수 있다는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연은 모든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자연은 그저 순환 구조물이다. 생태계란 자연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다. 문제는 이 구도가 '자연 VS 인간'이라는 이항 대립적 구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인간의 문명이 언제부터 자연의 반댓말이 되었는가? 그것은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자연을 개발하고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본 근대사회에 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 자연에 대한 입장을 근대적 태도에서 보는 것이다.

살균사회는 이러한 근대적 태도를 그대로 수용한다. 우리가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미리 오염 물질들을 살균, 정화처리하면 자연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살균, 정화처리는 우리의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숨겨져 있다. 즉, 오늘날 자연 친화 사회조차, 살균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자연'에 대한 태도가 '생존' 욕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연의 파괴는 인간의 종말을 예언한다. 오염 물질 역시 인간의 종말을 예언한다. 우리가 자연을 복구하고 회복하려는 태도는 바로 우리의 생존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살균사회는 아주 기초적이고 인간적인 반응이다. 우리 눈 앞에 놓인, 당장의 '더러움'을 해결하기 위한 살균적 반응은 '오염물질'을 그대로 두고 '깨끗함'으로 포장하려 하는 강박증이다. 우리는 어떤 방식(살균적 반응과 자연 친화적 반응)이든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멀리, 정확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살균'은 매우 인간중심적인 태도이다. '살균'은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한 면역학적 반응이다. '살균' 방식을 통해 우리의 몸을 지키려는 태도는 오히려 오염 물질에 '깨끗함'이라는 개념을 포장시키려는 시도와 같다. 문명 사회의 입장에서 '깨끗하게 처리된 오염물질'은 여전히 '오염물질'일 뿐이다. 자연에게 우리가 '깨끗하게 만든 오염물질'을 준다고 해서 자연은 그것을 '깨끗한 생태계의 일부'로 받아드리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우리는 이 살균사회의 태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페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자연'에 대한 우리의 종교적 태도는 원시 시대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이 태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와 '자연'을 가이아적인 무엇으로 보는 태도로 이어졌다. 그렇게 되다보니, 우리의 문명은 자연과 대립적인 구도를 가지게 되었다. 사실 '자연'은 애초에 자연이 아니었다. 자연은 우리가 만든 개념이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자연'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이데올로기적 태도는 우리에게 '마치 자연이 인간의 부산물들을 모두 정화시킬 수 있고 받아드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대체로 우리는 자연과 문명을 이항대립적인 구조로 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항대립적인 구도를 떠나야 한다. 그렇다고 필자는 자연에게로 귀속을 주장하지 않는다. 애초에 '자연'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이제 자연을 탈출한 개별적인 존재자들이다. 이들이 다시 자연으로 귀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에 가깝다. 인간이 만든 과학과 그 부산물들, 인간중심사고는 우리에게 존귀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 문명과 자연이라는 대립적 구조에 있어 하나의 '왜상', 혹은 '얼룩'이 되면서 이 두 대립적 구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해낸다. 코로나는 자연도, 문명도 아닌 새로운 돌출점으로 나타난 '징벌적 존재로서 신적 대리인'이다. 과연 우리가 스스로 부여한 이 존귀성을 해치지 않고 자연과 문명의 대립적 구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것은 '문명'을 하나의 자연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문명은 '자연 현상'이다. 문명을 하나의 생태계적 구도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굳이 이항대립적인 구도를 택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애초에 '자연적'이었다.(그렇다고 자연이 아니다.) 자연은 인간의 문명을 만들게 '두었다'(!) 만약 가이아적인 태도에서 본다면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

까? 더 많이 고민해야하는 지점이지만, 우리의 문명은 상당히 ‘자연스럽다’ 인간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당장 눈 앞에 있는 오염 물질에 대한 살균적 태도를 고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움에 우리는 ‘인위성’을 주장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우리는 자연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또 다른 자연으로서 문명을 주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더러움’을 받아들이야 한다. 더러움에 대한 면역학적 반응의 태도를 수정하고 ‘더러움’이 주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아야 한다.

‘인류세 종말’ 서사와 한국 환경 웹툰의 가능성: 김규삼 「하이브」를 중심으로

이상우

본 연구는 한국 웹툰에 나타난 ‘인류세 종말’ 서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 환경 웹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웹툰이란 용어가 창안된 2000년대 초반을 필두로 한국 웹툰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주목할 부분은 판타지, 액션, SF가 복합적으로 섞인 웹툰에서 등장하는 종말 서사다. 다수의 웹툰에서 나타나는 종말은 인류가 스스로 벌인 환경 파괴, 인재 등을 통해 멸망한다는 서사를 공통분모로 나눠 가진다.

‘인류세’는 2018년 9월 유네스코 뉴스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다. 인류가 지구상에 처음 출현해 오늘날까지 약 1만 년간 쌓은 흔적인 방사능, 플라스틱, 콘크리트, 온실가스 등이 후대까지 지구에 남아 현 인류의 시대, 즉 ‘인류세’(Anthropocene)를 형성할 것이라 가정하면서 온 용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가 스스로 벌인 인재(핵전쟁, 원전 폭발 등), 환경 파괴, 기후 변화 등으로 야기된 웹툰 속 종말 서사를 ‘인류세 종말’ 서사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김규삼의 「하이브」(이하 하이브)를 중심으로 ‘인류세 종말’ 서사의 특징을 규명한다. 하이브는 가상의 근미래 지구의 기후 변화로 인해 거대 곤충들이 등장하여 인류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웹툰이다. 특히 작중의 종말은 자연적 형태가 아니라 핵폭발, 기후 변화 등 ‘인류세 종말’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웹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이후 웹툰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작품 내에서 벌어지는 서사 양상이 환경 문제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웹툰의 종말 클리셰가 생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사유될 수 있을지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인류세 종말’ 서사를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나아가 한국환경 웹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1. 들어가며

웹툰이란 용어가 창안된 2000년대 이후 한국 웹툰은 산업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네이버 웹툰은 세계 기준 사용자가 4000만명을 넘어섰고,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을 운영하는 포도트리는 국내 월간 사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카카오 페이지는 누적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작품이 614개에 달하며,¹²⁾ 스마트폰 사용자의 20%, 나아가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30%가 웹툰을 이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바 있다.¹³⁾

그간 웹툰에 대한 연구는 산업적인 성과와 장르에 대한 본격적인 모색을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 이 중에서는 각 장르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기도 했으나, 기존의 웹툰 작가, 독자들이 소비하는 장르 속에

12) 김범수, 「만화 시장 1조 시대 연1등 공신... K웹툰 열풍도 이끌어.」, 『조선비즈』, 2018년 2월 15일.

13) 김재필, 성승창, 홍원균, 「웹툰 플랫폼의 진화와 한국 웹툰의 미래」, 『서울:kt경제경영연구소』, 2013.

나타나는 표현 양상과 소수자 혐오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에서의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¹⁴⁾

흥미로운 점은 판타지, 액션, SF, 현대판타, 회귀물, 서로판 등 다양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종말 서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다는 점이다. 특히, 다수의 웹툰에서 나타나는 종말은 인류가 스스로 벌인 환경 파괴, 인재 등을 통해 멸망한다는 서사를 공통 분모로 나눠 가진다. 이러한 종말 서사는 단순히 극화된 형태의 종말이 아니라 인간이 벌이는 환경 파괴가 어떻게 인간의 종말을 야기하느냐를 성찰하고,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인류가 환경에 끼친 영향이 도리어 인류 문명의 존속에 어떤 영향을 되돌려주느냐를 사유한다는 점에서 종말 서사는 환경 웹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녹색 문학, 환경 영화 등의 단어가 그리 낯설지 않은 작금에 환경 웹툰이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하게 들린다. 또한, 환경 웹툰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정립이 시급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 웹툰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인류세’ 나아가 ‘인류세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웹툰을 주목한다.

‘인류세’는 2018년 9월 유네스코 뉴스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다. 인류가 지구상에 처음 출현해 오늘날까지 약 1만 년간 쌓은 흔적인 방사능, 플라스틱, 콘크리트, 온실가스 등이 후대까지 지구에 남아 현 인류의 시대, 즉 ‘인류세’(Anthropocene)를 형성할 것이라 가정하면서 온 용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가 스스로 벌인 인재(핵전쟁, 원전 폭발 등), 환경 파괴, 기후 변화 등으로 야기된 웹툰 속 종말 서사를 ‘인류세 종말’ 서사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김규삼의 「하이브」(이하 하이브)를 중심으로 ‘인류세 종말’ 서사의 특징을 규명한다. 하이브는 가상의 근미래 지구의 기후 변화로 인해 거대 곤충들이 등장하여 인류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웹툰이다. 특히 작중의 종말은 자연적 형태가 아니라 핵폭발, 기후 변화 등 ‘인류세 종말’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웹툰에 나타나는 ‘인류세 종말’ 서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 환경 웹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 ‘사건’으로서의 환경 문제

1) 사건 하나, 오존에 구멍이 뚫렸다. (ozone hole)

1974년 마리오 몰리나와 셔우드 롤랜드는 CFC(염화플루오린화탄소) 대기권의 오존을 고갈시킨다는 연구를 발표했다.¹⁵⁾ 미국 듀폰사의 상품명인 ‘프레온 가스’로 널리 알려진 이 물질은 인체에 독성이 없고, 불연성을 지닌 화합물로 냉장고, 에어컨 등의 냉매, 스프레이의 분사제, 우레탄 발포제, 반도체의 세정제 등 각종 산업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지닌 CFC는 대기 중에 방출되었을 때, 성층권까지 올라가 그곳의 오존층을 파괴했다.¹⁶⁾ 70년대 초부터 대두된 학계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까지 오존층 파괴문제는 대중으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과학적으로 오존은 3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기체다. 오존은 성층권에서 태양광선 중 가장 해로운 자외선 파장 UV-B의 대부분을 흡수한다. 이러한 오존층 파괴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외선의 영향으로 단세포 미생물이 소실된다는 것이다. 미생물은 사실상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외선을 담은 햇빛으로부터 취약하다. 오존층 파괴로 자외선이 증가하면 미생물이 소실된다. 미생물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생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악영향이 돌아간다. 중국엔 먹이사슬이 파괴되고 생물 종의 다양성이 축소된다. 이를테면 식물성 플랑크

14) 조익상, 「웹툰의 현재 : 플랫폼 자본주의와 여성 혐오」, 『문학과학』 104, 문학과학사, 2020. ; 서은영 「로맨스 판타지 웹툰의 부상과 재현 : #서로판, #영애물, #집착남물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16(3),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20. ; 김윤종, 문안나,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의 양태와 맥락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 한국콘텐츠학회, 2020.

15) Mario Molina & F. Sherwood Rowland, “Stratospheric Sink for Chlorofluoromethanes : Chlorine-atom Catalyzed Destruction of Ozone” Nature, June 28 (1974)

16) 기상학백과

톤이 줄어들면, 동물성 플랑크톤이 줄어들고,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던 어류 개체가 감소한다.¹⁷⁾

그러나 문제는 오존층 파괴가 초래하는 결과가 대중에게 전달되기엔 막연한 메시지였다는 점이다. 학계에서 오존층 파괴와 CFC의 관련성이 속속들이 입증되고, 미국에서 CFC 감소에 대한 규제가 통과된 1980년대 초¹⁸⁾ 전 세계 CFC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돌입한다.¹⁹⁾ 미국에서 행해진 CFC 감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개발 도상국 등에서 CFC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킨 것은 1985년 『Nature』 지에 발표된 조 파먼, 브라이언 가드너, 조너선 생클린의 연구였다.²⁰⁾ 그들은 남극 상공 오존층의 집적도가 몰리나와 롤런드의 예상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오존층은 1977년과 1984년 사이에 40%나 감소했다. 이들의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오존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오존 구멍(ozone hole)이라는 ‘사건’으로 명명한 것이다. 이들의 연구 이후 나사에서는 위성을 통해 지난 6년간 줄어든 오존 면적을 관측한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다. 오존 구멍이라는 직관적인 설명과 마치 지구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나사의 위성 사진은 절묘한 시너지를 발휘했다.

‘오존의 두께가 줄어들어, 태양광선 중 가장 해로운 자외선 파장을 우리가 흡수하고 있으며, 미생물이 소실되었고, 인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환경 문제는 농산물의 생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길고 장황한 설명 대신에, 오존에 구멍이 뚫렸다는 말, 그리고 지구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한 장의 사진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집약된 문제의식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2) 들뢰즈의 ‘주름’과 오존홀이란 ‘사건’

기실 오존엔 구멍이 뚫릴 수 없다. 오존은 앞서 밝힌 것처럼 3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기체다. 오존층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의 층에 불과하며, 오존층이 자리 잡은 성층권에 오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태풍의 눈’과 같은 비유적 표현처럼 오존 구멍은 일종의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다.

질 들뢰즈는 『의미의 논리』에서 사건은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 의미의 사건이 아닌, 이념적이며 비물체적인 것이라 밝힌다. 이때의 이념은, 모두가 공유하는 본질적 상태의 이념이 아니라 개별적 사건의 특이성, 특이한 것을 가리킨다. 들뢰즈에게 있어 사건이란 비인격적인 하나의 사건, 특이성 또는 특이성들의 집합이 된다. 이러한 사건은 질 들뢰즈의 ‘주름’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각각의 사건은 하나의 특이성 또는 특이성의 집합이다. 그 맥락 아래에 존재하는 ‘주름’은 이러한 각 특이 존재에 대해 개별화를 허용하는 작동자 역할을 한다. 또한, 들뢰즈는 이러한 ‘주름’을 내재성의 사유 양식의 한 전형으로 인식한다. ‘주름’은 존재론의 맥락에서 일종의 접기, 펼치기, 다시 접기 등의 무한한 변화의 주요한 운동자이자 힘이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들뢰즈의 주름이 내포한 인간 기억의 작동 방식이다. 주체가 매일 반복되는 시간과 세계 속에서, 하나의 특이성, 주름을 얻는 건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비물체적이고 이념적인 이 사건은 개별적 사건을 하나의 육체화로 얻어내는 작업이다. 다시 오존 구멍으로 돌아가서 사유해보자. 오존의 두께가 얇아진다는 과학적 사실과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환경 문제는 인간에게 하나의 ‘주름’으로 감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존에 구멍이 뚫렸다. 이 문장은 인간의 신체성과 환경 문제를 한 문장 안에 절묘하게 접목하면서 환경 문제를 감각하는 하나의 수단을 마련해준다. 비물체적이고, 이념적인 이 사건은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주름’으로 변환된 것이다.

17) 신연재, 「오존층 보호 레짐의 성과와 한계」, 『국제정치연구』8(1),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5.

18) 미국 ‘환경청’ (EPA)은 1978년 에어로솔캔 분사제로 CFC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19) Reconciliation of halogen-induced ozone loss with the total-column ozone record

20) J. C. Farman, B. G. Gardiner & J. D. Shanklin, "Large Losses of Total Ozone in Antarctica Reveal Seasonal ClO_x/NO_x Interaction," Nature, May 16. (1985)

3) 사건 돌, 인류세(Anthropocene)

1987년 국제 사회는 몬트리올의정서를 통해 오존파괴물질의 규제 조치에 합의한다. 2002년 작성된 오존 파괴에 관한 과학적 평가에 따르면 1990년대 동안 오존파괴물질의 실질적 감소량이 뚜렷해졌다. 성층권의 오존파괴물질의 양은 1992년-1994년에 최고점에 오른 후 서서히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s(CFC-11, CFC-113)의 대기 중 양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²¹⁾ 2010년대 이후 중국 등에서 오존파괴물질의 방출량이 증가한 것이 파악됐으나,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 양이 다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와 같은 성과의 핵심은 오존층 파괴에 대한 경각심과 문제의식에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합의하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체제와 조약을 완성했다는 점이다. 일부 국가에서 유사한 환경 문제가 반복되더라도, 정해진 조약에 따른 감시와 규제를 통해 환경 문제가 더욱 악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후 주요 환경 문제 의제는 오존층 파괴에서 기후 변화, 각종 쓰레기의 처리 문제, 미세 플라스틱, 미세 먼지 등의 대기 오염 문제로 옮겨졌다. 이러한 각종 문제 앞에 ‘사건’으로서의 환경 문제를 상기하는 것은 중요한 대안일 수 있다. 환경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을 통해 대중에게 환경 문제가 실제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즉각적이었으며, 직관적이었다. 오존에 구멍이 뚫렸다 -> 자외선이 침입한다 -> 피부암 등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증가한다. 물론 오존층의 두께가 얇아진다는 것은 이토록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발생하는 위험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런데도 사건화를 통한 환경 문제의 제시는 오존층 파괴 문제에 보다 분명한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는 디딤돌을 마련해주었다.

오존층 파괴에 관한 연구로 노벨화학상을 받은 파울 크뤼천은 2002년 “인류의 지질학”이라는 제목의 네이처 기사에서 ‘인류세’란 개념을 주창하며 현재의 지구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인류가 끼치는 강력한 역할을 강조했다.²²⁾ 이를테면 인류가 사육하는 가축의 똥, 핵폐기물, 플라스틱 및 각종 쓰레기가 새로운 지질을 형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오존홀 개념의 초석을 다진 파울 크뤼천이 2000년대 초반 인류세 개념을 주창한 것은 흥미롭다. 오존에 구멍이 뚫렸다. 오존홀이 오존층 파괴문제란 단일한 환경 문제를 사건으로 바꾸는 작업이라면, 인류세는 문명과 도시의 탄생 이후 인류가 벌인 모든 종류의 환경 문제에 대한 사건화이다. 인류세에서 주목할 점은 각각의 환경 문제를 개별적으로 이해하던 사건화가 근본적으로 인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통시적 관점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국지적, 개별적으로 이해되던 환경 문제가 인류가 벌이는 환경 파괴 전반에 대한 자성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인류세는 ‘사건’으로서의 환경 문제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환경 문제를 하나의 ‘사건’으로 조명할 때에, 오존홀과 같은 개별적 양상의 사건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나아가 환경 문제 전반에 걸쳐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의 환경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 인류세와 같은 통시적 양상의 사건화도 필요하다. 두 가지 방향의 사건화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목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인류세 종말 서사

인류세 종말 서사로 하이브를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통시적 양상의 사건화이다. 동시에 하이브는 그 자체로 개별적 양상의 사건화를 드러내는 서사적 징후라고 볼 수 있다.

21) 이현조, 「오존층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48(3), 대한국제법학회, 307~308.

22) Harrison Smith, 「Paul J. Crutzen, Nobel laureate who studied ozone and named new ‘Anthropocene’ era, dies at 87」, 『Washington Post』, 2021, https://www.washingtonpost.com/local/obituaries/paul-crutzen-dead/2021/01/29/97e9c200-6244-11eb-afbe-49a11a127d146_story.html, 참고.

하이브의 주요한 배경은 기후 변화로 야기된 곤충의 진화가 거대 곤충 군집을 양산하게 한 근미래의 지구이다. 근미래 지구에서 기후 변화로 진화한 거대 곤충들은 인간의 도시를 습격하고, 문명을 파괴하고, 인간이 자신의 위대한 유산이라 믿어왔던 과학과 도시를 모두 파괴한다. 하이브에서 주인공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회사원이었으나 거대 벌, 개미 군집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며 종말 속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인간성은 무엇인지 보여 주게 된다. 하이브에서 흥미로운 반전은 이러한 곤충의 진화가 단순히 기후 변화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가상의 무력 집단 제너두에서 일으킨 인위적 진화였다는 점이다. 가상의 무력 집단 제너두는 세계 곳곳의 정권을 장악하여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인류를 다스린다. 그들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정권은 붕괴시키고, 전쟁과 쿠데타, 각종 시위와 반란들을 조장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이러한 제너두는 멀지 않은 미래에 기후 변화로 인한 곤충의 진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한다. 또한, 거대 곤충 군집이 세상의 주류 집단으로 자리 잡은 미래에도 자신들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거대 곤충의 진화를 촉진시킨다. 나아가, 인간과 벌, 인간과 개미들을 혼종시켜 혼종 인간 여왕벌, 혼종 인간 여왕 개미 등을 만들어 배후에서 지배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제너두의 노력은 거대 곤충 군집이 더욱 이른 시점에 지구에 등장하도록 했지만 그들은 혼종 여왕을 자신의 편으로 얻는데에는 실패한다. 제너두는 제너두 내부의 반란과 쿠데타 등으로 스스로 전쟁을 반복하며 인류는 제너두의 실험을 통해 탄생한 거대 곤충 군집에 의해 종말에 다다른다. 이러한 하이브의 주요한 배경 서사는 그야말로 ‘인류세 종말’ 서사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하이브의 배경 서사의 핵심은 인류가 야기한 환경 변화가 인류 자신을 어떻게 붕괴시키는가이다. 그간 인류의 압도적인 과학 문명,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제너두는 기후 변화가 야기한 거대 곤충의 습격마저 자신들이 통솔할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인류의 종말을 더욱 앞당기는 방아쇠가 되었다. 기후 변화가 거대 곤충의 진화를 촉진시킨 것이 아니라, 인류 자신이 기후 변화와 더불어 거대 곤충의 탄생마저 야기한다. 인류가 쌓아놓은 문명이 인류의 흔적이 되어 인류 멸망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하이브 시리즈 중에서 하이브 1 ~ 3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이브 시리즈는 프리퀀인 개장수, 후속작은 데드퀀, 본편인 하이브 1 ~ 3이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연재가 진행중인 데드퀀, 시리즈의 프리퀀 성격인 개장수를 제외하고 하이브의 본편만 주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류세 종말’ 서사로 한국 환경 웹툰의 가능성을 모색해볼 것이다.

정신보건과 몸의 문학적 발현: ‘몸 · 정신 · 언어’를 중심으로

정미경

보건은 안녕한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이다. 문명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점차 보건 영역은 확장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정신보건’은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최근 들어서야 중요시된 보건 개념이다. 특히 2020년 전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WHO가 팬데믹 상황임을 선포하게 된 상태에 이르자 ‘코로나 블루’²³⁾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며 더욱 정신보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육신과 정신이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면적으로는 그 둘이 이항대립적인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러한 구분은 인간의 사고체계 안에 갇힌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신과 육신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며, 이는 실제로 우리의 몸이 아프면 정신이 약해지고, 또 반대로 정신이 아프면 몸이 약해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계성에 집중하여 보건 중에서도 특별히 ‘정신보건’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육신(몸)’과 ‘정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매개체가 되는 ‘언어’의 상관관계를 한강의 장편소설 『채식주의자』를 통해 다뤄보고자 한다. 『채식주의자』에서는 특별히 인물 ‘영혜’를 통해 몸과 정신의 상호역동적인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기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1. ‘몸’과 ‘정신’ 그리고 ‘언어’

본격적으로 문학작품 내에서 ‘몸-정신-언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하기에 앞서, 왜 언어가 ‘몸과 정신의 매개체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성언어이든 문자언어이든 무엇인가를 사회적 약속인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명명의 과정을 거치며, 내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대상의 의미를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된다. 즉 ‘인지’했다는 것은 드디어 그 대상의 실제 파악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신호이자, 직면하기 위한 준비운동의 단계를 마쳤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는 화학작용이다.

본디 언어는 사회성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언어가 발전한 밑바탕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의사소통과 타인과 외부요인을 공유하기 위한 것²⁴⁾이 깔려있다. 하지만 언어가 꼭 외부 대상을 표현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 기억, 경험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요소들 또한 언어를 통해서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 즉 언어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임과 동시에, 나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자기(self)가 알아차리고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인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개방’은 앞서 언급했던 자기(self)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때로는 이 가교가 망가지거나 고장 나기도 한다. 바로 트라우마(Trauma)²⁵⁾가 우리의 삶을 덮쳤을 때가 그렇다. 이 트라우마의 증상에 대해 프로이트는 외상적 사건을 마주한 직후 바로 발현될 수도 있으며, 오랜 기간 잠복되고 억압된 이후 유사한 사건을 마주한 것을 계기로 다시 회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²⁶⁾ 외상 후 스트

23) ‘코로나19(Covid-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

24) 베셀 반 데어 콜크, 제효영 옮김, 『몸은 기억한다(트라우마가 남긴 흔적들)』, 을유문화사, 2016, 375쪽.

25) Trauma, 외상(外傷), ‘상처’를 뜻하는 말로, 그리스어 ‘트라우마트(traumat)’에서 유래되었다. 이상심리학과 정신병리학에서는 ‘정신적인 의미의 상처’를 지칭한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외상 사건(traumatic event)’에는 ‘생명의 위협’, ‘신체적 상해’, ‘성폭력’이 큰 범주로 구분되지만, 목격하는 경우에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생명의 위협 혹은 심각한 신체적 공포를 느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을 때, 사람은 오랜 기간 그 잔상이 남아 마음에 잔흔이 생기게 된다. 사건이 종료되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트라우마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증상들을 총체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라고 부른다. 김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학지사, 2000, 15쪽 참조.

레스 장애(PTSD)에 대해 오랜기간 연구해 온 의학박사 콜크는 이러한 트라우마의 침입에 대해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²⁷⁾이라고 표현한다. 모든 감각을 압도할 만큼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우리의 인지 체계는 얼어버린 채로 굳어버리고, 마음은 지하실에 감금당하게 된다. 마주한 상황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인해 두려움, 수치심, 공포 등의 파생 감각은 이름을 부여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 연쇄작용으로 우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이게 된다.

마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속담과도 같이,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해, 유사한 현상이나 대상을 보고도 놀라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왜 그러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²⁸⁾ 여기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과거의 사건을 개인의 내밀한 곳에만 감춰두고, 덮기에만 급급할 때 발생한다. 자신에게 그 사건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이야기 하지 않은 채, 타인 혹은 스스로에게 모두 침묵만을 고수한다면, 더더욱 두려움을 감싸고 있는 안개는 자욱해질 것이다. 지금 자신이 왜 불안한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솥뚜껑만 보면 트리거²⁹⁾가 눌러 감정이 폭발되는 상황을 반복하여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외상에 시달리는 많은 이들은 내면의 방 어딘가에 검은 천으로 덮여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은 작은 상자를 든 채, 그것을 무시하려 애쓰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그 ‘무명’의 것을 확인하고 검은 천을 들추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을 감추려 하면 할수록 소진되는 에너지 또한 상당하다. 또한 이미 감추는 것에 연료를 다 써버렸기에 일상생활을 꾸려나갈 삶의 의지는 매번 마이너스에 수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때로는 이러한 소진이 소화불량이나 신경증, 불면증 등의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거친 언행이나 자살 시도 등의 외부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트라우마의 기억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외상 기억은 파편화된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때때로는 그 조각들이 무질서하게 정신 이곳저곳을 부유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논리적이지만 않은 이야기 파편들이 나를 이루고 있는 조각들 가운데 하나임을 수용하고, 온전히 느끼며, 쏟아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화자(혹은 내담자)만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수용자(혹은 상담자) 역시 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발화자의 삶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미지의 것’으로 존재했던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 발화자가 그동안 취사 선택하며 살아온 삶의 방식들에 대한 인정과 포용이 필요하다. ‘트라우마를 벗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움직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침습적 반추들이 관성적으로 잡아당기던 방향으로 더는 무기력하게 끌려가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이 점차 많아져, 일상의 무게를 스스로 온전히 감당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2장에서는 ‘몸-정신-언어’의 상관관계 기반으로 하여, 세 요소의 관계를 문학적으로 잘 드러낸 한강의 장편소설 『채식주의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몸’과 ‘정신’의 가교가 되는 ‘언어’가 어떠한 이유로 망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저에는 주인공 ‘영혜’의 언어가 삶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트라우마가 무엇이었는지 짚고

26) 이진숙, 「트라우마에 대한 소고」, 『여성연구논집 제24집』,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13. 179쪽 참조.

27) 베셀 반 데어 콜크, 앞의 책, 365쪽.

28) 베셀 반 데어 콜크, 위의 책, 3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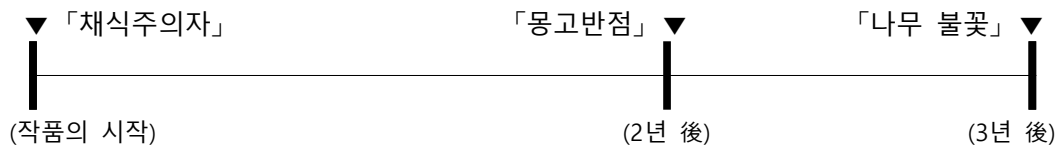
29) Trigger, 기폭제(起爆劑), 사전적 의미는 ‘방아쇠가 발사되다’, ‘폭발하다’의 의미로, 트라우마 경험을 재경험하도록 만드는 신체적 심리적 자극을 가리킨다. 즉,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을 떠올려 재경험하도록 만드는 자극을 ‘트리거’라고 일컫는다. 트라우마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후유증을 남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반복되는 불면과 악몽, 식욕부진, 불안, 공포, 우울, 기억상실, 집중력 감퇴, 무기력감, 대인기피증 등 다양한 증상을 야기한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트라우마의 피해자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트라우마의 지속적인 영향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트라우마는 한 번의 일회적 경험이 아닌 날마다 매순간 재경험되기 때문이다. 김춘경 외, 『상담학 사전』, 학지사, 2016, 참조.

넘어갈 것이다.

2. 한강 『채식주의자』 속 ‘영혜’ 이야기 분석

소설가 한강³⁰⁾의 『채식주의자』는 총 3개의 연작소설로 이루어진 장편소설이다. 표제작인 「채식주의자」는 『창작과비평』 2004년 여름호에 수록된 작품으로, 육식을 기피하는 영혜의 남편 ‘나’의 시선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³¹⁾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몽고반점」은 영혜의 형부인 ‘그’의 목소리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그’는 미디어 아트를 하는 예술가로 등장한다. 이 작품은 『문학과사회』 2004년 가을호에 발표되었으며, 2005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마지막 작품인 「나무 불꽃」은 영혜가 ‘육식 중단’을 선언하고 3년이 지난 시점³²⁾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영혜의 언니인 ‘인혜’의 시간과 시선을 담고 있다.

〈표 1〉 『채식주의자』 수록 작품별 시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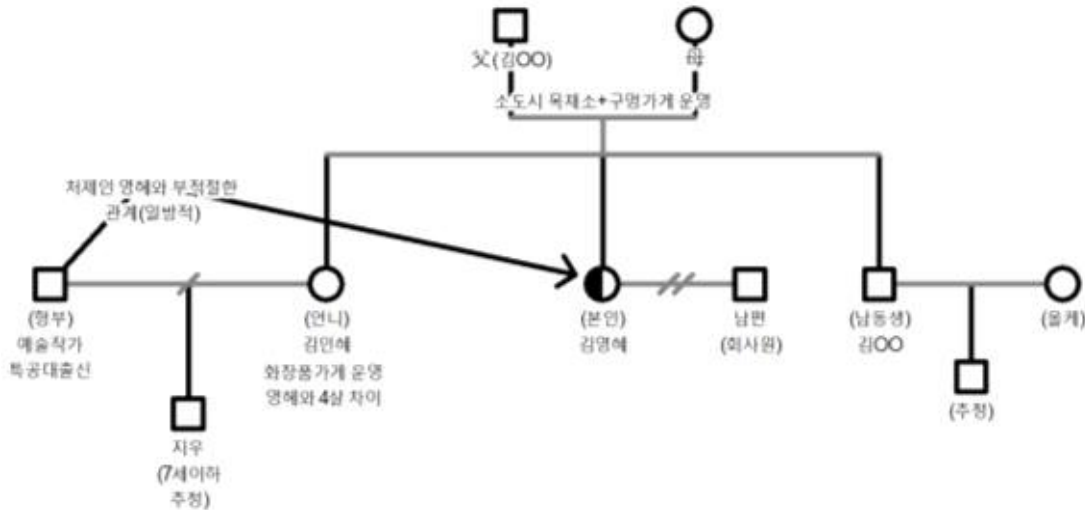


세 작품 모두 ‘영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영혜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 또한 공통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왜 작가는 영혜의 목소리가 아닌, 주변인의 시선으로 그녀를 그려냈을까. 무엇이 그녀에게서 목소리(언어)를 앗아갔을까. 그녀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위의 세 연작소설이 담긴 『채식주의자』 속 등장인물 ‘영혜’를 집중 조명하여, 그녀의 트라우마 흔적들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등장인물 ‘영혜’를 ‘내담자’의 위치에 두고, 소설 내용 전체를 내담자인 영혜의 ‘상담 기록지’로 보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영혜의 입을 빌려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어린 시절과 영혜의 모습을 통하여 그녀의 이야기를 파악하는 데 힘쓰고자 한다. 〈그림 1〉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가계도이다.

30) 1970년 생으로, 1993년 계간지 『문학과사회』에 시 「서울의 거울」의 네 편을 발표하고, 1994년 1월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흰』, 『소년이 온다』, 『희랍어 시간』, 『바람이 분다, 가라』, 『채식주의자』, 『그대의 차가운 손』, 『검은 사슴』, 소설집 『노랑무늬영원』, 『내 여자의 열매』, 『여수의 사랑』, 산문집 『사랑과, 사랑을 둘러싼 것들』,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등이 있다.

31) “그러니까 이년 전 여름의 초입, 처제는 그의 집에서 손목을 그었다. 그의 가족이 평수를 넘혀 이사한 뒤 처가 쪽 식구들이 모두 모여 점심을 먹던 자리였다.” 한강, 「몽고반점」, 『채식주의자』, 창작과비평사, 2007, 81쪽.

32) “영혜가 처음 이상해진 것은 삼년여 전 갑작스럽게 채식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채식주의자들이야 이제는 흔해졌지만, 영혜의 경우 특이한 점은 그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한강, 「나무 불꽃」, 위의 책, 166쪽.



〈그림 1〉 한강 『채식주의자』 등장인물 가계도

2.1. ‘육식 중단’ 선언

『채식주의자』 작품 전체에서 영혜가 육식을 중단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채식주의자’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녀는 ‘채식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닌, ‘육식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실제로 영혜의 입에서 뱀어진 문장을 살펴보면, “냉장고에 그것들을 놔둘 수 없어. 참을 수가 없어.”³³⁾,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³⁴⁾,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³⁵⁾, “아버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³⁶⁾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육식주의’에 대한 상대어로 ‘채식주의’가 쓰이기 때문에, 그녀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채식주의자’라는 명칭³⁷⁾을 붙인다. 하지만 영혜는 간절한 영혼의 외침으로 더 이상 뜨거운 피가 흘렀던 모든 것이 자신의 입을 통해 들어오는 걸 거부했던 것이다. 이는 영혜가 보통 채식주의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언니 인혜와 의사의 입을 통해서 그 다른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영혜가 처음 이상해진 것은 삼년여 전 갑작스럽게 채식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채식주의자들이야 이제는 흔해졌지만, 영혜의 경우 특이한 점은 그 동기가 불분명 하다는 것이었다.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체중이 빠졌고, 거의 잠을 자지 않았고,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다곤 하지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만큼 말을 잃었다. 제부는 물론 친정식구들 모두 그런 동생을 염려했다. 마침 그녀가 아파트를 옮겼을 무렵이었다. 집들이를 위해 친정의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아버지는 영혜의 뺨을 때리고, 입을 억지로 벌리게 한 뒤 고깃덩어리를 쑤셔 넣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얻어맞은 것처럼 몸을 떨었다. 영혜가 짐승같은 고향을 지르며 고깃덩어리를 뱉는 것을, 과도를 집어들고 자신의 손목을 긋는 것을 그녀는 딱딱하게 굳은 몸으로 지켜보았다.

(한강, 「나무 불꽃」, 『채식주의자』, 창작과비평사, 2007, 166쪽,

33) 한강, 「채식주의자」, 위의 책, 20쪽.

34) 한강, 「채식주의자」, 위의 책, 30쪽.

35) 한강, 「채식주의자」, 위의 책, 48쪽.

36) 한강, 「채식주의자」, 위의 책, 49쪽.

37) 영혜는 남편과 함께 직장 부부동반 모임을 가게 되는 데, 그곳에서 ‘육식 중단’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후, 사장에게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라는 말을 듣게 된다. 질문 형식을 띄고 있지만, 그녀의 대답은 애초에 기다릴 생각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말을 이어간다. 이후 그 식사 자리는 “아내가 그 모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다.”의 분위기로 흘러간다. 한강, 「채식주의자」, 위의 책, 30-33쪽 참조.

영혜는 “꿈에서 시키는 대로, 몸이 시키는 대로, 시간 속에서 풍화작용을 시작하는 것”³⁸⁾의 일환으로 자신에게 ‘남의 삶’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³⁹⁾한다. 그리고 그렇게 ‘육식 중단’을 선언하고 아슬아슬하게 타고던 줄타기를 급기야 놓아버리게 이른다. 천천히 가해지던 ‘자기 파괴’의 속력을 급격히 증가해 버린 것이다. 자살시도를 통해 자기 파괴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영혜에게 트라우마의 원천인 아버지의 행동은 또 다른 방아쇠가 되어버렸다.

영혜가 육식을 중단하게 된 결정적 시발점은 바로 남편에게 있었다. 트리거⁴⁰⁾가 되어 꿈을 통해 파편화 된, 어린시절 기억의 원천들이 의식으로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한 것⁴¹⁾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사건을 재경험하게 된다. 이는 침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꿈 혹은 해리성 플래시백으로 나타날 수 있다.⁴²⁾ 그런 의미에서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남편 ‘나’는 영혜의 신호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꿈 나부랭이 때문에 고기를 다 버렸다는 거야? 도대체 얼마어치를?”⁴³⁾이라고 하며, 초기 징후를 너무도 손쉽게 놓치고 만다. 처음부터 영혜가 “완전히 말문을 닫아”⁴⁴⁾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꿈을 꿔어”⁴⁵⁾라고 말하며 몇 번이나 자신만의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난 무서웠어 (...) 그렇게 생생할 수 없어, 이빨에 씹히던 날고기의 감촉이. 내 얼굴이, 눈빛이.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분명 내 얼굴이었어. 아니야, 거꾸로, 수없이 봤던 얼굴 같은데, 내 얼굴이 아니었어. 설명할 수 없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생생하고 이상한, 끔찍하게 이상한 느낌을.

(19쪽)

그 꿈을 꾸기 전날 아침 난 얼어붙은 고기를 썰고 있었지. 당신이 화를 내며 재촉했어. (...) 알지, 당신이 서두를 때면 나는 정신을 못 차리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허둥대고, 그래서 오히려 일들이 뒤엉키지. (...) 왜 나는 그때 놀라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욱 침착해졌어. 마치 서늘한 손이 내 이마를 짚어준 것 같았어. 문득 썰물처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미끄러지듯 밀려나갔어. 식탁이, 당신이, 부엌의 모든 가구들이.

38) 해설자 허윤진 역시 『채식주의자』 뒤편에서 영혜가 ‘채식주의자’로 규정될 수 없음을 짚고 넘어간다.

39) 꿈을 꾸 이후, 영혜는 육식을 거부한다. 이렇게 ‘단호한 거부’의 경우에는 또 다른 트라우마의 가능성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귀은은 “거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인간에게는 먹는 것보다 먹지 않는 것이 더욱 강한 의지와 동기가 필요하다. 먹지 않기 위해 그녀는 더욱 강한 투쟁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영혜는 과거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트라우마의 파편화 된 조각이, 남편과의 생활을 통해 ‘꿈’으로 재현되었다. 한귀은, 「트라우마의 (탈)역전이」, 『한강, 채식주의자 깊게 읽기』, 더스토리, 67쪽 참조.

40) Trigger, 기폭제(起爆劑), 사전적 의미는 ‘방아쇠가 발사되다’, ‘폭발하다’의 의미로, 트라우마 경험을 재경험하도록 만드는 신체적 심리적 자극을 가리킨다. 즉,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을 떠올려 재경험하도록 만드는 자극을 ‘트리거’라고 일컫는다. 트라우마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후유증을 남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반복되는 불면과 악몽, 식욕부진, 불안, 공포, 우울, 기억상실, 집중력 감퇴, 무기력감, 대인기피증 등 다양한 증상을 야기한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트라우마의 피해자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트라우마의 지속적인 영향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트라우마는 한 번의 일회적 경험이 아닌 날마다 매순간 재경험되기 때문이다. 김춘경 외, 『상담학 사전』, 학지사, 2016, 참조.

41) 한귀은 역시 “영혜의 트라우마는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다가 결혼 후 남편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말한 트라우마의 사후적 성격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시간적으로 후사건이 전사건의 원인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귀은, 앞의 책, 63쪽 참조.

42) 제임스 모리슨, 신민섭 외 11인 옮김, 『쉽게 배우는 DSM-5(임상가를 위한 진단지침)』, 시그마프레스, 2018, 221쪽.

43) 한강, 「채식주의자」, 앞의 책, 20쪽.

44) 한강, 「채식주의자」, 위의 책, 189쪽.

45) 이에 대해 최지원은 “억압된 것은 반드시 회귀한다”. “꿈은 소망을 충족하려 한다”라고 말한 프로이트의 말을 언급하며, 영혜의 꿈이 무의식의 발현이자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설명한다. 최지원, 「한강의 『채식주의자』 부부 관계 분석: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2020, 586쪽 참조.

나와, 내가 앉은 의자만 무한한 공간 속에 남은 것 같았어. 다음날 새벽이었어. 헛간 속의 피웅덩이, 거기 비친 얼굴을 처음 본 건.

(27쪽)

다시 꿈을 꿔. 누군가가 사람을 죽여서, 다른 누군가가 그걸 감쪽같이 숨겨줬는데, 깨는 순간 잊었어. 죽인 사람이 난지, 아니면 살해된 쪽인지. (...) 웬지는 설명 못해. 그냥 못견디게 싫은 느낌이라고밖에. (...) 무엇 때문일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져. 내가 뭔가의 뒤편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손잡이가 없는 문 뒤에 갇힌 것 같아.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걸 이제야 갑자기 알게 된 걸까. 어두워. 모든 것이 캄캄하게 뭉개어져 있어.

(37쪽)

영혜는 육식 중단을 선언한 이후, 꿈 이야기를 쏟아내듯이 발화한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이야기는 의미가 있는 언어가 되지 못하고 파편화 되어버린다. “설명할 수 없어”, “정신을 못 차리지”, “왜 나는 그 때 놀라지 않았을까”, “웬지는 설명 못해”라는 발화를 통해 영혜는 자신의 감각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27쪽에서는 직접적으로 꿈과 남편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미끄러지듯 밀려나갔어”라는 표현으로 모든 감각들이 자신을 벗어나 아득해지는 과정을 언급한다. 전형적인 해리(解離)⁴⁶⁾ 증상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내는 꿈쩍 않고 서서 냉장고를 마주보고 있었다.”⁴⁷⁾, “석상처럼 굳어있는”⁴⁸⁾, “아내의 소름끼치게 담담한 얼굴, 굳은 목소리가 떠오른 것”⁴⁹⁾이라 말한 남편의 발화로 보아, 이미 이인증⁵⁰⁾이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인화 현상이 발현되는 환자의 뇌를 스캔하면, 과거 트라우마와 마주했을 때, 모든 신경이 차단된 공백(해리) 반응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이들의 뇌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불이 꺼진 상태로, 생각을 하거나 깊이 있게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억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인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

머릿속이 멍해지는 현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 극적인 변화를 겪고 깜작 놀라 자기 파괴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감을 잃어버리는 이 같은 변화는 훨씬 더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⁵¹⁾

이러한 트라우마 환자들은 “세상과 동떨어진 기분이 어디에서 비롯 됐는지”⁵²⁾ 알지 못한다. 이는 영혜가 “무엇

46) 해리는 트라우마에서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특성이다. 한 사람을 압도한 경험은 쪼개지고 조각조각 분리된다. 당시의 감정, 소리, 이미지, 생각, 트라우마와 관련된 신체 감각이 제각각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각난 감각의 기억이 현실로 깨어들어 되살아난다.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는 한, 신체를 보호하려고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액에 계속 떠다니고 방어적인 행동과 감정적 반응이 계속 반복된다. 트라우마 환자들은 대부분 약간 짜증 날 만한 일에 자신이 왜 그토록 깊이 절망하고 무력해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베셀 반 데어 콜크, 앞의 책, 119쪽.

47) 한강, 「채식주의자」, 앞의 책, 13쪽.

48) 한강, 「채식주의자」, 위의 책, 14쪽.

49) 한강, 「채식주의자」, 위의 책, 18쪽.

50) 이인증은 ‘자기와의 분리’를 의미하며,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하는 방대한 해리 증상 중의 하나이다. 정신적 외상을 입은 환자들을 만나면, 시선은 멍하니 어딘가를 응시하고 생각은 다른 곳에 있고 생물학적으로 얼어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콜크는 이러한 대상들을 향해 “생명력을 잃어버린 환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베셀 반 데어 콜크, 앞의 책, 125-126쪽 참조.

51) 콜크는 뇌 스캔 사진을 통해, 실제 트라우마 환자들의 뇌에서 이인증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기도 했다. 그가 지은 책 『몸은 기억한다』 126쪽에 시각자료가 함께 첨부되어 있다. 콜크는 이렇게 이인증을 겪는 사람들은 각성하고 주변을 의식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야 함을 말한다.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삶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베셀 반 데어 콜크, 위의 책, 127쪽 참조.

52) 베셀 반 데어 콜크, 위의 책, 120쪽.

때문일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져. 내가 뭔가의 뒤편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때 영혜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감각과 감정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쥐는 방법을 습득해야했다. 콜크는 이를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느끼고, 정확히 밝히고, 확인하는 것이 회복의 첫 단계”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영혜는 그와는 반대편에 있는 지점에 머물게 된다. 이미 일어난 끔찍한 일을 재생하고, 머릿속에서 확대 시키며, 중국에는 그 끔찍한 일을 받아들이는 법을 익히는 길을 걷게 된 것이다.⁵³⁾ ‘꿈 이야기’를 언급하는 영혜에게 남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신이 아는 틀 안에 그녀를 가둬놓으려고만 한다. 그녀를 이해하려는 그 어느 누구도 취하지 않는다.

영혜는 “채식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건강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거예요?”라는 전무 부인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용기내어 입을 연다. 아니, 어쩌면 부지불식간에 그 질문을 듣자마자 아니라는 대답이 마음 속 깊은 속에서부터 튀어나간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남편인 ‘나’의 시선에서는 “아내는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태연하고 조용하게 입을 떼었다.”⁵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영혜는 “꿈을 꿔어요”라는 말을 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망설였다. 실제로 그녀의 말 앞에는 수많은 말줄임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과연 이들이 자신을 이해해줄까 싶은 두려움 반, 또한 자신이 이 두려움을 언어로 잘 표현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반이었으리라.

실제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⁵⁵⁾ 그들은 신체적인 분노와 공포, 그리고 무기력감을 다시 경험하고, 동시에 싸우거나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하지만 그 복잡다단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을 이해력의 한계로 물고 가서, 평범한 경험이나 상상할 수 있는 과거를 이야기할 때와 같은 언어적 표현으로 구술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트라우마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물론, 사건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어느 정도 설명해줄 수는 있지만, 실제 경험한 핵심이 포함된 경우는 드물다. 트라우마가 된 경험을 일관성 있게, 즉 시작-중간-끝이 있는 이야기 체계로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힌다.⁵⁶⁾ 그리고 그렇게 말로 뱉어내지 못한 경험의 이미지들은 “악몽처럼 되살아 나 머릿속에서 재현”⁵⁷⁾된다. 영혜의 경우에는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용기가 무색하게, 남편은 바로 그 발언권을 빼앗고 만다. 그것도 ‘위장병’이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덧씌운 채 말이다. 그렇게 자신의 언어를 타인에게 빼앗겨버린 이후, 영혜는 스스로 마음의 문과 입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영혜의 모습은 트라우마 사건이 언어화 된 이야기가 아닌 증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의미를 같이 한다.⁵⁸⁾

2.2. 혼곤한 두려움 안에서 떠는 것

육식을 하지 않는 영혜에게 아버지는 “이 애비 말이 말 같지 않아? 먹으라면 먹어!”⁵⁹⁾라고 고향을 친다. 심지어 그는 고향을 치는 정서적인 학대에서 머물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자신의 분노를 옮긴다. 뺨을 거세게 내려치는 것으로도 모자라, 양쪽에서 손을 결박시키고, 억지로 입을 벌리기 까지 하며, 고기를 짓이겨 입에 넣는다. 굉장

53) 베셀 반 데어 콜크, 위의 책, 121쪽.

54) 한강, 「채식주의자」, 앞의 책, 32쪽.

55) 한귀은, 앞의 책, 63쪽 참조.

56) 베셀 반 데어 콜크, 앞의 책, 87쪽.

57) 베셀 반 데어 콜크, 위의 책, 88쪽.

58) 트라우마 환자들은 사건에 대한 재경험과 마비 상태 사이에서 동요하는 증상을 보이고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영혜의 경우에는 그 꿈 또한 억압되기 때문에, 해리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다. 즉, 영혜는 증상의 기원을 감추는 동시에 드러내는 모순적인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 한귀은, 앞의 책, 64쪽 참조.

59) 한강, 「채식주의자」, 앞의 책, 48쪽.

히 가학적이고 괴랄한 상황임에도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말리지 않는다. 그나마 영혜의 언니인 인혜가 아버지를 막아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녀를 제외하고는 전부 방관하거나, 순응하며 흘러가는 상황을 주시할 뿐이었다. 심지어 영혜의 남동생은 “누나, 그냥 좋게 먹어. 누나가 받아서 먹어.”⁶⁰⁾라며 그녀의 손을 결박하는 데 한 몫을 한다.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에 떠밀려 버랑 끝에 내몰리게 된 영혜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 상황이 방아쇠가 되어, 그녀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흉인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꿈을 꾸게 된다.

내 다리를 물어뜯은 개가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묶이고 있어. (...) 나는 꿈쩍 않고 문간에 서서 점점 지쳐가는, 핏떡이며 눈을 희번덕이는 흰둥이를 보고 있어. 번쩍이는 녀석의 눈과 마주칠 때마다 난 더욱 눈을 부릅떠. (...) 개에 물린 상처가 나오려면 먹어야 한다는 말에 나도 한입을 떠넣었지. 아니, 사실은 밥을 말아 한그릇을 다 먹었어. 들깨냄새가 다 덮지 못한 누린내가 코를 찔렀어. 국밥 위로 어른거리던 눈, 녀석이 달리며, 거품 섞인 피를 토하며 나를 보던 두 눈을 기억해. 아무렇지도 않더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

(52-53쪽)

영혜에게는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리고 중국에는 자신의 입속으로 들어와 전신에 퍼진 개의 피를 잊지 못한다. 그 죄의식⁶¹⁾은 그녀의 꿈속에 깊숙이 자리잡혀있다.⁶²⁾ 영혜의 이 꿈은 “수백 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깃덩어리”⁶³⁾가 가득한 숲을 건너는 꿈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는 표현하지만, 이는 모순된 고백이다.

영혜의 무의식 속에는 개가 끌려가며 점점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 붉은 피가 낭자하던 당시의 색채, 자신과 계속해서 마주쳤던 흰 개의 눈, 그리고 자신의 앞에 결국 당도하고 만 개고기의 누린 냄새까지 선연히 남아있었다. 어느 것 하나 그녀의 뇌리속에서 나갈 수 없었다. 그리고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그녀의 꿈으로 증명되었다.

영혜의 ‘중얼거림’으로 표현되는 내적 독백 역시 발설하고자 하는 욕구와 은폐하고자 하는 욕구의 충돌로, 해리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독백의 청자는 ‘당신’이었다가, 차츰 그 표현이 사라지게 된다. 이를 통해 영혜의 트라우마가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타자와 더욱 단절되어 자폐성이 깊어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⁶⁴⁾

꿈의 언어와 현실의 언어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다.⁶⁵⁾ 하지만 그 괴리를 뚫고 현실이 꿈으로, 그리고 다시 꿈의 괴로움을 현실에서 발산하도록 있는 ‘가교’는 바로 남편의 추궁이다. 새빨간 고기와 피웅덩이로 가득한 꿈을 꾸기 전, 영혜는 남편으로부터 “제기랄, 그렇게 꾸물대고 있을거야?”, “그냥 삼켰으면 어쩔 뻔했어! 죽을 뻔했잖아!”⁶⁶⁾라는 고함을 듣게 된다. 그 욕박지름은 그녀의 아버지와 상당히 결이 유사하다. 욕박을 지르고 추궁하고 억압하는 모습을 지닌 남편은 영혜의 아버지와 오버랩 되어 그녀에게 다가간다.⁶⁷⁾ 그 유사점은 인혜의 회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60) 한강, 「채식주의자」, 위의 책, 50쪽.

61) 한강, 위의 책, 231쪽 해설 참조.

62)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 내 입에 피가 묻어 있었어. 그 헛간에서, 나는 떨어진 고깃덩어리를 주워먹었거든. 내 잇몸과 입천장에 물컹한 날고기를 문질러 붉은 피를 발랐거든.”이라고 영혜는 꿈속 한 장면을 회상한다. 한강, 「채식주의자」, 위의 책, 19쪽.

63) 한강, 「채식주의자」, 위의 책, 18쪽.

64) 한귀은, 앞의 책, 65쪽 참조.

65) 한강, 앞의 책, 231쪽 해설 참조.

66) 한강, 「채식주의자」, 위의 책, 26-27쪽.

67) 한귀은, 앞의 책, 65쪽 참조.

오래전 그녀는 영혜와 함께 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그때 아홉 살이었던 영혜는 말했다. 우리, 그냥 돌아가지 말자.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 아버지의 손찌검은 유독 영혜를 향한 것이었다. 영호야 맞은 만큼 동네 아이들을 때주고 다니는 녀석이었으니 괴로움이 덜했을 것이고, 그녀 자신은 지친 어머니 대신 술국을 끓여주는 맏딸이었으니 아버지도 알게모르게 그녀에게만은 조심스러워했다. 온순하나 고지식해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던 영혜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고, 다만 그 모든 것을 뺏속까지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안다. 그때 맏딸로서 실천했던 자신의 성실함은 조속함이 아니라 비겁함이었다는 것을. 다만 생존의 한 방식이었을 뿐임을.

(191-192쪽)

당시 영혜가 9살이었으니, 언니인 인혜는 13살이었을 것이다. 인혜의 회상으로 유추해 봤을 때, 초등학교 6학년과 2학년 여자아이 둘에게 ‘집’은 더 이상 편안한 곳이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돌아가지 말자”라고 말할 정도로 영혜에게 더 이상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닌 것이다. 보호막이 충분히 되어주지 못하는 공간으로 인식한 그곳을 영혜는 가고 싶지 않아했다. 돌아가야 하는 곳이 그 곳 뿐이라, 상당히 괴로웠을 것이다.

영혜는 그녀보다 네 살 어렸다. 터울이 제법 져서인지, 그녀들은 자매간에 흔히 볼 수 있는 티격태격하는 갈등 없이 자랐다. 손이 거칠던 아버지에게 차례로 뺨을 맞던 어린시절부터 영혜는 그녀에게 무한히 보살펴야 할, 흡사 모성애와 같은 책임감을 안겨주는 존재였다. 발뒤꿈치에 새카만 때가 끼어 있고 여름이면 콧잔 등에 땀띠가 빨갳하게 돋던 여동생이 성장하여 결혼하는 것을 그녀는 신기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158쪽)

물론 인혜에게도 집은 여느 아이들이 느끼는 수준의 편안한 곳은 아니었다. “지친 어머니 대신 술국을 끓여주는 맏딸”⁶⁸⁾, “영혜는 그녀에게 무한히 보살펴야 할, 흡사 모성애와 같은 책임감을 안겨주는 존재”⁶⁹⁾라는 고백이 말해주듯이 말이다. 191쪽의 고백에서는 자신에게 조심스러워 한 아버지가 있는 반면, 158쪽의 고백에서는 “아버지에게 차례로 뺨을 맞던 어린시절”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상대적이었을 뿐이지, 아버지는 세 자식에게 모두 손찌검을 했던 것이다.

가정 내에서 어머니는 아이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다. “지친 어머니”라는 표현으로 미루어보아,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 형편상 어머니도 일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불명확한 것을 뛰어 넘더라도, 성인인 아버지를 위해 어린 딸이 대신 술국을 끓여주는 상황은 가히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13살 때의 기억이니, 얼마나 어린 나이부터 술에 취한 아버지를 위해 “생존의 한 방식”으로 술국을 끓였을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그래서 었을까, 그녀는 열아홉에 집을 떠나 “누구의 힘도 빌지 않고 서울생활을 헤쳐”⁷⁰⁾갔다. 그 또한 생존의 한 방식이었을 것이다. 열아홉에 집을 떠난 것도,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을 것도, 서울생활을 한 것도 말이다. 그녀의 문장은 전부 생존과 맞닿아 있었다.

그리고 언니가 그렇게 떠날 때에, 15살인 영혜는 이전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가 없는 집에 홀로 남게 되었다. 한창 사춘기인 영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집’으로 계속 숨죽이며 들어가야 했다. “해질녘이면 대문간에 혼자 나가 서 있던 영혜의 어린 뒷모습”⁷¹⁾은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68) 한강, 「나무 불꽃」, 앞의 책, 191쪽.

69) 한강, 「나무 불꽃」, 위의 책, 158쪽.

70) 한강, 「나무 불꽃」, 위의 책, 161쪽.

71) 한강, 「나무 불꽃」, 위의 책, 192쪽.

오지 않을 대상을 기다리는 것인지, 혹은 자신이 떠날 시간을 기대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멀리 떨어지는 석양은 자유로우니 그것이 부러운 것인지를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영혜의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은 그녀 자신의 입을 통해서가 아닌, 전부 언니인 인혜의 고백을 통해서 엿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성 거식증의 경우 십오에서 이십 퍼센트가 기아로 사망합니다. 뼈만 남았어도 본인은 살이 찼다고 생각하죠. 지배적인 어머니와의 갈등이 주된 심리적 이유가 되고..... 하지만 김영혜 씨 같은 경우는 정신분열증이면서 식사를 거부하는 특수한 경우예요. 중증의 정신분열증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솔직히 예측 못했습니다.

(171쪽)

비단 엄청난 사건이나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의 물리적인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도 정서적인 충격으로 자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⁷²⁾ 그런 의미에서 영혜는 일생동안 그 트라우마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숨죽여 살고, 드디어 그 억압에서 벗어나 ‘결혼’이라는 관문을 거쳐 새로운 곳을 보금자리 삼았음에도 여전히 다른 모습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존재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영혜의 담당의사가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영혜에게 있어 근원적인 파편화 된 조각은 바로 양육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존 볼비(John Bowlby)는 생애 초기 경험이 이후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원형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그는 아이-엄마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애착 관계가 아이가 세상으로 나오는 안정적인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⁷³⁾ 이러한 애착 관계 유형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⁷⁴⁾, 어떤 유아기를 보냈느냐에 따라 관성 작용으로 성인기 역시 동일한 패턴으로 자랄 확률이 높은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가 부모나 다른 양육자에게 본능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유아기에 안전한 기분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은 커서도 기분과 정서적 반응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⁷⁵⁾ 그렇기 때문에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전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의 내적 상태를 감지하는 능력이 손상되고, 과도한 의존성이나 자해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⁷⁶⁾

그렇기 때문에, 영혜는 남편이 성을 내면 허둥대며 정신을 못 차리고, 긴장을 했던 것이다.⁷⁷⁾ 과거의 두려움이 되살아나,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만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콜크는 “트라우마를 겪은 내면의 일부분이 수동성을 느낄 때면 또 다른 자기인 분노 관리자가 등장하여 유독 취약한 일부를 보호하려고 나선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정작 당사자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⁷⁸⁾라고 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자기(self)’들을 통합하여 트라우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 기억을 끄집어 내, 최악의 상황도 잘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재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습관 속에서 만들어진 ‘자기의 일부분들’도 불러내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⁷⁹⁾함을 언급하며 ‘내면 가족 체계 치료(IFS)’⁸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72) 김환, 앞의 책, 5쪽 참조.

73) 베셀 반 데어 콜크, 앞의 책, 183-185쪽 참조.

74) 베셀 반 데어 콜크, 위의 책, 193쪽 참조.

75) 베셀 반 데어 콜크, 위의 책, 195쪽 참조.

76) 베셀 반 데어 콜크, 위의 책, 201쪽 참조.

77) 영혜는 “당신이 서두를 때면 나는 정신을 못 차리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허둥대고, 그래서 오히려 일들이 뒤엉키지.”라는 고백을 통해, 남편의 어떤 부분이 자신의 비상벨을 누르게 하는지 은연중에 밝힌 바 있다. 한강, 「채식주의자」, 앞의 책, 26쪽 참조.

78) 베셀 반 데어 콜크, 앞의 책, 440쪽.

79) 베셀 반 데어 콜크, 위의 책, 441쪽.

‘관리자 - 추방자(유배자) - 소방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내면 부분 가운데, 영혜는 ‘소방관’의 부분이 비대하게 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콜크에 따르면 “내면의 소방관들은 정서적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한다.”⁸¹⁾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관리자’와 달리 ‘소방관’은 “불을 끄려고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는 일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체 시스템이 망가질지언정, 내면에서 고집어내어 추방(유배)해야 하는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강박적인 몰입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실제로 콜크는 ‘쇼핑’이나 ‘음주’, ‘컴퓨터 게임 중독’, ‘충동적 불륜 관계’, ‘운동 중독’ 등 무언가 하나에 지나치게 몰입한 상태에 자신이 만난 자기(self)의 소방관들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소방관’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⁸²⁾에 있다. 때문에 폭식이나 자해와 같은 몸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쉽사리 그만두지 못하고, 만일 멈춘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해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기어코 찾아내고야 만다. 이 악순환은 자기(self)가 지휘자의 자리에 온전히 올라서고, 내부 시스템 전체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비로소 끝이 나게 된다. 영혜는 바로 그 ‘안전’과 ‘조율’이 필요한 지점에 다다른 것이다.

3. 마무리

“사람들은 평생동안 어쩔 수 없이 한 두 번은 트라우마(Trauma, 외상)를 겪는다”라는 김환의 말과 같이, 우리들은 살며 타인으로부터 혹은 상황으로부터 심리적인 외상을 겪으며 살게 된다.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근육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에 따라, 감당할 만한 일로 경험되기도 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또한 각자의 지점이 다른 것도 있다. 나에게는 견딜만한 것이, 당신에게는 비극적인 것이며, 반대로 당신에게는 넉넉한 것이 나에게서는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대한 존재로 다가오기도 한다. 우리는 너무도 다른 지점들에서 숨 쉬며 살고 있다.

내면의 어느 부분을 자극하는가에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던 일도, 부지불식간에 나의 비상벨을 누르게 만드는 결정타가 되기도 한다. 한강의 『채식주의자』 속 등장하는 ‘영혜’는 바로 그 지점을 담고 있다.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 괜찮은 줄 알았던. 그리고 본인조차도 그 이유를 몰랐던 내면의 균열이 서서히 쌓이고 쌓여, 거대한 눈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말이다.

한강은 “따로 있을 때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해지면 그 중 어느 것도 아닌 다른 이야기-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담기는 장편소설이다.”⁸³⁾라고 『채식주의자』에 대해 설명한다. ‘육식 중단’을

80) Internal Family Systems therapy, 내면가족체계치료(內面家族體系治療), 리처드 슈워츠가 개발한 치료모델이다. 이 치료에서는 자기(self)를 구성하는 한 가지 부분을 일시적인 감정 상태 내지는 습관적인 사고 패턴으로 여기고, 고유한 역사와 능력, 필요, 세계관을 가진 별개의 정신 체계로 본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트라우마는 각 부분들이 충분히 가치 있는 상태에 자연스럽게 머물지 못하도록 제압해 버린다. 그로인해 갇힌 내면의 부분을 찾아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내면가족체계치료에서 진행되는 방식이다. IFS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마음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하자면, 관리자-추방자(유배자)-소방관의 부분들은 ‘악기’이고, 자기(self)는 ‘지휘자’라고 볼 수 있다. 악기가 지휘자를 넘어 불협화음을 내지 않도록 조율하고, 내면 체계에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때의 ‘관리자(managers)’는 보호와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비판적이고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며, 생산성을 추구한다.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저항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소방관(firefighters)’은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추방자(유배자)로부터 나오는 감정의 불을 끄기 위해 움직인다. 때문에, 이 부분은 추방된 감정을 떠올리게 만드는 경험을 할 때마다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추방자(유배자, exiles)’는 마치 자기 시스템에서 나온 유독성 폐기물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은 부분이다. 과거에 상처를 받거나 수치를 당한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상처받은 감정적 기억을 깊이 감추어 두는 역할을 한다. 베셀 반 데어 콜크, 위의 책, 437-468쪽 참조.

81) 베셀 반 데어 콜크, 위의 책, 455쪽 참조.

82) 베셀 반 데어 콜크, 위의 책, 456쪽 참조.

83) 한강, 위의 책, 245쪽 작가의 말.

선언한 자신에게 어느 누구 하나, 심지어 어머니와 남편, 언니조차도 자신의 말을 수용해주지 않는 상황이었던 영혜. 그리고 그런 영혜를 옆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인혜를 통해 작가는 무슨 말을 건네고 싶었을까. 굳이 두 인물로 꼽은 이유는 정신병원에 있던 영혜에게 손을 내밀고 그녀와 함께 그곳을 벗어나기로 결심한 인물이 인혜이기 때문이다. 그 이전의 인혜의 행동을 생각한다면, 확실히 전과는 다른 행동임에는 틀림없다.

트라우마를 겪은 이후 다시금 마음을 살리고, 몸과 정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주 사소하면서도 일상적인 것에 달려있다. 바로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주고, 언제고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누군가를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맞잡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가족이나 타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타인이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다만, 트라우마로 인해 폐허가 된 마음을 살리는 데에는 타인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받은 ‘사회적 지지’의 한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만큼, 나는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안전감을 느끼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럴때에 비로소, 끝나지 않는 긴 터널같이 느껴졌던 트라우마의 상처가 봉합되고, 작은 상자를 덮고 있던 검은 천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 때때로는 그 상처가 아물고 딱지가 생긴 이후, 작은 잔흔으로 남기도 한다. 하지만 이 잔흔은 더 이상 우리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을 주거나 패닉에 빠지게 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 흔적은 Tedeschi와 Calhoun이 말한 ‘외상 후 성장(postraumatic growth)’⁸⁴⁾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전에는 조그마한 이슬비에도 금세 물이 차고 넘쳐 패닉에 빠졌다면, 이제는 잘 정비된 수로와 배수시설이 마련된 건강한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본디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존재이며,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 인생을 살아가며 언제든지 또 비는 올 수 있다. 때로는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고, 다시 과거의 경험과 같이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잠식할 수는 없다. 그 사실을 우리의 몸과 정신이 경험했고 또한 기억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사회적 지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개방’, ‘의도적 반추’⁸⁵⁾, ‘사회적 지지’의 세 톱니바퀴가 맞물려 이를 통한 ‘삶의 의미 재구성’이 트라우마로 인해 허물어진 정신 건강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⁸⁶⁾ 바로 그 조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영혜’의 삶이자 ‘인혜’의 삶인 것이다. 『채식주의자』는 문학 속에 존재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시각과 분석을 통하여 임상 현장의 일면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들의 삶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신 보건의 어려움들이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지 반면교사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84) Tedeschi, Richard G., Calhoun, Lawrence G.,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July 1996 9(3):455-471

85) ‘자기개방’과 ‘의도적 반추’ 모두 앞서 언급했던 ‘자기(self)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트라우마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되새김질하고, 이를 언어화하여 타인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자, 외상을 마주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관문이다.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 첫발을 떼는 것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86) 최남미·배진형·정미경·조은상, 「부모사별을 경험한 대학생의 심리적 성장을 위한 집단 문학치료 프로그램 기초연구」, 『문학치료연구』, 한국문학치료학회, 2021.

디지털 감시의 바다에서 살기 : 포스트-시네마 매체환경의 감시 이미지 연구

서동민

이 글은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포스트-시네마적 매체 환경을 예시하는 이미지의 양상을 살핀다. 변화된 세계와 신체의 현상학적 관계를 분석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해 왔듯이 매체 환경의 변화는 인간과 세계의 존재론을 뒤흔든다. 디지털 이미지 제작의 시대에 등장한 포스트-시네마 담론과 이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은 팬데믹과 맞물려 더욱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양상 중 하나는 감시 이미지다. 오늘날 코로나 방역 시스템이 크게 기대고 있는 GPS와 네트워크 시스템은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의 감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감시의 기능과 포스트-시네마적 매체 환경의 결합은 새로운 이미지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바로 신체적 지위가 중요하지 않으며, 인간이 데이터의 일부로서 새로운 감시의 구조를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데이터로 치환시키는 오늘날 빅데이터 시대의 감시는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횡단하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감시와 미디어 기술의 융합은 영화의 맹아가 싹틀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화의 탄생에 결정적이었던 광학 장치 스스로에는 측량의 목적이 내재되었고, 이러한 성질은 영화와 감시의 시선구조가 손쉽게 조응하도록 만들었다. 이 시기의 감시 주체는 줄곧 자본가나 관객 등으로 자리를 바꾸며 이론화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매체환경에서 감시의 시선 구조는 탈체현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감시의 이미지를 조망하는 자리에는 인간의 눈을 대신해 드론이나 항공뷰 등과 같은 기계적인 눈이 자리한다. 또한 감시의 대상으로서 우리는 더이상 유기물의 신체로 취급 당하지 않으며, 그래픽 데이터나 소비와 생산 데이터를 운반하는 유동적 자본의 흐름으로 인식된다. 열화상 카메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에 내재된 GPS 시스템 등은 이러한 감시의 구조를 시각화한다. 오늘날의 감시의 도식에서 유기체적 신체는 더이상 특권적 지위를 점하지 않으며, 새로운 감시 세계 속에서 인간의 존재론 역시 변동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팬데믹을 통해 전면화되어 온 이러한 감시 이미지의 양상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현상학적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포스트-시네마적 인식론의 지점들을 제안한다. 나아가 데이터의 바다가 ‘감시의 바다’가 되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하며, 감시의 바다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지 제안한다.

1. 들어가며

보건은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보건이라는 단어의 용례는 단순히 위생과 건강 보존 뿐 아니라 정신보건이라는 용어를 통해 인간의 광범위한 삶의 영역을 아우르는 듯 보인다. 보건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이지만, 한편으로 전염병과 관련해 굉장히 구체적인 규칙과 원칙들로 다가온다. 2020년 1월 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한국에 처음 발생한 이후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감소의 추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의 선언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는 보건의 갖게 된 새로운 중심 임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지닌 보건 수칙들은 신체적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통치기관의 전방위적 감시의 시선들을 수용하도록 만든다. 또한 팬데믹 시기의 보건의 ‘거리두기’라는 이름 아래에 몸과 관계의 형태를 탈물질화하는 듯 보인다. 물리적 거리가 아닌 네트워크와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회생활

은 이제 보편적인 소통의 형식이 되었다. 나아가 다양한 국가 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백신과 확진자 발생의 소식을 전달받지만,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동의 궤적과 개인의 정보들은 보건과 방역이라는 목적의 빅데이터로 취급 받고 감시된다. 이처럼 보건이라는 개념은 생명을 보호한다는 포괄적인 준거를 바탕으로 지니지만, 오늘날 굉장히 구체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몸의 경험을 바꾸어 온다고 할 수 있다.

COVID19이라는 전염병과 사투하는 오늘날, 보건 및 방역의 과정에서 미디어는 무엇을 매개하고 변화시켰는지 물어보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포스트-시네마적 매체 환경을 예시하는 이미지의 두 양상을 살피고 난 뒤, 변화된 세계와 신체의 현상학적 관계를 분석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해왔듯이 매체 환경의 변화는 인간과 세계의 존재론을 뒤흔든다. 디지털 이미지 제작의 시대에 등장한 포스트-시네마 담론과 이에 준하는 매체경험은 팬데믹과 맞물려 더욱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팬데믹이 가속시킨 새로운 매체 환경의 양상은 감시 이미지로 구체화된다. 오늘날 코로나 방역 시스템이 크게 기대고 있는 GPS와 네트워크 시스템은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의 감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포스트-시네마 매체환경 속에서 감시이미지는 오늘날 사회적인 신체에 큰 존재론적 변동을 가한다. 그것은 바로 신체적 지위가 더이상 물리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미지의 형태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감시와 미디어 기술의 융합은 영화의 맹아가 싹틀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화의 탄생에 결정적이었던 광학 장치 스스로에는 측량의 목적이 내재되었고, 이러한 성질은 영화와 감시의 시선구조가 손쉽게 조응하도록 만들었다. 이 시기의 감시 주체는 줄곧 자본가나 관객 등으로 자리를 바꾸며 이론화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매체환경에서 감시의 시선 구조는 탈체현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제 감시의 이미지를 조망하는 자리에는 인간의 눈을 대신해 드론이나 항공뷰 등과 같은 기계적인 눈이 자리한다. 또한 감시의 대상으로서 우리는 더이상 유기물의 신체로 취급당하지 않으며, 그래픽 데이터나 소비와 생산 데이터를 운반하는 유동적 자본의 흐름으로 인식된다. 열화상 카메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에 내재된 GPS 시스템 등은 이러한 감시의 구조를 시각화한다. 오늘날의 감시의 도식에서 유기체적 신체는 더이상 특권적 지위를 점하지 않으며, 새로운 감시 세계 속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위치 역시 변동하게 된다.

2. 포스트-시네마적 조건과 팬데믹

시대에 변화에 따라 매체 환경이 변화한다는 믿음은 영화와 미디어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이론적 밑거름이 되어 왔다. 디지털의 등장은 무빙 이미지의 존재론을 새롭게 규명하도록 만들었다. 아날로그 이미지 제작에서 디지털 이미지 제작으로의 전환기에 영화이론 연구자들은 전통적 시네마의 경험, 필름이라는 광학적이고 물질적인 지표적 성질의 상실을 당면하게 된다. 전통적 영화 미학에 있어 특권적 지위에 놓여있던 필름의 물질성과 지표성의 상실은 디지털이 영화에게 가한 거대한 존재론적 위협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카메라 앞에 펼쳐진 전-영화적 현실을 물리적으로 담아내던 필름의 유실은 영화의 죽음이라는 다소간 종말론적인 담론으로 확장되고는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영화가 지녔던 미디어 관람 경험은 불연속적인 단층선을 그리지 않았다. 이는 오히려 연속성을 유지하며 변곡점을 그리는 시네마 이후를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자장 아래에서 우리는 포스트-시네마라는 이름 속에서 영화와 미디어를 확장시켜오고 있다.

프란체스코 카세티는 이러한 현상을 ‘재배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는 타시타 딘의 〈필름〉이라는 설치 작품이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에 전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⁸⁷⁾ 딘의 설치 작품은 일찍이 크라우스가 매체의

87) Francesco Casetti, “The Relocation of Cinema” in *Post Cinema: Theorizing 21st Century Film* ed. Shane Denson and Julia Leyda. 채희숙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http://tigersprung.org/?p=1763>

물리적 지지물이라고 말했던 영화의 장치들을 보존하며, 환기시킨다.⁸⁸⁾ 그러나 이러한 딘의 시도에서 카세티는 영화적 장치의 “예술적 설치 작품의 부품”으로서의 역설적인 배치를 발견한다. 관람객은 영화를 보러가는 것이 아니라 딘의 설치 작품의 배치들을 보러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카세티는 물리적 지지물의 보존의 시도가 결국 미디어로서의 영화라는 성격에서 벗어나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세티가 제안하는 ‘영화의 재배치’, 전통적 관람 공간을 떠나 어디로든 흘러가는 영화라는 미디어의 속성은 단순히 갤러리 등을 넘어 다양한 곳으로 편재, 확장된다. 카세티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영화에 처한 역설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그 역설은 바로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잃고 있지만 전례 없는 기회를 얻고 있는 시기의 영화’⁸⁹⁾이며,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음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모든 미디어가 기존의 경로를 벗어나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는 시기에 영화의 지위와 나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있어 카세티는 영화의 기계적 속성을 넘어서는 경험을 역설한다. 그동안의 영화에 대한 많은 담론들은 기술적 장치들에 기원하는 설명들을 지녀오기도 했지만, 그것은 보기의 욕망을 주도하는 ‘스펙터클’(발터 세르너)이며 물질성 없는 ‘상상력’(루카치), 인간의 눈을 초월한 기계적 눈(지가 베르토프),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반구체의 공간(루이 델뤽)이기도 했다.⁹⁰⁾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 영화는 ‘기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요소들(문화, 사회, 미학)이 작동하는 경험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우리가 매체를 대할 때 그것의 지지물이었던 장치가 단순히 쇠퇴하고 버려진다는 인식 보다는 그것이 함의하고 매개했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의 연속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보와 폐기의 인식론이 아닌 오늘날 다시 연속성을 지닌 채 현재화 되는 경험에 방점을 찍을 때, 영화적 시각 경험은 새로워지게 된다. 카세티의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화를 비롯한 미디어의 시각 경험이 어떻게 재배치되는지 질문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다.

비비안 솅책은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의 지각 경험 변화에 대해 현상학적 설명을 제공한다. 그녀는 “기술이 매개하는 표현과 지각의 과정들이 인간의 감각 자체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며, “사진, 영화와 전자 미디어 기술들을 통해 ‘재창조’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⁹¹⁾ 그녀는 오늘날까지의 기술 변화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광학적 기계장치로서의 카메라의 시대, 움직이는 이미지가 등장하는 영화의 시기 그리고 모든 것들이 디지털 데이터 논리에 따르는 전자 미디어 장치의 시기의 구분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기술적 장치의 발전을 기준 삼고 있으며, 솅책은 각각의 시기에 신체와 세계의 현상학적 감각의 변동을 분석한다.⁹²⁾ 이러한 솅책의 이해가 기대고 있는 준거는 바로 하이데거의 기술 철학이다. 그녀는 “기술의 본질이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는 하이데거의 기술 철학을 직접적으로 인용한다. “기술은 독립적인 효용과 맥락에 따른 물질적 특정성과 효용에 따르지 않”으며 오히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이 역사적으로 기입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⁹³⁾ 이러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기술은 단순히 도구적 가치 이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무언가가 있으며 기술과 맺는 관계가 상호 관여하며 생명력을 얻고 문화적 가치를 획득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솅책의 구분은 바로 전자 미디어의 등장에 대한 그녀의 통찰이다. 솅책은 자신의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프레드릭 제임슨의 자본주의 역사 설명과 상관적으로 위치시킨다. 따라서 그녀가 마지막 단계로 분석한 전자 미디어와 몸의 경험은 제임슨의 “지금까지 상품화되지 않던 영역으로의 자본의 방대한 확장”

88) 로잘린드 크라우스, “복해에서의 항해”.

89) Francesco Casetti, Ibid.

90) Ibid.

91) Vivian Sobchack, “The Scene of the Screen : Envisioning Photographic, Cinematic, and Electronic” in *Post Cinema: Theorizing 21st Century Film* ed. Shane Denson and Julia Leyda.

92) Ibid.

93) Ibid.

의 단계와 조응한다. 이는 “자연과 무의식을 향한 역사적으로 독창적이고 새로운 침투와 식민화”를 내포한다. 전자 매체가 장악한 것은 사진적인 것과 영화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삶 경험 형태 일반이라는 점을 습책은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자 매체가 성취하고 있는 기술의 편재성과 분산의 현존 감각은 현재성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 매체가 매개하는 현존 감각은 단순히 과거를 향한 사진적 노스텔지어나, 미래를 향한 기술적 전망들과는 다르다. 디지털 전자기술은 사진과 영화의 특성들을 원자화하고 추상적으로 부호화하여 각각의 픽셀 정보 값인 비트 단위로 치환시킨다. 디지털 정보화의 근간에 놓인 이러한 이진 부호화를 습책은 ‘즉자 존재being-in-itself’로서 바라볼 것을 주장한다. 나아가 이 불연속적 데이터 값들로 구성된 세계는 수용자로 하여금 공간적 탈중심화를 수반하고, 비신체화된 상태에 가깝게 구축한다고 역설한다.

습책의 설명을 통해 디지털로의 전회 속에서 매체가 매개하는 경험의 속성들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서 물화시키던 사진적 복제의 시기를 지나 움직이는 이미지인 영화의 시기를 통해 포드주의적 자본주의 노동의 형식을 발견했고 우리의 세계 경험이 위 시기에 따라 다르게 직조되었던 것처럼, 디지털이 지닌 비물질성의 논리는 즉자적이며, 탈신체적인 시각성의 경험을 만든다. 전자 매체 이전 영화라는 ‘기술’이 특권적 지위에 올려질 수 있었던 물질성 자체의 존립 근거가 와해됨에 따라 기계가 아닌 매개된 경험을 통해 동시대를 진단해야 할 필요를 만드는 것이다. 카세트와 습책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포스트-시네마적 전회라고 불리는 영화 미디어의 담론 속에서 작동의 근원 동력이 바로 매체 경험이라는 것이다. 매체를 통한 경험은 단순한 기술적 지지물, 장치, 물질성의 외피 넘어선다. 포스트-시네마적 담론은 매체의 양식이 전달하는 경험의 연속성과 변화를 포착하는 바, 크라우스가 기대했던 ‘매체의 재창안’⁹⁴⁾에 대한 파악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팬데믹을 통해 삶의 많은 지반들이 변화하는 오늘날, 매체의 경험의 양식을 진단해보는 일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것은 있어왔던 포스트-시네마적 전회를 더욱 가속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신체는 더욱 탈신체화되고, 시간과 공간의 감각은 새롭게 배열된다. 따라서 이어질 다음의 장은 COVID-19 발생 이후 우리에게 두드러진 미디어 양식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 경험이 미디어의 시각 경험 내에서 어떻게 발아했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시각성의 경험이 변동시키는 신체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3. 미디어와 감시의 시각성

오늘날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선언과 함께 지구적 단위에서 질병의 감시와 통제가 큰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2020년 이후 질병 관리 및 보건 방역의 목적으로 개인의 역학조사가 수행되었고 그것이 공표되면서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드러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감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새삼 그것이 놀랍냐고 말할 테지만, 매체와 감시의 사회 구조가 결탁하는 지점에 있어서 그것의 관계가 날로 공고해지고 있다는 것은 논의되어야 할 지점임에 분명하다. 팬데믹이라는 지구적 단위의 이슈가 미디어 연구의 영역에서 다시금 환기를 요구하는 것은 감시의 시각 경험이 어떻게 연속성을 지니고 변형되어 왔는지에 대한 추적이 라고 할 수 있다. 감시의 데이터들이 그래프와 도표, 지도의 형식을 통해 가시화되는 오늘날, 감시가 이미지, 매체 경험에 유착되어온 시각 매체의 역사를 검토해볼 필요성을 자아낸다. 앞선 장의 분석에서 우리는 디지털로의 전환 속에서 영화를 비롯한 시각 매체의 경험이 어떻게 재배치 되는지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감시와 방역 시스템 속에서 매체는 그 목적 수행에 매우 긴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팬데믹을 통한 매체의 변화가 어떤 관계를 공모하는지 파악해보도록 하자.

캐서린 짐머는 감시 영화에 대해 연구하면서, 감시의 시선 구조가 시네마 이전의 광학 기술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94) 로절린드 크라우스, ‘매체의 재창안’, “북해에서의 항해”, 김지훈 역, 현실문화A, 2017.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짐머는 “연속 사진”이라는 광학 기술의 형태에 주목하는데, 그것을 무빙이미지와 스틸 사진의 중간적 단계로 파악하고 감시의 흔적을 발견한다.⁹⁵⁾ 에드워드 머이브릿지와 에티엔 쥘 마레의 연속 사진은 인간이나 동물의 움직이는 신체를 기록하는 데에 활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머이브릿지가 말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24 대의 사진기를 동원하여 말의 움직임을 포착했던 사실은 광학 미디어 역사의 유명한 일화이다. 이는 머이브릿지가 사진기라는 객관적인 기계장치를 통해 말의 움직임을 시간에 따라 해체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카메라의 포착이 객관적이라는 믿음 아래, 관찰과 측량의 관행은 시네마토그래프의 등장 이전의 시각 및 광학 기술에 존재해왔다. 짐머는 이러한 광학기술의 생체측량적biometric인 속성이 초기의 영화에서도 그대로 이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일찍이 광학 기계 장치의 감시의 시선 구조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하룬 파로키는 뤼미에르 형제의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에 주목한다. 파로키는 시네마의 발명이었던 뤼미에르 형제의 기록에서 감시의 시선구조를 발견한다.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는 공장의 문이 열리고, 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화면 양쪽으로 나가는 것을 담는다. 파로키는 이것을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동적이고도 맹목적으로 무한한 수의 사진을 찍어대는 오늘날의 수많은 감시 카메라들의 선구”라고 파악한다.⁹⁶⁾ 노동자를 포착하는 카메라의 위치에 공장의 소유주인 뤼미에르 형제가 있었던 것이다. 공장 문이 열리면 그곳에서 나오려는 카메라 기사의 연출과 명령은 자본의 명령이된다. 파로키는 몰려 나오는 노동자들에 대해 개인들의 삶을 동기화하는 ‘산업적 질서’를 예리하게 포착한다. 그에 따르면 “노동 구조는 노동자를 동기화하고, 공장의 문은 그들을 하나의 무리로 만들며, 이러한 압축의 과정은 노동력이라는 이미지를 만든다”고 지적한다.⁹⁷⁾ 그의 이러한 통찰은 자신의 에세이 영화로 표현되어 노동의 이미지와 근본적인 기술 장치의 감시의 시각성의 관계에 주해를 단다. 짐머와 파로키는 기계 장치가 지닌 감시의 시각성이 궁극적으로 인간 신체를 향한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파악한다. 이 시각성은 단순한 운동의 재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관습이 기입되고 투사되는 이미지를 만든다. 파로키의 말처럼 이미지의 움직임 자체가 아닌 “또다른 감각”이 이미 카메라라는 광학적 장치에 기입이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며, “이 최초의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에서 영화 스스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또다른 감각”일 것이다.⁹⁸⁾

눈 앞에 있는 현실 그 자체를 복제하는 필름의 특징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감시의 부인할 수 없는 신뢰성에 기반을 만들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 감시 이미지의 위상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디지털 이후 가장 보편적인 감시의 형태는 CCTV로 나타나게 된다. 토마스 레빈은 조지오웰의 소설 『1984』를 언급하면서 오웰의 판옵티콘적인 디스토피아 사회를 향한 예언이 현대사회에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미국사회가 9.11 테러를 기점으로 CCTV를 생활의 여러 부분에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⁹⁹⁾ CCTV를 비롯한 사회 감시는 안전을 보장한다는 믿음을 주면서도, 동시에 문명의 영향 아래의 어떠한 개인도 그 판옵티콘적인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레빈은 CCTV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의 이동 혹은 교통 정보 등 역시 수집되며 감시의 영역이 되었다고 분석한다.¹⁰⁰⁾ 안전을 보장하면서 감시를 수행하는 이 역설적인 기술의 기능이 천안문 사태에서 학생 지도자를 추적하게끔 만들었고, 질병이나 범죄자의 일거수일투족이 포착 가능해졌다는

95) Catherine Zimmer, “Introduction: Surveillance Cinema in Theory and Practice” in *Surveillance Cinema*,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5, 1-30.

96) Harun Farocki, “Workers Leaving the Factory” in *Harun Farocki: Working on the Sigt-Lines*, Thomas Elsaesser ed.,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4.

97) Ibid.

98) Ibid.

99) Thomas Y. Levin, “Rhetoric of the temporal index-Surveillance Narration and the Cinema of “Real Time””, in *Rhetoric of Surveillance from Bentham to Big Brother*, eds. Levin, Ursula Frohne, and Peter Weibel Karlsruhe, Germany and Cambridge, MA: ZKM/MIT Press, 2002.

100) Ibid.

것이다. 한편에서는 만연한 감시 속에서 수집되고 저장되는 데이터가 시장의 논리에 따라 거래된다는 지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여러 논쟁들¹⁰¹⁾이 있어왔다.

디지털 이후의 감시 이미지는 주로 모니터를 통해 전달된다. 이러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끔 만들었던 것은 다름아닌 전쟁에서 활용된 레이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레프 마노비치는 스크린의 계보학 분석에서 레이더의 등장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사용 되었던 첩보 기술 중 하나인 사진은 현상까지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그 유용성을 반감시켰다. 하지만 레이더에서 이미지는 순간적으로 생산되는 탓에 자연의 사태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한다. 마노비치는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한다.¹⁰²⁾ 기존의 과거 시간의 총합을 보여줄 뿐이던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변환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레이더 디스플레이는 CCTV와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곧장 모니터로 옮겨 놓는다. 니콜라스 롬스는 실시간 감시 이미지의 실현이 하드드라이브와 같은 저장공간의 마련을 통해 가능해졌다고 설명한다.¹⁰³⁾ 데이터 저장공간에 대한 발전은 실제 시간과 재현되는 시간 사이의 가상적인 일대일 대응관계를 만들어낸다고 분석한다. 이런 일대일 대응 관계는 자연스럽게 실시간 real-time 스크린으로 확장되어 오늘날의 시각 매체에 자리매김한다.

디지털 시대에 실시간 감시 이미지는 마찬가지로 기존의 미디어가 지니고 있던 그것과는 변별되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 우선 디지털에서의 감시, 이를테면 CCTV나 레이더 감시 등의 이미지들은 방치되어 있는 카메라의 속성을 지닌다. 이 이미지들은 특정한 (영화적) 사건의 발생을 예고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확히는 방치된다고 말해야 하며, 감시의 주체 역시 부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감시 카메라의 증가가 감시 및 통제에 인력을 대체해온 사실은 이러한 성질을 더욱 강화한다. 자동적 포착을 바라보는 신체는 더이상 필수적이지 않게 된 셈이다. 이전까지 카메라가 지닌 시선의 끝에는 하나로 수렴되는 감시 주체가 분명 존재했다. 신체를 감시하는 시선의 주인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의 시그널을 부호화하며 패턴인식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으로 대체된다. 감시 주체는 루미에르 공장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를 바라보는 자본가 혹은 감독이거나 관음증의 영화의 감독 스스로이거나 관객이었다. 디지털 이후 감시의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감시의 주체는 신체가 없이 유령처럼 우리의 곁에 자리한다.

그렇다면 감시에 노출되는 신체들은 어떨까? 히토 슈타이얼은 감시의 시각성에 흥미로운 작업과 설명을 내놓았다. 그녀는 줄곧 지평선이라는 원근법에 뿌리내리던 근대성이 디지털 세계에서 어떻게 변곡되고 있는지 집요하게 파고 들어 왔다. 그녀의 이러한 관심이 잘 드러나는 작업 중 하나는 바로 〈안 보여주기: 빌어먹게 유익하고 교육적인.mov 파일〉 (이하 ‘안 보여주기’)¹⁰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이 작업의 동기에 대해 정치적 반역자가 감시의 시선망을 피해 도주하는 방법에 대해 들었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기존 사회에서 반역자인 그들은 드론의 감시를 피해야 한다. 드론의 감시장치는 체온을 통해 움직임을 감시한다. 이러한 기계적 시각성의 작동 방식은 감시로부터 흥미로운 은폐방식을 초래한다. 도망자들은 반사 플라스틱 판을 쓰고 체온을 낮추기 위해 몸에 물을 적신다는 것이었다. 슈타이얼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도망자들의 플라스틱 판은 가시적이지만, 드론의 눈에서 그것은 비가시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드론이 떠날 때까지 도망자들은 그 플라스틱 판 아래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드론의 감시에서 숨는 시간이 휴식이며 공부의 시간이라고 진술한다. 슈타이얼이 밝히는 이러한 감시의 역설은 수직적 시선인 드론의 감시가 교묘한 역설 위에 올려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드론의 감시를 피하는 방법으로서의 〈안 보여주기〉 작업의 시작이 되었다고 그녀는 밝히고 있다.¹⁰⁵⁾

101) 대표적으로 “Do Not Sell My Personal Information”이라는 사회적 움직임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사회적 움직임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insights.truyo.com/ccpa-hidden-game-changer>

102) 레프 마노비치, ‘인터페이스’, “뉴미디어의 언어”, 서정신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132-133.

103) Nicholas Rombes, “Real Time,” in Cinema in the Digital Age (London: Wallflower Press, 2009), 84-89.

104) <https://www.youtube.com/watch?v=LE3RlrVEyuo&t=639s>

〈안 보여주기〉는 교육용 영상의 짜임새를 택하며 기계적 시각의 장에서 비가시적인 존재가 되는 각각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카메라로부터 어떻게 비가시적일 수 있는가?”, “육안으로부터 어떻게 비가시적일 수 있는가?”, “이미지가 되는 방법으로 어떻게 비가시적일 수 있는가?”, “사라짐을 통해 어떻게 비가시적일 수 있는가?”, “이미지로 구성된 세계에 합성되면서 비가시적 일 수 있는가?”와 같은 제목의 챕터들로 구성된 작품에서 슈타이얼은 각각의 기계적 시각 장치의 맹점을 제시한다. 작품의 주된 공간은 해상도 타겟이라는 미 공군의 공중 감시 거점이다. 공중 감시에 있어 근본적인 부분인 해상도는 곧 가시성의 획득과 직결된다. 히토 슈타이얼은 감시의 조건인 가시성이 다양하게 획득되거나 배제되는 경계를 분석한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비가시성’을 획득하는 일의 이중성이다. 그것은 감시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안전하고 아늑한 개인의 세계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여성과 노인 등 소수자로서 가시화되지 못한다는 역설적인 지점을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감시 세계에서 벗어나는 일은 신체적 가시성을 버리는 것이며, 이는 스스로 디지털 데이터로 합성되거나, 픽셀화되는 일이다.

우리는 여기서 슝책이 설명한 전자 매체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전자 매체의 편재성과 분산은 현재적 감각을 전달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체 환경은 모든 것(심지어 그것이 신체라고 하더라도)을 원자화된 추상적 각각의 비트 값들로 변환시킨다.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플라스틱 패널 밑에 자신의 체온 데이터를 숨기고, 픽셀 데이터로 변환되어 디지털 이미지에 합성되는 우리의 신체는 디지털 감시의 시각장에서 비물질적이고 유령적인 데이터로 존재하게 된다. 슝책이 전자 매체의 시대에 등장하는 현재적 감각과 탈-신체적인 경험은 오늘날 감시의 시각 세계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인간이 유동적 데이터로 치환되는 일은 코로나 확산 방지 목적의 개인 역학 조사와 조응한다. 팬데믹 속 개개인은 이동과 출입에 있어 정보를 제공할 것을 받아들이고,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사회적 생활이 진술된다. 또한 슈타이얼이 분명히 지적한 디지털 세계에서 가시성을 획득하는 일이 결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진술하듯이, 노인이나 소외계층은 만연한 디지털 감시의 시각 세계 속에서 역설적으로 비가시화 된다. 디지털은 모든 것을 데이터로 만들지만 한편에서 유용하지 못한 데이터들의 구분과 폐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4. 감시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촘촘하고 신체를 지우는 시선의 다발 속에서 살아야 한다. 팬데믹이 일상의 신체의 감시 환경을 가속시킨 것은 분명하다. 이를 통해 신체와 시선은 유령적이며, 데이터로 부호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점에서 어떻게 이 세계 내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슈타이얼과 웬디 희경 전은 이러한 디지털 감시와 빅데이터 시기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이들은 오늘날 일상이 된 데이터 처리 방식 중 하나가 ‘패턴 인식’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슈타이얼은 아주 미시적이고 비지각적인 수준의 신호작용들의 연속으로서의 데이터는 ‘이해 가능한 것을 볼 수 없는’ 오늘날의 뉴노멀 양식이라고 강조한다. 많은 양의 차고 넘치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들이 제안되어 왔는데, 슈타이얼이 보기에 오늘날의 패턴 인식은 시원적 점성술과 닮아 있다고 파악한다. ‘아포페니아’는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료들로부터 관계와 결론을 연역하는 방식이다. 그녀가 보기에 이러한 방식은 나무나 짐승의 내장을 통해 점괘를 살피던 점성술과 비슷한데, 오늘날의 빅데이터 패턴 인식 역시 아포페니아와 같은 과정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슈타이얼은 이러한 편집증적인 빅데이터 패턴 인식의 결과물들이 기괴한 괴물의 표상이나 전쟁의 이미지로 등장한다는 흥미로운 통찰을 보인다.¹⁰⁶⁾ 그녀는 구글이 데이터 패턴화를 거쳐 이미지를 생산, 합성해내는 ‘딥 드리

105) Hito Steyerl and Laura Poitras, “Techniques of the Observer”, Artforum International, vol.53, no.9, 2015.

106) Hito Steyerl, ‘A Sea of Data : Apophenia and Pattern (Mis-) Recognition’ in Duty Free Art: Art in the Age

밍’을 소개한다. 이 패턴 인식 방식이 작동하는 데이터 신경망에는 사전 설정 값으로서 기존의 사회의 이데올로기 및 선호도들이 투영된다.¹⁰⁷⁾ 구글의 딥드림은 인간들이 생산하는 많은 양의 이미지 데이터를 무작위로 취합하고, 그곳에서 ‘전형성’을 추출한다. 딥드림이 임의적으로 만든 이미지는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네트워크화된 시공간 속의 사용자들의 이미지 생산을 감시하는 유령의 창작물인 것이다. 딥드림의 이미지는 우리를 감시하는 괴물의 눈이 달려있다.



〈그림〉 구글 ‘딥드림’을 통해 만든 모나리자 - 출처 : 위키피디아 “Deep Dream” 페이지

빅데이터의 처리 속에서 패턴화되는 인간의 삶과 세계는 비물질화, 유령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기계적 도식으로 치환된 데이터의 기호들이 우리의 삶과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시원적 고대의 점성술이 별자리를 실체가 아닌 투영으로 보았듯이, 오늘날의 빅데이터 패턴 인식 역시 오늘날의 신용 점수, 학업 점수 등과 같은 선호도 및 가치의 투영된 결과물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들의 투영으로서의 패턴화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행사한다. 이러한 가치들의 투영은 무수히 많은 사용자의 행위를 감시하는 빅데이터의 결과물이며, 우리는 감시되고 추출된다.

슈타이얼의 통찰을 조금 다른 식으로 상상해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무수한 감시의 체계가 데이터의 바다로 흘러들어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실체가 되어버렸다면, 데이터의 바다는 다르게 표현해 ‘감시의 바다’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감시는 디지털 온라인 공간과 현실을 횡단하며 우리의 삶을 패턴화한다. 팬데믹 시기의 보건의 오늘날 물리적 감시의 총위를 넘어선 ‘나’의 데이터화와 비물질적 감시를 전면화시킨다. QR코드로 방문기록을 하며, 백신 접종 정보가 플랫폼 기업과 연합해 제시되며 취합된다. 우리는 거대한 국가와 기업이 구획 해놓은 데이터의 양식장에 가두어진 채로 살을 찌우고, 가치를 생산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공간을 새롭게 기획할 수 있을까.

전은 이러한 상황에서 급진적인 공동체의 미래를 상상한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나타나는 패턴 인식은 연결의 논리를 만드는데 이를 통해 ‘나’는 복수화되고 다중화된다. 무수히 많은 연결과 그로 인한 네트워크 속에 위치

of Planetary Civil War, Verso, 2017.
107) Ibid.

한 주체로서의 나는 결코 단일하지 않으며 당신(YOU)은 복수화된다.¹⁰⁸⁾ 이러한 단수적 복수인 주체는 정체성을 균등화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데이터, 감시의 바다 속에서의 나를 노출 시키는 일은 또다른 인접의 관계를 형성한다. 전은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급진적인 공동체의 형상으로 상상한다. 네트워크 상에서 마치 ‘바이러스’처럼 급속히 번져가는 성질은, 단순히 감염, 소통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주체의 복수화가 지닌 급진적인 가능성을 해방시킨다는 것이다.¹⁰⁹⁾ 데이터는 인식론적 주체로서 ‘나’의 외연에 존재하면서도, 거대한 하나의 흐름으로 주체를 복수화시키는 비물질적 세계와의 연결에 동원된다. 전은 데이터의 바다라는 공간화된 상상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녀는 장 퓌 낭시를 경유해 비의미적 데이터의 공간 속에서 ‘나’를 스스로 드러내는 반복은 공동체 감각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이자 획득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나는 네트워크는 이러한 행위들의 반복을 통해 작동하며, 너무 많아 파악할 수 없는 ‘무위’의 데이터의 바다 속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의 감각이 네트워크에 위치될 수 있는 여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4. 나가며

지금까지 팬데믹 선언 이후 인간의 매체환경에서 전면화되는 이미지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전염병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사회에 적극 도입된 것은 감시의 기제였다. 이러한 지점에서 영화라는 미디어 속에 나타난 감시의 시각성이 디지털 세계인 오늘날 어떠한 연속성을 획득하고 있는지 규명해 보았다. 기술 매체와 감시의 시각성은 분명 친연성을 지녀왔으며,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감시의 기술이 편재하며, 미시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질이 데이터로 치환되는 빅데이터의 시대에서 인간의 웹상 모든 생산 활동은 신경망 설계된 프로그램에 의해 감시되며 이는 기형적인 이미지를 생산하기도 한다.

매체는 기술과 밀접하면서도 시대의 가치와 이데올로기의 손쉬운 투영물이 된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접한 매체 환경을 어루만지는 여러 문제의식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에 따라서 이 글은 미디어 기술 매체를 휘감던 지배 논리의 역사를 소략하게나마 살펴가며, 오늘날의 기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문제의식들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지금껏 밝혀 온 감시의 편재성을 ‘감시의 바다’라고 이야기할 것을 제안했다.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영역을 모두 횡단하는 감시는 오늘날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그 몸집을 복잡하게 증대시켜오고 있다. 팬데믹의 불안 속에서 중요한 일은 빅데이터라는 ‘무위’의 바다에 질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세계와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포스트-시네마 매체 환경은 물리적 현실과 비물질적 디지털 공간을 망라하여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진단할 지점들을 열어주었다. 네트워크화된 감시의 바다를 세계와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는 단순히 유령적인 존재가 아닌 복수화되는 잠재성을 실현시키는 주체가 되며 새롭게 배열되는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Hui Kyong Chun Wendy, ‘Big Data as Drama’. ELH 83:2,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6.
 109) Ibid.

팬데믹과 한국문학

이인

1. 들어가며

코로나-19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이자 공포였다. 또 하나의 세계 전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일상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바이러스는 인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 발생하고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코로나 발생이 공식화되던 2019년 12월부터 백신이 보급된 현재까지도 바이러스의 추이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어렵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 이후 세 번째로 코로나바이러스를 ‘팬데믹’으로 규정하고 일시적인 방역 수준을 넘어선 감염병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를 선언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일상의 삶을 감염의 공포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기존에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일상의 구조와 삶의 기반을 성찰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생긴 문제들이 허다하지만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인간의 위치를 다시 떠올려보면 그것이 우연히 인류에게 불어닥친 불행이라고 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처럼, 코로나바이러스는 방역과 퇴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 수 없다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그리하여 전지구적인 팬데믹 사태는 “이제까지 삶의 방식이 야기한 결과이며 예전의 일상이 이미 재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¹¹⁰⁾이라고 일컬어졌다. 다시 말해 이는 재난이 일어난 것은 그 일상성에서 출발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의를 조금 더 축약하면 아마도 “인간이 바이러스요, 지구가 인간을 제거하기 위해 발명한 치료제가 바이러스다”라는 농담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이러한 농담을 즐기는 것과 달리, 코로나 사태를 문학과 연결지어 이야기하는 것은 때이른 감이 없지 않다. 아직 팬데믹은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리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내고 싶은 것은, 이를 다루는 한국문학이 “익숙한 실패”를 겪고 있다는 느낌이다. 『팬데믹-여섯 개의 세계』(이하 『팬데믹』)는 팬데믹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 현상이 극심했던 2020년 9월에 출간된 소설집이다.¹¹¹⁾ 『팬데믹』은 그 표제부터 ‘팬데믹 서사’임을 밝힌 SF 묶음집이다. 이 책에 묶인 6편의 소설은 ‘끝과 시작’, ‘전염의 충격’, ‘다시 만난 세계’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각각 묵시론, 전염병, 뉴노멀(New Normal)에 대한 이야기로 분류되어 있다. 이 키워드들은 대개 새로운 삶의 질서로 팬데믹 이후 제시된 키워드일 것이다.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세계의 종말을 형상화하는 묵시론적 상상력은 최근 한국문학에서 증가하고 있는 테마에 속한다. 묵시론은 회복할 수 없는 대재앙이나 참사 등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한국문학의 묵시론적 비전은 무자비한 개발이 초래하는 파국에 관한 서사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¹¹²⁾ 본 글쓴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SF 혹은 대재앙의 문제 그 자체는 아니다. 루카치가 말한 바와 같이, 환상문학에서도 리얼리즘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문학이 제시하는 인간에 대한 부정성이나 탈-휴머니즘과 같은 비판론은 2000년대 이후 반복되어 왔으며, 언

110) 피터 베이커,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이종임 옮김), 『창작과비평』, 2020년 여름호, 391쪽.

111) 김초엽·두나·정소연 외, 『팬데믹-여섯 개의 세계』, 문학과지성사, 2020; 조수경·김유담·박서련·송지현, 『쓰지 않을 이야기』, 아르테, 2020.

112) 파국적 당대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으로서 김형욱과 김애란, 황정은의 단편을 분석한 글로 김형중, 『대한민국 묵시록』, 『현대문학』, 2010년 7월호.

제나 한국문학이 강조해온 ‘진부한 미래’라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다. 휴머니즘, 혹은 근대 중심의 사유가 불러 일으킨 파국과는 별개로 그 사유를 재현하고 재생산하는 양식은 한국문학에서 반복되어 온 양식이며, 그것은 문제 의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허한 외침과 함께, 상업적 재생산의 한 양식이 아닌가 하는 시선이다.

2. 탈휴머니즘 서사의 불가능성

팬데믹은 인간이 당연하게 영위해온 삶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들었다. 팬데믹이 파국적 요소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삶에 대한 재인식을 요청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젝이 말한 것처럼 팬데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 특성들을 재점검하기 위해 하나의 파국이 필요하다는 서글픈 사실을 반추하는 의미가 있다.¹¹³⁾ 팬데믹이 인간의 삶의 우연성과 무의미를 상기시켜주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재정의일 것이다.

만물의 영장이자 모든 사물의 척도로서 표상된 고전적 이상인 ‘인간(Man)’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하나의 정의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완전성을 추구하는 거의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간주된다. 인간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바탕으로 휴머니즘은 목적론적으로 인가된 합리적 진보 개념에 인간 능력의 생물학적, 담론적, 도덕적 확장을 결합시킨 일종의 교리이다. 유일무이하고 자기규율적이며 내재적으로 도덕적인 인간 이성의 힘에 대한 믿음은 르네상스시대부터 휴머니즘적 신조의 불가분한 부분이 되어 왔다.¹¹⁴⁾

이러한 인간 중심의 사유들, 예컨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식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당장 팬데믹 사태가 그를 방증한다. 그러나 지금 본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컨대 최근 논의되는 포스트휴먼의 주제, 혹은 뉴노멀의 발명과 같은 논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일정부분 익숙하다. 일련의 포스트모던 사상들이 반복한 반-인간주의와 같은 특질일 것인데, 본고가 질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러한 사상 자체가 실제로 근대적 사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이며, 다른 하나는 그를 재현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서사 기법으로 자리잡은 묵시록은 당대의 언어와 분위기, 그리고 현안들을 재구성해 왔다. 그런 점에서 SF 소설은 소설 속의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관계가 비록 암묵적이고 암시적이긴 하지만, 단순히 장르문학(이미 장르문학과 순문학이라는 경계는 무용에 가깝기는 하나) 혹은 ‘공상’과학소설이라는 표현으로 격하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SF 소설을 ‘리얼리즘’이라고 평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현실을 적실하게 반영한다면 주관과 객관을 매개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리얼리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이 이야기하고자하는 것은 통상적인 인간 삶의 범위를 초과한 지구에서 먼 이야기이다. 인간이라는 주체는 어떤 이유에서든 종말했거나 종말의 위기에 처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공허해지는 것은 인간의 탈주체화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휴머니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의 주류 담론에서 단순히 벗어난 존재들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팬데믹』의 묵시록(‘끝과 시작’) 파트에 해당되는 김초엽의 「최후의 라이오니」와 듀나의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은 각각 인간이 절멸된 이후의 이야기, 절멸 직전의 이야기이다. SF가 “한편으로는 현실과 또 한편으로는 가능성과 맺고 있는 관계를 드러낸다”¹¹⁵⁾는 말의 의미는 『팬데믹』의 이야기들이 전염병의 공포를 말하면서도 인간의 한계 지점과 종말 이후의 삶을 그리고 있다. 또한 비현실적인 서사 공간과 이질적인 타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주목할 수 있다.

113) 슬라보예 지젝, 강우성 옮김, 『팬데믹 패닉』, 북하우스퍼블리셔스, 2020, 57쪽.

114)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옮김,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24쪽.

115) 조애나 러스, 나현영 옮김,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포도밭출판사, 2020, 65쪽.

「최후의 라이오니」는 작가의 말대로라면 팬데믹을 직접 쓰기보다 ‘지구에서 멀리 가 보는’ 방식으로 우회한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서는 인간의 멸종 이후 결함이 있는 인간 복제들과 기계가 등장한다. 이들은 적대적이지 않다. 오히려 복제들과 기계는 그 특성이 서로 모호해진다. 이 소설은 기계에 부여된 인간적 측면, 인간 복제인 ‘나’가 지닌 결함이 더 부각되는데, 이러한 비인간 타자들은 인간이 멸종된 세계에 남겨진 인간의 흔적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무대가 되는 곳은 인간이 사라진 후 기계들의 거주지 3420ED로 생명과 문명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곳이다. 이 곳을 탐사하기 위해 들어간 로몬인 ‘나’는 거주지의 함정에 살고 있던 기계들에게 붙잡히게 된다.

과거 불멸인들의 도시였던 거주구는 감염병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가 휩쓸었고, 불멸인의 결함 있는 복제였던 ‘라이오니’는 불량품들과 함께 자신들의 성체를 구축했다. 기계들의 리더인 셸은 계속 로몬인 ‘나’를 ‘라이오니’라고 착각하여 자신들을 구출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부서진 셸을 구해준 것이 라이오니였고 라이오니는 기계들이 가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복제였다. ‘나’는 라이오니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셸은 믿지 않는다. 셸이 라이오니를 찾는 이유는 라이오니가 자신들을 구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인간은 복제 기술로 불멸의 욕망을 실현하다가 전염병으로 파멸하는 존재들이다. 반면 라이오니나 ‘나’는 그러한 복제 시스템의 결함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복제들이다. 라이오니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기계들은 “라이오니에게 다른 생물이, 그리고 다른 생물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41)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유기체의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라이오니는 기계들이 두려움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 조건을 넘어서까지 기계들과의 공존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보편의 인간 종보다 훨씬 담대하고 강인하며 용감하다는 로몬의 일반적 특성들이 없는 ‘나’는 로몬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잘못된 종에 갇혀 있다는 감각”(22)을 평생 느껴왔다. ‘나’의 결함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완전한 로몬이 아니라는 점에 있는 것이다. ‘나’는 셸과 기계들을 구하기 위해 방법을 찾았지만 셸의 죽음과 거주구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나’는 죽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오니가 되어 셸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주고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다. 죽음을 상상하는 능력은 ‘나’의 결함이지만 인간의 흔적이 남은 ‘최후이자 유일한 존재’인 라이오니로 인해 ‘나’는 죽음이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 역시 인류의 위기 상황을 그리면서 생태학적 문제를 보여준다. 인간들은 “밤이나 낮으로 쏘려 가지 않으려면 꾸준히 노를 저어야”하는 운명이다. 고래는 ‘지구의 고래와는 닮은 구석이 전혀 없는 생명체’이며 ‘떠다니는 거대한 섬’의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다. 고래는 ‘수백의 개체가 모여 만들어진 군체’이자 “지구의 군체 동물보다 훨씬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이다.

고래는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였다. 고래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지구의 고래와는 닮은 구석이 전혀 없는 생명체였다. 우리의 고래는 떠다니는 거대한 섬이었다. 폭은 1-2백 미터 정도였고 길이는 7백 미터에서 1.5킬로미터에 달했다. 납작한 등은 언제나 물 위로 드러나 있었고 물 밑에 있는 수백 개의 지느러미로 헤엄을 쳤다. 수천 년의 관찰을 거친 끝에 우리는 고래가 수백의 개체가 모여 만들어진 군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단지 고래는 지구의 군체 동물보다 훨씬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였다. 생각 없이 험악한 해류나 태풍에 잘못 휩쓸려다가는 생선잡이나 냉동 생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덩치를 불리는 건 이치에 맞는 진화의 선택이었다.

(중략) 하지만 어떤 고래들은 죽어갔다. 개체가 죽는 속도보다 새 개체가 들어오는 속도가 더 느리면 고래는 완전히 죽었다. 그 속도가 어느 선을 넘으면 위기를 느낀 개체들은 접근하지 않았다. 고래는 분해되었고 그와 함께 그 위에 있던 마을은 멸망했다. 고래병이라고 했다. 전염병이라고 했다. 한 마리의 고래가 죽으면 인근 고래들이 따라 죽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염 경로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해류를 타고 감염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물고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우리 때문일 수도 있었다. 우리가 별다른 도구 없이 이

행성 생태계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건 지구인과 이 행성의 생명체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곳의 생명체들을 먹을 수 있었고 그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우리는 이 행성의 미생물에 감염되었고 이들도 지구의 미생물을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큰일은 없었다. 고래병이 돌아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인 다른 고래들마저 한 마리씩 죽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저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지만 탓할 수는 없었다. 우리도 그랬을 것이기에. (56~58쪽)

고래에 기탁해 살아야 하는 우리는 지구의 동물로서 고래보다 더 복잡한 군체 동물인 ‘고래’를 파악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죽어나가는 고래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 소설에서 인간은 바다 위를 부유하며 언제 멸종될지 모르는 위기를 겪는다. 또한 인간이 아니라 고래가 감염병에 걸려 죽는 생명체로 등장한다. 고래는 인간에 의해 포획되어 생선찜이나 냉동 생선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몸집을 불리는 진화적 선택을 해온 개체이다. 고래들이 감염으로 분해되면 그 위에 서식하는 인간의 마을도 멸망한다. 이러한 설정은 다분히 알레고리적이다. 고래와 인간은 거대한 공조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고래의 죽음은 곧 인간의 죽음이다. ‘우리는 이 행성의 미생물에 감염되었고 이들도 지구의 미생물을 받아들였다’는 서술은 고래와 인간이 같은 미생물을 공유하고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운명 공동체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한 쪽의 위기는 다른 한 쪽의 위기가 된다. 고래의 감염 원인은 다른 감염된 고래에서 온 사람들로 인한 것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다. 고래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생태계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개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래가 두 동강이 나면서 고래 위에 남을 것인지, 뗏목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는 후자를 선택한다. 고래는 ‘우리의 집’이 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고래들에게 인간들이 전염병이었을 것이라는 설명은 ‘고래와의 공생 관계’(66)가 실패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 고래는 영리한 포유류이다. 해류를 읽고 폭풍을 예측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라진 고래를 이루는 개체들이 다른 고래의 일부가 되어 인간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했다는 설정은 팬데믹에 관한 반인간주의적 생태학 관념의 연장이다.

이 소설의 화자는 사람들이 사는 고래와 마주치는 게 유일한 희망인 상황에서 지난 고래에서 감염되어 몸에 붉은 열꽃이 자라난다. 이 소설의 서술자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구출의 가능성이다. 생존을 향한 “희망의 크기는 너무나도 거대해 내 뇌와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 기대가 허망하게 끝나 죽음으로 마무리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으리라는 희망의 가능성에 의지해” 종이와 연필로 글을 쓰는 서술자는 자신이 쓰는 이야기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자신이 써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멋진 모험담이 기다릴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것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서술 혼란의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맺는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수용이나 어떤 희망에 대한 논증이 과연 팬데믹 상황에서 새롭게 재발굴된 사상이라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묵시적 상태나 인류의 절멸이라는 상황은 SF 소설 속에서 늘 제기되어 왔으며, 그를 멸망시킬 수 있는 소재가 팬데믹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오히려 본 필자는 이에 대한 사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현재 문제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밝히면서도,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간이 어떤 방향을 택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하지 않느냐가 싶다. 인류의 절멸을 소설의 배경으로 가정하거나, 혹은 반인간주의에 대한 논의는 현재 생존해 있는 인류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이는 ‘포스트’ 담론이 근대 담론에 대한 무의미한 부정으로 흐르는 것과, 이를 당연한 듯이 수용하고 재 반복하고 있는 어떤 양상들에 대한 질문으로 흐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휴머니즘을 무분별하게 반대

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과연 현재의 환경 문제와 팬데믹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가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 가고 있는 개별 단위의 개인이 전지구적인 환경 오염과 팬데믹 사태에 얼마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오히려 이는 현대의 생산-소비문화와 그 배후의 권력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과연 이것은 휴머니즘의 외부, 혹은 인간 중심성의 해체와 새로운 윤리의 창안일 수 있는가 묻고 싶다. 이는 근대의 부정이라는 점에서 비서구문명주의적이지만, 여전히 서구에서 출발했다는 데서 한국문학이 봉착한 - 마르크스의 언어를 빌자면 - “철학의 빈곤”이 아닌가 싶다.

특히 생태학적인 원인으로서는 생태가 반인간적이며 그것이 원래 그러하다는 인식은 인간-자연의 이분법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소위 “인간이 바이러스이며 지구가 인간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치료제가 코로나”라는 농담은 뼈아픈 말이기도 하나 코로나-19의 대확산은 인간 활동의 부산물이다. 팬데믹의 매개물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인간은 오히려 바이러스계를 움직이고 추동하는 주원인이며 여전히 자연계의 일부이다.

김이환의 「그 상자」는 바이러스의 위기가 만연한 미래 세계를 그린다. 「그 상자」의 상황은 좀더 극단적이다. 이 소설에서 바이러스 항체 보유자와 비감염자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등장하고 신경계가 파괴되어 혼수상태에 빠진 감염자들은 감염 이후 2년이 지나면 안락사 처리를 한다는 법률이 제정된다. 그마저도 대기자가 많아 가족이 있는 경우는 미뤄진다. 민준의 부모가 그런 경우이다.

부모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민준에게 바이러스 이전의 삶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팬데믹 이전의 삶이 떠오르는 것”정도일 뿐, 그의 일상엔 인공지능이 진행하는 뉴스를 보거나 인공 배양육을 먹는 것으로 무미건조하게 채워져 있다. 민준은 집밖을 나가지 않은 채 2년을 보낸다. 민준은 의료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석현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인공지능인 장웨이와 존의 교류를 통해 친해지면서 게이 커플로 발전한다. 죽음이 일상이 된 서울에서 무단으로 빈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석현, 집에 있다가 감염이 되어서야 집을 나온 고등학생, 그리고 민준은 그들의 집이 보여주고 있듯 그저 삶을 연명한다. 이 소설에서 집은 물건과 쓰레기가 뒤섞여 있고 먼지와 곰팡이와 쓰레기 냄새로 가득하며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는 아수라장”이다. 감염자의 집은 그가 세상을 뜰지 알 수 없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치울 필요도 없는 집이 되고 민준은 자신 역시 그런 집에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

2020년 5월의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유행은 곧 혐오의 대유행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성격과 한국 사회에 등장한 혼란의 양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의 극복과 미래적인 가족의 성격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소설에서 마치 토큰처럼 소수자는 언급되고, 단순히 모든 책임이 기존의 가부장제적 가족 질서에 있다는 인식은 의미가 있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못하다. 그에서 탈피하는 대안적인 가족 질서가 코로나 이후의 삶에 필요한 대답이라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무례한 사용일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지 않은 것을 낡은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활용 방식이다.

유토피아적인 대안 제시, 관념적 차원에서의 대안 제시는 한국 문학에서 제기되었던 오래된 문제들, 즉 현실에서 출발하여 이야기를 재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서 출발하여 현실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로 귀결된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과연 근대주의라는 거대 담론이 봉착한 위기 상황인 팬데믹 상황에서 그 답안이 유토피아적인 제시라는 방안으로 귀결될 수 있는가이다.

3. 유의미한 사유를 위해

이 글이 대안으로 내놓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재유행한 영화 <컨테이전>(2011)이다. 이 영화는 기존 전염병 재난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치사율 100%”의 변이 바이러스도, 정부에 대한 맹목적 불신도 드러나

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이 영화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대응을 조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모델을 자문받으면서 그러한 드라마적인 영역을 축소시켰고, 이것이 당시 흥행 실패의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러한 흥행 실패의 사유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IPTV 및 OTT 서비스 시장에서의 흥행 원인으로 떠올랐다.

울리히 벡은 1986년 ‘위험사회’를 논의하면서, 현대 산업사회가 위험을 조장할 뿐 아니라 반복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요컨대 그것은 위험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위험의 본질은 경제 논리 속에서 훨씬 더 체계화되고 구조화되어 확대재생산되는 시스템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코로나 사태에 대입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현대 사회의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론을 언급한 시점보다 현재의 위험은 구조적이고 세계적이며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그 위험의 시스템이 어떠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각 개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컨테이션〉은 다양한 인물들의 군상을 보여주지만 크게 보았을 때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의 혼란, 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기존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 등으로 나뉜다. 〈컨테이션〉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완전한 해결과 회복을 보여주지 않으며 이를 극복해내는 영웅도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인류를 위협에 처하게 하는 것은 세계화 시스템 그 자체이다. 바이러스의 시작은 다국적 기업의 무자비한 개발과 그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에서 시작되고, 그 다국적 기업의 주요 인물(기네스 펠트로)이 최초 감염자가 되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면서 현대 시스템이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세세히 파헤쳐 들어간다. 영화는 반복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타인들간에 얼마나 많은 접촉이 일어나는가를 잡아내며, 저 멀리 열대우림에 있어야 할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내 앞까지 ‘로켓배송’되어 오는가를 묘사한다.

그 뿐 아니라 울리히 벡이 지적했던 ‘재난의 평등성’이라는 개념까지도 넘어서는 지점을 보여주는데, 이는 현실에서 이미 발생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저소득층이었으며 이들은 바이러스 확산과 직장 폐쇄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 영화에서 한정 수량의 백신은 고위 관료에게 우선적으로 분배되며, 빈곤국의 취약 계층은 가장 1차적으로 전염에 노출된다. 미국에서 생계 곤란이 인종차별 문제와 겹쳐 BLM이라는 대규모 시위문제로 번졌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대단히 사실적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적인 조명 역시 과연 미래를 위한 유의미한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지젝의 언어를 빌자면 그것은 ‘멈춰라, 그리고 생각하라’라는 질문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떠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지구적인 자본주의와 생산-소비 문화를 극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안은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단일한 의제에 합의하는,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른바 현대문학 작성에 유용한 기호들의 적절한 사용을 통한 문학의 기계적 생산과 그를 통한 추체험은 오히려 현실 파악을 왜곡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컨테이션〉은 최소한의 문학적 윤리를 지키고 있는 작품이다. 〈컨테이션〉은 팬데믹 사태의 대안이 아니라, “팬데믹 문학”의 대안이다. 〈컨테이션〉은 재난 이후의 사회 변화나 재난에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할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인들의 사고 체계나 대응 양식을 보여준다. 또한 재난의 세계화라는 관점은 정확하게 현실을 유의미하게 보여주고 있다. 〈컨테이션〉은 기존의 재난영화가 가지고 있는 영웅서사나 개인을 통한 극복이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헌신과 재난을 기회로 삼는 부정적인 인물상을 묘사하기도 한다.

〈컨테이션〉이 코로나 이후의 문제 해결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팬데믹 시대의 예견된 자화상이

며, 이미 초기 대확산을 지나 극복의 단계에 이른 현재의 COVID-19 진행과정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사실주의 장르의 유의미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관객들에게 호소 가능한 서사는 현실과의 접합 지점이며,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유토피아 대신 이 영화는 냉철한 시선을 통해 글로벌 자본주의의 위기 사회로서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4. 결론

『팬데믹』과 〈컨테이션〉은 장르가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내는 데 목표를 둔다. 따라서 『팬데믹』에 대한 과한 시의성을 담지하라는 요구 역시 일정 정도는 불공평한 일이다. 본고가 파악하는 진짜 문제는 『팬데믹』에 내재된 한국 서사장르의 진부한 반복에 있다. 반인간주의, 포스트 담론에 대한 반복적 재생산은 한국 문학이 새로운 문제의식을 지니지도, 또 대중에 호소할만한 시의성을 지니지도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팬데믹』에서 제시하는 문제의식의 결을 따르다 했을 때,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개별 단위의 개인이 전 지구적인 환경오염과 팬데믹 사태에 있어 얼마나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되는대로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 묻자면, 소비자가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과 기업에 대한 규제 중 무엇이 더 환경 문제에 선행적인 해결책이어야 하는가?

대안이 될 수 없는 유토피아주의와 반인간주의적 태도는 현대의 생산-소비문화와 그 배후의 권력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나아가서는 팬데믹이라는 시의성을 소재로 익숙한 해법을 내놓는 상업주의가 아닌가 오히려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과연 이것이 휴머니즘의 외부, 혹은 인간 중심성의 해체와 새로운 윤리의 창안일 수 있는가 묻고 싶다. 이는 『팬데믹』 소설집이 “SF라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 문학이 보여주고 있는 인식 지평의 종합적인 한계가 아닌가 싶다. 필자가 생각할 때, 진정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합리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은폐하는 비합리의 물질이다.

문학은 장르가 어떠한 작품이 존재하는 현실을 기반으로 삼는다. 따라서 문학의 재생산은 먼저 현실의 한계선들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학의 리얼리즘화를 주장하는 바는 아니며, 모든 문학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본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비판을 모호하게 전개함으로써 오히려 그 비판의식을 흐리고자 하는 과정이다.

향후 연구활용 계획

1. 향후 인문학과 과학 자료로 만날 수 있는 기반연구
2. KCI급 논문 투고 예정

글로벌 그린인프라 포레스트(Global GreenInfra For 愛 SDGs Team)

본 연구모임은 도시 내의 그린인프라로서 숲을 대상으로 2015년 UN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주요 목표에 기반하여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국내 및 북한, 일본, 캐나다, 독일 등에서 그린인프라로서 숲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연구 및 활동 등에 대해 서로 비교함으로써 글로벌한 시각에서 방향성을 공유코자 한다.

(총 9회 연구모임 진행)

팀장 채진해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팀원 김민서 히로시마대 URA연구원

팀원 김서린 서울대 협동과정조경학 박사과정

팀원 박세진 캐나다 현지 거주

팀원 윤문영 공원재단 공원관리운영연구소

박사연구원

팀원 이태호 (주)기브앤 대표

팀원 이현정 서울시립대 대학원 조경학 석사과정

팀원 허윤경 랫츠앤파트너 도시조경설계사무소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활용 방안

1. 서론

2000년 9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1세기를 향한 국제 사회의 목표로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선언되었다. 이는 인류가 처음으로 범세계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 선언이 종료된 후, 현세대에게 닥쳐진 주요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함께 앞으로의 세대가 맞이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로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2015년에 채택되었다. SDGs의 선언에서, 주목할 점은 육상·해양생태계의 보전, 평화,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와 같이 오늘날 지구촌에 당면한 글로벌 환경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고 존엄성이 보장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SDGs가 발표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맥락에서 포용적이고 안전한 정주환경조성에 대한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GI)의 가치가 재조명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COVID-19 등 다양한 도시재해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 등 거점공간으로서 GI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가 요구되어 지면서 그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산림이 국가 녹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지는 도시그린인프라(Urban Green Infrastructure, UGI)로서 중요 자원이다. 따라서 GI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세부적인 제도와 유형,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살펴보는 것은 국내의 지속가능한 GI 발전을 위해서도 유의미하다. 본 연구는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및 사회현상과 그에 따라 결부되는 도시민의 삶의 질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지구적 목표인 SDGs에서 제시하는 주요 목표를 기반으로 GI의 다양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GI에 관련한 기후변화, 도시, 산림, 커뮤니티, 이용서비스, 정책 및 제도를 연구 키워드로 선정하여 전문 연구자팀을 구성하고, 한국, 북한,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의 각국의 이슈를 발제하고 토론을 진행하여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2. 본론

1) 지속가능한 도시 주거환경을 위한 GI

초고령화 사회에 일찍이 진입한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토지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치바현 카시와시에서는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토지나 관리 수준이 현저히 낮은 토지에 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토지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및 지역 활성화 진흥에 도모하는 “카시니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의 미이용 토지와 이러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단체를 지자체에서 중개하고 토지이용의 활성화와 공간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촉진에 도모한다. 이로써 주거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GI의 활용성을 증진시켜 SDGs no.11과 같은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리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마을숲을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 관리함에 따라 SDGs no.13과 no.15의 실천목표에도 기여한다.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GI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SDGs 17개의 목표중에서 no.13(Climate Action)에 명시되어 있으며, 탄소저장공간으

로서 GI의 유형과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에 관련한 저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경(Klimagerechte Landschaftsarchitektur)」을 통해 독일의 GI 전략과 그에 따른 계획 및 실천 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 베를린은 도시의 미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과 같이 과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후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시내의 녹지 조성과 동시에 수분 공급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도시내의 산림, 공원, 가로수 등 비포장공간을 GI를 탄소 흡수원으로 인지도 높이고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을 넘어, 토양과 수목으로 이루어진 자연복원의 개념의 생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대응에 있어서 GI의 전략으로 Edible Landscape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는 식량자원의 운반에 따른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자급자족의 라이프스타일 추구하고 학교 시스템과 연계한 기후변화 교육으로 그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3) GI에서의 정책과 실천

UGI는 숲과 산지 또는 공원 등의 유형으로 나타나며 GI의 충분한 공급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도시내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한국의 산림은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그 역할과 활용성에 대한 역사적 가치가 시민들과 함께 공유되어 왔으며 공공에서는 공유된 자원의 가치를 통해 그 시대가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 왔다. 독일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분단을 겪으면서 역동적인 공간 변천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20세기 초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베를린 근교의 숲을 보고하는 “항속림계약”을 이루게 되었고, 통일된 이후 이는 베를린의 GI제도는 “경관프로그램”으로 나타나, 토지이용계획과 같은 위상으로서 도시공간 정책의 상위 제도로써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유엔-북한 전략계획 2011-2015”를 통해 MDGs 달성을 지원하고, 2016년 고위급 회의에서 SDGs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SDGs no.15는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전국국가적으로 시행한 산림복구 사업과 맞닿아 있어, 북한의 산림경관에 대한 보호, 이용현황과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남북교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정원이 개인의 취미활동을 넘어 정원박람회, 마을정원 등 지역발전과 공동체 회복 등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가든투어리즘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유형 및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SDGs no.13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도시 미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환경교육을 통해 no.4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SDGs의 실천방향에 있어서 GI의 역할과 기능을 한국, 북한, 일본, 캐나다, 독일의 제도, 정책, 사업 등을 바탕으로 이슈발제와 토론진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첫째, 생태환경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삶의 질 개선과 함께 기후변화 및 도시재해에 대응하는 GI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후변화, ’그린뉴딜’, ’포스트코로나’를 포함한 도시가 당면한 과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GI는 도시의 공공재로서 시민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 SDGs의 대원칙인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no one is left behind)”에 상응하는 형평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GI관련 정책, 제도, 사회적 이슈 등은 그 나라에 처해진 현황에 따라 주안점이 상이할 수 있으나, GI가 도시 산업화, 범지구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물리적 공유공간임과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인지적 공유공간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시사점을 가진다.

참고문헌

- 허윤경&채진해, 2018,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도시 외연부 녹지 활용 사례연구-베를린, 밀라노, 서울을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6(1), 72-85.
- 채진해&김원주, 2020, 『탄소저장량 측정을 통한 근린공원의 생태적 가치 평가와 관리 방안 연구-서울시를 대상으로』. 『한국경관학회지』, 12(2), 217-231.
- 채진해&이인재, 2020, 『그린인프라로서 근교산 지역의 물리적 특성과 주민인식 및 행태 연구-서울시 관악구를 중심으로』, 『도시디자인저널』, 2(1), 26-35.
- 채진해, 허윤경, 이현정, 김영일, 2021,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연구』, 『2020 작은연구 좋은연구』, 서울연구원.
- 채진해, 허윤경, 김성학, 2021, 『역사적 변천에 따른 서울과 베를린의 근교녹지 비교 및 고찰』, 『서울학연구』
- 김서린, 2018, 『북한 보호지역의 보전과 이용』, 『국립공원연구지』 9(3), 165-373.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산림관광 상품으로서 정원가도(庭園街道) 구축 및 스마트 관광 플랫폼 개발 최종보고서』, 산림청.
- Chae J.H. & Joh, M.J., 2021, 『Changes in the Cultural Trend of Use by Type of Green Infrastructure Before and After COVID-19 Using Blog Text Mining in Seoul』, 『인간식물환경학회지 (JPPE)』, 24, 415-427.

향후 연구활용 계획

최근 기후변화, COVID-19등 도시재해로 그린인프라의 역할은 더욱 다원화되었다. 본 연구는 2015년 UN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목표에 기반하여 도시 내의 그린인프라를 대상으로 지속성과 활용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국내 및 북한, 일본, 캐나다, 독일 등에서 그린인프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연구 및 활동을 공유하고 비교함으로써 글로벌한 시각에서 방향성과 시사점을 공유한 결과, 지속가능한 도시 주거환경,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실천이라는 큰 카테고리 구분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집중 토론한 결과, 어떻게 하면 정책, 계획, 행정에서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도록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등 체계적인 방법이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여 보다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2018년 발표한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서울을 바꾸는 17가지 방법’과 접목하여 GI의 활용방안을 구체화 하고, 나아가 세부 목표에 대한 측정 가능한 지표를 구상하는 등 시민들의 인식과 정책을 개선하는 선순환 과정을 구축하여 GI가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세대는 물론 후손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 자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간의 관계를 공생과 협력의 관계로 새로이 정립하기 위한 후속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찾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7G

본 연구모임은 한-아세안 개발협력 MOU 체결 5개국에서 진행 중인 환경, 안전, 보건 분야 ODA사업의 코로나 발생 전, 후 난제 및 해결방안 등을 조사해, 동일 주제 문헌 부재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효과적인 ODA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

(총 6회 연구모임 진행)

팀장 박지은 UIUC 대학원

팀원 김현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팀원 서정대 고려대 뇌공학 석사과정

팀원 임서현

팀원 이은정

팀원 이우철

팀원 조옥래 전북대 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보조원

포스트 코로나 안전/환경/보건 분야 한-아세안 ODA 사업 전략: ASEAN 중점협력국 5개국 사례연구를 통한 현황분석 및 방향성 제시

1. 서론

- 1) 연구 배경 및 중요성: 코로나 19 대유행 및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범지구적 도전과제로 국제 공조와 연대의 중요성 부각; 보건 및 안전 시스템이 취약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대상 지원 필요성 증대
- 2) 목적: 한-아세안 개발협력 MOU 체결 5개국을 대상으로 환경, 안전, 보건 분야 ODA사업의 코로나 발생 전, 후 난제 및 해결방안을 조사해, 동일 주제 문헌 부재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ODA전략 수립에 기여
- 3) 연구 방법: 2021년 3월~11월 간, 해당 연구 범위 사업 비교 및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학제간 연구를 통한 다각적인 관점 제시

2. 본론

1) 환경

- a) 미얀마: 기후변화 취약국 2위 미얀마에 환경 빅데이터 기반의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후 및 환경 통계의 수집 및 활용 제약 극복, 기술역량 강화, 환경 데이터 활용 ODA방안 마련
- b) 라오스: 기후변화 취약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ODA기여가 적은 라오스의 경우, 일본의 green mekong initiative, 독일의 거버넌스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ODA 사업 방향 제시
- c) 캄보디아: 환경보호, 자연보전 ODA 사업은 증가 추세임에도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 폐기물 처리 미흡; 타 분야 사업 운영시 환경문제 고려를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의 필요성 증대
- d) 필리핀: 심각한 자연재해 및 생물다양성 위협을 겪는 필리핀의 경우 적극적 대응(2009년 기후변화법, 대기정화법, CDM 사업)과 국제협력(JICA, USAID)등 다양한 벤치마킹 가능
- e) 베트남: 열악한 위생시설, 부족한 환경규제, 경제개발에 초점; 세계은행은 환경정책 및 제도, 아시아개발은행은 기후변화, 한국업체는 물 관련 수주에 집중

2) 안전

- a) 미얀마: 정정불안, 전염병, 자연재해 순으로 위험도 상승; 코로나 이후 재난 대응, 여성 및 소수민족 포함한 갈등 예방 및 해결, 평화, 안보, 코로나 검사 및 예방사업 등 융합 ODA 진행
- b) 라오스: 코로나 이전에는 자연재해, 열악한 의료 시스템, 취약불발탄 극복을 위한 한국의 '라오스 불발탄 제거 지원 사업' 등 재난/사고 예방에 집중; 코로나 이후 감염병대응 집중
- c) 캄보디아: 자연재해 취약 및 지뢰 및 불발탄 이슈 증대로 한국의 불발탄 제거 지원사업 및 일본의 대인지뢰 프로그램(2014~2020); 남남협력 방식으로 캄보디아-라오스, 이라크, 앙골라에서 지뢰제거 관련 기술 공유
- d) 필리핀: 동남아시아에서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 사건사고 다대하여 코로나 이전에는 자연재해 및 사건사고

관련 안전 사업 위주, 코로나 이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 등 신사업 추가

e) 베트남: 베트남전 과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베트남 지뢰 및 불발탄 통합대응 역량강화사업 (2016~2021)’, ‘베트남 폭력피해 여성 및 여아 예방 보호 모델 구축사업(2016~2021)’; 코로나 이후 ‘베트남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2020)’ 등 신사업 추가

3) 보건

a) 미얀마: GDP 대비 보건 지출이 1%에 불과하고, 병상확보가 시급하여 한국의 경우 감염병 대응지원에 집중 한 “전염병 연구소 역량 강화사업” 수행

b) 라오스: 입원자수에 비해 부족한 보건인력 및 역량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보건인력 역량강화 사업 집중, 라오스 정부는 2017년 ‘라오스 보건부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및 웹 기반 통합정보 플랫폼 전환을 통해 의료 서비스 강화 추진중

c) 캄보디아: 국가개발계획(NSD)으로 보건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구축, 보건 시설 접근성 개선, 의료인 능력 향상 등 원조기관과 협업해 ODA 진행중; 한국의 경우, 코로나 대응을 위한 포괄적 긴급지원 사업 수행

d) 필리핀: 코로나 전에는 부족한 의료인력과 미흡한 보건체계를 보완하고자 한국은 보건 ODA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영양개선사업, 보건 서비스 체계 강화 사업 수행;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포괄적 긴급지원 및 워크스루 진단부스 지원 사업 등 신사업 추가

e) 베트남: 타 ASEAN 국가 대비 의료인프라가 양호하여 코로나 발생 이전 한국은 식수 개발, 종합병원 건립사업 등의 사업 진행; 코로나 발생 이후 관련 대응 사업 등 보건 체계 강화 지원

3. 결론: 환경, 안전, 보건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ODA전망 및 사업 전략

(1) 환경 ODA 전략 제언

(미얀마) ICT 융합형 ODA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다인종 특성을 고려한 지역간 포용성 강화, 데이터 활용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강화, 불평등 해소 및 기후정의 실현에 기여

(라오스) 농림업 분야 고려, 기후변화 적응 사업 중심으로, 사업 관리 및 운영시 진행 및 평가 방법등을 개선하여 장기적인 사업 실행 필요

(캄보디아) 환경분야 사업 추진 시 다양한 부처와 연계 진행 및 타 분야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환경문제 고려를 위한 구체적 ODA 사업 실행 지침 마련

(필리핀) 해수면 상승, 해양생태계 피해 대비/저감 사업 개발 필요; 생태계 보호 및 에너지 프로젝트의 통합운영, 민간자금 활용 방안 모색 활성화, 협력국 환경데이터 수집

(베트남) 환경에 대한 부족한 인식 극복 위한 정책화/법제화 지원 및 기술지원 병행 필요

(2) 안전 ODA 전략 제언

(미얀마) 인프라 구축, 에너지 자원 개발 등 지속적 지원 필요; 군부쿠데타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및 계획 수정

(라오스) 불발탄 제거를 비롯한 기존 안전 사업들의 지속적 지원 및 코로나 확진자 변동에 대응하는 유동적 지원

(캄보디아) 불발탄 사업 지역 접근 어려움 및 정보원 확보 문제 고려한 해결책 필요

(필리핀) 자연재해 및 코로나19 피해 예방을 위한 장단기적인 사업 진행 및 사업 지속성 강화를 위한 민간-시민사회-국제기구의 협업 강화

(베트남) 확진자 변동을 반영한 코로나 관련 ODA 지원

(3) 보건 ODA 전략 제언

(미얀마) 보건 ODA 규모를 농업분야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부족한 인프라 극복을 위해서 백신 지원을 넘어 포괄적인 보건 지원 확대 필요

(라오스) 의료 인프라, 기술 및 역량사업 병행하여 필수 의료 장비 구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발전 도모; 우리나라의 다양한 공여기관간 협력을 통한 융합형 ODA 추진

(캄보디아) 단기적으로 코로나 대응 지원 사업에 집중, 장기적으로 보건체계 및 인적 역량 강화 사업으로 확대 및 ICT 활용 보건 체계 강화 사업 필요

(필리핀) 제약 시장 규모 활용한 연구 및 의료기술 이전 등의 ODA지원 다각화

(베트남) 의료서비스 수혜층 확대, 의료분야 접근성 증대, 보건 역량 강화 위한 'e-헬스'

향후 연구활용 계획

- 학술정보 교류와 학제적 연구 경험을 통해 참여 연구자들의 타 분야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연구 역량 강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환경/안전/보건 사업을 지원하는 ODA 전략에 기여
- 신남방 5대 중점 프로그램 아세안 (ASEAN) 5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에 대한 지원사업 강화 및 파트너십 강화 방법 모색
- 범 지구적인 환경/안전/보건 과제 발생시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 하기 위한 향후 MOU 체결 전략 및 방안 모색
- 보건 및 안전 시스템이 취약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안전/보건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논의 활성화
- 빈부 격차와 차별을 줄이고, 평화적이며 친환경적인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추후 연구 아이디어들에 기여

라틴아메리카 지속가능한개발 및 인권 연구회

본 연구모임은 주류 관점에서 합의되고 제시되어 온 ‘지속가능한발전’ 담론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다. 20세기 말 이후, ‘지속가능한발전’은 대안적 발전 모델로서 현재 우리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되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지역적 맥락 또는 행위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며, 실질적 시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흔히 ‘개발도상국’ 또는 ‘제3세계’로 간주되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지속가능한발전 모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라틴아메리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모임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지역적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촌, 도시, 젠더, 환경, 난민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의 논의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총 8회 연구모임 진행)

팀장 심은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팀원 박근유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팀원 소재원 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de Mexico
팀원 이수아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원 농업경제학
팀원 이지효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팀원 허경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라틴아메리카 지속가능한개발 및 인권 연구

1. 들어가며

본 연구회는 주류 관점에서 합의되고 제시되어 온 ‘지속가능한발전’ 담론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다. 20세기 말 이후, ‘지속가능한발전’은 대안적 발전 모델로서 현재 우리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되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지역적 맥락 또는 행위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며, 실질적 시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흔히 ‘개발도상국’ 또는 ‘제3세계’로 간주되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지속가능한발전 모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라틴아메리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회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지역적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촌, 도시, 젠더, 환경, 난민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의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1-1.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정의

앞서 설명한 목적을 위해, ‘라틴아메리카 지속가능한발전 및 인권 연구회’에서 ‘지속가능한발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본 연구회의 세부 연구 분야인 농촌, 도시, 젠더, 난민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해 살펴본다.

가)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와 지속가능한개발

첫째로, 지속가능한개발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개념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ESG는 CSR의 발전적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개발에 조응하는 기업 활동을 의미하며 기업 활동이 더는 경제적 이익을 좇는 형식이 아닌 지속가능한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등을 기업의 활동에 중요한 요소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관점을 관철하는 연구의 진행하는 데, 환경의 ‘소비자’로 여겨졌던 기업 행위자에 대한 분석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ESG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개념이며 실제로 이것을 평가 지표로 환산하여 기업을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ESG와 관련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목재시장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양적 연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SG의 경우, 기업 행위자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어 여성, 난민 등 다른 연구의 행위자들을 분석하는 데 한계점이 관측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에 집중된 관점에서 탈피하여 바라보자면 ESG는 분배의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나) 젠더와 지속가능한개발

둘째로, 젠더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서는 SDGs가 인권과 결합할 경우, 기존 기득권층의 관점에서 해석됐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주목받지 못했던 계층에 대한 권리 보장과 관련이 되어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권리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만약 지속가능한 개발의 일부 개념을 페미니즘과 결부할 경우 예를 들어, 산림개발과 관련된 운동과 관련하여 운동 전개와 커뮤니티의 존립 여부와 관련한 주제가 있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분석하는 연구 주제일 경우 지속가능한 개발과 연계가 가능하며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다) 지속가능한개발과 '합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 해보자면, 이 연구회에서 지속가능한개발을 보고 싶은 점은 '합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개발의 논의는 환경에서 출현했고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된 개념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발과 비개발, 환경과 비환경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 방식이 아닌 어디까지 합의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행위자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학을 주로 이루는 연구방법인 사례 연구(Case Study)의 경우, 지속가능한개발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다양한 이해, 가치 분석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환경 난민과 지속가능한개발

합의라는 키워드와 관련하여, 환경 난민에 아주 적합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환경 난민은 실재하지만 정확한 개념화가 되어있지 않다. 환경 난민은 꼭 국경을 넘어야만 난민이 아니라, 환경적 이유로 국내 간의 이주 또한 난민으로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 난민은 다양하게 실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념이 합의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호되지 않거나, 비가시적인 존재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환경 난민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합의점에 대한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식량 주권과 지속가능한개발

식량 주권 자체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건강하게 재배하여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로컬 마켓과 같은 현상이다. 이러한 점은, 식량주권을 커뮤니티 운동으로서 바라볼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내에서 돌파구를 찾게 될 경우와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맥락은 다를 수 있다. 식량 주권과 관련해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음식물과 관련한 커뮤니티의 발달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개발과 라틴아메리카와 관련하여 커뮤니티라는 개념은 매우 진보적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

바) 소결

종합해보자면 다원주의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 사회는 지속가능한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의 이해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장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언급했던 분배 문제 역시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개발을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이다.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 행위자 간 이해가치의 충돌이 분배의 문제와 결부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분배 문제는 이익의 분배 뿐만 아니라, 피해의 분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개발 담론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회 구성원들은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 기업 행위자, 시민 사회 행위자, 정치적 행위자, 농민 행위자 등의 이해와 가치와 이들 간의 권력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점을 포착하고자 한다.

2. 본론

본론에서는 앞서 제시한 관점에서 난민, 도시, 농촌, 젠더, 산림 분야의 개인 연구를 종합한다. 각 사례는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국가 또는 국제적 스케일의 합의가 실제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2-1. 난민과 지속가능한개발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 정책의 한계

: 베네수엘라 난민 거버넌스 속 시민사회에 대한 배제를 중심으로

박근유, 이수아

1. 서론

전 세계 최대 석유 보유국이자 한 때, 폭넓은 복지 정책과 진보적인 사회정책을 펼치고 인접국의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했던 베네수엘라는 현재 전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송출하는 국가로 나타난다. 2015년부터 일어났던 이 곳의 난민 행렬은 외세의 침략, 내전 혹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한 난민이 아닌 베네수엘라 국내정세의 심각한 불안정과 관련이 깊다. 베네수엘라 난민은의 목적국은 대체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로 나타난다. 역내 국가는 베네수엘라 난민 현상 초기,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적극 수용했지만 2017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베네수엘라 난민에 대한 수용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 정책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해가 갈수록 그 대상을 확대해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도모한다.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 하듯, R4V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180만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난민을 수용했고 가장 많이 수용한 국가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과 배경 아래,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 정책의 한계를 검토 해 보고자 한다. 콜롬비아의 난민의 수용과 거부, 거시적으로는 모든 이민정책과 관련되어 있어서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전적으로 법률로써 보장한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콜롬비아의 난민 수용 정책 기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콜롬비아의 이러한 수용을 ‘정책’으로 해석할 경우 한계점이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점을 시민사회에 대한 배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이론 검토

일반적으로 난민의 수용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며 대체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대통령 혹은 총리(집권여당)을 중심으로 그 권한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때, 대통령은 국내외적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난민 수용과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Karen Jacobsen(1996)은 수용국의 수용 결정 과정에서는 a) 수용국의 관료제도 b) 수용국과 송출국의 외교관계 c) 수용국의 역사적 배경 등이 관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etts et al.(2008), Whitaker(2008) and Aglorti(2011)은 UNHCR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Bidinger(2014)와 Song(2014)는 국내적 요인을 강조했는데, Bidinger는 사회보장 제도의 중요성을, Song은 난민자체가 수용국의 국내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난민의 수용과 거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민 수용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과 수용과정은 모두 정책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난민의 성공적인 중-장기적인 자국의 성공적인 통합과 추후 송환을 목적으로 가지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베네수엘라 난민 현상과 같은 대규모 난민 유입의 상황은 수용국의 국내 노동시장, 치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콜롬비아 국민과 베네수엘라 난민의 갈등으로 표출하게 된다. 따라서, 난민 수용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2.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난민 거버넌스

Law 1444 of 2011에 따르면,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민 정책과 관련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난민 거버넌스를 도식화 하면 <그림1>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1>.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 정책 도식화



3. 난민 거버넌스 속 시민사회의 배제

중앙정부와 시민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은 난민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최소화 하며 난민이 이질적인 외부인이 아닌 이제 수용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난민 수용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참여가 배제된다. 이러한 문제는 1) 노동시장에서의 콜롬비아 국민과 베네수엘라 난민의 갈등 2) 콜롬비아 국내 베네수엘라 난민에 대한 범죄율 증가와 같은 문제로 나타나며 베네수엘라 난민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더 빈번 해 질 것이다.

3. 결론

난민 수용 정책은 어느 정책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게 된다. 정책형성 과정에서는 국내적 상황 뿐만 아니라 국외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심지어는 송출국과의 외교관계 또한 고려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수용 결정 과정에서 난민 수용이 이루어지고 난민이 수용국에 유입 될 경우 이제 이들은 수용국의 국민들과 함께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수용 정책은 보다 시민 사회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하는 필요성이 부각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난민 수용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필연적으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직면할 수 있게 되며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다.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 사례가 적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정책 형성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로인 해 콜롬비아 정부의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 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지라도, 국내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관측 되었다. 이처럼, 본 논문을 통해서 난민 수용을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Bidinger, S. et al., (2014). "Protecting Syrian Refugees: Laws, Policies, and Global Responsibility Sharing. Boston: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
- Betts, A., G. Loescher, and J. Milner, (2008). "UNHCR: The politics and practice of refugee protection into the 21st century". Routledge.
- Jacobsen, K., (1996). "Factors influencing the policy responses of host governments to mass refugee influx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0(3), 655-678.
- Whitaker, B. E., (2008). "Funding the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Implications for protection. Global Governance: A Review of Multilater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4(2), 241-258.
- Song Young Hoon, (2014). "Terrorism and Securitization of Refugee Migration: A Case Study of the Kenyan Government's Refugee Policy".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54(1), 195-230.
- "R4V", <http://r4v.info>, (2021년 9월 28일)

2-2. 식량 주권과 지속가능한개발

멕시코의 종자 보호에 대한 고찰 :커먼즈(communs)로서의 종자

소재원

1. 서론

역사적으로 종자는 인류의 공동체의 일부였다. 종자는 인간 식량 생산 체인의 첫 단계로서 인류 및 공동체 문화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농민들은 종자를 자유롭게 교환하며 해당 거주지의 자연환경과 필요에 맞춰 종자를 육종하는 노력을 통해 종자 다양성을 이뤄낼 수 있었다. 종자는 수천년간 공동체와 자연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지식과 생물다양성은 계속되는 기후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식량 개발을 위해 지켜내야 할 유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종자가 인류의 커먼즈(communs)라는 것을 나타낸다. 멕시코는 옥수수 종자의 원산이자 가장 많은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는 국가중 하나로, 멕시코 지역사회 농민들은 예로부터 다양한 종자를 커먼즈로 보존해왔고 이를 통해 국가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지켜왔다. 하지만 현재 멕시코에는 종자를 사유화 시스템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경제적 위협을 겪고 있다. 국제 식물 신종 보호 연맹의 1991년 협약(UPOV 91) 가입국 확대와 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을 통한 협약 이행 압력을 비롯해, 종자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있다. 때문에 이 보고서는 멕시코에서 종자를 인류와 자연의 매개체로서 공동체 문화를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로 바라보며, 이에 해당하는 생물 문화 유산은 미래세대의 식량주권과 식량 안보를 위해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여긴다. 하여, 멕시코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자의 사유화 흐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및 국가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학술논문 및 서적, 현지 기사를 비롯해 관련 컨퍼런스등의 문헌연구를 통해 이뤄졌다.

2. 본론

1) 종자는 커먼즈인가

(1) 커먼즈 담론

커먼즈는 공동의 것을 일컫는 일상적인 용어로(라인보우, 2012), 이에 대한 연구는 중세, 고대에서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의 것 즉, 커먼즈로 인식되었던 토지, 종자, 수자원 등이 사유화 되어왔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보편화 속에서 이러한 ‘자원’들을 재화화 하며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개릿 하딘(Garret Hardin)은 1986년에 출간된 그의 논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서 커먼즈가 사유화 되어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과도이용과 무임승차로 인해 지속가능한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커먼즈를 재화로서 관리해야 하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구시대적인 소유방식으로 여겨져 온 커먼즈는, 공동의 것으로 향유되어야 하는 것들의 재화화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Boiller, 2015)

(2) 커먼즈로서 종자

종자는 농업, 식량, 식량 자급 그리고 세계의 많은 농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존재이며, 생물문화유산, 공동체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서 인간과 인간이 거주하는 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체로서 삶 자체과 공간을 재생산하는 커먼즈 활동(commonig)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식량을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많은 종자들은 수천 년동안 농민들에 의해 발전된 유산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형태는 변화하고있는 생물이다.(Boege, 2008;

Casas et al., 2017) 종자는 소유권이 적용되지 않았고, 자유로운 교환, 경작 및 재 경작의 활동을 거치며 인간 거주지의 기후, 경작지 형태에 맞춰 발전하며 인간은 공동체 형성, 문화발전을 이뤄왔고 식량을 보급할 수 있었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새로운 필요들에 적응하고 식량 안보 및 식량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종자를 커먼즈로서 인정하고 통한 자연과의 시공간적 공진화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종자 사유화 전개 및 현황

(1) 멕시코 종자 사유화 역사

멕시코는 녹색혁명을 기점으로 종자 개발 사업 및 종자 대량보급이 이루어졌다. F1종자 그리고 유전자 변형(GMOs) 종자를 대량 보급하며 종자 사유화가 진행되었는데(Kloppenborg, 2005), 이 과정에서 종자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지역, 국가, 국제적 규제의 전유물로 변질되었다. 결과적으로 종자는 몇몇 다국적 기업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회사들은 해당 종자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화학 제품을 생산하여 멕시코 농업의 주체가 농민들에게서 다국적 회사로 옮겨졌다. 단일경작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 파괴, 농민 공동체 소외, 멕시코 중소기업의 시작 접근성 저하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었다.(Brieva et al., 2008)

멕시코 헌법에 의하면, 서명 및 비준된 국제 협약에 대한 내용은 자동적으로 멕시코 내에서 합헌화 되며, 이를 기준으로 법적 규제들이 생겨난다. 그 중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연맹(UPOV) 1991년 협약은 종자 개발자 등록, 재 경작 금지 등 커먼즈로서 종자의 가치를 외면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GRAIN, 1998). 그런데 현재, 2018년 체결된 북미 자유무역협정안에는 UPOV 91 협약 이행 의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멕시코 종자를 위협하는 정치사회의 압력이 크다. 종자주권을 인간의 기본 권리를 인정하거나(농민권리선언, 2018)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려는 국제적 운동들이 존재하지만, 종자 사유화를 위한 협약들이 비준되는 경우에 해당 법적 효력이 크기 때문에, 이는 멕시코 사회가 직면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커먼즈로서 종자 보호를 위한 노력

멕시코 내에서 종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옥수수 보호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2007년 ‘옥수수 없이는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Sin Maiz No Hay Pais) 캠페인에는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였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2019년 국가 옥수수의 날(Dia Nacional de Maiz)를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 및 컨퍼런스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SMNHP, 2020). 또한 2013년에는 위 캠페인에서 파생된 ‘옥수수를 위한 집단적 요구(La Demanda Colectiva Maiz)’라는 사회운동은 ‘건강한 자연환경과 먹거리를 위한 집단권리’라는 새로운 사법적 도구를 활용해 2018년 GMOs 옥수수 종자 경작을 금지시키는데 성공한다(SanVicente, 2015). 이는 멕시코인에게 문화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옥수수를 다루는 케이스라는데에 한계가 있지만, 종자 사유화의 과정의 일부인 GMOs종자 보급을 금지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그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농민들은 종자를 교환하는 장(場)을 열고, 공동 유전자원을 관리하며 농민을 중심으로 종자 보호를 위한 사회 연결망 그룹을 형성하여 관련 제도 및 종자 공유를 통해 커먼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 커먼즈로서 종자 보호 적용 가능 법률

멕시코 헌법(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xicanos) 제 2조은 멕시코 원주민 문화 및 멕시코 국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할 것을 명시한다. 종자는 생물문화유산으로서 멕시코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며 종자를 통한 커먼즈 활동(commoning)은 멕시코인의 거주환경 조건을 형성하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종자 사유화는 위 조항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 4조에는 식량의 품질과, 건강한 자연 환경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종자 사유화로 인해 발생하는 생물다양성 파괴와 식량 품질 저하 문제는 이와 관련이

깊다. 토종 옥수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멕시코 연방법(Ley Federal para el Fomento y Protección del Maíz Nativo)은 비록 토종 옥수수를 보호하기 위해 공포된 법안이지만, 여러 조항에 걸쳐 GMOs 옥수수 종자 경작 금지, 옥수수 종자 다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육종, 옥수수 토종종자 정보접근 권리, 공동체 활동을 통한 종자 보호 및 관리 등 옥수수 종자에 대한 커먼즈 활동을 보호한다. 이처럼 멕시코 법률은 멕시코의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원주민 문화와 농민 문화를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결론

종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멕시코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운동은 종자를 커먼즈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규제와, 멕시코 국민의 식량주권 및 식량 안보를 위한 종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이를 위한 공동체적 움직임의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종자를 커먼즈로서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들의 운영개선이나 국제사회에서 정부의 입장표명 및 노력은 현안을 개선할 중요 요소이다. 또한 커먼즈로서 종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멕시코 시민사회가 법제도 개선에 대해 실천하고 있는 집단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종자, 식량, 농민의 사회 경제적 역할과 그 가치에 대한 사회 전반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만큼, 경험적이고 도구적인 전략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라인보우(Linebaugh, P.) (2012), 「마그나카르타 선언」. (정남영). 갈무리
- 볼리어(Bolier, D.).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배수현). 갈무리
- Boege, E. (2008). “El patrimonio biocultural de los pueblos indígenas de Mexico: hacia la conservacion in situ de la biodiversidad y agrobiodiversidad en los territorios indígenas”(No. Sirsi) i97896803854).
- Bollier, D., & Helfrich, S. (Eds.). (2015). “Patterns of commoning. Commons Strategy Group and Off the Common Press”.
- Brieva, S., Ceverio, R., & Iriarte, L. (2008). “Trayectoria de las relaciones socio-técnicas de los derechos de propiedad intelectual en la agricultura argentina: los derechos de obtención de semillas (DOV) en trigo y soja desde principios de los años 70 a la actualidad”. Ponencia presentada en las XXI Jornadas de Historia Económica de la Asociación Argentina de Historia Económica, Septiembre, 23-26.
- Casas, A., Parra-Rondinel, F., Aguirre-Dugua, X., Rangel-Landa, S., Blancas, J., & Vallejo, M. (2017). “Manejo y domesticación de plantas en Mesoamérica”. Domesticación en el continente americano, 2.
- de Mexico, G. (2017).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CPEUM)”. Gobierno
- de Mexico (2017),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CPEUM), en: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html/1.htm> (2020.08.13.).
- Espinosa C., A., Margarita T., R., Turrent F., A., Zamudio G., B., Valdivia B., R., Sierra M., M., Gomez M., N., Virgen V., J., y Mora G., K., Y. (2019). “Producción de maíz y soberanía alimentaria en el contexto del deterioro socioambiental de México”. En: Andres Barreda Marin, Lilia Enriquez Valencia, Raymundo Espinoza Hernandez (Coords.) Economía política de la devastación ambiental y conflictos socioambientales en México.
- GAIA/GRAIN. (1998). Vegetales, V. Diez razones para decir NO a UPOV, Num 2.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the population problem has no technical solution; it requires a fundamental extension in morality”. science, 162(3859), 1243-1248.
- Kloppenburg, J. R. (2005). “First the seed: The political economy of plant biotechnology”. Univ of Wisconsin Press.
- Secretaria de Gobernación, Mexico. (2020). “Ley Federal para el Fomento y Protección del Maíz Nativo”. [http://dof.gob.mx/nota_detalle.php?codigo=4700926&fecha=24/01/1991,\(2020.04.04.\)](http://dof.gob.mx/nota_detalle.php?codigo=4700926&fecha=24/01/1991,(2020.04.04.))
- SanVicente-Tello, A., & Morales-Hernandez, J. (2015). “La demanda colectiva contra la siembra de maíz transgénico: ciudadanía y soberanía alimentaria”.
- Sin Maíz No Hay País (SMNHP).(2020). “En Defensa de las Semillas y en contra de la reforma a la Ley Federal de Variedades Vegetales”.

2-3. 도시와 지속가능한개발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도시권 (Right to the City) 참여 투쟁 멕시코시티 메트로버스 7호선 사례를 중심으로

심은지

1. 서론

‘도시권 (Right to the City)’의 개념은 앙리 르페브르 (Henry Lefebvre)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최근 도시 연구와 도시 사회운동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특히, 유엔 해비타트 (UN-Habitat)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포용적 도시’를 위한 도시권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왔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브라질 (2001년), 에콰도르 (2008년) 등의 국가들이 도시권을 헌법에 명시하거나, 멕시코시티 (2010년)와 같은 도시들 또한 도시권의 내용을 도시 헌장에 반영하는 등 민주적이고 평등한 도시에 대한 참여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하지만 많은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이 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을 마련해왔음에도 여전히 시행 단계에서 한계를 보인다. 특히, 멕시코시티의 경우, 시민들의 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들이 정부에 의해 마련되는 한편, 이는 사업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시행하는 근거로 활용되며 사회 갈등을 유발해왔다 (Delgadillo Polanco, 2012:118).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한계를 좁은 관점에서 도시권을 이해하는 도시 정책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특정한 범위의 권리로 제한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멕시코시티의 간선급행버스 (Bus Rapid Transit, BRT) 시스템인 메트로버스 7호선 사례를 다룬다. BRT 시스템은 단순히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대중교통 정책을 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 안전, 건강을 보장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적 대중교통 정책으로 더욱 지속가능한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병두, 2020; Carrigan 외, 2013). BRT 시스템의 이러한 특성은 모든 시민이 도시의 서비스, 활동 기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Morales, 2010:1). 멕시코시티는 2005년부터 메트로버스라는 BRT 시스템을 도입해왔다. 멕시코시티의 BRT 시스템은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Francke et al., 2012; Mejia-Dugand et al., 2013), 2013년 교통개발정책연구소 (Institute for Transportation and Development Policy, ITDP)로부터 지속가능한 교통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메트로버스의 각 노선은 시행 단계에서 지속해서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가장 최근에 개통된 7호선의 경우 건설 과정에서 주민단체, 환경단체, 역사/문화단체의 반발을 겪었다. 갈등의 주된 이유는 메트로버스 7호선 건설이 차풀테펙 숲 (Bosque De Chapultepec)과 레포르마 거리 (Paseo de la Reforma)의 환경과 역사, 문화 유적 등을 훼손한다는 것이었다. 갈등이 심화하자 앞선 반대 단체 연합은 메트로버스 7호선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멕시코시티 연방 법원의 판결로 7호선 건설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이는 도시를 둘러싼 다양한 요구와 이해,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7호선 사례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2. 본론

1) 이론적 접근 : 다중스케일 관점에서의 도시권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은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 사회 운동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론적으로 복잡하고 논쟁적이기 때문에 도시권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Marcuse, 2009:189). 도시권을 둘러싼 논의는 주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으로 도시 생산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는 급진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기존의 민주주의적 법적 시스템에 시민들의 참여권을 포함함으로써 도시권을 보장하고자 하며 (Purcell, 2014: 142), 후자의 경우 기존 사회 시스템에 대한 변혁적인 요구를 주장한다 (Mayer, 2009; Kuymulu, 2014). 따라서 행위자들의 이해와 가치에 의해 도시권의 해석은 다양해질 수 있으며, 행위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저마다의 정치적 행위를 이어나가며 각자의 공간을 형성해나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각자의 도시권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형성한 사회-공간을 이해하는 것은 해당 사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특정한 공간의 규모는 주어진 것이 아닌, 국가와 지역 등 다양한 스케일에서 형성된 사회 행위자들의 정치적 전략의 결합 공간이자 결과물이다 (박인옥, 2020; 이상현 외, 2014).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공간에 국지화된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이 네트워크의 공간적 범위를 ‘의존의 공간(space of dependence)’이라고 하며, 이러한 의존의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 중 하나가 ‘연대의 공간 (space of engagement)’을 형성하는 것이다 (Cox, 1998; 박배균, 2012). 즉, ‘의존의 공간’의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가치를 보호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장소에 더욱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러한 ‘스케일 점프 (jumping scales)’를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와 정책적 연대가 형성되는 ‘연대의 공간’을 구축하는 ‘스케일의 정치 (politics of scale)’가 발생한다 (박배균, 2012; 장덕수 외, 2017; Cox, 1998, Hwang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멕시코시티의 메트로버스 7호선을 둘러싼 각 사회적 행위자들을 찬성과 반대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도시권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담론과 전략을 활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멕시코시티 메트로버스 7호선을 둘러싼 갈등 담론 비교

(1) 도시권에 대한 행위자들의 이해와 전략: 의존의 공간

[표1] 메트로버스 7호선 국지화 시기의 갈등 지형

	반대	찬성
행위자	풀랑코-차풀테펙 주민 위원회	시정부, 메트로버스
담론	도시 녹지 파괴, 역사적 공간 및 유물 훼손, 공공 공간 훼손	접근성 향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략	시위, 탄원서 제출	주민들과의 라운드 테이블 통한 협상 시도
스케일	국지적 스케일	국가 스케일

메트로버스 7호선 건설 초기 지역 주민들은 도시 녹지 파괴, 역사적 공간 및 유물 및 공 공간 훼손 등의 담론을 사용하면서 반대했다. 이에 시정부와 메트로버스 당국의 경우 접근성 향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담론 전략을 사용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 공간의 훼손이라는 지역적 스케일에서 도시권을 둘러싼 갈등을 이해했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와 메트로

버스 당국은 건설 지역의 주민들과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협상을 시도하는 등, 갈등의 초기 단계에는 메트로버스 7호선 건설을 둘러싼 건설 지역의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도시권 문제가 국지화되었다.

(2) 도시권에 대한 행위자들의 이해와 전략: 연대의 공간

갈등이 심화하며 주민단체는 환경단체와 역사단체 등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대의 공간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 문제와 사적 이윤 추구 문제를 연계함으로써 주민단체와 환경단체는 무리하게 광고 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녹지 공간을 개발하는 시정부와 메트로버스 당국의 행위가 반생태적이라는 담론을 내세웠다. 이에 메트로버스 7호선 건설 허가권을 주었던 국립인류역사기관 또한 해당 공간의 광고 공간 설치에 대해 반대했다. 즉, 반대 집단은 도시 공간의 생산과 기존의 시장 메커니즘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다 변혁적인 도시권에 대한 요구를 주장했다.

[표2] 연대의 공간 형성 시기의 메트로버스 7호선 갈등 지형

	반대	찬성
행위자	풀랑코-차폴테펙 주민 위원회, 멕시코 환경권 학회, 국립인류역사기관	시정부, 메트로버스, 민간기업, NGOs
담론	생태적 살인, 사적 이윤추구를 위한 반생태적 행위	도시 서비스 개선 및 현대화, 공공성,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대중교통 도입의 필요성
전략	헌법소원, 녹지 파괴와 사적 이익 추구의 문제 연계	메트로버스 7호선 건설을 통한 잠정적 이점에 관한 연구 수행, 언론 보도
스케일	전국적 스케일	국제적 스케일

하지만 메트로버스 당국은 다양한 사회 행위자들에 의해 합의된 메트로버스 프로젝트의 법적 정당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NGO들의 지지를 통해 시민사회가 지지하는 친환경적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는 주장과 JCDecaux와 같은 초국가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현대화한다는 담론을 사용했다. 즉, 메트로버스 찬성 집단의 경우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지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도시권을 법적 요구라는 제한적 의미에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좁은 의미에서 고안된 도시권을 보장하는 도시 정책의 경우, 시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혁적인 요구들은 다루지 않거나 이미 다루어진 것으로 치부하는 한계를 보인다.

3. 결론

본 연구는 메트로버스 7호선 갈등 사례를 통해 도시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정부와 메트로버스 당국의 경우 기존의 민주주의적 법적 절차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재생산적 참여(reproductive participation)’를, 주민단체, 환경단체, 역사단체 등 저항세력의 경우 도시 공간의 사용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혁적인 참여(transformative participation)’를 통해 도시권을 실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도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에도 각각의 사회 행위자들이 다른 이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초기에는 도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역적 갈등으로 국지화되었다. 하지만 갈등이 심화하고 장기화하며, 각 사회적 행위자들은 도시권에 대한 이해와 가치에 따라 저마다의 정치적 행위를 이어나가며 ‘연대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저항세력의 경우 환경 정의와 시장의 교환 가치의 문제를 연계함으로써 담론을 내세우며 지역 주민 외의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과 협력할 수 있었다. 이처럼 메트로버스 7호선 사례는 도시권을 이해하는 범위에 따라 스케일을 규정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도시권을 위한 기존의 법적 절차를 보장하는 제도적 참여와 법적 시스템 외의 시민운동 또는 저항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박배균, 2012,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47(1), 37-59.
- 박인옥, 2020, 『갈등의 공간적 전이와 다중스케일적 연구: 한국화약의 시흥·소래 지역 공유수면매립 갈등 사례』, 『도시연구』, 17, 135-170.
- 이상현, 이정필, & 이보아, 2014,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탑 갈등 연구』, 『공간과 사회』, 48, 252-286.
- 장덕수, & 황진태, 2017, 『한국에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연구 강원도 양양 케이블카 유치 갈등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60, 226-256.
- 정병두, 『도시와 교통』, 서울: 크레파스북, 2020.
- Carrigan, A., et al,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s of BRT systems. Bus Rapid Transit Case Studies from Around the World", EMBARQ. 2013, <https://www.wrirosscities.org/sites/default/files/Social-Environmental-Economic-Impacts-BRT-Bus-Rapid-Transit-EMBARQ.pdf> (2020년 10월 03일).
- Cox, K. R, "Spaces of dependence, spaces of engagement and the politics of scale, or: looking for local politics", Political geography 17(1), 1998, 1-23.
- Delgadillo Polanco, V. M, "El derecho a la ciudad en la Ciudad de México. ¿ Una Retórica progresista para una gestión urbana Neoliberal?", Andamios 9(18) , 2012, 117-139.
- Hwang, J. T., Lee, S. H., & Müller Mahn, D, "Multi scalar practices of the Korean state in global climate politics: The case of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Antipode, 49(3), 2017, 657-676.
- Kuymulu, M. B, "Claiming the right to the city: Towards the production of space from below", Ph.D. dissertation,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14
- Marcuse, P, "From critical urban theory to the right to the city". City", 13(2-3), 2009, 185-197.
- Mayer, M, "The 'Right to the City' in the context of shifting mottos of urban social movements", City, 13(2-3), 2009, 362-374.
- Morales, E. B, "Promoting the Right to the City Through a Transport System? The Case of Transmilenio, the BRT of Bogot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College London, 2010.
- Purcell, M, "Possible worlds: Henri Lefebvre and the right to the city", Journal of urban affairs, 36(1), 2014, 141-154.

2-4. 젠더와 지속가능한개발

지속가능한 여성정책에 대한 고찰: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사례를 중심으로

이지효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여성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과 지속가능한 여성정책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명시된 다양한 여성 권리 보호 및 여성폭력 철폐를 위해서는 낙태 이슈에 자주 등장하는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생산권은 ‘여성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성생활과 자유롭게 임신 시기 및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임신과 출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다양한 여성의 권리 및 여성 폭력 문제와 연쇄적으로 맞물려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임신은 여성의 노동 및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여 타인에 대한 여성들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O’Rourke(2010)에 의하면 여성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여성들은 폭력이나 불평등한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은 많은 경우 성폭력에 의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낙태법의 제한적 성격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출산이나 위험한 불법 낙태 시술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 (Guttmacher Institute, 2020; Ipas, 2013). 이와 같은 낙태의 불법성은 부부나 연인, 혹은 의사 등 여성의 낙태 사실을 아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한 폭력 및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백영경 외, 2018) 재생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여성들의 다양한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부상하며 많은 지역에서 낙태 합법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중 아르헨티나는 낙태 합법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온 대표적 지역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어져 온 오랜 사회 운동의 결과 2020년 12월 마침내 임신 14주 이내의 자유로운 낙태가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합법화 이후에도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에 반발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The Cambridge Language Collective, 2021). 사회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에 놓인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며,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제대로 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여성연구소(2005)는 여성정책이 법과 제도적 발전을 이룩하더라도 종종 실질적 이행에서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정책이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가며 단계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정치적 계산 및 여성운동 진영의 요구에 따라 ‘압축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과정 분석을 통해 일명 IVE(Interrupción Voluntaria del Embarazo)법안이라고 불리는 낙태 합법화 법안이 행위자들간 균형 있는 합의 하에 도출된 정책인지 알아보고, 지속가능한 여성정책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기반한 질적연구로 연구를 위해 관련 서적, 학술논문, 인터넷 기사, 정부기관 보고서 등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정책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제도주의 이론 중 제도란 고정된 선호(preferences)를 가진 행위자들이 각자의 선호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 및 변화한다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접근법(Hall & Taylor, 1996: 939-940)에 기반하여 아르헨티나 정치적 제도의 특징과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 행위자 - 대통령과 의회-가 해당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 본론

1) 아르헨티나 정치 제도의 특징

(1) 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 상대적으로 약한 의회

아르헨티나 정치 제도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전문화가 부족하고 약한 의회, 그리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며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입법자들의 모습을 말할 수 있다 (Spiller & Tommasi, 2008). 대통령은 고위직 임명권과 거부권 등의 헌법적 권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직책에 임명 및 해임하거나 법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Mustapic, 2002: 31-32; Rose-Ackerman, 2011: 288). 또한, 의회 자체 강화에 대한 입법자들의 무관심은 행정부의 일방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Spiller & Tommasi, 2008).

(2) 정당보다는 지역 의견을 중시하는 입법자들

정치인들은 정당 명부 형성에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는 주지사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지방 정치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받는 재정 시스템으로 인해 (손혜현, 2014; Spiller & Tommasi, 2008)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의회 입법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의 경우 정당의 이익과 지방의 이익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의 관점을 따르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Spiller & Tommasi, 2008).

(3) 인구가 적은 지역의 과대대표성(overrepresentation)

하원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에 최소 5석을 보장하고 상원에서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시스템에 의해 인구가 적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과대대표성(overrepresentation) (손혜현, 2014; Gibson et al., 1998; Spiller & Tommasi, 2008) 역시 입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 제도의 특징 중 하나이다.

2) 아르헨티나 정책환경 변화

(1) 가톨릭 교회의 패권 약화, 여성운동의 세력화 확장

오랜 시간 아르헨티나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으로 여겨진 가톨릭 교회는 (Esquivel, 2016: 136; Mallimaci & Esquivel, 2013) 군사 독재 기간 동안 군사 정권의 잔인한 고문과 죽음을 방관하고 군부 정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민주화 이후 사회적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다. 가톨릭 신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가톨릭 사제들의 성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가톨릭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는 더욱 낮아졌다 (Koehrsen, 2016; Sun Sentinel, 2019). 반면, 여성들은 ‘5월광장어머니회(Madres de la Plaza de Mayo)’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 참여 경험을 통해 정치적 의식 및 동원력을 강화해갔다. ‘전국 여성 대회(Encuentro Nacional de Mujeres, ENM)’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의제를 발표 및 토론하는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ENM의 워크숍을 통해 21세기 초 아르헨티나의 낙태 합법화 운동을 주도한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자유로운 낙태를 위한 전국 캠페인 (the National Campaign for the Right to Legal, Safe, and Free Abortion)’이 발전하였다. 이후 낙태 합법화 운동은 2015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여성살해 철폐 운동인 ‘니 우나 메노스(Ni Una Menos)’ 운동과 결합하여 확장되었고, 니 우나 메노스 운동은 노동자 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단체와 연대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2) 경제위기, Covid-19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정

최근 몇 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2020년 Covid-19의 확산은 아르헨티나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2007~2015), 마우리시오 마크리(2015~2019), 알베르토 페르난데스(2019~) 모두 경제위기 극복에 실패하였고, 페르난데스 정부의 경우 Covid-19 확산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3) IVE법안을 둘러싼 대통령과 의회 입법자들의 행보

(1) 정권별 대통령 행위 분석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마우리시오 마크리,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세 대통령 모두 지지계층을 의식하여 낙태 합법화 의제를 선거 승리 및 지지율 확보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IVE 법안이 최초로 의회에 제출되었던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는 일관되게 해당 의제에 반대했는데, 이는 여성운동 세력을 자신의 지지세력 보다는 위협요인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he New York Times, 2019). 마우리시오 마크리의 경우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니 우나 메노스 운동이 커지면서 2018년에는 의회 투표를 장려하고 중립적인 모습을 취했지만 의회에 반대 입장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The Washington Post, 2021), 2019년 대선을 앞두고 반대 입장을 굳히면서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지세력으로 삼았음을 보여주었다 (Clarín, 2018; Páinga12, 2019).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낙태 문제를 공중보건 이슈로 규정하고 2019 대선에서 낙태 합법화를 공약했다. 해당 의제에 일관되게 찬성한 페르난데스 정부가 해당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점은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시점에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키고 마찬가지로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점(Sieff & Mellen, 2020) 등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2) 입법토론 당시 의회 분석

의회 역시 표결에서 입법자들의 정치적 커리어를 의식한 선택이 보인다. 의회의 특징은 정당보다는 지역에 따른 찬성과 반대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2018년과 2020년 모두 같은 정당일지라도 상원과 의원에서 찬성과 반대의 경향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Honorable Cámara de Diputados de la Nación Argentina, 2018; Honorable Senado de la Nación Argentina, 2018). 반면, 선거구를 기준으로 투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2018년과 2020년 표결 모두 북부 지역은 주로 반대를, 남부 지역은 찬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Wikipedia, 2020; Wilson Center, 2021). 낙태 합법화에 대한 오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법화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인구가 적고 빈곤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과대대표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톨릭 교회의 헤게모니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다원적이고 세속화된 대도시가 많은 남부에서는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지만, 인구가 적고 보수적인 북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Catholics and Cultures, 2016).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의견을 중시하는 상원위원들의 경향과 의회에서의 과대대표성은 2018년과 2020년 IVE 법안 표결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차이를 설명해준다.

3. 결론

대통령과 의회 모두 선거 승리 및 지지율 확보라는 동일한 선호를 가졌지만, 대통령은 전체적인 유권자를 가장 의식한 반면, 의회 입법자들은 각 선거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운동 세력의 성장과 함께 대통령은 여성운동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정하는 모습이 두드러진 반면, 의회 입법자들은 2018년과 2020년 모두 보

수적 복부는 주로 반대를, 다원적 남부는 주로 찬성을 하며 입장 변화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IVE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선호와 의지에 따라 고위관료들을 임명 및 해임하고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의 선호가 의회 입법자들의 선호보다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아르헨티나 정치 제도의 특징 덕분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사례는 한국연구소(2005)의 주장처럼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발전한 것이 아니라, 여성운동의 성장 및 세력화와 정치인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압축적 발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입법화 이후에도 정책 이행과 실질적 삶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입법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해당 이슈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의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이재경 외, 2007: 296), 낙태 이슈는 근본적으로 성별에 따른 사회적 권력관계와 맞닿아 있는 여성정책(ibid.)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들이 이를 ‘공중보건’ 문제로 간주한 것 역시 정책 수립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공중보건에 초점을 맞춘 IVE 법안은 공중보건에 대한 접근성 및 의료 서비스 제공 개선에 있어서는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여성정책 수립 이후 정책 시행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힌 지속가능한 여성정책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충분하고 점진적인 합의를 거쳐야 하며, 정책 문제에서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백영경, 이유림, 윤정원, 최현정, 나영, 류민희, ... 최예훈, 2018, 『메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후마니타스.
- 손혜현, 2014, 『아르헨티나 정당체제의 지역화: 제도와 지방분권화 정책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27(1), 21-46.
- 이재경, 조영미, 민가영, 박홍주, (이)박혜경, 이은아, 2007, 『여성학: 여성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또 다른 세상』, 미래엠앤비.
- 한국여성연구소, 2005, 『새 여성학 강의』, 동녘.
- Catholics and Cultures, “Introduction: Catholicism is a visible force in Argentina, though the reality is complicated”, <https://www.catholicsandcultures.org/argentina/introduction> (2021년 5월 20일)
- Clarín, “Mauricio Macri y la ley del aborto: “Estoy a favor de la vida pero no se lo impongo a nadie””, https://www.clarin.com/politica/mauricio-macri-ley-aborto-favor-vida-impongo-nadie_0_SkTxUXz_z.html (2021년 4월 28일)
- Esquivel, J. C., “Religion and politics in Argentina: religious influence on legislative decisions on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43(3), 2016, 133-143.
- Gibson, E. L., Calvo, E.F., & Falleti, T.G., “Reallocative federalism: overrepresentation and public spending in the Western hemispher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 Processed, 1998, 1-31.
- Guttmacher Institute, “Unintended Pregnancy and Abortion Worldwide”, <https://www.guttmacher.org/fact-sheet/induced-abortion-worldwide> (2021년 7월 23일)
- Hall, P. A., & Taylor, R. C.,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Political studies*, 44(5), 1996, 936-957.
- Honorable Cámara de Diputados de la Nación Argentina, “Interrupción voluntaria del embarazo. Régimen. Dictamen de Mayoría. Expediente 230-D2018 y otros Orden del Día 155”, 2018, <https://votaciones.hcdn.gob.ar/3805.pdf?date=202105130712>
- Honorable Cámara de Diputados de la Nación Argentina, “O.D. 352 - LEY DE REGULACIÓN DEL ACCESO A LA I.V.E. Y A LA ATENCIÓN POSTABORTO”, 2020, <https://votaciones.hcdn.gob.ar/votacion/4077>
- Honorable Senado de la Nación Argentina, “Interrupción voluntaria del embarazo. CD-53-20-PL, O.D. 716/2020”, 2020, <https://www.senado.gob.ar/votaciones/detalleActa/1260>
- Honorable Senado de la Nación Argentina, “PROYECTO DE LEY EN REVISION SOBRE REGIMEN DE INTERRUPCION VOLUNTARIA DEL EMBARAZO. CD-22/18-PL”, 2018, <https://www.senado.gob.ar/votaciones/detalleActa/361>
- Ipas, “Sexual violence and Unwanted Pregnancy”, 2013, <https://www.ipas.org/wp-content/uploads/2020/06/SVUPYE13-SexualViolenceandUnwantedPregnancy.pdf>

- Koehrsen, J, “Social Class, Symbolic Boundaries, and Religion in Argentina”, *Middle Class Pentecostalism in Argentina*, Brill., 2016, 57-93.
- Mallimaci, F., & Esquivel, J. C.,). “The Triad of State, Religious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in Modern Argentina”, *Amerika. Mémoires, identités, territoires*, (8), 2013.
- Mustapic, A. M., “Oscillating relations: president and Congress in Argentina”, In Morgenstern, S. & Nacif, B. (Eds.), *Legislative Politics in Lat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23-47.
- O’Rourke, C, “Financial capability and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Center for Financial Security Research Brief 2011-5.4, 2010, 1-5.
- Páingal2, “Macri contra el aborto: “Claramente a favor de las dos vidas””, <https://www.pagina12.com.ar/223709-macri-contra-el-aborto-claramente-a-favor-de-las-dos-vidas> (2021년 4월 5일)
- Rose-Ackerman, S., Desierto, D. A., & Volosin, N, “Hyper-presidentialism: Separation of powers without checks and balances in Argentina and Philippines”, *Berkeley J. Int’l L.*, 29 (1), 2011, 246-333.
- Spiller, P. T., & Tommasi, M, “Political Institutions, Policymaking Process, and Policy Outcomes in Argentina”, In Stein, E. & Tommasi, M. (Eds) *Policymaking in Latin America: How politics shapes policies*,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8, 69-110.
- Sun Sentinel, “U.S. Catholic Church’s Latino survival strategy takes big sex abuse hit - in Latin America”, <https://www.sun-sentinel.com/opinion/commentary/fl-op-com-padgett-catholic-church-survival-latin-america-20191127-kchdeiallbbzxnikyccqzycnn4-story.html> (2021년 5월 29일)
- The Cambridge Language Collective, “Legal, but still divisive: Abortion in Argentina”, <https://www.thecambridgelanguagecollective.com/views/legal-but-still-divisive-abortion-in-argentina> (2021년 9월 17일)
- The New York Times, “A New Evita Rises in Argentina”, <https://www.nytimes.com/2019/12/05/opinion/argentina-cristina-fernandez-de-kirchner.html> (2021년 5월 28일)
- The Washington Post, “Argentina legalized abortion. Here’s how it happened and what it means for Latin America”,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1/01/18/argentina-legalized-abortion-heres-how-it-happened-what-it-means-latin-america/> (2021년 3월 18일)
- Wikipedia, “Proyecto de Ley de Interrupción Voluntaria del Embarazo (Argentina)”, [https://es.wikipedia.org/wiki/Proyecto_de_Ley_de_Interrupci%C3%B3n_Voluntaria_del_Embarazo_\(Argentina\)](https://es.wikipedia.org/wiki/Proyecto_de_Ley_de_Interrupci%C3%B3n_Voluntaria_del_Embarazo_(Argentina)) (2020년 9월 21일)
- Wilson Center, “Argentina’s Historic Vote to Legalize Abortion”, <https://www.wilsoncenter.org/blog-post/argentina-historic-vote-legalize-abortion> (2021년 2월 28일)

2-5. 산림과 지속가능한개발

불법벌채방지와 볼리비아 산림정책

허경도

1. 서론

최근 국제적으로 대형 산불을 비롯하여 산림 파괴가 이슈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임업 통상에 있어 목재류 불법 벌채 방지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선제적으로 EU, 한국, 일본,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불법 벌채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합법성 인증이 되지 않은 목재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9년 이후 유럽에서 아마존 산림 벌채, 훼손이 지속되면 무역협상, 투자에 대해 재고하겠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선진국의 이러한 이윤 추구에 영향을 받는 자원 수출 국가이다. 특히 유럽 등 주요 목재 수요국가에서 불법 벌채에 대한 제재를 아마존 유역 국가 중심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21,전철현). 이에 대표적인 목재류 무역 제한으로 나타나는 불법 벌채 방지프로그램의 도입 이후 중남미 아마존 인근 볼리비아의 산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불법 벌채 문제가 아니더라도 환경-무역이 연계되어 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점차 증가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남미 아마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이뤄질 것인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본론

1) 불법 벌채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1) 불법 벌채 및 산림 분야 국제적 논의

불법 벌채(illegal logging)는 국내, 국제법을 위반하여 생산된 목재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의미한다. 산림 벌채는 이후 복구에 수십 년이라는 세월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즉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비용을 외면하여 발생하는 문제라 볼 수 있다. 불법 벌채는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유발함과 동시에 원주민들의 인권 침해, 빈곤 등을 야기하는 거대한 의제이나 이러한 경제적 논리에서 불법 벌채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매년 100억\$ - 150억\$ 수준의 환경,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벌채는 세계 목재 시장을 교란하고 환경, 기후변화, 사회 등 전반적으로 문제를 나타내기에 국가 차원의 책임과 노력, 더 나아가 국제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1992), G8 버밍엄 정상회의(1998) 등에서 불법 벌채와 관련된 대책이 논의되었고,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불법 벌채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의 교역 제한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상당수 국가들이 불법 목재의 수입과 유통을 막는 법률을 운영하며, 세계 주요 목재 생산국과 수입국에 해당 법률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한국 역시 불법 벌채에 대한 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2019년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불법 벌채는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근절할 수 없으며 세계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산림 분야에서 관련 국제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불법 벌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협약은 국제열대목재협정(ITTA)이라 할 수 있다. ITTA는 1976년을 시작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지속적 논의를 통해 채택되었다.(1983.11.18). 협정의 내용은 산림 벌채, 황폐화를 방지하고 합법적 목재 거래를 위한 토대가 되었다. 당 협약에서는 열대 목재의 경제적 가치와 산림 보존의 가치가 모두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 대응 이슈에 대한 논의 등 시대 변화에 따른 협약 개정과 후속 협정 비준으로 발전하였으며 열대 목재의 생산, 열대림의 생물다양성 등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리우 회의에서 설치 권고 이후 1992년 12월 사막화 방지를 위한 위원회 설치 결의문이 채택, 1994년 6월 발효되었다. 발효 이후 사막화 피해에 대한 재정지원, 연구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림 분야에 있어 불법 벌채로 시작되는 산림 전용 및 황폐화가 사막화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연구 등으로 대응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세번째, 기후변화협약(UNFCCC)은 1994년 3월 발효되어 온실가스 감축 합의, 배출권 거래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2000년 독일 본에서의 총회에서 토지 이용, 전용 및 임업 부문의 배출권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이후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의 11차 총회에서 개도국의 산림 전용(Deforestation)에 대한 배출권 제도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였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2007년 발리 총회에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운영, 기술이전, 재정지원 이 논의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된 제도 설립,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네 번째,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은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1992년 5월 협약이 채택되어 1993년 발효되었다. 기존의 단편적 협약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 지구적 생물다양성에 대한 협약을 제시한 것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기술 발전, 기술력 차이에서 나타나는 부의 불공정한 분배, 유전자 변형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협약이다. 다루는 대상이 광범위하여 산림자원, 농업, 해양, 섬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4차 총회 당시 채택되었고 6차에서 확장되면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 산촌 원주민에 대한 이슈, 산림 생태계 보존 등을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몬트리올 프로세스는 1993년 9월 몬트리올에서 온, 한대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속가능 산림경영에 대한 기준과 지표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2) 불법벌채 방지 제도 현황

Chatham House(2010)는 세계적으로 매년 1억㎡ 수준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벌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매년 100억\$ - 150억\$의 환경,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며, UNEP(2012)에서는 약 1천억 달러 수준의 불법 목재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주요 불법 목재 생산국으로 손꼽히기도 하였다. 불법적 벌채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최근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한국이 불법 목재 무역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le cay act를 통해 목재 합법성 제도를 도입하였고 농무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의 T/F 형태로 협조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NGO가 적극 참여하여 산촌, SFM, 산림 연구 및 불법 벌채 근절 업무 수행, 환경 조사 등을 분담하여 연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농무부, 산림청이 정책 수립, 법률적 지원, 기술 지원 등과함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각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클린우드 법으로 명명된 합법 목재 교역 촉진을 추진하면서 국가는 자금확보, 무역, 지속가능 산림 법, 등록제도,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고 산업계는 인증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의 부재로 불법 벌채 목재의 유통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목재 합법성 인증(Vriksh)는 인도 목재제품 수출 진흥기구가 합법성 기준을 제시, Chain of custody 이행, 원산지의 합법성, 국제 규정의 실사 등을 통해 인증된 목재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를 운용하면서 합법성 인증이 된 목재의 유통을 통해 불법 벌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시행 2년차로 정밀화 과정에 있으며 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농촌경제연구원 3자 심포지엄을 통해 꾸준히 개선 및 제도의 안착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6년 제도 도입으로 NOMOP78호에 의거하여 불법목재의 수출입, 내수 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장 실사와 수입신고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2014년 illegal logging prohibition act를 통해 수입, 가공업자 실사 및 사후검사 방식으로 교역 제한을 하고 있다.

2) 볼리비아 산림 현황

아마존 불법 벌채에 대한 이슈는 아마존 유역 국가 내의 문제로 다루어져 오지 않았다. 즉 아마존 불법 벌채 및 산림 황폐화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전반에서 관심을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최근 EU와 MERCOSUR의 FTA 협상에 있어 유럽 국가들은 브라질이 공공연한 불법 벌채 및 산림 훼손을 묵과하는 것을 지속할 경우 무역 협상에 대해 재고하겠다. 파리 협약 준수를 약속하지 못한다면 무역, 투자 등 경제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에 반박하여 '불법 벌채로 추정되는 목재를 추적하여 수입국가를 찾아 밝히겠다' 라며 대응하는 등의 이슈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산림자원 평가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국토면적의 53%가 산림이며 이중 65%는 자연림, 나머지는 인공림으로 조사되었다. 볼리비아 내에는 보호림지역의 네트워크 형성이 우수하여 FSC인증 열대우림의 보유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림 훼손율은 90년 270ha, 00년 271ha, 05년 308ha 수준으로 0.58%의 전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볼리비아의 빈곤 인구는 대다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림 자원에 생계 의존이 강하게 나타난다. 농림수산업의 GDP는 15% 수준으로 특히 대규모 농업이 주요 수입으로 나타난다. 산림 훼손은 이러한 이유에서 농업 확장, 목장 및 불법 벌채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부족하여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볼리비아는 산림관리를 위한 각종 법안을 제정하고 있으나 집행 효과가 부족하고 불안정한 제도적 문제로 산림면적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의 임업 비중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경우 약 2~3% 수준으로 추정된다. 제재목(sawnwood)가 주요 목제품이며 대부분 생산량이 수출된다

볼리비아의 산림 분야는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부 주관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산림감독 기구를 통해 규제 제도를 운영, 산림 및 토지 회계 감사와 사회적 통제 위원회가 임업 경영계획, 모니터링, 불법 벌목 통제 등을 수행해 왔다. 또한 국제열대목재기구에 따르면 임업 관련 기술자와 관리자가 부족하여 산림 역량 확보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볼리비아의 산림정책은 산림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적용하면서 자연 유산을 관리하며 기술적, 제도적 발전을 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1996년 Forest Law no.1700이 제정될 때부터 적용되어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볼리비아에서 최초로 나타난 분야가 산림 분야이다. 이를 통해 산림 법규가 수립되면서 현재의 사회, 경제, 환경적 이익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의 지속가능 이용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제시하는데 진전을 보였다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 인력, 직업 훈련 및 자원마련 등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볼리비아의 산림개발 정책은 합리적 시한 내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구축과 임업과 산림분야가 GDP에 기여하는 것, 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민간 투자 장려 및 현안 분석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3. 결론

지속가능개발은 2021년 현재 전 세계 공통의 의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산림 분야는 사회, 경제, 생태적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지속가능 산림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림, 임업 분야에 관련된 다자 협상, 국제기구의 출범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 재화로서의 산림은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탄소배출권 사용 등의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기능을 포괄하고 있으며 환경과 경제가 연계된 산업으로 구조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행된 한국의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는 불법 목재 생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제도 고도화 단계에 있으며 미국, 유럽을 비롯한 6개 국가가 선진적으로 도입하고 국제 사회 전반에서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차후 목재를 넘어 비목재 임산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산림 보호와 국제 사회의 환경적 노력으로 인해 산림 개간, 불법 생산 등을 통해 삶을 영유하던 산촌 지역 거주민들은 이로 인해 생계 및 생활 여건에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방법으로 생산된 목재 제품만을 교역대상으로 하려는 목재인증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일본, 캐나다,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이 자국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유럽의 제도 도입이 비관세 장벽으로 영향을 나타내었고 산림과학원(2021)의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의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역시 관련 효과가 있음을 밝혀낸 점에서 목재 수출 국가에 있어 관련 제도의 확산은 상당한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아마존 유역 국가들의 경우 국제 사회에서 아마존 보호, 산림 벌채에 대해 경제적 압박 등이 빈번히 나타난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역 국가들의 경제 상황, 임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각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볼리비아의 산림 현황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자원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산림 자원, 광물 자원, 농산물 등의 자원들이 국가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향이 매우 큰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 규제, 불법 벌채 방지 제도의 확산은 중남미 지역 산업계에서도 ESG 관련 지표와 성과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의 대응 전략으로 몇가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산림자원의 환경적 기능,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여 산림 생태의 지속성 확보 하의 경제적 활용을 위해 지속가능 산림경영 정책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둘째, 폐 목재의 활용, 목재 재활용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불필요한 벌목 수요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제 사회의 표준, 인증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기준 마련, 인증제도 대응 연구 및 법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한다. 이를 통해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목재 인증 제도가 국내 임산물 시장이나 임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고 대응해야한다. 넷째,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산림분야 역할 증대 및 국익보호를 위하여 정부간 산림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산림선진국, 목재 수요국과 긴밀한 관계 구축을 시도한다. 다섯째, 산림 분야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함유하는 분야로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하에 숲, 산림을 활용하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야할 것이다. 이런 고민을 통해 아마존 유역 국가들의 임산업은 친환경, 자원, 에너지 산업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불법벌채 방지 제도의 등장과 불법벌채 문제에 대한 볼리비아의 정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보다 폭넓은 데이터를 통해 계량 경제학적으로 무역 및 임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요구될 것이다. 끝으로 지속가능 산림경영에 대한 각종 제도의 도입에 대해 산업 종사자 및 노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을 찾아내는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상민, 장철수, 김경덕, 송성환, 박지은, 2014, 「불법벌채 목재목제품 수입 규제에 따른 목재산업의 영향분석」, vol. 37, 37-58
- 이상민·정호근·안현진·조성주·은중호·리경호. 2018. 「ah국가별 목재합법성 위험도 평가」.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 이상민 외. 2013. 「RCEP 대응방안과 목재 교역 규제제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은호 외, 2015, 중남미 국가별 산림분야 개발 수요와 한국의 협력 전략, 국립산림과학원
- 이혜진, 2009, 「기후변화협약 대응 산림정책이 동남권 목질산업에 미치는 경제성 분석」,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 안현진·정호근·구자춘·은중호·김나현. 2020. 「국가별 목재합법성 관리체계 조사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 전철현, 김동현, 설미연, 이수연, 2021, 「비관세 장벽 중 목재합법성 검증제도의 영향과 기술조치(TBT) 대응방안」,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서
- 국립산림과학원, https://nifos.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02_07_01_01&cmsId=FC_000861 (2021.04.27.)
- Ruhong Li, J. Buongiorno, J.A. Turner, S. Zhu, J. Prestemon, "Long-term effects of eliminating illegal logging on the world forest industries, trade, and inventory", 2008, Forest Policy and Economics 10(7-8):480-490
- FSC Russia, "FSC National Risk Assessment for the Russian Federatio". 2018
- FSC. Hoare, Alison. "Illegal logging and related trade: the response in Malaysia". 2015, A Chatham house p4.
- ForestTrend, 2019, 불법목재교역제한 : 한국
-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2021. 06.27.)
- Tradenavi, <http://www.tradenavi.or.kr/> (2021. 05.17.)
- Worldbank open data, <http://www.data.worldbank.org> (2021. 08.13.)
- FAO STAT, <http://www.fao.org/forestry/statistics/84922/en/> (2020.05.24.)

3. 나가며

라틴아메리카 지속가능한개발 및 인권 연구회는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 다양한 공간과 행위자들의 상이한 이해, 가치를 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대안적 담론을 도출하고자 라틴아메리카의 난민, 젠더, 도시, 농촌, 산림 등의 분야의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근유와 이수아의 콜롬비아 난민에 대한 연구와 이지효의 아르헨티나 낙태법 사례 연구는 난민, 여성이라는 사회 취약 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국제 및 국가적 차원의 지속가능한개발 논의 속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국제적 또는 국가적 행위자와 같은 정치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한개발 정책의 주요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입법화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부족한 경우 시행 단계에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심은지의 멕시코시티의 도시권 관련 연구에서는 BRT라는 도시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개발 정책이 시행 단계에서 한계를 보이는 이유를 도시권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이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각 사회 행위자들이 전개하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설명했다. 그 결과, 지속가능한개발 정책 구상 단계에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해석 가능성을 바탕으로 제도와 시민사회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규명했다. 소재원의 멕시코 종자에 대한 연구는 지속가능한개발이라는 국제적인 담론하에 전통적으로 커먼즈로서 존재하던 종자들이 사유화되는 과정과 이에 대항하는 커뮤니티의 운동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실제 농민들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지속가능한개발 담론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허경도의 볼리비아 산림정책을 통해서 불법벌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실현될 수 있는 제도들의 가능성을 연구했다. 결과적으로, 친환경, 자원, 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창출할 수 있는 보다 포용적인 제도의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라틴아메리카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개발’의 정의는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여전히 상이하게 해석되며 갈등을 초래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개발 담론의 ‘결과’ 뿐만 아니라 담론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지속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 연구회는 주장한다.

향후 연구활용 계획

연구회 활동 기간에 수행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인연구를 발전시켜 학술지 투고 및 관련 학회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공통된 관점에서 개인연구들이 진행된 만큼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논의를 확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공간적 차원에서 콜롬비아 난민 사례를 다룬 박근유, 이수아, 멕시코시티 도시권 연구를 진행한 심은지, 아르헨티나 낙태법 연구를 진행한 이지효의 경우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구성원들의 권리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여 지속가능한도시와 권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물을 도출하고, 멕시코의 종자 연구를 진행한 소재원과 볼리비아의 산림 연구를 진행한 허경도는 농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농림업 활동과 제도, 커뮤니티 활동 분석을 통해 연구회 활동 종료 후에도 추후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공동연구 결과 역시 학술지 투고 및 발표를 통해 연구회 내부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국내 대안 담론 개발 논의를 확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그린워싱연구회

본 연구모임은 4차 산업혁명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게 되었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맞추어 변화되고 있으나 이를 기업의 수익 모델로만 활용하려는 ‘그린워싱’이라는 역효과도 생겨나게 됨. 이에 본 연구모임은 국내외 기업과 정부의 ‘그린워싱’ 활동을 직접 살펴보고 자체의 그린워싱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총 26회 연구모임 진행)

팀장 장지혜 서강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팀원 김동희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팀원 김은진 숙명여대 대학원 기후환경에너지학
팀원 박민경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팀원 이승혜 프랑스 INSA Toulouse대학원 박사과정
팀원 이혜림 룬드대학교 대학원
팀원 최하예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팀원 현유정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팀원 황보현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국내 그린워싱 현황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탐색적 연구

1. 서론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 정의는 여전히 불분명한 실정이다.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린워싱의 개념 정의와 규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소비하는 ‘가치소비’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트렌드코리아 2018, 2017). 많은 기업이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그린마케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린워싱은 도리어 소비자의 판단을 저해하고 잘못된 소비 선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만큼 그린워싱에 대한 판별과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다국적기업의 그린워싱 사례가 공유된 반면, 국내 사례에 대한 조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린워싱 연구회는 (1) 국내외 그린워싱의 개념 조사 (2) 그린워싱 규제 및 가이드라인 조사 (3) 주요 그린워싱 사례 조사(기업홍보, 소비재, 인증마크) (4) 설문 및 공개세미나를 통한 내용 공유와 여론 수렴 (5) 현장조사-기업의 그린워싱 및 인증제도 현황 분석, 향후 과제 도출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린워싱의 유형을 분석하고 사례를 공유해 소비자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은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나아가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본론

2.1 방법론

2.1.1 내부 스터디 및 발표

아래 내용과 같이 문헌 조사를 통해 그린워싱 및 입법평가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외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다. 기업 홍보 및 소비재, 인증마크 부분에서의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를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하려 했으나 분야별로 내용이 상이하여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해 스터디 내용을 공유하고 일반 시민에게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2.1.1.1 그린워싱의 개념 국내 / 해외

2.1.1.2 ESG와 그린워싱/입법평가의 정의와 개념

2.1.1.3 입법평가, 해외 법 규제 중심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2.1.1.4 국내외 그린워싱사례(기업홍보)

2.1.1.5 국내외 그린워싱사례(패션 및 화장품)

2.1.1.6 국내외 인증제도 및 동물복지 인증제도 사례

2.1.1.7 공개세미나

2.1.2 팀별 현장 연구

2.1.2.1 기업 현장 연구팀. 설문 및 SNS 분석

1) 기업 대상 현장 연구의 취지

일반적으로 그린워싱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높다.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때문에 현장 연구에 있어 기본적으로 기업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현장연구를 기업 마케팅 담당자를 인터뷰하고 그린워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린워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2) 현장 연구 방법: 인터뷰 및 온라인 마케팅 비교 분석

어떤 산업군의 기업들을 조사할지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현장 연구 전 스터디를 하면서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에서 그린워싱 이슈가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조사 대상으로 화장품 기업을 선정하고 그린마케팅 및 그린워싱 인식 수준과 대응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여러 화장품 기업 중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업, 친환경 가치를 주된 기업 전략으로 삼고 있는 스타트업(중소기업), 최근 화장품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헬스앤뷰티(H&B)’업계로 나누어 각각 2~3개의 업체를 선정했다. 인터뷰를 위해서는 설문지를 작성해 선정된 기업들에 발송하고 유·무선으로도 연락을 취하였다.

인터뷰 외에도 화장품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그린워싱이 어떤 지점에서 발생하게 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친환경 뷰티에 대한 포지션, 대응, 관심도가 저마다 다른 대표기업 3곳(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아로마티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브랜드 중에서 친환경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인 이니스프리와 더페이스샵을 선정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브랜드이면서 친환경 마케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팀원 중 한 명이 실제로 제품을 쓰고 있는 브랜드인 아로마티카를 선택했다.

온라인 마케팅 분석을 위해서는 각 기업의 SNS채널(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 내 기업별 마케팅 콘텐츠들을 살펴보았다. 비교 분석 일(2021. 9. 13.) 기준으로 각 브랜드의 인스타그램에서 30개의 게시글을 비교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비교기준은 ‘주요 키워드 및 언급 빈도 수’, ‘이미지’, ‘강조하고 있는 메세지’로 하였다. 또 각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각 브랜드별로 그린워싱 이슈가 있었는지와 그 이슈에 대한 대응이 어땠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2.1.2.2 시민 현장 연구팀. 설문

1) 시민 대상 현장연구 취지

기업, 정부, 시민이라는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그린워싱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것은 일반 시민 소비자이다.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방향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시민들의 인식 수준과 필요한 교육 방향을 파악하고자 시민 대상 현장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현재 좁은 의미의 환경 측면에 제한되고 있는 그린워싱의 범주를 시민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2) 현장 연구 방법: 인터뷰 및 설문조사

그린워싱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린워싱을 일으키고 확산하는 주체 및 해결에 앞서야 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질문과 기존에 그린워싱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그린워싱 범주 관련, 그린워싱을 활용한 기업의 상품 구입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했으며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포함했다. 설문지의 구성은 응답의 통일성을 위해 폐쇄형 질문(closed-ended)이 주를 이루었지만 의견을 자유롭게 기입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open-ended)도 함께 제시했다.

2.1.2.3 정부/인증기관 현장 연구 팀. 자료조사 및 관련 기관 자료 요청.

1) 정부/인증기관 대상 현장연구 취지

기업에서 행해지는 그린워싱을 제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법적 규제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법으로 그린워싱을 규제할 수는 있으나 정부의 인증마크가 오히려 그린워싱을 유도할 수 있음을 스터디를 통해 인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부와 친환경 인증기관에서는 어떠한 법적 기준으로 그린워싱을 관리하고 있는지, 해외 사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2) 현장 연구 방법

정부에서 관여하는 법적 규제와 정부공인인증마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추가적으로 의회정보회답을 활용해 국회도서관 내 법률자료를 공유 받았다.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내외 그린워싱 광고규제 및 친환경 인증마크 부분에 대해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국내외 친환경 인증마크 비교를 위하여 대상 제품을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선정하고 인증마크 부여 기준을 비교하기 위해 독일의 블루엔젤과 일본의 에코 마크 프로그램 기준을 참고했다.

2.2 결과

2.2.1 내부 스터디 결과

2.2.1.1 그린워싱의 개념 국내 / 해외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그린워싱이 현재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지에 대해 개념을 확인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1) 그린워싱의 개념 및 정의 - 해외편

다양한 논문과 기사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공통된 내용은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성과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를 보류하고 긍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Selective Disclosure (선택적 노출)’ 을 행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그린워싱을 분류하는 방법과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도 비교해볼 수 있었다.

2) 그린워싱의 개념 및 정의 - 국내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려는 선의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며 친환경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며 기업의 친환경제품 생산·유통 의지를 꺾어 친환경제품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고 환경으로 위장한 제품을 감시하는 한편 친환경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공정한 친환경 시장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압축파일의 1차 모임 발제 자료 참조)

2.2.1.2 ESG와 그린워싱/입법평가의 정의와 개념

그린워싱의 가이드라인으로서 ESG가 올바른 역할을 하는지, 대안은 무엇일까 고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입법평가에 있어 계량화된 수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 유무를 알아보고, 기존 입법평가연구들을 검토해보았다.(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압축파일의 2차 모임 발제 자료 참조)

- ESG는 그린워싱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가
- 입법평가에 있어서의 비용편익 방법론의 유용성 검토

2.2.1.3 입법평가, 해외 법 규제 중심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해외의 그린마케팅 정의 및 개념을 정리하고, 기업의 환경성 주장에 대한 부적절성을 규제하기 위한 환경성자기주장제도를 중심으로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환경관련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과 비교하여 주요국의 제도를 알아보았다. 해외 사례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14021 환경성자기주장제도」, 미국 FTC 「Environmental Marketing Guides」, 일본 환경성 「환경표시 가이드라인」, 호주 ACCC 「Green Marketing Guidance」, 영국 DEFRA 「Green Claims - Practical Guidance」를 살펴보았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제품의 전 과정 동안 존재하거나 실현되기 쉬운 환경 측면만 반드시 관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환경 측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까지 포함시킬지에 대해 연구회에서 논의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팀별 현장연구 중 ‘시민 현장 연구팀’에서 그린워싱의 범주에 대한 질문을 설문 에 포함시켰다. 시민인식 개선과 기업 촉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압축파일 의 3, 4차 모임 발제 자료 참조)

2.2.1.4 국내외 그린워싱사례(기업홍보)

2.2.1.4.1. 환경경영

환경경영시스템(EMS, ISO 14001)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들로 하여금 친환경경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 1996년 최초 제정된 것으로 제품의 전과정(Life cycle of product) 관점을 고려한 환경측면의 파악을 요구한다. 환경부에서 1995년 4월 시행한 환경친화적기업지정제도는 2010년부터는 녹색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업 스스로 기업활동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경영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녹색기업으로 선정 되는 경우 세제 및 융자혜택과 환경지도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을 제공됨으로 관련혜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녹색기업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심사 및 선정하게 된다.

2.2.1.4.2. 친환경 기업 PR의 유형

기업홍보에 있어 그린(친환경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 유형에는 첫째, (나쁜)이미지 개선, 둘째, (좋은)속성강 조, 셋째, 트렌드에 동참이 있다. 첫째는 기업단위의 홍보가 가능하며 큰 자산규모를 가진 대기업 등에서 산업 적으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 그린컬러, 자연이미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이미지를 드러내고 일부 친환경적 노력을 강조하며 ESG경영, 지속가능성 경영보고서등의 주요 지표에 강한 모습을 보 인다. 둘째의 경우 제품 및 서비스가 가진 친환경적 속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및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창업주(대표) 및 기업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 가치소비를 자극한다. 세번째 유형 은 트렌드를 고려하여 그린마케팅 대열에 합류하는 것으로 MZ세대 등의 환경에 관심이 많은 젊은 소비층을 타 겟팅하여 패키지, 캠페인 등을 통해 드러나는 분야에 집중하며 제품 및 서비스의 속성 및 전과정에 대한 개선은 아직 미흡함을 보인다.

2.2.1.4.3 친환경 기업 PR사례

구체적 사례로는 관련 사례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대기업 포장재부터, 단발적 이벤트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로 기업단위의 그린 PR은 아이러니하게도 기후변화에 대한 악영향이 검증된 주요 산업체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환경경영 및 친환경 기업 PR의 유형과 연관되어, 이미지개선을 위해 기업을 홍보하고자 친 환경 PR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최근에는 캠페인 및 참여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소비자들의 친

환경성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두 번째로, 식품관련 업계의 패키징을 활용한 그린마케팅이 있다. 이러한 패키징을 통한 마케팅은 우유팩 수거 등의 재활용 활성화로도 이어진다. 셋째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환경 PR은 지구의 날 기념 인스타 마케팅등에서 나타난다. 플로깅 등록하면 굿즈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할인 또는 친환경적 속성을 일부 지닌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많은 사람들의 친환경적 행동 참여를 독려하면서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압축파일의 5차 모임 발제 자료 참조)

2.2.1.5 국내외 그린워싱사례(화장품 및 패션)

2.2.1.5.1 친환경 화장품의 부문별 그린워싱 사례

친환경 화장품이란, 천연 성분 원료를 사용하고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방식을 도입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 제품을 말하며 피부의 건강 뿐만 아니라 제품이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법적인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친환경화장품의 구성요소는 성분/원료(유기농, 천연, 비건), 제조공정의 투명성, 지속가능성, 패키징(용기의 소재), 소비후 재활용, 재사용, 기업의 철학 등이 포함된다.

2.2.1.5.2. 친환경 화장품의 부문별 그린워싱 사례

친환경화장품을 통한 빈번한 그린워싱 사례는 1) 근거정보 부재, 2) 모호한표현, 3) 불명확한 대상, 4) 유사, 모조마크, 5) 과장된 표현 등을 유형화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식물성 원료, 재생지 사용을 명분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산림벌채를 통해 휴지, 포장재조달을 하면서 홈페이지에서는 숲을 보호한다고 홍보하는 사례, 겉모습은 종이용기지만 내부용기는 무색 폴리에틸렌 재질을 용하여 재활용을 높인 친환경 패키지로 홍보하여 페이퍼보틀의 이중성에 대해 그린워싱이라고 비난받은 사례, 리필스테이션을 만들어 친환경성을 홍보하였으나, 전용 용기만 가능하여 코코넛 껍질을 함유하였으나 어쨌든 플라스틱인 용기를 구매해야만 하는 사례, 공병수거 캠페인을 수년 동안 진행하였으나, 실제 재활용 비율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있다. 친환경 스타트업의 경우 스티커 라벨링, 플라스틱펌프, 비닐 속포장지, 복잡한 분리배출 등으로 패키징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인증제도가 너무 다양하고 일반화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그린워싱 사례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

2.2.1.5.3 클린뷰티 그린워싱에 대한 대응

이처럼 녹색인증의 범람은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무역장벽을 높이고 비과학적 근거문제를 초래해 오히려 소비자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소통하기 위해 녹색마케팅을 새롭게 육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PEF(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제품환경 발자국) 정보와 데이터 사용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효과적인 도구로서 활용한다. QR코드를 통해 이산화탄소배출, 물소비, 산성화, 부영양화등 지표를 유사제품과 비교해 환경영향결과를 보여주도록 연구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는 화장품 용기를 중심으로 화장품 기기업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 화장품병을 쏟아놓고 오는등의 퍼포먼스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2.2.1.5.4. 지속가능한 패션

친환경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호응에 힘입어 플라스틱, 버섯, 냉시그물, 식재료 부산물 등을 통한 대체섬유개발, 재활용원단, 자투리원단 활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패션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원자재 추적성을 95%까지 보장하겠다, 버려지는 가죽의 양을 최소화하겠다, 퍼프리(모피사용안함) 선언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플라스틱 및 순환경제를 주제로 학

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탄소중립 실천 등을 선언하는 사례를 나타낸다.

2.2.1.5.5. 지속가능한 패션과 그린워싱

그러나 지속가능한 패션 라인을 따로 두고 홍보하면서도 다른제품보다 더 나은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개발도상국의 의류작업자 및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을 언급하지 않으며, 해당 일부 의류라인은 전체 재고 중 소수이지만 브랜드가 마케팅으로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높다.

2.2.1.5.6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그린워싱에 대한 대응

패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린워싱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세분화된 목표를 세우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며 제조로부터 전과정 평가를 해야한다. 또한, 소비자가 패션산업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브랜드의 주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업이 애매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부터 경계해야한다.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이 자켓을 사지 마시오’를 떠올리며 필요하지 않은 것은 소비하지 않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패션과 화장품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압축파일의 6차 모임 발제 자료 참조)

2.2.1.6 국내외 인증제도 및 동물복지 인증제도 사례

각종 인증마크의 종류 및 인증기관 현황에 대한 이해, 친환경 인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린워싱 사례 소개(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압축파일의 7차 모임 발제 자료 참조)

2.2.1.7 공개세미나

3달간 진행한 그린워싱연구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일주일 간 홍보 후 그린워싱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40여 명을 모집하여 그린워싱의 개념 및 정의, 친환경 인증제도, 그린워싱 사례 공유 및 동향에 대해 공유하였고 이후 참여자 분들에게 현장연구를 소개하고 Q&A 및 토론 하는 시간을 가졌다.(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압축파일의 9차 모임 발제 자료 참조)

2.2.2 팀별 현장 연구

현장연구와 중간점검 일자별 회의록은 첨부 압축파일의 자료 참조. 세부적인 조사 및 연구 결과는 개별 회의록 보다는 아래 항목에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음.

2.2.2.1 기업 현장 연구팀

1)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업, 친환경 가치를 주된 기업 전략으로 삼고 있는 스타트업(중소기업), 최근 화장품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헬스앤뷰티(H&B)’업계로 나누어 각각 2~3개의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인터뷰 요청 업체는 다음과 같다.

분류	기업명	선정이유
대기업	LG 생활건강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업 2곳을 선정. 한국 화장품 업계 상위 2개 기업을 선정.
	아모레퍼시픽	
친환경 중소기업/스타트업	러쉬	친환경 가치(비건, 제로플라스틱 등)를 내세우고 있는 중소기업이면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로 선정.
	멜릭서	
	보나쥬르	

	디어달리아	※ 인터뷰 답변이 없어 인터뷰 요청 기업을 추가하였음.
	닥터하우쉬카	
	딕셔니스트	
	밀드플레르	
	아로마티카	
H&B 업체	올리브영	화장품 유통에 있어 강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헬스앤뷰티(H&B) 업체 두 곳을 선정.
	롭스	

그러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기업들이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터뷰 요청에 응하는 기업이 없어, 친환경 가치를 표방하는 기업을 여러 개 더 선정하여 추가로 인터뷰 요청을 하였고, 전화를 하여 요청하는 등 여러 수단을 더 이용해야했다. 어떤 기업이 그린워싱을 했다고 지목되는 경우, 기업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그린워싱 주제로 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이다. 또한 인터뷰에 대한 답변은 실무적으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무응답’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로마티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의 대표를 만나 직접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었고, 답변을 얻었다. 아로마티카의 답변 중 주요한 내용만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분류	질문	답변
회사의 친환경 경영활동	당사의 주요 친환경 경영활동(제품 및 서비스, 생산과정, 마케팅 등)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구성현황)	인체에 안전한 성분, 합성향을 배제한 천연향, 그리고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 원료의 선별과 수입부터 연구, 제조, 물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자체 공장과 연구소는 에너지 세이빙 스마트 시스템으로 운영. 환경경영 전담 부서를 별도 신설해서 환경 캠페인, 자원순환 세미나, 제로스테이션 투어, 제로웨이스트숍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진행 현황/경영성과, 회사가 느끼는 소비자의 반응과 평가는 어떤가요? 이와 관련하여 환경경영 활동에서 기대하는 효과, 향후 회사의 목표와 계획도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이 브랜드 철학에 공감하고 함께 실천해온 분들로, 단순히 제품을 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스테이션에 찾아와서 공용기에 리필을 하고, 리필팩 문화를 체험하고, 잔재 쓰레기를 최소화하려는 브랜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소위 찐팬들이 많음. 공식 홈페이지에는 ‘제안해주세요’라는 섹션이 별도로 있는데 실제 고객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시고 우리도 제품 개발에 이를 적극 활용. 향후의 주요 계획은, bottle to bottle 형태로 플라스틱 자원의 선순환을 완성시켜서 우리가 제안하고 꿈꾸는 ‘잔재 쓰레기 제로’가 가능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
그린마케팅/그린워싱 인지 및 이해정도	그린마케팅과 그린워싱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린워싱은 왜 나타난다고 생	‘친환경’이라는 과제를 단지 이미지 마케팅, 수익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린워싱의 출발점이라고 생각 화장품 업계의 경우에는 딜레마가 더 큼.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PCR 소재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유리

	<p>각하시나요? 기업차원에서 그린워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사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p>	<p>소재는 유통이나 보관 등이 어려워서 진입장벽이 있음. 제품의 외관 매력 때문에 코팅 등 후가공이 된 복합소재를 포기하는 것도 마냥 쉽지가 않음. 쓰레기를 필연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화장품 산업의 종사자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p> <p>아로마티카의 이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영향력을 가지고 시장을 바꿔나간다면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그린마케팅과 그린워싱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p>
<p>그린워싱 관련 이해관계자의 노력</p>	<p>기업의 환경경영이 그린워싱 문제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정부부처(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등), 인증제도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4-3 해당 연구와 관련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절한 소비자 인식과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소비자 단체 또는 시민 개인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p>	<p>자원의 선순환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환경경영은 개인 또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p> <p>이에 아로마티카는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을 통해서 자사 공병과 투명 페트를 모아서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 공정으로 보내는 ‘무한플라스틱사이클’ 캠페인을 시작하였음.</p> <p>‘친환경’을 단지 기업의 손에만 맡기면 그린워싱의 가능성을 피해갈 수 없음. 기업의 다양한 환경 관련 생산과 마케팅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소비자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야 함. 이런 측면에서 아로마티카의 홈페이지나 매장을 통해서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 내는 고객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얻고 있음.</p> <p>남양주의 한 제로웨이스트숍에는 약사인 공동 점주가 있는데, 약국에서 대량 발생하는 PE 소재의 약통 쓰레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음. 환경부와 식약처 등 부처와도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아직 진척이 없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아로마티카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p> <p>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업계와 현장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뜻을 함께 하는 개인들, 그리고 아로마티카 같은 기업들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음.</p>
<p>기타</p>	<p>뷰티업계에서 시도하는 주요 환경 경영활동은 제품 용기(플라스틱), 친환경/비건 재료 사용, 공정 및 유통과정에서의 탄소배출 감소 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는 어느 쪽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p>	<p>아로마티카는 어느 특정분야만 논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모든 환경경영 요소들을 초기부터 중시해왔음.</p> <p>최근 가장 소비자와 언론의 관심도가 높은 것은 PCR 유리 소재와 플라스틱 자원의 순환.</p> <p>이와 관련해 아로마티카는 수도권 13군데의 제로웨이스트숍에 수거함을 설치했고, 전기 트럭으로 자원을 모아서 아로마티카 오산 공장에 적재했다가 바로 재활용 소재 공장(플레이크/펠릿)으로 보내는 등 플라스틱 자원 순환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p> <p>이런 ‘무한플라스틱사이클’에 주력하는 이유는 플라스틱이 각 개인이 일상 속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쓰레기이기 때문.</p> <p>(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기업들은 재활용이 쉬운 단일</p>

	소재로 용기를 제작하고, 정부는 자원 순환 정책과 인증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p>〈답변 종합〉</p> <p>아로마티카는 플라스틱 쓰레기량 감축, 자원 순환, 안전, 에너지 소비 절감 등 다양한 환경경영방식을 도입.</p> <p>기업이 환경친화적 경영을 하려면 비용이 높아 기업의 결단 필요. 기업의 노력 외에도 소비자의 관심 요구, 정부의 인증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p> <p>아로마티카의 환경경영은 기업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에서 나아가, 캠페인을 하거나 고객의 의견을 듣는 등, ‘소비자와의 협력’을 통해 경영 방향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p>	

2) 온라인 마케팅 비교 분석

온라인 마케팅 분석 결과, 기업별로 그린마케팅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 키워드를 사용하는 빈도나 키워드가 다루는 영역이 저마다 달랐고, 아로마티카,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순으로 그린마케팅의 강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비교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교 기준	이니스프리 (대기업 브랜드)	더페이스샵 (대기업 브랜드)	아로마티카 (중소기업 브랜드)
주요 키워드 및 언급 빈도 수	1) 자연과 관련된 키워드 - 31회 (지구, 제주, 바다) 2)인체 안전 관련 키워드 - 11회 (피부) 3)자원 순환과 관련된 키워드 - 30회 (공병, 재활용, 자원 순환)	자연물 관련 키워드 - 14회 (장미, 사철쭉, 제주 알로에 등) 자연 - 1회 신선한 - 5회 “바다생태계와 산호초도 지켜주세요” - 1회	1) 자연과 관련된 키워드 - 27회 (자연, 환경, 친환경, 지구, 천연, 지속가능 등) 2)캠페인 및 실천 관련 키워드 - 13회 (캠페인, 실천, 비건) 3)자원 순환과 관련된 키워드 - 22회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 재활용, 리필, 플라스틱 프리 등) 4)기후위기 관련 키워드 - 9회 (탄소절감, 기후위기, 기후변화, 에너지, 그레타 툰베리 등) 그린워싱 - 2회
이미지	제품(11) > 사람(6) = 활동(6) > 자연(4) > 기타(3)	제품 사진 중심	제품(35회) > 사람(24회) > 캠페인 표지 (9회) > 기타(2회)
강조하는 메시지	공병수거/ 제주 바다 보호/ 피부에 절대적으로 친화적/ 깨끗한 이미지 강조	제품명/ 제품 주성분/ 성능 *친환경적 가치 강조하는 메시지 거의 없음.	지속가능/제로웨이스트/실천/캠페인
<p>〈종합〉</p> <p>같은 대기업 브랜드이지만, 이니스프리와 더페이스샵의 그린 마케팅 강도는 큰 차이를 보였음. 이니스프리는 공병 활용 등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마케팅을 주로 활용하였음. 더페이스샵은 브랜드 색상으로 녹색을 택하고, 자연물 이미지를 마케팅에 이용하긴 했지만, 친환경 메시지를 거의 전달하지 않았음. 자연물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제품이 자연 유래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 그쳤음.</p>			

아로마티카는 가장 강력하게 그린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 활용하는 키워드의 종류에서 다른 기업과는 큰 폭의 차이를 보였음. 공병 수거나 재활용 소재를 이용하는 것 뿐 아니라 기후변화나 에너지 절감, 비건 등 다양한 주제가 등장했음. 자연히 환경 관련 키워드 언급 횟수도 많았음. 아로마티카는 환경 이슈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깊은 편이라고 판단됨.

세 브랜드 모두 제품 이미지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그린 마케팅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아로마티카도 이미지 활용에 있어서는 제품 사진이 가장 많았음. 이는 아로마티카가 친환경 이미지를 이용해 결국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다만, 아로마티카는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해 관련된 이미지도 많았음. 이는 다른 두 브랜드와 확실히 구별되는 차이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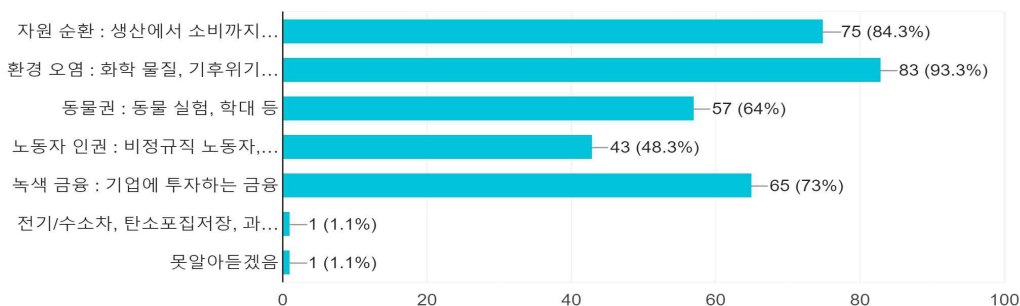
대외적으로 그린워싱 이슈가 부각된 브랜드는 이니스프리였는데, 소비자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해명에 그쳐 큰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더페이스샵에서 그린워싱 이슈가 없었던 것은 사실상 그린마케팅을 하지 않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린워싱도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로마티카의 경우 제품과 마케팅 전반에서 친환경을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린워싱 문제가 제기될 만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2.2.2 시민탐

조사 결과 15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89명(59.3%)이 다른 사람에게 그린워싱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나 그 이상으로 알고 있었고 61명(40.7%)가 그린워싱을 들어보기만 했거나 알지 못했다. 설문 참여자의 경우 여성이 118명(78.7%), 남성이 32명(21.3%)을 차지했고 응답자의 대부분(103명, 70.7%)이 기후,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19-29세가 76명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보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린워싱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나 그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그린워싱의 범주를 묻는 질문에 환경 오염(93.3%), 자원순환(84.3%), 녹색 금융(73%), 동물권(64%), 노동자 인권(48.3%) 순으로 답하였다.

어떤 내용이 그린워싱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두 선택해주세요.
응답 8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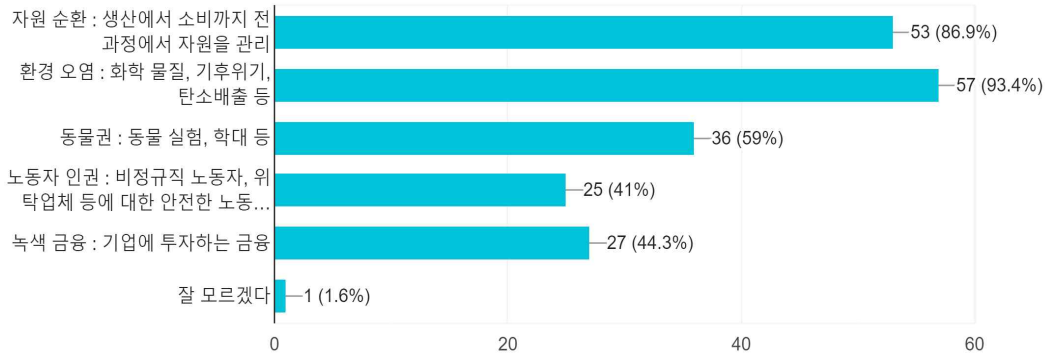
그린워싱에 대해 ‘들어보기만 했거나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린워싱의 범주를 환경 오염(93.4%), 자원순환(86.9%), 동물권(59%), 녹색 금융(44.3%), 노동자 인권(41%) 순으로 답하였다.

동물권과 노동자 인권, 녹색 금융은 환경오염을 뜻하는 좁은 의미의 환경 측면에서 벗어나지만 상당수 시민이 선택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인식 수준이 앞으로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워싱을 일으키고 확산하는 주체로는 기업이 1위, 정부가 2위, 소비자가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를 해결

어떤 내용이 그린워싱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두 선택해주세요.

응답 61개



해야 하는 주체로는 정부가 1위로 나타났고 기업, 소비자가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기업이 그린워싱 확산 주체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가 그린워싱 확산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그린워싱을 행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였다.

2.2.2.3 정부/인증기관팀

1) 그린워싱 규제 법령

국내 그린워싱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으로는 환경부 소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환경부 소관 법규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상의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상의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실증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처벌,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관리하고, 후자는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해 관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상의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실증이 있다.

정부의 그린워싱 관련 법적 규제에는 국회도서관으로부터 공유 받은 법률자료로부터 호주, 미국, 영국, EU, 캐나다, 한국의 그린워싱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비교할 수 있었다. 한국과 미국의 법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제품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친환경 마케팅 표시사용 지침(GG)을 바탕으로 그린워싱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GG 지침 자체의 법적 구속력은 없고 FTC가 GG에 반해 친환경 위장광고 하는 판매자를 FTCA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다.

2) 인증마크

정부는 시민들의 친환경소비 촉진을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표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표지인증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 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에서는 1979년 독일 환경표지 인증제도 최초 시행, 현재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일본 등 4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각 나라의 문화, 경제, 사회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994년 환경표지제도 운영기관 협의체인 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이 결성되어, 환경표지 제도를 시행중인 대부분의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협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2009)

독일은 블루엔젤로 친환경 플라스틱 인증제도를 관리하고 있고 일본은 에코마크 프로그램, 한국은 환경표지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친환경 플라스틱 인증제도는 독일, 일본에 비해 제도의 체계성, 플라스틱 재활용 촉구 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 (박상우, 2019)

독일 블루엔젤의 에코 라벨은 물질 유형별로 고품질 재활용이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형태의 재활용보다 우수하므로 더 많은 폐기물을 물질 유형별로 재활용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을 지원한다. 일본의 경우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플라스틱 제품과 PET병(용기)로 구분하여 환경마크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인증기준은 EL721(합성수지 제품)이며 이 기준은 폐합성수지(폐합성섬유 포함)를 원료로 해 성형 제조한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각 규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블루엔젤은 일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90%가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완제품에 대해 Post consumer products가 최소 80% 이상 함유된 제품에 대해 마크를 부여한다. 이때 강철 보강이 필요한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는 등 그 외에 예외사항에 대하여 합성수지 함유량 90%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Blue angel, 2019)

에코마크프로그램은 각 제품군에 대해 합성수지 함량과 pre-consumer materials와 post-consumer materials의 비율을 각각 50, 50 25%로 부여하고 있다. 이때 post-consumer materials란 제품 사용 후 발생 폐합성수지로 제품으로서의 정상적인 유통 단계를 거친 후 사용 목적을 다하고 배출된 합성수지를 의미하고, pre-consumer란 제품 사용 전 발생 폐합성수지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공정 부스러기(scrap) 등의 형태로 발생하여 제품으로서 사용되지 못한 합성수지를 말한다.

환경표지제도는 합성수지 함량 50% 제품에 대하여 토목건축, 자동차 부품, 문구가정용품, 기타의 기준에 대하여 단일 재료로 이루어진 경우는 40%, 단일재질로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pre-consumer와 post-consumer 합성수지가 혼합된 경우 각각에 대하여 60%, 25%, 50%, 80% 사용해야 하고, post-consumer 합성수지를 사용한 경우는 각각 40%, 20%, 40%, 60% 비율로 구성되어야 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 부분에 있어서 독일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비율의 함량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사용 폐합성수지 종류에 있어서 독일은 post-consumer material만 인정하고 일본은 post-consumer와 pre-consumer 각각의 사용에 대해서, 한국은 post-consumer와 pre-consumer 두 개를 합친 것도 인정하고 있다. 독일에서 pre-consumer 플라스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post-consumer 플라스틱이 진정한 의미의 재활용이라서 그런 듯하다. 둘 다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pre-consumer 물질은 제품으로 사용되지 못한 부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재료이다. 따라서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하여 제품의 플라스틱 함유량과 그 기준을 보았을 때 독일과 일본의 기준이 국내 환경표지제도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블루 엔젤 (독일)	함유량 질량분율(%)	
	합성수지	Post-consumer products
일반 제품	90	80
예외(강철 보강 필요)	80	80

에코 마크 프로그램 (일본)	함유량 질량분율(%)		
	합성수지	Pre-consumer materials	Post-consumer materials
액세서리/장신구	50	50	25
장난감/운동기구			
Recording media			
농림수산물	90	-	20
실내 및 실외 기구			
Self recycling	90	-	20
중합제 첨가제 성분	70		

환경표지제도 (한국)	합성수지 함유량(%)	폐합성수지 사용률(%)		
		단일 재질	단일재질로 분리 곤란	
			Pre+Post-consumer materials	Post-consumer materials
토목건축	50	40(재료30)	60	40
자동차부품			25	20
문구가정용품			50	40
기타			80	60

3. 결론

본 연구회는 국내외 여러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정리했으며 각종 산업에서 행해지는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내부 스터디에 그치지 않고 공개 세미나를 통해 정부, 기업, 시민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개 세미나에서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현장 연구를 진행했다. 기업, 시민, 정부(인증기관)로 팀원을 나누어 각 분야에서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기존의 다양한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정리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산업 별로 상이한 부분이 많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및 비대면 상황의 지속으로 현장 연구에서도 더욱 활발한 논의가 어려웠다. 아울러 현장 연구 과정에서 그린워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게 되었다. 그린워싱이라는 직관적인 단어의 표현이 다소 모호하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기도 했다.

현재도 여전히 그린워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친환경 행동의 진정성, 이를 규제하는 정부의 세심한 관리, 똑똑한 시민의 소비문화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상우. (2019) 플라스틱 관련 환경표지 인증제도 비교 : 독일·일본·한국, 국내외 IP 분석보고서
- 이경아, 황은애, & 김성천. (2010). 녹색상품 구매 선택정보 적정화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1-4.
- 이동승, & 윤효영. (2014). BP 의 유류오염과 녹색위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강원법학, 42, 263-308.
- Competition, A. (2011). Green marketing and the Australian Consumer Law. Commonwealth of Australia.
- DEFRA, A. (2008).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Federal Trade Commission. (2012). Guid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Claims: Final Rule
- Federal Trade Commission. Green Guides. 2021.9.8.
- Federal Trade Commission. Part 260 - Guid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s. 2021.9.8.
- Frydendal, J., Hansen, L. E., & Bonou, A. (2018).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In Life Cycle Assessment (pp. 577-604). Springer, Cham.

향후 연구활용 계획

1) 그린워싱 연구자료 공유와 공감대 확산

당초 본 연구회에서는 연구활동을 통해 그린워싱 문제 의식을 고취하고 기업, 인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도록 자극하고 그린워싱에 대한 책자 자료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업들의 소극적 응답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었고, 자료의 취합, 분석, 정리 이후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기간 등으로 인해 책자 제작이 지연되었다. 다만 본 연구 내용을 환경단체 및 SNS, 기업/기관단체와 공유하여 그린워싱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 소통활동을 지속하여 연구를 연장하고자 한다.

2) 규제 가이드라인 제안

그린워싱 연구와 자료 수집 과정에서 본 연구회는 산업별로 처한 상황 및 인증, 인식의 차이가 크고 다양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때문에 획일화된 표준 가이드라인 정립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연구회는 화장품/기타 소비재 기업, 인증 연구기관 등 본 연구와 관련된 조직들과 추가 협의하거나 조사를 통해 특화된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설정, 제안할 계획이다.

3) 관련 분야 연구자와의 네트워킹

공통 관심사를 가진 여러 연구자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그린워싱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행가능하며 효과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및 연구를 통한 관점의 교류는 해당 연구 뿐만 아니라 추후 각자의 영역의 연구 진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에 대한 의견 제시

최근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바, 그린워싱연구회에서 연구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폭넓게 그린워싱을 이해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제시를 함으로써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 커뮤니케이션(ESC)

본 연구모임은 재생에너지와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언론보도·광고(캠페인)·뉴미디어·미디어교육 사례를 분석하며 재생에너지 관련 프레임 분석이나 미디어교육 지도안 구성 등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총 22회 연구모임 진행)

팀장 이해선 서강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팀원 강동완 포스코건설 사원
팀원 신수현 서강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팀원 장지혜 서강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팀원 정선임 서강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팀원 호규현 서강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재생에너지와 환경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언론보도 기초분석

1. 서론

본 연구모임은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시작된 2021년을 맞아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재생에너지와 환경 커뮤니케이션 관련 선행연구를 탐색하고 언론 보도·광고(캠페인)·뉴미디어·미디어 교육 사례를 분석하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으며, 대학원생과 건설회사 기업 재직자가 참여하는 발제와 토론 중심의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실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연구모임의 각 구성원이 재생에너지 관련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이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환경 커뮤니케이션 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했다.

2. 본론

1) ‘재생에너지와 환경 커뮤니케이션’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본 연구모임은 ‘재생에너지와 환경 커뮤니케이션’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결과를 토대로 재생에너지와 환경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언론 보도 내용 분석 연구를 위한 유목 개발 및 기초분석을 진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실시하여 ‘재생에너지와 환경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주제를 선정한 뒤 관련 문헌과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재생에너지와 환경 커뮤니케이션’ 관련 주제 및 선행연구 사례

회차	구분	세부내용
1회	주제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을 둘러싼 재생에너지의 필요성
2회	주제	재생에너지와 언론 보도 I: 프레임 이론과 긍정적·부정적 메시지
	선행연구	김효정, 2017, “원자력 기사 프레임이 수용자의 심리적 저항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저항 이론 (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학회, 61(5), 130-164.
3회	주제	재생에너지와 언론 보도II: 전망 이론과 이득·손실 프레임
	선행연구	고태성, 강보영, 권상희, 2020, “에너지전환 정책 홍보 메시지 프레임이 정책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프레임과 해석수준의 상호 적합성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학회, 64(2) 46-116.
4회	주제	재생에너지와 광고(캠페인): 매체 유형에 따른 차이
	선행연구	김주경, 김준홍, 한문성, 강제상, 2020,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회, 34(4), 123-152.
5회	주제	재생에너지와 뉴미디어: SNS와 댓글의 프레임 및 영향력 논의
	선행연구	김은지, 이연님, 조재홍, 권오병, 2014, “에너지·친환경 기업들의 소셜미디어 브랜드 게시물 성공요인 분석”, 한국IT서비스학회지, 한국IT서비스학회, 13(4), 1 - 17.
6회	주제	재생에너지와 미디어 활용 교육 사례 (예정)
7회	주제	종합토론 (예정)

연구모임에서는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발제한 뒤, 각 내용에 따른 환경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면, 2회 모임에서는 재생에너지 언론 보도의 프레임 분석을 논의하고자 프레임 이론과 심

리적 저항 이론을 다룬 선행연구 발제가 이루어졌다. 이후 각 이론을 언론 보도 사례 분석에 적용하였는데, 제주 지역 신재생에너지가 언론사에 따라 ‘강제종료(조선비즈, 2021, 4, 15)’ 혹은 ‘타지역 역전송(제주일보, 2021, 4, 18)’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언론 보도의 프레임은 정보원에 따라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사실 나열형’, 기후변화의 일반적 대응이나 정부 정책에 관한 태도 표명을 포함하는 ‘태도 정립형’, 실생활 행동·사회문화적 참여·대응체제 마련 측면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관한 제언을 포함하는 ‘행동 조직화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이득·손실 프레임을 적용한 재생에너지 관련 언론 보도 분석(3회), 국내·외 재생에너지 관련 광고·캠페인 영상 비교 분석(4회), 환경 관련 기업의 SNS 게시글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5회), P4G 관련 언론보도의 제목에 포함된 긍정·부정 프레임 분석(5회)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모임 구성원을 2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한 뒤 재생에너지와 환경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재생에너지 관련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위한 유목 개발 및 코더간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재생에너지와 환경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인 연구

3) 재생에너지 관련 언론보도 내용분석 연구수행을 위한 기초분석

재생에너지 언론보도 관련 선행연구는 실험연구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태성 외, 2020; Bayulgen & Benegal, 2019; Stokes & Warshaw, 2017). 해당 연구들은 언론 보도 프레임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관한 공중의 인식이 변화할 가능성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실제 공중에게 전달된 재생에너지 관련 언론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아직 공중에게 뚜렷한 인상이 형성되지 못한 주제이므로 경제적 손실에 관한 프레임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경제적 차원의 부정적인 정보가 먼저 제공된다면 재생에너지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Bayulgen & Benegal, 2019). 따라서 이 연구는 재생에너지 관련 언론보도를 신문사 유형(경제지·중앙지·지역 종합지), 경제적 이득·손실 프레임, 정보원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언론보도(20,648개)를 확인하였으며, 신문사 유형에 따른 기사 빈도는 경제지(8,340건), 중앙지(5,797건), 지역종합지(6,511건) 순이었다. 전체 언론보도 가운데 비례층화표집(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으로 5%의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고자 하며, 표본 추출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거나 본문이 한단락 미만인 단신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총 1,032건의 재생에너지 관련 언론보도를 표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3. 결론

본 연구모임은 각 구성원에게 재생에너지와 환경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1) 재생에너지와 환경 커뮤니케이션 관련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재생에너지 관련 언론 보도 내용분석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고태성, 강보영, 권상희, 2020, "에너지전환 정책 홍보 메시지 프레임이 정책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프레임과 해석수준의 상호 적합성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4(2) 46-116.
- Bayulgen, O., Benegal, S, "Green Priorities: How economic frames affect perceptions of renewable energy in the United States", Energy research and social science, 47, 2019, 28-36.
- Stokes, L., Warshaw, C., "Renewable energy policy design and framing influence public support in the United States". NATURE ENERGY, 2(8), 2017, 17107.
- "수요 없는데 막 짓더니... 제주 풍력·태양광발전, 남아돌아 강제종료", 조선비즈, 2021년 4월 15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4/2021041402419.html
- "신재생에너지 전력 타지역 첫 역전송", 제주일보, 2021년 4월 18일,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1329>

향후 연구활용 계획

본 연구모임은 각 구성원에게 재생에너지와 환경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1) 재생에너지와 환경 커뮤니케이션 관련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재생에너지 관련 언론 보도 내용분석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각 구성원이 참여한 후속연구들이 실제 학술논문 작성 및 현장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전문성향상을 위한 <기상전문방송인 연구모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와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상정보 전달의 최전선에 있는 기상방송인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 방대해진 미디어 환경 속에 ‘미세먼지는 무조건 중국발’이라는 프레임과 기후변화에 대한 과장된 정보들로 인해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실이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연구모임은 기상캐스터를 비롯한 기상방송인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상방송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연구모임을 이어갈 예정이다.

(총 6회 연구모임 진행)

팀장 맹소영 웨더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팀원 구현진 BTN불교방송 기상리포터
팀원 권하경 OBS경인TV 기상캐스터
팀원 김예슬 BTN불교방송 기상리포터
팀원 박소민 KBS부산 기상캐스터
팀원 윤수미 울산MBC 기상캐스터
팀원 이정은 티브로드 기상캐스터
팀원 전소영 SBS 기상캐스터
팀원 허유원 채널A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서론

〈기상전문방송인연구모임〉은 기상방송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현직 기상캐스터(SBS, 채널A, OBS경인방송, KBS부산, KBS청주, 울산MBC)로 구성된 자발적 연구모임이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날씨에 민감한 사람들이며,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를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사실 1년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상캐스터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계절의 변화보다 기후의 변화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폭염, 폭우, 태풍, 한파, 폭설, 산불, 가뭄, 미세먼지 등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은 그 어느때보다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기상방송인들은 기후변화로 과거와 달라진 뉴노멀(New Normal)기상 대한 이해와 기후위기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문제에 좀 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전문성 있는 기상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장 먼저 대다수 방송사의 기상캐스터 채용과 근무시스템상 이러한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매년 기상캐스터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사의 제작 시스템 역시 기상방송인을 채용하지만 정작 재난방송에서는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전문성 향상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상전문방송인연구모임〉은 이러한 기상방송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사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전문성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기상방송 콘텐츠의 제작과 제공을 통해 우리 국민이 보다 기후 위기를 느끼고 대응하도록 해 크게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작게는 개인의 삶이 더욱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2. 본론

- 1)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기상 방송의 중요성
- 2) 기상캐스터의 현실태
- 3) 재난방송 모니터링 (지상파 3사, YTN, 연합뉴스, 종편채널)
 - (1) 지상파 3사
 - (2) YTN, 연합뉴스 등 보도채널
 - (3) MBN, 채널A, TV조선, JTBC 등 종합편성채널
- 4) 기상캐스터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 (1) 자격증 제도 도입
 - (2) 전문기관을 통한 세미나 등 교육기회 제공
 - (3) 방송사 채용과정의 개선
 - (4) 대학 등 기초교육 과정 강화(학과개설 등)

3. 결론

지금은 소수의 기상캐스터들의 참여로 기상방송의 현실적 문제 보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보다 많은 기상방송인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 이 안에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기상용어나 현상을 함께 연구하고, 기상청 예보관을 비롯한 기상전문연구원들이 함께하는 세미나, 강연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기상캐스터를 지망하는 사람들 역시 기상캐스터가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지식과 직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은 기상전문성을 갖춰야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대학에서는 직무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방송관련 직무를 바탕으로 한 기상캐스터 학과 등의 개설을 통해 대기과학 및 방송진행능력 등을 함께 갖춘 전문인력 교육 과정의 도입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는 더이상 기상캐스터를 외적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심각해진 기후위기 속에서 정확한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전문가로 바라 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비록 연구를 거듭할수록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이 보여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급변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이러한 노력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상캐스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맹소영
기상전문방송인연구모임

기상캐스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상캐스터에 대한 대국민 인식

- 기상캐스터 외모 중심의 편향적 사고 난무
- 기상캐스터의 성 상품화 심각
- 기상전문가라는 인식보다 예쁜 방송인이라는 인식이 강함
- 기상캐스터 출신 연예인의 사례로 인한 '준 연예인'이라는 인식의 일반화

기상캐스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빈번

-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예상보다 빠르고, 그 추세 또한 가속화되는 경향 큼
- 이대로 진행된다면 2040년 전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상승 예측
- 산업혁명 이전 대비 3°C 상승 시, 20100년 기근 사망자 300만 명, 해안침구 피해인구 1억 7000만 명
- 2020년 54일 역대 최장 장마 반면, 2021년 제주 장마기간 17일 1973년 이후 3번째로 짧아
- 올해 여름철 폭염 1994년, 2018년 이후 3위 기록. 열대야일수 1994년 이후 최대치 발생
- 한파특보 기간확대 기행 이후 17년 만에 10월 한파특보 발효

3

기상캐스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상캐스터 실태와 문제점 파악

- 재난의 일상화, 피해 규모의 대형화 추세 (2021 부산지방기상청, 한국언론정보학회 보고서)
- 변화하는 재난환경 속에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재난정보 전달 체계 강화 필요성 증대
- 반면, 증가하는 재난방송 상황에서 기상캐스터의 역할 미흡
- 기상청 예보관 및 기상전문가(연구원, 교수 등)의 역할 증대
- 기상정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잘못된 정보 전달
- 과도한 시청률 경쟁에 따른 자극적이고, 극단적 표현의 증가

4

기상캐스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국 기상캐스터 현황



5

기상캐스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상캐스터 채용과정

- 1차 서류전형(이력서, 자소서, 프로필사진, 날씨진행영상 및 자기소개영상)
- 2차 실무전형(카메라테스트 및 심층면접)
-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1차 서류전형에서 방송진행능력만을 평가
- 채용과정 중 기상전문지식 평가 부재
- 기상캐스터 채용담당 실무자의 기상전문지식 미흡
- 기상캐스터 중 기상관련전공자 비율 매우 저조

6

기상캐스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채용 이후 기상캐스터 관리시스템

- 신입 입사자에 대한 교육 전무
- 채용 즉시 투입되는 사례 다수
- 신입 입사자 기상방송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부재
- 중앙사(KBS, SBS, MBC)를 제외한 다수의 방송국은 기상캐스터 1인 체제로 이뤄짐
- 기상캐스터 개인 역량 차이에 따른 기상방송의 질적 격차가 큼

7

기상캐스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외 기상전문방송인력 사례(미국/일본)

- 기상예보사 자격증 보유한 기상캐스터 자격의 엄격함
-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상방송전달
- 기상캐스터의 외모가 기상방송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큼
- 미국 보스턴 지역 지상파 방송 3개 기상전문방송인 기상정보 전달할 때 전문가의 권위 큼
- 전체 일기예보의 59.9%는 시청자와 상관없음. 시청자와 관련 내용은 여과 활용(20.9%), 야외활동(16.5%)
(2021 부산지방기상청, 한국언론정보학회 보고서)

8

기상캐스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상캐스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기상캐스터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 필요
- 재난을 전달하는 전문가로의 역할 제고
- 기상캐스터 채용과정의 전문성 보완 및 확대
- 기상캐스터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시스템 도입 및 기상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제시
- 기상관련학과 <기상방송응용학> 과목 개설 필요
- 선진국처럼 엄격한 기상캐스터 자격 수준 제시

언론과환경포럼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환경·보건 분야 언론 보도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나 많은 기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속보 경쟁에 내몰리다보니, 치밀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솔루션을 제공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언론과 환경 세미나를 통해 환경 보도를 시작하는 기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개발하고자 한다. 가이드북 개발 과정에서 환경·보건 분야의 정확한 보도를 위한 기초적인 학습 자료, 환경·보건 분야의 대표적인 오보들을 팩트체크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의 잘못된 보도 프레임을 복제하는 기사들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모으고자 한다.

(총 6회 연구모임 진행)

팀장 정희정 세종대 기후환경융합센터 연구위원

팀원 김아영 내일신문 기자

팀원 박상욱 JTBC 기자

팀원 선정수 뉴스톱 기자

팀원 송찬영 데일리한국 환경전문기자

팀원 윤지로 세계일보 기자

팀원 이정훈 KBS기상전문 기자

팀원 최우리 한겨레 기자

팀원 신동호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

팀원 안종주 단국대 보건복지대학원 초빙교수

팀원 전성철 SK가스 커뮤니케이션그룹 PL

팀원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팀원 조영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주무관

환경·보건 분야 오보의 원인과 바람직한 보도 방향

: 초보 기자를 위한 환경·보건 분야 보도 매뉴얼 개발 연구

1. 서론

오늘날 미세먼지, 코로나19와 같은 이슈를 다루는 환경·보건 분야의 언론 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난 보도로 다루지고 있다. 언론은 미세먼지 농도가 과거보다 개선된 것과는 다르게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보도하여 미세먼지 위험의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을 재구성하고 있었으며, 미세먼지 이슈를 마케팅 관점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김영욱 외, 2015a). 또한, 개인은 미세먼지의 본질적인 위험보다 보도 빈도에 따라 위험성을 중요하게 인식한다(김영욱 외, 2015b). 이준웅과 김성희(2018)는 국내 미세먼지 보도의 문제점을 ‘파편화 보도’ 현상으로 진단했는데, 미세먼지 현상의 복잡성과 영향력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지만, 시민들은 ‘파편화된 보도’로 인해 이를 단순하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기자들이 인터넷 위주의 변화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속보 경쟁에 내몰리다보니,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단신 위주의 기사를 생산하게 되고, 일부는 오보나 왜곡 보도를 하게 되어 재난 보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 일명 ‘기레기’ 취급을 받기도 한다. 충분한 취재를 통해 시청자와 독자가 궁금하거나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해서 지나친 공포심을 갖게 하거나, 해결책을 찾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내부보다 외부로 돌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체념하게 만드는 보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취재의 시작부터 잘못된 보도 프레임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 현실을 왜곡하게 되는 것은 물론 문제의 원인을 엉뚱하게 진단하여 그 해결은 더욱 요원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보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보건 분야 언론 보도에서 오보와 왜곡 보도의 원인을 찾고, 바람직한 보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기자협회는 “전원 구조”라는 역사적 오보를 냈던 자성의 의미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달성하고자 「재난보도준칙」을 2014년 9월 16일 발표했다(한국기자협회, 2019). 「재난보도준칙」은 재난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와 목적, 정확한 보도, 피해의 최소화, 비윤리적 취재 금지,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취재원에 대한 검증, 유언비어 방지, 선정적 보도 지양 등 33개 조항에 걸쳐 취재와 보도에 대한 준칙을 설정했고, 언론사 역시 이 보도 준칙을 교육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코로나19 보도는 여전히 단신 위주의 경제와 정치적인 목적의 보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오보와 왜곡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는 위험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미세먼지, 코로나19 등에 대한 미디어 분석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기사를 만드는 기자들의 노력을 찾아보기는 힘든 것이 아쉬운 실정이다.

2020년 10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환경·보건 분야 취재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기자들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환경·보건 분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언론과환경포럼’이 결성되었다. 이 포럼에는 다양한 언론사의 현직 기자 8명, 전직 기자 6명, 그리고 정책 홍보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포럼 회원들이 각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에 관련한 발제를 하고, 함께 토론하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의 발표와 특강이 주로 대면 모임 혹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발표된 주제는 미세먼지 보도, 기후위기, 생태, 가짜뉴스, 팩트체크 등 각 멤버들이 특히 집중하고 있는 전문 분야를 위주로 진행됐으며, 해당 분야의 보도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 후배 기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노하우 등을 담아 환경·보건 분야를 처음 맡게 된 기자들을 위해 「환경·보건 분야 보도 가이드북」에 담을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내용은 보건 환경 언론 보도와 국내외 문헌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실제 취재와 보도, 팩트체크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좀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치열한 고뇌가 담겨져 있다. ‘언론과환경포럼’은 구성원의 절반 이상은 현직 기자들이기 때문에 학습하고 연구한 내용을 기사로 쓰기도 하며,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기사거리를 제보하기도 하고,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하는 실무적인 효용성이 높다는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 역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럼에 참여하는 현직 기자들의 기사에 반영될 것이며, 향후 환경·보건 분야 보도를 맡게 될 기자들의 실제적인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포럼에 논의된 주요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1) 환경, 보도 분야 오보와 왜곡 보도의 원인

(1) 기상전문기자의 미세먼지 보도

기상학을 전공하고 10여 년간 기상청 한 곳만 출입한 KBS 이정훈 기상전문기자는 미세먼지 예보제가 시행된 2013년, 날씨를 전하듯 기상전문기자가 미세먼지 ‘예보’를 전하는 게 좋겠다는 방송국 방침에 따라 미세먼지 보도를 맡게 됐다. 이정훈 기자는 그때 이후로도 환경부를 출입하지는 않았고, 환경부 보도 자료도 받지 않은 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미세먼지를 취재해왔다. 이런 취재 방식은 환경부의 시각에 갇히지 않고, 또 출입처에 얽매이지 않고 미세먼지 문제에 엮인 여러 전문가의 시각을 종합해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정훈 기자는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보도가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지는 못했다고 느꼈다. 중국인이냐는 악플은 쓰는 기사마다 달렸고, 욕설 가득한 메일에 사무실로 항의 전화도 수차례 왔기 때문이다. 이정훈 기자는 이런 원인을 출입처 소속의 문제라기보다 환경 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미세먼지와 맞서 싸워야 했는데 때로는 대중과 맞서 싸웠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상전문기자로 숫자만 떠든 기사는 시청자와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사나 기자의 전문성 제고가 만능과 같이 제시되지만, 현실적인 시민 소통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는 대목이다.

① 미세먼지 보도, 첫 번째 실패담 ‘경각심과 공포감의 사이’

미세먼지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건 2013년이다.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한 시기가 이때고, 같은 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미세먼지를 연구하고 관측하던 전문가들은 이때만 해도 미세먼지가 그렇게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지 상상도 못 했다. 그들에게 미세먼지는 과거부터 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연무’나 ‘스모그’로 표현되던 것이 ‘미세먼지’라는 제 이름을 찾았을 뿐이다. 그런데 대중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다. 전에 없던 괴물이 등장한 것과 같은 충격이 전해졌다. 이때 두 가지 통계가 동시에 던져졌다. 하나는 전문가들의 말대로 미세먼지가 예전부터 있었으며, 예전보다 오히려 크게 줄었다는 통계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유해 중금속인 납도 과거보다는 줄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런데도 현재 우

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전 세계로 따져도 중하위권이라는 성적표이다. 이는 분명 대중이 걱정할 만한 지표이다.

기차라면 후자의 통계에 관심을 두는 게 당연한 일이다. 과거보다 줄었더라도 여전히 우리 건강에 위협이 되는 수준이라면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언론사가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미세먼지를 바라본 것은 아니었다. 일부 언론은 대중의 ‘공포심’을 이용해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등 상품팔이에 전념했다. 노골적인 광고 기사가 아니더라도 상당수 기자가 자신의 기사를 잘 팔리게 하려고 ‘공포감’을 이용하기도 했다. 특히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통계와는 달리 과거 깨끗했던 우리 하늘이 갑자기 미세먼지로 뒤덮인 것처럼 왜곡한 사례도 많았다.

그러는 동안 미세먼지는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됐을까?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앞으로 더 줄여나가자는 건전한 경각심일까? 아니면 전에 없던 독가스가 우리 숨을 위협하니 아이들을 위해 이민 가야겠다는 비합리적인 공포심일까?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대중의 인식은 후자에 가까운 것 같다. 환경부와 통계청에서 조사한 국민 환경 인식 조사를 보면 최근까지도 미세먼지가 과거보다 나빠졌고, 앞으로도 악화할 거라는 인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굳이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주변에 물어봐도 십중팔구는 “미세먼지가 예전보다 심해졌다”라고 답한다. 실제 미세먼지의 변화 양상과는 다른 인식이다.

그렇더라도 ‘미세먼지가 과거보다 줄었다’는 통계가 대중이 꼭 알아야 할 정보일까? 이정훈 기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미세먼지는 2019년부터 ‘사회적 재난’에 포함됐다. 한국기자협회의 「재난보도준칙」을 보면 재난보도의 주목적으로 ‘피해 최소화’와 함께 ‘사회적 혼란 방지’도 함께 다루고 있다. 미세먼지에 적용해 보면 ‘잘못된 실태 인식과 이로 인해 발생한 비합리적인 공포감’을 ‘사회적 혼란’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되돌리는 것도 재난 보도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대중에게 쉽게 닿지 못했다. 요즘 세상에 미세먼지가 과거보다 줄었다는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발제 과정에서 까이기 일쑤였다. 겨우 기사화했더라도 숫자보다는 본인의 느낌을 믿는 대중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다.

② 미세먼지 보도, 두 번째 실패담 ‘고농도가 문제? 평균은 함정?’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은 잘못된 원인 파악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데, 정작 공기 중의 농도가 높아지니 그것은 다 외부에서 왔다는 인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것이 ‘중국발’ 프레임의 시작이었다. 이를 더 강화한 것이 미세먼지 예측 모델이다. 미세먼지 예측 모델은 주로 고농도 시기의 원인을 보여주기 위해 방송 기사에서 많이 활용됐다. 이 무렵 발생한 상당수 고농도 사례가 예측 모델을 통해 마치 중국발로 ‘증명’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과연 고농도일 때만 해로운 것일까? 이 역시 대중들의 인식과 전문가의 견해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대중들은 하늘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할 때만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낮은 농도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가 특정 농도 이상에서만 유해성을 가진다는 ‘역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의 원인을 파악할 때도 ‘고농도’ 시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농도 시기에는 중국의 영향이 큰 만큼 ‘중국발’을 줄이지 않고서는 미세먼지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연평균 농도를 가지고 기여율을 따지는 것은 ‘평균의 함정’이라고도 말한다.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평소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때 국내 기여율이 더해지기 때문에 정작 고농도일 때의 높은 중국 기여율이 희석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보건학자들의 분석은 완전히 다르다. 미세먼지는 장기간 노출됐을 때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기 때문에 장기간 평균 농도의 차이가 유해성을 결정짓는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장기간 평균 농도이든 매일의 농도이든 매우 낮을 때부터 유해성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통계 연구를 통해 밝혀내기도 했다. 미세먼지에는 ‘역치’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농도를 줄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보건학자들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건학자들의 설명을 언론은 언제 대중에게 전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때, 대중들이 흥분을 가라앉혔을 때 차분하게 전해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시기에는 미세먼지 관련 기사를 발제해도 출고하기 어렵다. 출고된다 한들 시청자와 독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고농도 시기에 정말 중요한 건 평소 농도이니 평소에 줄이자는 얘기도 당연히 먹혀들기 어렵다. 고농도 시기에는 당장 느끼는 불편감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정훈 기사는 틈이 날 때면 나름대로 이런 내용을 종종 보도에 담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매번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서 보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소수의 기자가 이런 내용을 보도한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여전히 국민 대부분이 미세먼지는 고농도 시기만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③ 미세먼지 보도, 세 번째 실패담 ‘문제 제기’로 끝? 해결은?

설령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연평균 농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해도 끝은 아니다. 많은 연구에서 연평균 농도의 기여율로 봐도 국내 영향과 중국 영향은 절반 정도씩 비슷하게 차지한다. 분명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는 상당 부분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이다. 당연히 우리 언론이라면 중국이 듣든 안 듣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정훈 기자 역시 미세먼지를 처음 보도할 때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문제에 대해 많이 다뤘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반복적으로 내다보니 ‘과연 이 기사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하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기사 끝에 해결책을 한 마디쯤 덧붙이고 싶지만, 국제법 전문가, 외교 전문가를 아무리 취재해보도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일 그럴싸한 대책은 없었다. 고작 나오는 것이 중국과의 연구 협력과 참여국을 확대한 다자간 환경 협력체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다. 이런 내용을 클로징에 한 마디씩 의례적으로 덧붙이기는 하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해 보였다.

결과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의 관점에서 보자면 국내 발생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벌써 10년 가까이 반복된 문제에 언제까지나 중국발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력발전소부터 경유차, 암모니아를 배출하는 축사까지 주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배출되는 곳들을 누비며 현장 취재도 여러 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언제나 ‘주범’인 중국은 놔두고 왜 애먼 국민만 괴롭히냐는 불만이었다. 결국, 해결 방안을 다룬 미세먼지 보도 역시 철저히 실패작으로 남은 셈이다.

④ 속 시원한 보도, 숨 시원한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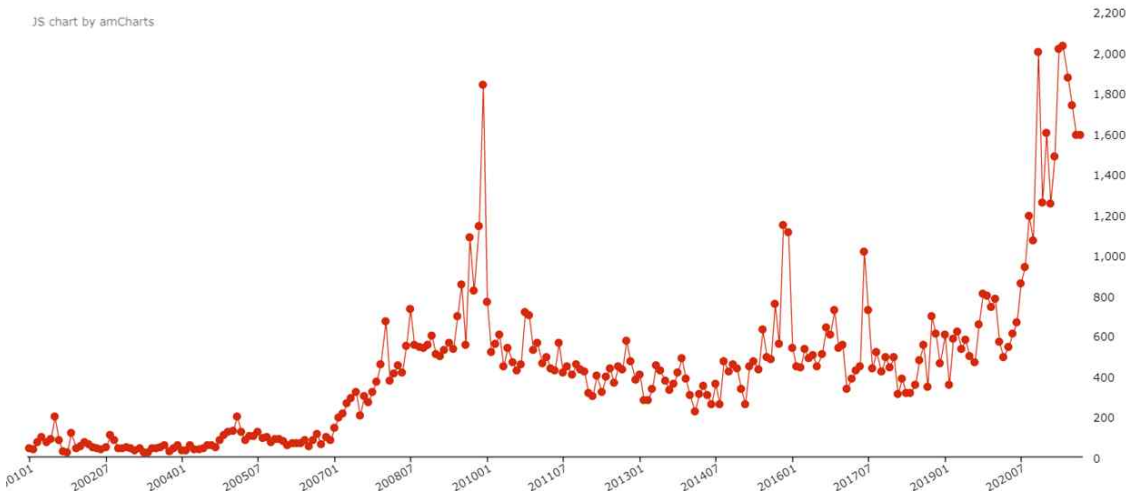
이정훈 기자가 그동안 미세먼지 분야를 취재하며 느낀 것은 현실 인식부터 원인 분석, 해결 방안까지 전문가의 견해와 대중의 인식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대중에게는 계몽 언론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정훈 기자는 몇몇 선배에게 이런 고민을 토로했을 때 대중이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정부와 언론에 바라는 것은 그저 ‘속 시원한 한마디’일 뿐이란 답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중국 탓’하라는 얘기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속 시원한 보도’가 결국 ‘숨 시원한 보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껏 이정훈 기자는 자신의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많은 이의 속을 답답하게 하긴 했지만, 숨을 시원하게 하는 방향을 향하고자 노력했고, 그 속에서 가끔은 희망을 보기도 했다. 미세먼지에 역치가 없다는 개념, 30년 전에도 대기오염이 9시 뉴스의 첫머리에 등장했던 점 등 대중이 흥미를 보이는 지점도 있었다. 이정훈 기자는 그것을 친절하게 전달하지 못한 기자로서의 부족한 능력 때문이 아닐까 라고 반성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후배기자들이 국민의 속도, 숨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보도를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 기후위기 시대 언론보도의 문제 진단

1) 기후위기 관련 보도 현황 분석

기후위기 관련 기사의 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20여 년 동안의 기사를 검색해 확인해 보았다. 분석 대상은 2001년 1월1일~2021년 9월28일, 일간지 11개(경향, 국민, 내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와 경제지 7개(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파이낸셜, 한국경제, 헤럴드)였고(2007년 창간한 아주경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라는 3개 키워드를 OR 조건으로 검색한 결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발표 이후인 2020년 7월부터 보도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그 이전까지는 2009년 12월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코펜하겐에서 열렸을 무렵의 기사가 가장 많았는데, 최근 보도량은 그보다 훨씬 많다. 기후정상회의와 P4G가 열린 2021년 4~5월의 보도량은 2012년, 20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1~9월 평균 보도량은 173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764건)보다 127% 증가했다([그래프 1] 참고).

이번에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 중에서 ESG가 포함된 기사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보았다. 왜냐하면 2020년 하반기부터 기업의 ESG 경영 선언이 잇따르고 있으며 최근 증가한 기후위기 기사 중에도 ESG 관련 보도가 포함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후 관련 기사 가운데 AND 조건으로 ESG가 포함된 보도를 분류해본 결과, 2021년 7월에는 총 1735건의 보도 중 346건(20%)이 ESG 관련 기사로 분류되었다. 2021년 5월과 6월에도 각각 17%와 16%의 기사가 ESG 관련 기사였다. 이와 같이 ESG라는 키워드가 기후변화 기사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프 1] 주요 언론사의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관련 보도 양의 변화

최근 1년 동안(2020년 9월1일~2021년 9월28일)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OR 조건) 기사들의 키워드 연관어 언급 순위를 살펴본 결과, 일간지와 경제지 모두 국제 이슈와 관련된 단어(중국, 유럽, 정상회의, 바이든, 영국, 러시아 등)가 많았다. 이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해결이 국제적이라는 특징을 반영한다. 다만 경제지의 기후 기사 연관어 중 ESG가 12위에 랭크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앞서 언급한 ESG 관련 기사의 상당수가 경제지에서 보도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2) 기후위기 관련 보도의 특징 분석

ESG가 어떤 맥락에서 언급됐는지 가능해보고자 위 경제지 기사에서 ESG의 정보원을 추출해 본 결과, 총 1330건의 언급 가운데 경제인(특정 기업의 관계자, 재계 단체나 기업 부설 연구소 및 투자증권 관계자 코멘트는 제외)의 발언이 798건(60%)에 달했다. 경제인의 발언이란 최태원 회장, 신동빈 회장, 최정우 회장, 김승연 회장 등 기업 총수와 간부들이 선언적으로 ESG 경영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사의 비중이 기후 및 ESG 보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디어오늘’이 2021년 6월 네이버에서 검색된 ESG 관련 기사 2만 5000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88%가 보도자료 기반의 기사였고 취재나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획·단독성 기사는 5.7%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는데 그 같은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해외 언론에서는 기업이 ESG 선언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기사를 쓰는지 살펴봤더니,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따지고 동종업계와 비교 분석하는 기사, 선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계속 추적하는 기획 기사가 많았다. 예컨대, 가디언에 실린 “Could Microsoft's climate crisis 'moonshot' plan really work?”라는 기사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가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2050년까지는 1975년 회사가 설립된 이후 배출한 탄소를 모두 없애겠다는 야심찬 선언을 했을 때 이에 대해 차근차근 검증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꿈의 신기술에 의존해 탄소를 흡수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한국 언론들은 기업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단순히 홍보성으로 다루는 기사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국 언론들도 기후변화의 현상만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대안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사를 쓰고는 있는데,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전기요금 관련 기사를 분석해 보았다. 전기요금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비정상적인 요소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데, 매체의 정치 성향에 따라 전기요금 관련 보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9월1일~2021년 9월28일 전기요금 관련 기사를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보수언론(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과 진보언론(경향신문, 한겨레)으로 구분해 연관어 분석을 해보았다. 보수 언론의 경우 전기요금 연관어 3위가 ‘탈원전’이었다. <결국 전기요금 손댄 정부,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온다>, <1인 가구 덮친 탈원전 부메랑>과 같이 ‘원전은 저렴한 발전원’이라는 전제 아래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탓에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는 식으로 주로 보도하고 있었다. 진보언론에서는 5위에 탄소중립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맥락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현실화(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보수언론 연관어 3위인 탈원전이 진보언론 연관어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진보언론 연관어 5위인 탄소중립은 보수언론 연관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수/진보언론이 전기요금을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 보수언론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이라는 기사에 객관성을 부여하겠다면서 통계를 제시했는데, ‘전력통계월보’에서 의도적으로 7월 통계만 가져와서 원전 발전량은 전년보다 감소하고 석탄과 LNG 발전이 늘었다고, 원전을 안 돌리니까 전기요금이 오른 것이라고 단정지어버렸다. 통계까지 있으니 독자 입장에서는 기사의 내용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들은 모두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되고 7월 초에는 점검을 받느라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원전들이 많았다. 실제로 24기 중 8기가 가동이 안 되고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 같은 언론사에서도 기사를 썼다. 7월 중순이 지나면서 점검이 끝나고 순차적으로 다시 가동이 되었는데,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 텐데도 의도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다. 원전 발전 비율은 점점 일정에 따라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고, 1년 치 평균을 내면 사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비율이 거의 똑같다. 그런데도 특정한 달의 통계만 뽑아서 엉터리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왜곡보도 외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해 부정확하게 보도하는 경우도 많다. BAU(Business As Usual)란 흔히 있는 일을 일컫는 관용표현인데, 감축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의미하며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를 ‘BAU 시나리오’라고

부른다.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와 BAU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고 기사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3) 한국 언론이 기후위기 보도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

한국 언론은 지나치게 보도 자료 의존적이며 이념적이어서, 그리고 과학적 이해가 부족해서 기후위기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언론사 차원의 문제로는 출입처 제도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기후위기 이슈는 주로 환경부 출입 기자들이 다룬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내의 현상 위주로 기후변화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제공하는 내용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기후변화 관련 보도가 겹핍기식이 되고 만다. 예컨대, 한국에서 P4G라는 국제 행사가 열릴 때 환경부는 한국이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한국이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했다는 것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언론사에서도 그 정도 수준에서만 기사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도 있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기자들은 출입처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전문성을 쌓기 어렵고 출입처 간에는 장벽이 있다. 언론사 편집국의 경직성도 문제다. 기자는 보도와 관련해 사내 의견을 공유하거나 상의할 사람이 거의 없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자료를 찾고, 혼자 자원을 구해야 한다. 또한, 기자들이 국제 뉴스를 다뤄본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기후위기라는 국제적인 이슈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국 언론의 영세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치 담당 기자는 정치인의 말을 매일매일 옮겨 손쉽게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쓸 수 있다. 반면, 환경 관련 기사를 심층 취재해서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한 판단에서 언론사는 한정된 인력으로 가장 많은 기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 분야의 보도를 하면 광고 수익과 연결이 된다. 이러한 구조를 깨뜨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3) 환경 보건 분야 문제적 보도, 팩트체크

1) 의도적 왜곡보도

환경 보건 분야의 문제적 보도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환경 분야 팩트체크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는 체리피킹(cherry-picking)이라고도 불리는 의도적 왜곡보도 사례다. 보수 성향 매체와 경제지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공격할 때 흔히 관찰된다. 중앙일보는 2021년 2월 12일 “폭염·한파로 전력수요 피크때, 정작 태양광 기여도는 0%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했다. 핵심 주장은 전력수요가 가장 몰리는 시간 대에 태양광 발전량의 비중이 미미하다는 내용이었다. 중앙일보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피크 시간대 발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지난달 1~14일 전력수요가 가장 큰 피크 시간 대 태양광 발전량의 비중은 0.4%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6일부터 내린 폭설로 태양관¹¹⁶⁾ 패널 위에 눈이 쌓이고, 기온 하강으로 태양광의 발전 효율이 떨어지면서 전력 생산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무엇보다 태양광은 전력 수요가 높은 밤 시간대에 ‘무용지물’이었다. 태양광은 지난해 7월 일곱 차례, 지난달 1~14일 두 차례 피크 시간대 발전량 비중이 0%를 기록했는데, 해당 날짜의 피크 시간대는 모두 해가 진 밤 시간대였다. 풍력발전도 지난달 1~14일 0.5%, 지난해 7월 0.2%, 8월 0.3%에 머무는 등 피크 시간 대 전력 공급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전력 수요가 몰리는 피크 시간 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중앙일보는 원자력 전문가인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인용해 “태양광은 야간이나 흐린 날, 눈이 올 때는 전력을 생산할 수 없고 풍력은 풍량이 유동적이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힘들다.”면서 “여름·겨울 밤시간 때에 냉방·난방 전력 수요가 급증하곤 하는데, 이에 맞춰 가동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는 팩트체크를 위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116) 편집자 주: 태양광의 오기인 듯

실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취지와는 다르게 왜곡해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라 보도자료를 따로 내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검증을 위해 필요하니 자료를 달라고 하자 의원실은 “자료를 보내줄 테니 기사를 쓰게 되면 기사 방향을 알려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리고는 끝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선정수 기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일보 보도에 심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태양광 발전은 기업 또는 대학 등 시설 구내의 자가 발전용으로 사용되거나 한국전력과 직접 거래를 맺고 판매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다. 한국전력거래소는 “국내 태양광 설비 중 전력거래소에 계량·등록된 설비는 25%에 불과하며 한전PPA, 자가용 태양광발전량은 취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태양광 발전 전력은 전체 태양광 발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은 자가 소비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피크시간도 바뀌었다. 겨울철 전력 소모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전 10~11시, 오후 17~19시 정도이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이 많이 보급되면서 피크시간도 바뀌었다.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지는 낮 시간대엔 전력거래소를 통해 공급되는 전력량이 줄어든다. 전력 수요를 자가용 태양광 발전이 충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 거래소의 전력 수요량은 낮 시간 대에 하루 중 저점을 찍었다가 저녁 무렵에 높아진다. 태양광 발전은 피크시간 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전력공급원이 아니다. 이미 피크시간을 뒤로 미뤄버릴 만큼 우리나라 전력 공급에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어엿한 발전원인 셈이다. 그러나 중앙일보와 윤영석 의원은 자가 소비되는 태양광 발전 전력은 전력거래소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그리고는 전력거래소에서 하루 중 가장 거래량이 많은 시간을 피크시간대로 산정해 태양광 발전 전력의 비중이 미미하다고 포장했다.

2) 맹목적인 받아쓰기에서 비롯된 오정보(misinformation)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은 박원순 시장 유고 이후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와 조직이 사라졌다는 원자력 단체의 주장을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전달했다. 그러나 팩트체크¹¹⁷⁾ 결과 보도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이 시민을 속이고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었다. 다만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이 출범 당시 내걸었던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에는 미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에너지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당초 서울시가 내세웠던 감축 목표와는 차이가 있었다. 해당 매체가 평소 보수 성향을 드러내 온 인터넷 언론이기 때문에 ‘박원순 때리기’에 나선 보수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아무런 검증 없이 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과학적이지 않은 과학 보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 1월 25일 ‘서울시, 950건 대중교통 코로나19 검체 검사…모두 바이러스 불검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제목대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해봤더니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보도자료를 인용해 다수의 매체가 기사를 내보냈다. 대부분은 ‘대중교통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검출 사례 없어’ 등의 제목을 달았다. KBS는 ‘대중교통에서 감염 안 될까?…검사해보니 코로나바이러스 불검출’이란 제목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KBS는 9시 뉴스 보도에서 앵커 멘트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하시죠? 서울시가 지난 1년간 확진자가 이용한 대중교통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라고 전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발병 이후 모두 950건의 대중교통 환경 시료를 채취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00건은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이용한 대중교통 25곳을 대상으로 소독·방역 조치 후에 환경 검체를 검사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중교통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니 안심하고 타시라.’ 정도 되겠다. 그런데 확진자가 다녀간 뒤 소독을 하고 검체를 채취했다면 바이러스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결

117)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02>

과다. 이 연구는 대중교통 소독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따지는 의미밖에는 찾을 수 없다. 왜 소독 후에 검체를 채취 했을까? 연구원은 보도자료에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이용한 대중교통 25곳을 대상으로 소독·방역 조치 후에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 검체를 검사했다.”라고 밝혔다. 이 말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소독 이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이야기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지하철, 버스, 택시 차량 내부, 지하철 승강장, 대합실 등은 소독 후 환경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차량은 소독 전에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바이러스 불검출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하철과 버스는 운행이 종료되고 차고지에 들어가서 소독을 진행한다. 소독을 마치고 환기를 한 뒤(소독약은 인체에 해로워 꼭 환기를 거쳐야 한다) 다시 운행에 나선다. 승객 중 감염자가 있다면 타고 내리면서 비말을 퍼뜨리거나 손잡이 등에 바이러스를 묻힐 가능성이 있다. 운 없는 다른 승객이 감염자가 내뿜은 비말을 들이마시거나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묻혀놓은 손잡이를 만진 손으로 눈, 코 등 자신의 점막을 비비면 감염 가능성이 생긴다. 운행을 마친 뒤 소독을 하고 나서 차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승객이 감염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대중교통 운영 주체의 노력을 폄하할 의도는 없다. 운행 후 버스 지하철 차량 내를 소독하는 것은 분명히 접촉 전파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일정 정도 낮출 것이다. 그렇지만 소독 이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도록 소독을 꼼꼼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랑거리가 전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 설계는 잘못됐다. 대중교통의 감염 위험에 대한 방역 당국의 입장을 요약하면 “위험성은 인정하지만, 역학조사는 사실상 어렵다.” 정도로 정리된다. 현재 우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하철 이용 도중의 접촉 사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은 30%까지 높아졌다. 이런 이유로 대중교통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결국 대중교통에서의 집단감염은 ‘발생 사례가 없다’고 하기보다는 ‘발생 사례를 찾지 않았다’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코와 입을 완전히 덮고 얼굴 면에 밀착시키도록 잘 착용해야 한다. 버스에 타면 창문을 열어놓는 것도 감염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다. 가급적 혼잡도가 높은 시간대는 피해 이용하고 하차한 뒤 꼭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해 감염 위험을 낮춰야 한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도 이로 인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던 가장 큰 요인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대화 및 통화 자제 등 시민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도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핀 것처럼 수많은 ‘감염경로 미상’인 발병 사례가 속출했고, 대중교통 이용은 역학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대중교통 내 이용객 간 감염 전파가 확인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4) 위험산업과 유사과학도 환경 분야

선정수 기사는 코에 끼우면 코로나19가 예방된다는 코뿔이 방지기구 ‘코고리’의 허위광고 사례를 팩트체크¹¹⁸⁾했다. 해당 업체는 ‘코뿔이 방지기구’로 특허를 낸 뒤 언론사가 주관하는 발명 시상식에서 수상한 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다. 수수료만 부담하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한 미국 FDA 의로기기 등록을 ‘FDA 승인’이라고 허위 광고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내용을 거짓이 홍보하면서 제품을 판매했다. 결국 업체는 의로기기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례는 악덕업자들이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이익을 취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허위광고의 근거로 쓰

118)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99>

인 언론사 발명대상은 참가비만 내면 타낼 수 있는 상이었다. 돈을 받고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방송사들도 있었다. 인터넷 매체와 경제지는 대가를 받고 홍보성 기사를 발행했다. 썩어빠진 언론이 악덕업자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도운 셈이다.

삼성, LG 등 대기업들도 소비자를 우롱하긴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은 제품을 가동하면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다며 판촉에 열을 올렸다. LG전자는 LG퓨리케어360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다. LG 전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 제품에 대해 “트루 토탈케어 필터 시스템을 사용”, “항바이러스/항균 기능으로 더 안전하게”, “바이러스 99.9% 제거”, “유해균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해 홍보했다. 광고 문구에 표기된 내용을 입증하는 실험 내용은 제품 광고 밑 부분에 붙여 놔다. 실험 조건에 관한 설명을 유심히 읽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이 홍보 문구만 보고 ‘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실내 바이러스가 99.9% 제거된다’는 뜻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제시된 실험 조건은 실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바이러스 99.9 % 제거 시험 조건’은 항균 필터와 PET 부직포를 대상으로 실험했다는 사실을 적어 놔다. 항균필터와 PET 부직포에 생쥐 코로나바이러스(mouse hepatitis virus)를 배양하고 18시간이 지난 뒤 바이러스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파악하는 실험이다. 즉, 이 실험은 항균필터에 바이러스가 달라붙은 뒤 18시간이 지났을 때 바이러스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일 뿐이다. 실생활 조건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제거되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홍보 문구는 “바이러스 99.9% 제거”라고 표시했다. 실생활 조건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필터를 통과하기 전후 공기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실험을 해야 한다. 공기청정 면적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 업체들은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표시할 때 부피(m³)가 아닌 면적(m²)을 기준으로 삼는다. 100m²에서 사용하도록 권장되는 제품이라면 실생활 공간 100m² 규모와 동일한 조건의 실험 시설 안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가동 전후의 미생물 수치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큐브 에어’라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에 대해 전기 살균 시스템을 사용해 세균 99%를 살균한다고 광고했다. 살균 플러스 집진 필터는 산화아연 항균 섬유로 바이러스와 세균 증식을 방지한다고도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산화아연 항균 섬유에 대한 설명은 LG전자와 마찬가지로 필터의 항균·항바이러스 성능을 제시한 것이다. 실험 역시 필터에 바이러스와 세균이 달라붙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삼성전자는 전기 살균 시스템에 대해 “정전 커버가 세균에 전기 극성을 부여하고, 살균 커버가 필터에 전기장을 발생시켜 집진 필터에 포집된 세균 99% 살균한다.”고 설명한다. 실험 방법은 “집진 필터에 균을 주입한 후 강풍으로 3시간 동안 작동한 후, 작동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살균율을 계산함.”이라고 적었다. 실험에서 살피는 대상은 집진 필터에 집어넣은 균이 남아있는 정도이다. 실생활 조건과는 역시 다르다. “바이러스·세균 걱정 줄여주는 UV 플러스 안심 살균” 기능에 대한 설명도 있다. 그렇지만 자외선(UV-C)램프를 제품 가장자리에 설치했을 뿐이다. 이 램프로 인해 살균 효과가 발휘되는 부분은 팬 가장자리로 제한적이다. 그런데도 제품 광고는 자외선으로 공기청정기에 드나드는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설명은 “바람이 일어나는 부분은 세균이 달라붙지 않고 날아가기 때문에 세균이 달라붙을 수 있는 가장자리 부분에 UV 램프를 비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UV 램프는 실내 공기 중에 떠도는 미생물을 살균하는 용도가 아닌 셈이다. 종합해보면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제품의 실험 방법도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실생활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제품 가동 전후 생활공간의 공기 중에 함유된 미생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실험하는 방식이 아니다.

2018년 단속 이후 공기청정기 업계의 광고 관행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공정위는 2019년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상품 광고 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제한사항을 표기하거나 별도 홈페이지를 이용해 알리는 관행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형식에 그친 제한사항 표기는 소비자 오인 해소에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사업자는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크기의 글자로 기재해야 하고, 색상 등은 배경과 뚜렷이 구분해야 한다. 또 제한사항은 주된 표시·광고와 가까우면서 소비

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문 전면광고를 하면서 제한사항을 왼쪽 아랫부분 구석에 작은 글씨로 기재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한사항을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문장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또 추가 설명 없이 난해한 법률 용어, 기술 용어 같은 전문 용어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광고에서 ‘EN1822 실험실 검사 결과’라고 표기하면서 ‘EN1822’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시했다. 판매자가 이 지침을 위반한다고 바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공정위는 “제한사항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분명히 알려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들은 홈페이지에 성능 실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99.9%라는 효능을 강조하는 글자는 크고 눈에 잘 띄게 꾸며냈고 실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글자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삼성전자는 토글 스위치를 클릭해야 실험 정보가 표출되도록 설정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지 않으면 실험 조건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주요 성능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가정, 사업장, 사무실 등 실내 공간에 공기청정기만 덩그러니 놔놓는다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해방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방역 당국은 주기적인 환기를 실내 공간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확실한 방법으로 꼽고 있다. 창문을 모두 열고 환기를 시키면 실내의 오염된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 나가면서 감염 위험을 낮춘다. 방역 당국이 환기를 강조하는 것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선 사실상 거리두기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대화, 노래 등을 통해 비말을 퍼뜨리면 바이러스가 비말에 섞여 공기 중으로 퍼진다. 입자가 큰 비말은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작은 입자들은 오래도록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다. 공기 중으로 확산한 입자는 균질화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간 전체로 퍼진다. 따라서 밀폐된 실내에서 거리두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자는 실외보다 실내에서 더 쉽게 사람들 사이에 퍼진다.”라며 “실내에서는 바이러스 입자의 농도가 실외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며, 가벼운 바람도 빠르게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실내에서 환기 완화 전략은 바이러스 입자 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힌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2021. 6. 21.). 실내 공기 중 바이러스 농도가 낮을수록 바이러스 입자가 폐로 흡입될 우려가 적어 감염 위험이 낮아진다는 개념이다. 공기청정기는 필터로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방식과 UV 램프를 비춰 부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방식, 두 가지를 조합한 방식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실제 사용조건과 실험 조건이 현저히 다르므로 실생활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능을 표시하는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불가리스 보도 참사

마시는 요구르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는 남양유업의 선부른 연구 결과 발표를 모든 언론이 받아들였다. 남양유업의 연구는 세포 수준에서 소독약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방법이다. 그러나 업체는 불가리스를 마시면 유효성분이 바이러스의 세포 내 침투를 막아주고,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처럼 발표했다. 전문성 없는 언론 매체들은 별도의 확인 없이 업체의 보도자료 내용을 받아쓰기에 급급했다. 주가가 널뛰고 마트, 편의점 매대의 불가리스가 동나는 등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첫 보도 이후 질병관리청이 남양유업의 실험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한 이후에야 받아쓰기 일색을 탈피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13일 자사의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중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완제품이 H1N1 인플루엔자바이러스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항바이러스 연구 동향 및 발효유의 항바이러스 기능성을 주제로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주관해 진행했다. 박 소장은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H1N1을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효유를 마시면 몸속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코로나19는 곧 종식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생겼다. 남양유업 주가는 요동쳤고, 대형 마트와 편의점에선 불가리스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의 연구는 치명적인 오류를 지니고 있었다. 이날 발표에서 남양유업이 제시한 실험 방식은 ‘수정된(Modified) ASTM E1052-11’ (119)이다. 이 실험 방식은 현탁액에서 살균제의 바이러스에 대한 활성을 평가하는 표준 방식이다. 남양유업은 이 실험법에 대해 “미국의 바이러스 성능평가를 위한 테스트 표준으로 국내 식약처에서도 의료기기용 바이러스 유효성 평가 방법으로 사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선 이 실험법을 의료기기용 살균소독제의 유효성 평가 방법으로 사용한다. 남양유업이 사용한 실험 방법은 이렇다. 세포주로 사용된 원숭이 폐 세포(vero cell)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접종하고 불가리스를 넣은 뒤 일정 시간 경과 후 대조군(불가리스를 넣지 않는 쪽)과 비교해 바이러스가 얼마나 억제됐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실험 결과를 풀어쓰면 이렇다. 세포 현탁액에 배양한 바이러스에 불가리스를 떨어뜨렸더니 77.8% 증식 억제됐다는 내용이다. 남양유업은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실험 설계는 잘못됐다. 마시는 발효유인 불가리스를 바이러스와 접촉시켜 얼마나 억제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마시는 발효유의 기능성을 평가하려면 사람이 마시고 나서 유효성분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평가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전략을 공개했다. 수용체 내 바이러스 침투억제와 바이러스 증식 억제가 주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불가리스 유효성분이 바이러스의 세포 내 부착을 직접 차단(수용체에 대신 부착/ 바이러스에 부착하여 수용체와 접촉 차단)”, “불가리스 유효성분이 바이러스가 이용하는 세포 수용체(HPSGs) 역할을 무력화”, “체내 흡수된 불가리스 유효성분이 IFN(인터페론) 활성화하여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거나 NK세포를 활성화하여 면역력을 증가시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이 공개한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연구 결과’는 이 전략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 단지 개 신장 세포, 원숭이 폐 세포에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대조군과 비교해 얼마나 바이러스를 사멸 또는 억제하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남양유업의 실험은 사실 불가리스를 바이러스에 떨어뜨렸을 때 바이러스가 얼마나 억제되는지를 확인한 간단한 실험일 뿐이다. 유산균 음료는 산성을 나타낸다. 바이러스가 산성 물질에 닿으면 외피가 깨지면서 활성을 잃는다. 발효유를 직접 바이러스에 닿게 하면 산성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사멸된다. 발효유를 마시면 구강과 식도를 지나 위로 내려간다. 구강과 식도에 달라붙어 있는 바이러스 일부를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침입 경로는 호흡기이다. 비강 점막과 상기도가 주된 공격 대상이다. 따라서 발효유를 마신다고 해서 호흡기에 달라붙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량의 발효유가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질식을 유발한다. 제대로 된 실험이라면 불가리스를 사람이 마신 뒤 체내 흡수된 유효성분이 인터페론을 얼마나 활성화하는지, NK성분을 얼마나 활성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이에 따른 바이러스 복제 억제 효과와 면역력 증진 효과를 따져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구강 내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에도 시험 조건은 실제 소비자들의 음용 습관과는 판판이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사멸실험을 했다. 남양유업이 공개한 자료에는 “인플루엔자 H1N1에 대한 항바이러스 테스트 결과 99.999%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됨.”이라고 적혀있다. 시험 조건을 살펴보자. 개의 신장 세포에 H1N1 바이러스를 배양한 뒤 불가리스를 넣는다. 25(±1)도 조건에서 2시간을 보낸 뒤 불가리스를 넣지 않

119) <https://www.astm.org/DATABASE.CART/HISTORICAL/E1052-11.htm>

은 대조군과 비교한다. 불가리스가 바이러스와 접촉해 복제를 막거나 사멸시키는 효능을 보여주는 실험인데 말이 안 된다. 도대체 세상 어떤 사람이 불가리스를 두 시간 동안이나 입에 물고 있던 말인가? 세상 어떤 발효유가 마신 뒤 두 시간 동안 입안에 남아있던 말인가? 실험 온도 25도는 사람의 체온보다 10도 정도 낮은 조건이다. 남양유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성이 담보된 식품(발효유)에 대한 실험 결과로, 1회 음용량(150ml) 및 구강을 통해 음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소·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 “발효유 제품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연구한 것”이라며 연구 의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세포 실험은 시료(불가리스)와 바이러스가 접촉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결과를 입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접촉 시간이 중요하다. 낮은 살균력을 가진 시료라도 오랜 시간 접촉을 시키면 바이러스가 억제 또는 사멸되는 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접촉 시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살균제 등에서 살균력 관련 실험을 할 때는 시료와 실험대상을 얼마나 오래 접촉하게 했는지가 중요하다. 발효유를 마셨을 때 구강과 식도에 얼마나 오래 남아 있는지를 고려했을 때 접촉 시간은 바이러스 사멸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논란이 일자 질병관리청은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한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 얻은 결과이며,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풀어서 말하자면 발효유를 마신다고 체내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남양유업이 공개한 실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렇다. ①인플루엔자 H1N1 바이러스 시료(25도 조건)에 불가리스를 떨어뜨리고 2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99.999% 사멸한다. ②코로나19 바이러스에 불가리스를 떨어뜨린 뒤 일정 시간(얼마인지는 모름)이 지나면 77.78% 억제된다.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이렇다. ①불가리스를 두 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으면 구강에 달라붙어 있던 인플루엔자 H1N1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구강 온도는 25도가 아니고 타액이 섞이는 등 시험 조건과 달라짐) ②얼마나 걸릴지 모르 시간 동안 불가리스를 입에 물고 있으면 구강에 달라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일부 제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에 비춰보면 “1회 음용량(150ml) 및 구강을 통해 음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COVID-19 바이러스 감소/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이라는 남양유업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남양유업의 실험 결과를 인용한 보도를 보고 불가리스 제품을 마셨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제품을 섭취했을 때 일어나는 효과가 아니라 제품을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시킨 뒤 얻어낸 수치이다. 실험 조건도 소비자들의 음용 습관과는 전혀 다르게 설정돼 일상적인 방법으로 불가리스 제품을 마셨을 때 구강 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지도 심각한 의문이다. 그러나 국내 모든 언론은 남양유업의 보도자료를 베끼기에만 급급했다. 일언반구라도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도는 남양유업 심포지엄이 끝난 뒤 3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뤄졌다. 중앙일보에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에 효과” vs “인체 검증 안 해 의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이다(이병준, 2021. 4. 13.). 중앙일보 이병준 기자는 남양유업의 실험결과에 대한 질병청의 입장을 물었고, 질병청은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보도 이후 한국일보 등이 남양유업의 실험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발행했다. 다음날 뉴스톱이 심층적인 분석으로 실험 결과의 허구성을 공박했다. 이후 여러 매체가 남양유업에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결국 보건 당국은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공장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어 홍원식 전 회장 등 경영주 일가 전원이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조사 및 청문회를 수행한 세종시는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등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질병 예방·치료에 효능 인식 우려가 있는 광고)·제4호(거짓·과장된 광고)·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 및 시정명령 대상이다. 엄벌에 처하라는 소비자 여론이 강했지만 세종시는

결국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선택했다. 공장의 생산이 중지되면 낙농가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결국 남양유업은 과징금 8억2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오너일가의 약속은 깔끔히 지켜지지 않았다. 주식 매수인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에 돌입했다. 이를 지켜보는 시장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6) 울릉도, 염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박멸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너무 낮이 뜨겁다. 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보도이다. 기자의 과욕과 무지에서 출발해 게으름과 확인 의무 해태가 더해지고, 언론사의 데스크킹 기능 실종이 어우러져 역사에 기록될 조롱거리가 탄생했다. 인터넷 매체 더팩트는 2020년 11월 30일 “울릉도는 확진자 다녀가도 확진자 안 나와…염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박멸” 조성출(2020. 11. 30.). 울릉도는 확진자 다녀가도 확진자 안 나와... “염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박멸”, 더팩트¹²⁰⁾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했다. 울릉도가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염분이 바이러스를 박멸해 울릉도민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매체는 울릉군청이 캐나다 앨버타 대학 연구진의 소금 코팅 마스크 연구 결과를 인용 발표한 것으로 보도했다. 기사에는 “울릉군은 이 대학 연구진 관계자가 소금을 주성분으로 한 이물질이 바이러스를 둘러싸 굳으면서 살균 효과를 내는 것으로, 즉 바이러스가 염분에 접촉하는 순간 박멸된다는 실험 결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라고 적혀있다. 기사의 골자는 울릉도 주민들의 몸에 해풍이 실어 나르는 염분이 배어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울릉도는 2021년 7월 31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명에 그친다.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확진자 수가 가장 적다. 다른 지역 출신 입도객이 확진자로 밝혀진 사례가 있었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된 울릉 주민 중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더팩트는 “울릉도 마을은 섬 특성상 모두 해안을 끼고 집단을 이루고 있다. 울릉도는 육지 해안과 달리 평지가 없다. 화산섬으로 급하게 마그마가 굳어 해안가는 대부분 비탈진 계곡에 마을이 형성돼 있어 울릉도 주민들은 항상 부는 해풍으로 날리는 염분과 함께 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뉴스 메인에 편집되면서 많이 본 기사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맹렬히 비난 댓글을 퍼부었다. “과학적 근거 없는 기사는 쓰레기다.”, “제주도는 육지냐”, “예전에 입에 소금물 뿌려주던 교회에서 대거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팩트체크 매체들도 기사의 내용을 검증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은 “[팩트체크] 울릉도민은 염분 때문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¹²¹⁾ 기사를 통해, MBC는 “[팩트의 무게] 울릉도에서는 소금기 때문에 코로나 안 걸린다?”¹²²⁾ 기사를 통해 더팩트 보도를 팩트체크했다. 울릉군청은 기사에 언급된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울릉군청은 “기사 내용에 관해 일언반구 언급한 적이 없다.”며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울릉군청이 하지도 않은 발표 내용으로 기사가 작성된 것이다. 연구 내용의 해석도 연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MBC는 이 연구를 주도한 최효직 앨버타대 교수에게 물었다. 최 교수는 “바이러스를 함유한 에어로졸이 소금 필름으로 얇게 코팅된 마스크 표면에 접촉하면 소금 코팅이 국부적으로 녹게 되고 이후 증발이 일어난다.”며 “이 과정에서 재결정화가 일어나 바이러스가 파괴된다.”고 설명했다. 더팩트 보도 내용 중 “바이러스를 둘러싸 굳으면서”, “바이러스가 염분에 접촉하는 순간 박멸”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소금 코팅에 사용한 성분도 바닷물과 성분이 다르고, 바이러스가 소금물에 닿는다고 쉽게 사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호흡기 질환 전파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유를 과학적 연구 결과 없이 염분이 많은 지역 특성에 결부시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짚었다.

120) <http://news.tf.co.kr/read/national/1827954.htm>

121)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6>

122)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002406_29123.html

왜 이런 기사가 나올까? 취재 윤리 실종에서 출발한다. 더팩트는 기사에 정당성과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자체가 하지도 않은 발표를 날조했다. 기자의 전문성 부족과 게으름, 매체의 데스크 능력 실종이 사태를 키웠다. 더팩트는 과학 논문을 인용한 다른 매체의 기사를 재인용 하면서 연구의 취지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했다. 모든 기자가 취재 분야의 전공자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전공자가 상식에 비추어 판단해도 억지스러운 기사를 출고했음에도 더팩트는 이 기사를 걸러내지 못했다. 그만큼 매체의 데스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더팩트는 “울릉군민들은 우리나라 공식 연구기관에도 코로나19와 염분의 역학관계 조사를 의뢰한 뒤 결과가 나오면 마케팅을 통해 울릉도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문장으로 기사를 끝맺었다. 바닷바람에 실려있는 염분이 사람의 몸에 배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한다면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집단감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내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항만 근로자나 선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섬 지역인 제주도에선 7월 31일 현재 17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울릉군 인구는 2020년 현재 9077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적다. 일반인이 울릉도에 접근할 방법은 여객선뿐이다. 인구가 적은 데다가 유입되는 외지인들이 드나드는 경로가 사실상 하나뿐이라 통제가 쉽다는 뜻이다. 울릉군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은 757명 정도다. 인구수에 관광객을 더해 9834명이다. 이 합계를 모수로 10만 명 당 확진자 수를 구하면 30.5명이다. 전국 최저 수준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전남 강진군은 인구 3만4597명에 확진자 8명이 발생해 10만 명 당 확진자 수로 환산하면 23.1명으로 울릉도보다 더 적다. 게다가 2021년 1월 16일 이전까지는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강진군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방역 성공에서 찾았다. 남도일보 “강진군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비결은? (이봉석, 2020.12.16)”, 8면에 따르면 강진군은 민·관이 협력해 강력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읍·면사무소 마을 담당제를 시행했다. 관공서와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 대한 수시 방역, 손소독제와 세정제를 비치했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미리미리 나눠주며 예방수칙을 강조했다. 남도일보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도 코로나19를 방지하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4) 바람직한 환경 보건 보도 방향

(1) 기후위기는 융합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불과 5~6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에 관한 기획물들을 게재하면 ‘불안감을 조성한다.’ ‘먼 미래 일을 어떻게 예단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급격히 변화해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는 곧 그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일이지만 반대로 독자들의 기사에 대한 요구도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모든 기사가 그렇듯 다양한 영역의 이야기를 취재한 뒤 기자 특유의 통찰력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기후 위기는 특히 더 그렇다. 기후위기는 ‘전통적인’ 환경 영역에서만 다루는 주제가 아니다. 기후위기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산업·금융·건물·에너지·교통·IT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일들을 해나간다. 때문에 ‘기후위기=환경’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한정된 취재원들을 만나서는 깊이 있는 기사가 나올 수 없다. 환경을 기반으로 에너지·금융·교통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 전략을 펼쳐야 한다. 이는 곧 기자들의 특징점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각 분야에서 30여 년 넘게 매진해온 이들의 전문성을 융합의 관점으로 꿰어내면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시각으로 다룬 글들은 독자들에게도 차별성 있는 기획물로 인지될 수 있다.

사실 환경은 전 지구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입처 기반으로 나눠진 취재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전통적인 환경 분야 출입처에서 틈을 ‘눈’으로 달라진 출입처를 바라보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 환경 관점으로 달라진 출입처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면 기자에게 큰 강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탈탄소경제를 위한 대전환 시기에는 더 그럴 수 있다. 물론 익숙하지 않은 시각에 낯설어하는 전문가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점이 있다면 그 익숙함을 변화시키는 일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기후위기를 처음 언급한 과학자들도 똑같은 취급을 당한 적이 있으니까 말이다.

(2) 환경 보도를 위한 기자-전문가 플랫폼 구축

개별 언론사 차원에서는 환경 기사보다 정치와 경제 기사를 더 쉽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기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를 해야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야를 넓혀보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언론사들이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인력 배치를 하다 보니, 전체 기자들 가운데 80~90%는 같은 자료를 보고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물론 같은 내용을 듣고도 조금 더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동소이한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으니 인력 낭비이다. 반면 독자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 활동하는 기자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특별취재팀을 따로 운영하는 언론사도 있지만 그 숫자는 너무 부족하다. 기자들에게 기획 기사만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기획기사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기자의 수가 늘어난다면, 보도의 질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싸워가야 한다. 사내에서는 노동조합이 움직이고, 언론사 간에는 노조협의회, 신문협회, 방송협회 차원에서 논의가 많이 이뤄져 다양한 협력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

기후위기 관련 보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해외에는 지속적인 협업을 위한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클라이밋 데스크(CLIMATE DESK)’는 기사를 공유하는 플랫폼인데, 파트너 언론사들의 기후위기 관련 기사를 모아서 다시 공유해 더 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이라는 플랫폼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문가, 박사급 연구진 등을 기자들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자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오면 전문가들이 협업해 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공동 작업을 해주고 있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커버링 클라이밋 나우(Covering Climate Now)’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는 언론 보도가 많아지도록 하는 글로벌 협력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자들의 기사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주기 위해 전문가와 기자들의 브라운백 미팅을 만들어주고, 웨비나도 개최한다. 기사에서 필요한 그래픽은 어떻게 표현하면 보기 좋을지 같이 고민하고 유익한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 한국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기후위기 관련 보도의 질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팩트체크

언론 기사를 접할 때 한눈에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보도들을 가끔 보게 된다. 모든 언론사가 사실 확인보다는 조회 수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보도들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흘러버리는 것이 좋다. 영 찻찻하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해당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가 있는지 확인하자. 팩트체크 미디어에 팩트체크를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확인하고 싶은 기사에 적혀있는 기자 이메일을 통해 직접 기사 내용을 질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장 속 시원한 대답은 들을 수 없을지 몰라도 해당 기자가 향후 기사를 작성할 때 더 신경 써서 꼼꼼히 취재하도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미디어 소비자들이 비판 없이 기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사에 피드백을 보내고 사실과 다른 점을 따져 묻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소비자가 눈을 뜨고 기업을 감시해야 좋은 제품이 나온다. 저널리즘도 마찬가지다. 같은 이슈라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룬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들을 찾아서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요즘은 팩트체크 기사를 적극적으로 쓰는 언론사도 늘고 있어서 정확한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뉴스톱과 같은 팩트체크 전문 언론사, 미디어오늘과 같은 미디어비평 매체의 기사는 비교적 신뢰성이 높으므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면, 원본 자료를 찾아서 직접 확인

하는 것이 좋다. 정부 보도 자료를 일부 언론사에서 왜곡 보도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같은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편파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광고비를 받고 쓴 기사가 아닌지 의심해 보시기 바란다.

팩트체크란 널리 알려진 어떤 진술문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이다. 국내에선 2017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을 비롯해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 인터넷언론들이 팩트체크 코너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언론사의 참여로 운영되는 SNU팩트체크센터¹²³⁾와 시민팩트체커¹²⁴⁾로 특화된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① 팩트체크 원칙과 팩트체크 기사 가이드라인(재단법인 팩트체크넷)

팩트체크넷 시민 참여 팩트체크 원칙은 7가지 큰 항목으로 구성된다. △불편부당성과 공정성 준수 △검증 아이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점 △근거를 통해 결론을 도출 △검증 근거와 자료의 정확하고 투명한 공개 △공개적이고 정직한 수정 원칙 △재원 출처 공개 등이다. 팩트체크 대상은 검증 가능한 근거를 갖춘 발언(또는 진술)로 정한다. 이 중 시급성, 중대성, 공익성을 바탕으로 검증 가능한 근거를 갖춘 발언(또는 진술)로 선정한다. 가정이나 예측은 검증 가능한 근거로 선택할 수 없다. 단, 의견에 사실적 주장을 담고 있어 그 사실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면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근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진술의 출처(발화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검증하고자 하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반대 근거 모두를 확인해야 한다. 팩트체크 결과물(기사,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작성할 때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검증의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검증 근거와 자료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취재원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자세하게 모든 자료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 팩트체크 결과물이 공개된 이후에는 더 강력하거나 최신의 근거를 반영해 열린 마음으로 결과를 수정해야 한다. 검증 과정이나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오류를 인지하는 즉시 이를 밝히고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은 ‘시민팩트체커’ 양성과 활발한 활동을 위해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다음은 팩트체크넷이 만든 ‘팩트체크 순서도’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이 제작했다. 현재 미공개상태이며 곧 일반에 공개된다고 한다.

② 팩트체크 기본원칙(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팩트체크 기본원칙을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신뢰할 만한 소스인지 우선 출처와 저자를 확인해야 한다. 제작 시점도 확인해야 하고,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일단 거짓 정보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유럽위원회의 ‘허위 조작 정보의 온라인 확산을 막기 위한 6가지 원칙’¹²⁵⁾을 소개한다. ①출처 확인(Check the source) ②저자 확인(Check the author) ③컨텐츠 확인(Check the content) ④사진과 동영상 확인(Check the pictures and videos) ⑤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지 확인(See how the story makes you feel) ⑥신고(Report)

③ 허위 정보 대응책(뉴스톱)

123) <https://factcheck.snu.ac.kr/>

124) <https://factchecker.or.kr/>

125) <https://europeancommission.medium.com/stopping-online-disinformation-six-ways-you-can-help-d25489724d45>

대한민국의 유일한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은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내 머리로 생각해보기 뉴스(정보)를 받아들이는 동안 이 정보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2. 정보의 목적을 짐작하기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찾았다면 그 뉴스(정보)는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어졌는지 짐작해본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공포 마케팅’ 상품(서비스) 판매를 위해 공포심을 조장, ‘관심 끌기’ 관심을 유도해 이익 창출(조회수? 광고수익), ‘정치적 목적’ 허위 정보로 대중을 선동 3. 두 개의 정보를 비교하기. 이상한 정보를 발견했다면 그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다른 매체의 정보를 검색해 보길 바란다. 4. 이상한 매체와 기사 리스트 만들어 보기. 뉴스(정보)를 접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나만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특정 매체 또는 특정 기사가 어떤 목적을 갖고 편향된 정보를 발신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정보 이용자로서 우리는 편향성이 가득한 매체(기자)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의심 정보에 들일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반대로 믿을 수 있는 매체(기자)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④ 환경법의 기본원칙

환경 분야의 팩트체크 및 취재 보도에 있어서 환경법의 기본원칙을 알아두면 좋다. 현대 환경법의 기본 원리로는 사전 예방(사전 배려)의 원칙, 원인자 책임 원칙, 협동(협력)의 원칙 등이 꼽힌다. 이 원칙들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국가 지자체·사업자·국민의 책무와 의무)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에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환경오염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오염 또는 훼손을 일으킨 주체가 원상 회복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가는 환경오염과 훼손에서 비롯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하며 국민과 기업은 이에 협력할 의무를 지닌다. 이런 틀 안에서 환경 관련 이슈를 파악하면 무엇을 다뤄야하는지 또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다.

(4) 선배 기자의 좋은 기사를 참고한다.

환경 문제는 한국 사회가 성장해 온 시간만큼 역사가 있다. 그래서 기사도 많다. 사회적으로 매우 큰 논란이 된 환경문제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아닌 경우라도 조금씩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환경 기자들이 고민하며 기록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선배들의 고민을 엿보며 진짜 환경 기자로 성장하는 시간은 꽤 고통스러웠지만 스스로에게도, 기사를 읽는 시민들에게도 보람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곧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3. 결론

이 연구는 환경 보건 분야 보도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기자들이 오보와 왜곡 보도의 원인을 파악해 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보도 방향을 탐색해보았다. 우선 환경 보건 분야 보도의 문제는 재난보도로서의 그 영향력에 비해, 파편화된 보도로 대중에게 「재난보도준칙」의 내용을 이행하기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일부는 공포를 조장하고 심지어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도 자료에 의존적인 출입처 제도의 한계이다.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사의 영세성과도 연관이 있다. 손쉽게 화제성이 높은 기사를 많이 생산해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심층적인 취재가 필요한 환경·보건 보도는 언론사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나마 출입처 역시 자주 바뀌게 되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든다. 그렇다면, 전문성만 확보된

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실현이 가능할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둘째, 대중의 인식과의 괴리이다. 이 괴리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환경·보건 문제의 본질적인 사실들은 ‘뉴스’라는 틀과 생리 안에서 소화하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은 매우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고, 그 해결방안 역시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면과 방송 시간의 한계에 부딪쳐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모든 재난 보도의 문제가 그렇듯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를 제외하고 뉴스의 화제성이 떨어져 문제 해결까지의 지난한 보도 과정을 기다려주기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형성된 인식이 ‘중국발 미세먼지 프레임’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손쉽게 원인을 지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셋째, 의도적, 비의도적 왜곡보도 ‘가짜뉴스’의 등장이다. 이는 취재 윤리가 실종되어 가는 현재 언론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다. 기자의 전문성 부족과 게으름, 매체의 데스크 능력 실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고, 재생산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 보도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환경·보건 분야의 보도가 마케팅과 정치에 이용되는 의도적 왜곡보도이다.

다음은 보건 환경 분야 바람직한 보도 방향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융합의 관점으로 접근하자. 기후위기를 비롯하여, 미세먼지, 환경 보건의 문제는 원인과 해결이 복합적이며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속보와 단신, 대중의 인식 등을 고려한 보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편화된 보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작과 접근 방법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보도의 영역을 출입처에 국한하기보다 같은 사안과 보도 자료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둘째, 기자와 전문가의 플랫폼을 구축하자. 환경 보건 전문기자의 수는 매우 적다. 환경·보건에 관심이 있어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기자들을 위해 ‘클라이밋 데스크(CLIMATE DESK)¹²⁶⁾’,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¹²⁷⁾’, ‘커버링 클라이밋 나우(Covering Climate Now)¹²⁸⁾’처럼 국내에도 기자와 전문가를 연결하여 고품질의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환경·보건뿐 아니라 과학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보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의심되는 보도는 팩트체크를 하자. 언론사 보도의 전제는 확인된 사실이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기자와 독자 모두 의도적, 비의도적 왜곡 보도인 ‘가짜뉴스’를 구별하기 위해 기본적인 팩트체크를 통해 기사를 확인하고 보도하도록 한다. 넷째, 선배의 좋은 기사를 참고한다. 환경 기자들이 다뤄본 역사와 같은 기사를 보면서 환경 보건 보도의 맥락을 짚고, 프레임을 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전·현직 기자들이 실제 보건 환경 보도를 하면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 언론 현장의 경험과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이 실무적인 함의를 더한다. 기자들 스스로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여 정리했다는 점에서는 재난 보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학술 논문에 비해 이론적인 기반이나 형식적인 부분이 미비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환경·보건 분야 보도를 시작하는 기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완성하고, 후속 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부분을 보충한다면 연구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126) www.climatedesk.org

127) www.climatecentral.org

128) www.coveringclimatenow.org

참고 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2019. 2. 1).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지침, Retrieved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69
- 김영욱·이현승·장유진·이혜진(2015a). 언론은 미세먼지 위험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한국언론학보, 59(2), 121-154.
- 김영욱·이현승·이혜진·장유진 (2015b).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언론보도가 수용자의 인식과 의견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1.
- 김선호·고홍석 (2021. 5.), 협업 저널리즘, 기후변화를 에버그린 의제로 만든다. <신문과 방송>, 5월호.
- 김슬기라 (2021. 8.). <Why South Korean Media Perform Poorly in Climate Change News Production(왜 한국 미디어는 기후변화 뉴스 보도에 취약한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준 (2021. 4. 13).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에 효과” vs “인체 검증 안 해 의문”. <중앙일보>, Retrieved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4271>
- 이준웅·김성희 (2018). 미세먼지 재해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62(4), 125-158.
- 조훈혁 (2021. 7. 13). ESG 광풍 속 기사 2만5000건 쏟아졌다... 88%가 보도자료. <미디어오늘>, Retrieved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75>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2021. 1. 25). 서울시, 950건 대중교통 코로나19 검체 검사...모두 바이러스 불검출, Retrieved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2527
- 손해용 (2021. 2. 12). 폭염·한파로 전력수요 피크매, 정작 태양광 기여도는 0%대. <중앙일보>, Retrieved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90932#home>
- 한국기자협회 (2014. 9. 16) 재난보도준칙. Retrieved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0
- 미상 (2020. 4. 22). ‘지구의 날’ 언론사들이 기후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방식. <동아시아인스>, Retrieved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6149>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1. 6. 21). Ventilation in Buildings, Retrieved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ventilation.html>
- Oscar Schwartz (2020. 4. 23.). Could Microsoft’s climate crisis ‘moonshot’ plan really work?. <The Guardian>, Retrieved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0/apr/23/microsoft-climate-crisis-moonshot-plan>

E4P(Energy transition for Peace)

본 연구모임은 왜 남북 에너지 협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찰하며 에너지전환을 한반도로 확장하여 살펴본다. 각자의 전공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발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현황 정보 공유를 넘어 개인이 생각하는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프로그램 혹은 사업을 가상으로 구성해본다. 또한 한반도 재생에너지 협력의 중요성과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여 콘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대중과 공유하는 등 연구모임에서의 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지식과 아이디어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총 9회 연구모임 진행)

팀장 김은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팀원 고도연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팀원 성재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팀원 윤슬기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팀원 이효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북한의 재생에너지 국제개발협력 SWOT 분석

UNDP 사업을 중심으로

I. 서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발생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분야인 에너지 부문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각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 지역 예외지역이라고 볼 수 없다. 한국 정부는 2020년 12월 30일 탄소중립 저탄소발전전략을 유엔에 제출했고, 2021년 탄소중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소 배출량 감소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 역시 2021년 유엔에 자발적 이행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제출하여 에너지 부문 전환을 위한 국가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제출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Intended Contribution; NDC)를 통해서도 감축 목표를 제시하여 적극 국제사회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에너지 추이를 살펴보면 에너지 공급량이 급격히 감소한 2015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가 2018년 이후 다시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석탄은 여전히 북한에서 주요한 에너지원이다. 북한의 이러한 에너지 활용은 대도시 및 공업 단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소외지역이며, 북한 역시도 2021년 제출한 VNR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 보고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있어 남북이 처한 상황에 주목하고 향후 한반도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담아낼 수 있을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분석하였다. 북한 <재생에너지법>(2013)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 타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한다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북한 역시도 남북 에너지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에너지 분야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하지만 점차 강화되어온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이 직접적으로 에너지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제협력 또한 연구 내용에 포함시켰으며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북한의 재생에너지 현황 및 북한 자연 자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북한 재생에너지 현황 및 남북 에너지 협력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존에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 풍력 자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풍력 발전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서 조망하였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북한 에너지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SDGs 목표에서 북한 에너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SDGs 각 목표들과 에너지 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ODA 측면에서 북한 에너지 협력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재생에너지 지원이 ODA를 통해 가능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타 지역에서 제시되었던 슈퍼 그리드의 논의, 슈퍼 그리드의 장점 등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지역의 슈퍼 그리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동아시아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슈퍼 그리드를 어떻게 적용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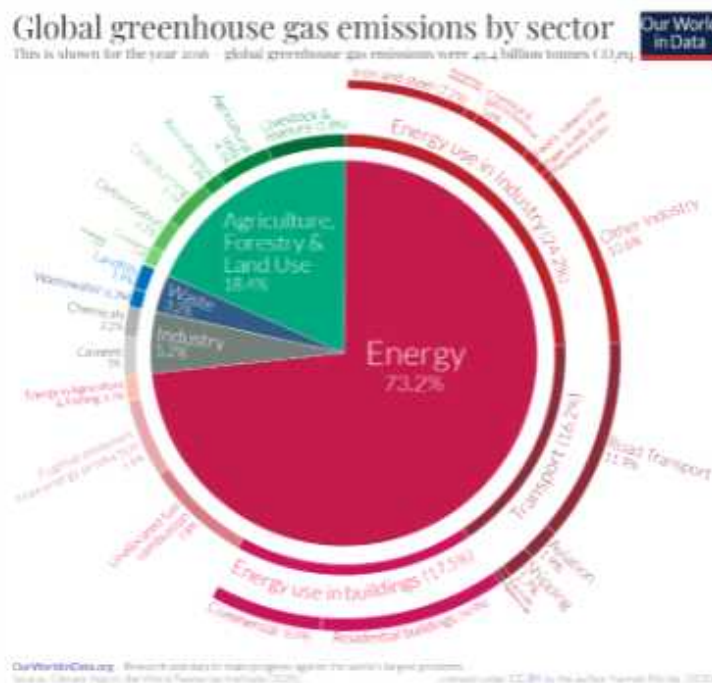
있을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기 뉴노멀을 조명하였다. 생활 습관의 변화, 기술의 변화 등 우리 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남북 협력 또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뉴노멀 시대의 남북 에너지 협력에 주목하여 어떠한 협력이 이뤄져야 할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II. 북한 재생에너지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2.1 남북 재생에너지 현황 및 남북 재생에너지 연구 분석

기후변화 시대 탄소배출 감소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으며, 2050 탄소중립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었다. 그 중 에너지 분야는 탄소 배출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OurWorldData는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분야가 1위로 73.2%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OurWorldData, 2020). 실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생산하느냐가 중요하게 되었으며,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정책이 되었다.

〈그림 1. ourworlddata〉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여러 국가들이 노력을 하는 가운데, 북한의 에너지 현황은 어떠하며 재생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북한 경제와 산업구조는 어떠하며 에너지 공급에 있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북한의 경제 역사 및 현황을 간략히 보고 북한의 에너지 현황 및 재생에너지 도입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남북 에너지 협력에서 에너지 전환을 기반으로 한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1.1 남한 에너지 현황과 계획

한국은 화석연료에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집약적인 분야에 집중적인 산업구조를 가진다. 탄소 집약적 국내 산업·사회 시스템에서 국내에는 산업화의 필수적인 투입요소가 될 만한 부존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1차 에너지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남한의 에너지 전환은 산업구조적인 문제로 우선은 2차 에너지, 즉 전력원의 구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실제 남한의 발전량에서 화력발전에 의존도는 높게 나타난다. 석탄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합으로만 전체 전력 공급의 약 70%를 충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공식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서는 기존의 발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성장을 전제로 경제성을 최우선시한 나머지 환경 친화성 내지 안전성에 대한 배려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주된 문제로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제껏 석탄과 원자력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8차 기본계획에서는 노후 원자력 및 석탄 발전소를 점차적으로 폐쇄해 나가면서 가스발전 및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확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1.2 남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기초

당분간 기후위기는 주된 범지구적 문제이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¹²⁹⁾은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구적 장기목표를 설정하였으며,¹³⁰⁾ 2050년 감축목표인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유엔에 제출할 것을 각국에 요청하였다.¹³¹⁾ 주요 당사국은 2050년 인접 시점에 탄소중립 달성을 공표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20년 10월 28일’ ‘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동년 12월 30일 이를 명시한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탄소중립 경로에서 기본적으로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발전 등 현존하는 시대착오적인 기반 설비로부터 신속한 탈피가 필요하며(McCauley et al., 2019), 중심 논점은 경성에너지에서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 이하 재생에너지)에 기반하는 체계로의 전환(energy transition; 이하 ‘에너지 전환’)이다.¹³²⁾ 이에 따라 한국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국내에서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미세먼지,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환경사회적 문제에 대한 완화 방안으로 거론된다. 복합적인 인식 제고 요인으로 인해 전환에 대한 범국가적 동의 수준은 높지만, 실제 지역 확산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피해, 공정성 문제, 님비 현상으로 설명되는 기회주의 등 다양한 마찰이 수반되는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합의점이 일반화된 지지에 비해 저점에서 수렴하는 ‘사회적 격차’가 유발된다. 실제로 국내 거주지 주변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에 대한 낮은 수용성 문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지자체의 규제 강화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된 장벽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129)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2015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에서 채택된 조약

130) 산업화 이전 대비 2°C 온난화는 기후위기의 임계점(tipping point)으로 간주되며 최근 1.5°C 목표도 부상하고 있다.

131)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1.5°C 이내로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특별보고서에 명시하였다.

132)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사회 모든 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거의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력에너지와 열에너지 등 대부분의 에너지는 전기에너지에서 변환되어야 하고, 그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될 필요가 있다.

2.2 북한 재생에너지 현황 및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2.2.1. 북한 경제의 역사 : 중첩된 위기와 투쟁의 역사

북한이 처음부터 개발도상국으로 가난을 겪었던 것은 아니다. 해방 이후 북한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위기를 겪었고 전쟁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일제 강점기 산업 기반이 북한 지역에 있어 공업 발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였다. 1980년대 말까지 2~4%의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 침체가 심화되었다. 특히 1995년은 북한에서도 ‘큰물피해’라고 부르며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원조를 요청했을 정도로 북한에서도 큰 위기 상황이었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한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플러스 성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김정은 집권 시기 이후 경제성장이 이뤄졌으나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2017~2018년 기간에 마이너스 3~4%의 성장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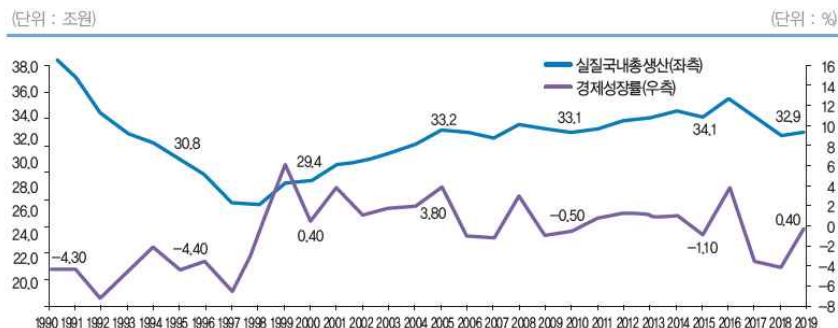
1945년 해방 후 김일성은 여러 산업 시설을 국유화하고 토지를 몰수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한국 전쟁으로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자체적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하면서 구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를 받아 공업 부문 재건을 추진하였다. 1954~56년(전후복구 3개년계획)에는 중공업 우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투자액의 80% 이상을 중공업 부문에 투자하였다.

1960년대 중소 갈등이 시작되면서 위기를 느꼈던 북한은 중공업 발전과 동시에 농업과 경공업을 동시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자력갱생과 ‘주체경제’가 등장하게 된 것도 이 시기이다. 1970년대 기술발전 및 설비 현대화를 추구했던 북한은 동서양 데탕트를 기회로 서방 세계의 자본을 유입하여 경제 발전을 꾀하였다. 하지만 오일쇼크 등 북한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차관 및 연불수입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채무불이행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KDB산업은행, 2020).

1980년대 북한경제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중공업 분야 중심의 북한 경제는 대외 여건의 악화와 맞물려 경제적으로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에 자극을 받아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했던 북한은 이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제한적으로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1984년부터 추진했던 합영사업을 통해 북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공동 투자, 공동 경영 등을 통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합영기업의 대상은 대부분 재일교포인 조총련 계열이었으며 이들의 투자는 이후 회수되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 1991년부터는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무역지대(경제특구)로 정하여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역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양문수, 2001).

〈그림 2. 북한 거시경제의 변화 추이(KDB산업은행, 2020)〉



주 : 실질국내총생산(GDP)은 2015년 한국 불변가격기준이며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성장률임
자료 : 한국은행

1990년대는 북한에 있어 위기의 시기였다. 소련 및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대외 여건이 악화되어 그 동안 구상무역을 해왔던 북한 무역에 타격을 입었다. 북한과 거래를 해왔던 소련, 중국 등의 국가도 구상무역을 중단하고 실제 가격을 중심으로 무역을 요구하였고 이 역시도 북한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취약성과 대외 여건의 악화는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 지방에서부터 배급제는 중단되기 시작하였다. 북한 식량난에 의한 인구손실은 학자마다 다르나 적게는 15만 명부터 많게는 300만 명까지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박경숙, 2012).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진 북한 주민들은 공장에 있는 물건들, 전선, 부품들을 가져다가 팔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던 공장들이 증가하였고, 과거 부업을 권장하기 위해 조직했던 8.3 노동자들은 경제난 이후 8.3 노동자로 등록한 후 태동하기 시작한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당국에서는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하던 시기를 되새기며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으로 이 기간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했고,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표 1. 북한 식량난에 따른 인구손실 분석(박경숙, 2012)〉

추정기간	연구자		이석 (2004a, 2004b)	Goodkind & West(2001)	좋은벗들 (1998)
	1993~1998	1998~2008	1994~2000	1995~2000	1995~1998
추정자료	1993, 2008년 센서스, 새터민 조사, 증언, 공식통계		1993년 센서스, 1998년, 2002년 북한어린이영양 실태조사	중국기근시 사망률 및 98년 북한어린이 실태조사자료	식량난민의 조사자료
추정치	881,862명				
출산	14,870명	271,275명			
사망	342,639명	150,331명	25~69만 명 63~112만 명	60~100만 명	300만 명
이주	102,746명				

2000년에는 남북 화해 모드로 인해 개성공단이 열리고 남북경협이 추진되는 등 여러 경제교류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2008년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피격되는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의 5.24 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이 중단되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북핵 실험 및 미사일 대응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켰다.

남북관계가 부침에 있는 와중에도 북한은 점진적인 개혁을 실시해왔다. 2002년 북한은 경제관리 개선조치(7.1 조치)를 통해 분권화, 가격현실화, 화폐임금제 등을 실시하였다(김연철, 2002). 2012년 집권한 김정은은 집권 후 김정일 시기에 강조했던 선군 정치에서 군사와 경제를 함께 추진하는 병진전략(핵·경제 병진노선)을 내세웠다. 장마당을 통해 확대되었던 시장은 2003년 공식화시켰고 2018년 기준 약 109개의 시장이 새로 생겼거나 확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변가격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시장을 확대하며 경제개발구(13개의 경제개발구와 특수경제지대 설치)를 지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5.30 담화, 2014)을 발표하여 기업들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였다(조동호, 2021; 이승욱, 2016). 코로나 이전에는 관광 산업을 강조하면서 원산-갈마 지역에 대규모 해안 관광 지구 건설을 추진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산업 정책은 여전히 중공업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문에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실용주의적인 산업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초 하에 에너지 부문 자

원 투입, 설비 안정화와 현대화 역량 확충,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개발과 설비 투자에 우선하는 특징을 보인다. 과학기술을 중시하면서 건설 부문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이석기 외, 2018).

2.2.2. 북한의 산업과 에너지 보급 현황

북한 산업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노동력 활용, 수력, 석탄, 철광석 등을 이용한 중화학공업 위주의 전략으로 2차 산업이 발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1990년 광업 및 제조업 비중은 한국에 비해 10%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생산시설 노후화 및 무역의 어려움으로 인해 2차 산업 비중은 1990년 40.8%에서 2000년 25.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0년대에는 설비의 보수, 현대화 등을 추진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시기 들어 기계 및 화학 분야 강화 및 경공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만성적인 전력공급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 과거 화력 및 수력 발전소 위주로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추었으나 대부분의 시설은 노후화되었고, 국가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표 2. 북한 발전설비용량 추이(KDB산업은행, 2020)_(단위: 천KW,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력	4,942	4,487	3,918	3,958	3,960	4,260	4,283	4,293	4,467	4,701	4,761	4,790
비중	62.1	59.9	56.6	56.8	57.2	59.0	59.1	59.2	60.1	61.4	61.7	58.8
화력	3,010	3,010	3,010	3,010	2,960	2,960	2,960	2,960	2,960	2,960	2,960	3,360
비중	37.9	40.1	43.4	43.2	42.8	41.0	40.9	40.8	39.9	38.6	38.3	41.2
합계	7,952	7,497	6,928	6,968	6,920	7,220	7,243	7,253	7,427	7,661	7,721	8,150

주 : 2009년도 발전설비 용량 감소는 북한 수력발전소 용량 재평가에 근거한 것임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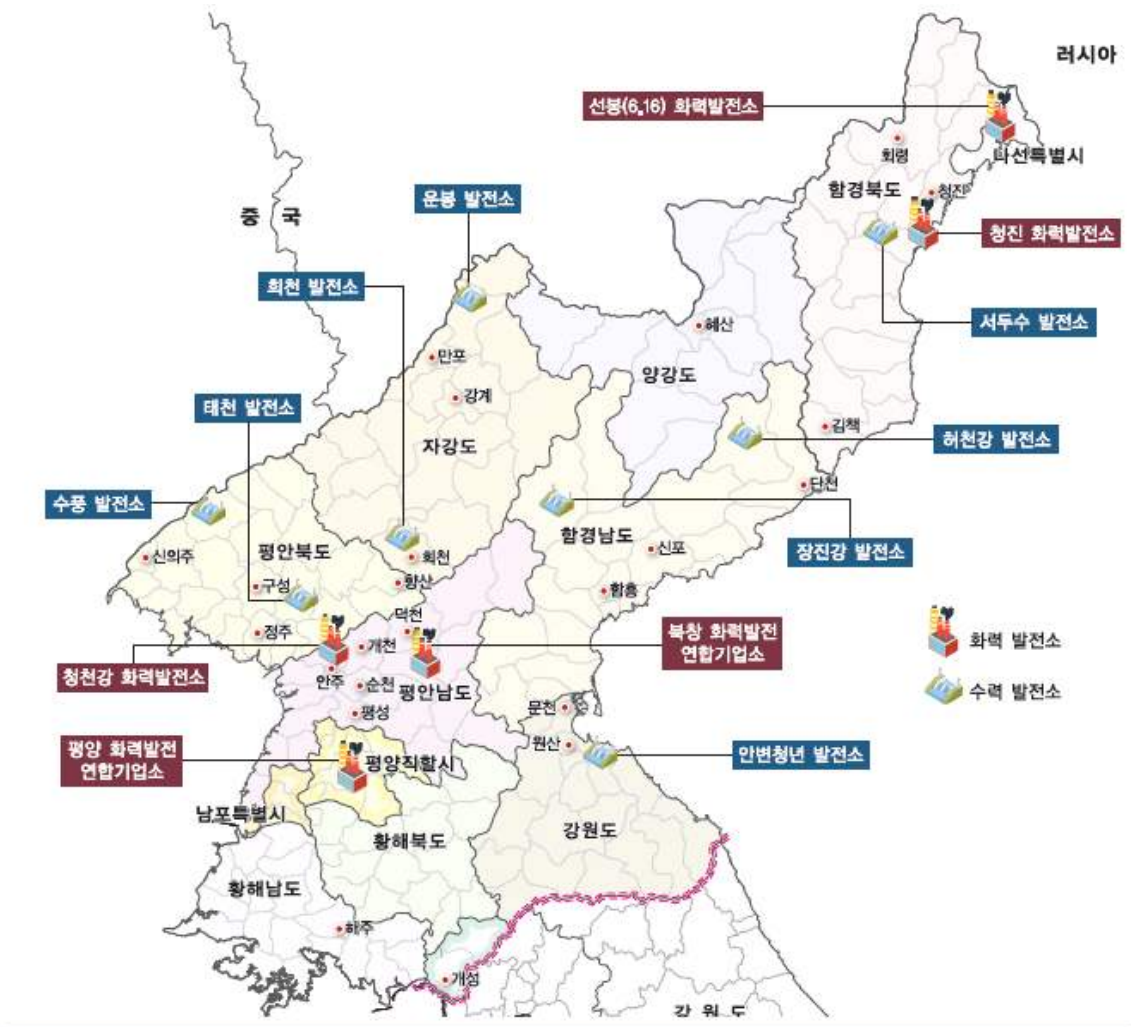
〈표 3. 북한 발전량 추이(KDB산업은행, 2020)_(단위: 억KWh,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력	133	141	125	134	132	135	139	130	100	128	119	128
비중	56.0	55.0	53.0	57.0	63.0	62.8	62.9	60.2	52.6	53.6	50.6	51.4
화력	103	114	110	103	79	80	82	86	90	111	116	121
비중	44.0	45.0	47.0	43.0	37.0	37.2	37.1	39.8	47.4	46.4	49.4	48.6
합계	236	255	235	237	211	215	221	216	190	239	235	249

자료 : 통계청

북한의 발전 설비 용량을 보면 수력 발전의 설비 용량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설비 용량에 비해 발전량은 상당히 낮으며 2018년 기준 수력 발전 설비 이용률은 30.5%, 화력발전은 41.1% 수준이다. 발전 설비 용량은 남한의 6.8% 수준이며(북한 815.0만kW, 한국 11,909.2만kW) 북한의 총발전량은 한국에 대비해서 4.4% 수준이다(북한 249억kWh, 한국 5,706억kWh).

〈그림 3. 주요 발전소 위치(KDB산업은행, 2020)〉



북한이 발전 설비 용량에 비해 실제 발전량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주요 발전소들이 일제 강점기에 건설되었고, 이에 대한 개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대규모 발전 시설은 대도시 및 주요 기업소 근처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에너지 보급에 대해서는 중 소형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발전소 건설은 수력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2000년 이후 10여 개의 중대형발전소를 건설하였다(1지역 1발전소 정책으로 중소형발전소가 225개로 전체(263개)의 85%를 차지한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8개의 중대형 발전소와 여러 개의 공장화력발전소가 있다. 대부분 열병합 형식으로 구소련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신규 화력발전소는 건설되지 않았다.

북한의 주요 발전소 중 일제 강점기 건설된 발전소로 수풍발전소(신의주 근처), 운봉발전소(건설 추진, 해방

후 재건설, 중국과 절반을 나눠 전력 공급), 장자강발전소(해방 후 완공, 자강도 지역 전력 공급), 강계청년발전소(해방 후 완공, 북한 전역에 전력 공급), 허천강발전소(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에 전력 공급), 장진강발전소(흥남일대, 청진, 원산에 전력 공급), 부령발전소, 부전강발전소(흥남일대, 문천, 원산에 전력 공급)가 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수력발전소 건설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발전소의 경우 개보수 및 시설 확대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였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중국과 소련의 원조로 건설된 발전소가 많으며 신규 건설은 1970-80년대 추진되었고 90년대 이후에는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 시설의 보수 및 현대화를 위주로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소 위치는 탄광 지역 또는 주요 공업 지역에 위치해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1960년대부터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서 에너지원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본격적으로는 2009년 이후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유럽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신재생에너지 연수를 받도록 하였고 2014년 기존 시설을 확대 개편하여 국가과학원 산하에 '자연에너지연구소'를 설립,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법의 경우 2013년에 채택되었으며 에너지원으로 "태양열 및 빛, 풍력, 지열, 생물질, 해양에너지"를 꼽고 있다(재생에너지법, 제2조). 정책적으로 풍력발전 비중 확대(10% 이상), 황해남도 강령군에 '국제녹색모범기지' 특구 지정, 김책공대 및 여러 연구소에서 풍력발전기, 모터 개발 등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KDB산업은행, 2020).

〈그림 4. 북한 자연에너지 개발 계획(통일뉴스, 2016)〉



〈그림 4〉는 북한 자연에너지연구소 전시실에 게시되어 있는 계획표로 각 에너지원 당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지를 표기하고 있다. 북한은 최종적으로 2044년까지 자연에너지를 통한 발전능력을 500만 kW로 확대하고

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통일뉴스, 2016).

이러한 목표 하에 태양광, 태양열, 풍력, 조력 등의 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평양, 신의주, 개성 등 주요 도시와 류원신발공장, 대성산שמ물공장 등 공장에 설비가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풍력발전의 경우는 산간 지역 협동농장, 군부대, 중계소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력발전의 경우 1978년 평안남도 대안군 서해안에 대안조력발전소를 완공하여 운영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도 황해남도 웅진군, 강령군 청수도, 벽성군 등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KDB산업은행, 2020).

〈그림 5. 북한연구학회 학술회의 발표자료1(김은진, 2021)〉



〈그림 6. 북한연구학회 학술회의 발표자료2(김은진, 2021)〉



〈그림 5〉와 〈그림 6〉은 로동신문의 재생에너지 관련 보도를 정리한 그림이다. 〈그림 5〉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전역에 재생에너지가 보급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 태양열,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었으며 이를 적용한 지역은 평양, 개성 등 대도시와 공장, 학교 등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

하여 전력을 보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보급현황도 마찬가지로이며 공장 및 지방도 재생에너지가 보급되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전력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먼저 수력발전소의 경우 첫째, 계절적 영향(갈수기 또는 우기)으로 전력공급이 불안정하였고, 둘째, 삼림 파괴로 인해 토양이 쓸려 내려가 수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발전량 감소, 50% 내외 수준), 셋째, 대부분의 발전소가 일제 강점기 및 소련의 지원으로 이뤄져 시설이 낙후되었다는 문제, 무리한 속도전(70일 전투와 같은 속도전)으로 부실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해볼 수 있다.

북한 화력 발전소의 경우 첫째, 석탄 연소에 따른 고장률의 증가(저질탄 사용으로 열효율도 감소), 둘째, 증기를 활용한 발전방식으로 설비 신뢰도가 낮은 점, 셋째, 혼소율(재료 혼합율)이 낮은 점(유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석탄을 활용, ‘액상 재처리 방법’ 등을 활용하고자 하나 설계상 온도상승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음), 넷째, 발전 설비 중 56%가 1970년대 건설되어 설비가 노후화된 점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수력과 화력 발전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송배전에도 문제가 있다. 첫째, ‘1지역 1발전소’ 원칙으로 수요지를 중심으로 한 근교 송전이 주로 이뤄지고 있어 지역별로 분리된 망을 운영, 고압 송전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둘째, 재료와 설비가 부족하다. 설비의 보수유지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송배전으로 인한 손실은 20~30%로 추정된다(한국은 3.5%). 셋째, 일부 송배전 전선이 공중가설이 아닌 지하매설로 이뤄져 있고(누전으로 인한 전력손실) 지하화된 군수공장을 운영하면서(지상공장에 비해 전력이 30% 정도 추가로 소요) 전력소모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병렬배전 방식(하나의 배전선 본선에 많은 지선을 연결)을 이용하여 전압변동이 크다고 보인다. 다섯째, 민간과 산업 전력계통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공장 및 기업소 전력 부족 시 민간 공급이 중단되고는 한다. 여섯째, 주민들이 전력손실이 많은 전열등을 사용하고 있다. 일곱째, 잉여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양수발전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수급량 조정이 어렵다(KDB산업은행, 2020).

2.2.3. 북한 재생에너지 현황

김정은 집권 이후 2년차인 2013년 북한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공식 천명하고 핵무력 뿐만 아니라 6·28 조치, 5·30담화 등 대내개혁정책, 그리고 경제개발구 대외개방정책 등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경제강국, 혹은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나용우, 2019, 재인용).

북한은 예로부터 일관되게 경제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하였다. 북한은 경제적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해 2016년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향후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에너지문제 해결을 그 중심에 놓을 것이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전력산업을 인민경제 선행부문으로 매우 중시하고 있다. 실제로 김일성은 ‘전기는 산업의 쌀’로, 김정일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제일 절실한 문제는 전력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의 『전력법』 제2조, 제3조는 “전력은 인민경제의 기본 동력이며, 전력시설 건설은 나라의 동력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전력공급률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김윤성 et al., 2018, 재인용). 북한의 주요 동력자원은 수력·화력이며, 특히 수력에 의한 전력생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2019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8,150 MW(남한 125,338 MW)로 수력(58.8%)과 화력(41.2%) 중심의 구조가 예로부터 지속되고 있다. 같은 해 실제 발전량은 총 238억 kWh로(남한 5,630억 kWh) 수력이 46.2%의 발전비율을 차지하며 화력은 53.8%이다(통계청, 2020)

북한의 에너지 정책은 특유의 자력갱생 원칙에 기반하여 펼쳐지고 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이른바 ‘체취공

업' 중에서도 석탄을 "공업의 식량, 주체공업의 연료이자 원료"로 규정해 왔는데, 이러한 석탄의 자리매김은 경제에 있어서 '자립' 혹은 '자력갱생'을 최우선시 하는 '주체사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 부존자원 중 하나인 석탄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수력 이용의 확대를 통해 수입 에너지에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북한 에너지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통적인 정책 기조의 결과는 현재 북한의 에너지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며, 외부로부터의 수입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남한의 상황과는 매우 대조되는 것이다 (나용우, 2019, 재인용).

1990년대 이후 외부에서 석유 수입이 어려워지고 석탄발전소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른 화석연료 발전의 한계, 전력망의 노후화, 발전용량 부족 등으로 전력 부족 문제가 상존한다. 북한은 송배전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송전과정에서 상당한 전력이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송배전 손실률은 지역에 따라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력망은 단기간에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하여도 최종수요자에게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반시설이 이와 같이 열악하다면 실질적으로는 전국적인 송배전 운영이 어려워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별 수력발전소 건설을 독려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에 러시아와 협력하여 풍력발전소 건설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윤성 외, 2018).¹³³⁾

수력발전의 계절적 한계, 화력발전의 석탄생산량 감소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한 발전능력 감소로 인해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동력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재생에너지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전력난 해소방안으로 강조하고 있다(나용우, 2019).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경제발전5개년전략에서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대형 수력발전소의 건설과 화력 발전소에 대한 석탄공급 확대만으로는 전력공급을 충분히 확충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기술과 비해 전력의 소규모 발전이 가능하고 전력수요지 인근에 건설하는 것이 용이하며, 대규모 인프라망이 없어도 필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김윤성 외, 2018).

2.2.4. 북한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계획

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수력자원 개발에 매우 적극적으로 국토 전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력발전소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2016년 기준 4.7GW의 용량을 보유하며 각지에서 대·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이 독려되고 있다. 북한 언론에서는 함경남도 단천시에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수력발전을 비롯해 강원도와 자강도, 함경북도, 황해북도에서 다양한 대소규모 수력발전소들의 개보수 관련 보도가 나타난다. 조수력 부문에서는 시·군 단위로 중소형 조수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자체 에너지 수급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황남 웅진군, 1996년 황남 강령과 벽성군에서 소형 조수력 발전소 건설이 완공되었으며 발전용량은 100~300kW 수준으로 추정된다. 평안북도에는 국가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조류 발전기가 방조제 배수문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도 찾을 수 있다(김윤성 외, 2018, 재인용).

풍력발전에서는 전력수요의 15%를 담당하기 위한 장기목표를 세우고 중규모 발전용 풍력발전기 개발과 국제 교류 확대를 꾀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소형 풍력발전기 설치가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600W, 10kW,

133) 자력갱생을 기반으로 하는 전력공급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와 함께 에너지사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북한 당국은 송배전 시설의 현대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재정능력의 부족으로 이를 위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실질적인 통합전력망 구축을 통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전력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북한 전력공업성이 전국적인 통합전력관리체계를 개발하였으며, 2017년에는 국가통합전력 관리체계 완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100kW급 풍력발전기를 소개하고 있다. 황해남도 은천군에서는 바람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풍력에 의한 전기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군 전체에 1,640여대의 풍력발전 기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김윤성 et al., 2018). 평양국제신기술경제정보센터(PIINTEC)는 2005년 세계풍력에너지 협회(WWEA)에 가입하고, 2004년부터 꾸준히 세계풍력에너지대회에 참가하는 등 기술확충 우선사업으로 선정하여 외국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7월 러시아 극동 최대 전력회사인 라오동부에너지시스템(RAOEnergySystemofEast) 와 공동으로 연해주와 나선시에 40MW급 풍력발전단지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나용우, 2019, 재인용). 이 계획에 따르면, 2016년, 2017년 북러 접경지역 2곳과 나선경제특구 2곳 등 모두 4곳에 40MW의 풍력단지를 개발하고 생산한 모든 전기를 북한에 판매하기로 하였다(나용우, 2019, 재인용). 이를 통해 북한이 외국계 자본과 연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빙현지 & 이석기, 2017).

바이오발전에서는 나무, 농업부산물을 직접 태워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메탄가스를 이용하는 기술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2000년 벃겨가스 개발 이후 2002년 벃겨가스 발전소 건설, 2005년 메탄가스 이용한 조명등 <광명 2002-가>를 도입하기도 했다. 동시에, 농촌 가구의 취사, 조명을 위한 메탄가스 이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경술 & 신정수, 2019). 북한 당국은 농업지역에서는 축산, 임업, 에너지 생산이 연계된 '고리형순환농업' 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북측 강원도 세포군 일대에서는 대규모의 축산농장과 바이오매스 이용 시설을 연계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하였다(김윤성 외, 2018, 재인용).

현재 북한의 태양광 산업은 자체생산의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태양광/태양열 관련 제품을 생산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평양에서 관련한 산업 박람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보도와 조사를 종합해 보면 북한은 '나선경제특구'와 평양과학단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태양광전지판 생산 공정을 건설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한다.

북한의 부족한 전기 문제를 해소하고자 각 세대 차원에서 경유발전기를 따로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대북제재 이후 석유류 수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한사항이 있는 방편이며,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세대가 약 10만호에 이를 정도로 기술 도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에너지 및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도시 아파트의 약 10~15%가 우리식 '베란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있고 설치된 패널 대부분은 중국산 수입품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북한 생산제품일 것으로 보고 있다(김윤성 외, 2018, 재인용)

즉 자체적인 수력개발을 독려하는 가운데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풍력발전기가 운영되고 있고 태양광과 조수력 발전이 시도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풍력 발전기 등 일부 분야에서 개발성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아직 재생에너지 개발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가 재생에너지 개발을 강조함에 따라 구매력이 있는 주민들은 중국 등에서 태양광 패널을 수입·설치하여 전력을 생산/사용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등도 정부 정책에 따라 태양광에너지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지열이나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는 주택이나 공공기관 등 대규모 시설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양어장 등 소규모 시설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나용우, 201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하여 2044년 재생에너지 설비 5GW 보급을 목표로 하는데, 이밖에도 지열, 생물질에너지, 메탄수화물, 수소 공급계획이 나타나 있으며 재생 에너지와 연계한 '자연에너지 자립주택', 탄소제로 도시 계획 등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살펴보면 북한은 보유한 자체적 기술 수준이나 자본은 논외로 하더라도 미래 도시계획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자립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빙현지 & 이석기, 2017). 이러한 북한의 에너지/전력부문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재생에너지 투자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전문 연구 인력의 부족, 통합적 전력 관리 역량 부재 등 문제는 북한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타국과의 협력을 필수적인 요소로 보게 한다.

2.2.5. 북한 재생에너지 협력사업

유엔기구는 모든 형태의 원조에 있어 수원국의 재정 투명성, 모니터링 결과의 공유, 사업성 보고에 대한 책무를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는 대북 사업에도 적용되는 바이다. 이에 따라, 예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협력 사업에 있어 북한의 국제협력 양상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북한 당국의 책무성 혹은 협력 대상으로서의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논하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기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협력 사업은 다양한 유형과 통로를 경유하여 이뤄졌다. 문경연 외(2018)는 유엔기구의 대북지원을 진행 경과와 지원금액 등을 상황과 결부하여, 인도적 지원과 사회인프라 부문 지원에 초점을 두고,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박경석 외(2011)는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한 북한 산림부문 지원/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국제기구의 사업 참여는 비정치성, 재원조달 용이성 등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경술(2014)은 인간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북한 주민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자력갱생형 성장을 추구하는 북한의 상황과 결부하여, 탄광 현대화 수요로 인한 협력이 필요함을 개진하였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d Company) 형태의 협력을, 경제적 타당성 평가 자료와 결합하여, 제안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경희(2019)는 유니세프의 대북 수자원 협력이 가지는 다중심 거버넌스 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중심 거버넌스와 북한사회의 경직된 수직적 의사결정 체계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부 조직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북한에 미래 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개진하였다. 임을출(2013)은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속된 고립이 글로벌 거버넌스인 MDGs 협력에 의존하게 만들었으며, 이와 관련된 UNDP와의 협력을 통해 MDGs의 국제규범 및 원칙이 북한에 수용되는 내용을 기본계획을 통해 파악하고, 북한 상황과 결부된 협력 우선사항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존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지원/협력 방안을 살펴본 연구는 그 내용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고 대부분 인도주의지원과 같은 전통적 논의에 국한되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거론되는 주요한 논의 맥락인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에 초점을 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워 향후 생각해 볼 수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에 참고할 만한 자료는 많지 않아 보인다.

2.2.6 에너지 분야 남북 협력 방안

에너지 전환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 분야 남북협력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중앙 차원에서 전력 보급이 어려운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에너지 기본권 개념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내외적으로 남북 에너지 협력에 대한 설득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수력 발전 중심의 북한 전력 상황에서 노후화된 수력 발전 설비 개보수 및 지방의 소규모 수력발전 설비 지원 역시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전력 문제는 발전원 확보 및 시설 확충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력망, 잉여 전력의 저장 시설 등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며 관리하는 시스템 역시 확충될 필요가 있다. 전력망 개선의 경우 향후 남북 그리드를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분절화되며 지하매설 중심으로 건설된 송전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력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에 대한 협력도 향후 남북협력에 있어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지방 및 지방의 협동농장, 기업소 등에 도입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밤 시간의

잉여 전력을 충전하는 배터리 설비는 각 지역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에너지 효율도 에너지 기본권 향상을 위한 전략에 포함시켜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력발전 중심의 북한에 양수발전 역시도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밤에 생산된 전기를 통해 물을 높은 곳으로 올려두었다가 낮에 전력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의 양수발전으로 전기를 저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투데이에너지, 2020). 전기 수요가 적은 밤 시간에 생산된 전기를 양수발전을 통해 고지대로 이동시키고 이를 다시 낮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전기 저장 기술이 지역 곳곳에 도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전기 절약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에너지 분야 남북협력은 에너지 전환을 기저로 하여 추진하되 현재와 같이 단절된 형태의 개별적인 전력망이 아닌, 남북이 연결되는 동북아시아 그리드를 구상하며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며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에너지 기본권 개념이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는데 있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되어야 하며, 군수 공업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 대북 제재로 인한 협력 제한으로 인해 어느 정도까지의 에너지 협력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여부 또한 판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을 기반으로 한 남북 에너지 협력이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키며 온도 상승을 막고 에너지 기본권에서 소외되었던 북한 주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에 더해 한국 내부의 남남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한반도 그리드를 구상하여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필요하다. 에너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분단으로 인한 상실을 극복하며 미래가치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미래세대의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3 북한 풍력 자원 개발의 중요성

2.3.1. 북한의 재생에너지 관련 현황

북한의 대외경제교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부문이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은 대 중국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상황이며, 이것은 향후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적 문제가 중국에 예측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남북경협 시 한국 기업의 북한 진출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북한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통해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다양한 자연에너지 기원천을 적극 리용하여 에네르기수요를 자체로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언급했으며, 민주조선 2017년 12월 30일 기사에서는 “화석연료에 계속 의존할 경우 화석연료가 적게 매장되어 있거나 고갈된 국가들은 에너지 문제에 있어 다른 나라에 예측되게 되어있다.” 라며 기존의 석탄, 석유, 가뭄으로 인해 고갈된 수력 자원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에서는 2013년도에 제정된 재생에너지관리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토 환경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북한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전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재생에너지 개발의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상정된다. 따라서 북한 사회 내에서는 자연에너지를 적극 이용하는 것을 균중적 운동으로 활발히 벌이고 있다.

평양에 위치한 ‘자연에너지 연구소’에서는 200여 명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풍력과 태양열 등 다양

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4년도에 이 법에 근거한 자연에너지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중 풍력 분야에 대해 집중하여 살펴보면 2034년에는 해상풍력자원도를 작성하고, 2044년에는 전체 전력 수요의 15%를 풍력에너지로 활용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점을 통해 북한 내 풍력에너지 자원 개발이 매우 중요한 정책 요소로 상정됨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은 수력자원 개발에 매우 적극적이며 태양광발전 시설 또한 상업시설과 더불어 일반 가정 내에서도 그 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바람이 많이 부는 황해남도 은천군의 경우 풍력개발이 집중돼 있고, 군 전체에 1600여개의 풍력발전기가 가동 중이다. 아래 표는 해외 지원을 통해 실행된 풍력 협력 사업 내역으로,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015년도에 러시아 전력회사 라오 동부 에너지 시스템과 북러 접경지역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착공하고 이때 생산된 전력을 북한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이다.

〈표 4. 국제단체의 북한 재생에너지 협력 사업(김윤성 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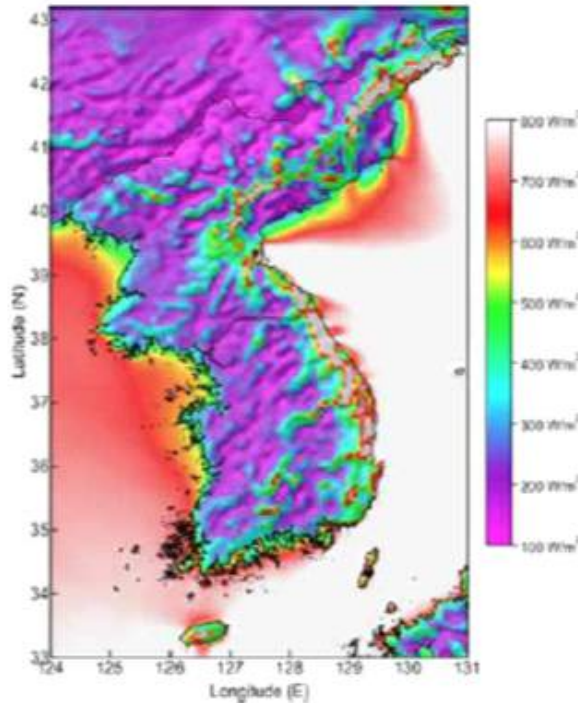
협력 주체	내용
노틸러스연구소	1998년 은천구에 7기의 풍력발전기 설치
스위스 NGO 캠퍼스퍼어크리스투스 (Campusfurchristus)	2000년대 초 에서 황해북도 지역에 30W, 2kW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각각 1대, 3대 운영
UNDP	2011년 은천군과 평안북도 철산군에 소형풍력발전기 설치
러시아 전력회사 라오 동부 에너지 시스템	2016~2017년경 북러 접경지역에 총 40MW 규모의 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착공한 것으로 보임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노후화된 전력망, 인력 및 기술과 개발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북한의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개발로는 북한의 전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일한 해결방안은 북한 사회로의 대규모 자본 투자가 도입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사이언스타임즈, 2019). 따라서 러시아 전력회사 사례 외의 다른 사례들과 같이 인도적 차원에서 몇 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계약을 통해 보다 대규모의 단지 형성을 통해 전력난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 활용될 것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3.2. 북한 해상풍력 투자개발의 중요성

북한은 분산형 전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풍력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북한은 평양과 평안북도, 양강도 등에 중형급인 100~200kW급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력 계통의 불안전성과 선로 손실 가능성의 문제로 인해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 글로벌 풍력발전 회사의 선진화된 기술과 자본이 투입되어 대형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북한의 에너지 공급안정화를 꾀할 수 있음과 동시에 투자 및 개발 회사의 이윤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사이언스타임즈, 2019).

<그림 7. 북한 풍향 지도(한국에너지기술원, 2017)>



<사진: 북한의 풍력 잠재량 평가지도, 붉은색일수록 풍량이 좋음>

또한, 북한에서 풍력발전이 가능한 지역의 발전 가능 용량은 남한 대비 1.7배 수준으로 잠재성이 매우 높고, 특히 강령특구 등을 포함한 서해안 지역은 남서풍이 안정적으로 불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에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육상풍력에 비해 해상풍력은 육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있어 더욱 용이한 측면이 있다(인더스트리뉴스, 2018).

끝으로 사업지역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강령 국제 특색 시범구는 2013년 5월 29일 제정된 ‘경제개발구법’에 의거하여 「강령 국제 녹색 시범구」로 지정되었으며,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에 적합한 지역으로 분류된다(북방경제인연합회, 2018).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서해안에 속해 풍질(風質)이 좋은 해상 지역으로 꼽힌다. 서해안은 25m이내의 수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기에 최적의 해상이며 생산도니 에너지를 북한 내륙지역으로 보급하기에도 용이하다.

<그림 8. 북한 서해안 해상풍력 예상 지역(한국도로공사, 2017)>



<사진: 북한의 서해안 해상지역>

따라서, 서해안 지역에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리적 이점과 거버넌스 차원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북한의 정책과 개발 수요에 부합하다는 측면에서 사업자와 지역 간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투자 및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3.3. 투자 및 개발유도 전략

구체적인 투자 및 개발유도 전략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북한 현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발전소 건설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리와 관리방법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발전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또한, 북한 정부와 협력하여 해상 풍력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전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북한 내 풍력 산업 관련 DB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 및 개발 사업 시 필요한 현황 및 이해관계자, 인력 풀 등을 데이터를 통해 관리하고, 노하우를 축적한다면 발생하는 변수에 따라 새로운 전략을 수립 시 용이하게 활용될 것이다.

세 번째는 사업 기획 혹은 착수 단계에서 국제기구를 의사소통의 매개로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 경제는 정치구조 특성 상 투자관련 규제변화나 투자 제한요소 등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요소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과 정부 및 공공기관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얻고 협의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부경진, 2015). 북한의 재생에너지법 주요내용 중 하나가 ‘국제기구들과의 교류 및 협조 강화’라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협의를 진행한다면 북한 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시키고 추진하는 데 있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방현지·이석기, 2017).

2.3.4. 기대효과

첫째, 서해안에 위치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된다면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해양관광자원으로도 육성할 수 있으며 사업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도에서 풍력발전기 하단부에 어망을 설치한 것과 같이 수중양식을 통해 북한의 또다른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고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

둘째, 남북경협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인접한 지역에서 풍력발전에 대한 외부 투자와 개발의 장이 열린다면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에 유리하고, 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협력과 재생가능한 한반도 에너지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석탄화력발전을 통해 에너지의 상당량을 공급하는 북한 내에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진다면 탄소 배출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교역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I. SDGs와 ODA,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3.1 SDGs 달성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국제사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무한 경쟁 속에서 국가 간 빈

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조정하고 선도할 역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었다. 세계평화와 안전, 경제와 사회 개발을 도모하며 인권보호를 위해 일하는 유엔은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규범이자 공동목표를 설정하였다. 이것이 지속가능개발목표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다. 국제사회는 SDGs 이행이 경제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그리고 환경보호를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SDGs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와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194개 나라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 결과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이행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가 되었고 국제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SDGs는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 그리고 232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4년마다 SDG VNR 제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6년 SDG VNR를 유엔 고위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에 제출하였고 북한은 2021년에 제출하였다. 북한 당국은 2016년 ‘UN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 합의하였고 북한은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개발협력을 요청하였다(김기섭 et al., 2020). 유엔 전략계획 2017-2021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북한도 참가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의미한다(송철중 et al., 2020).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에 분명한 중장기적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대북지원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공여국과 국제기구가 함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발협력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입각한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SDGs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정부 및 NGO, 기업들이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남북한의 SDGs 이행 개요를 살펴보고 남북 에너지 협력을 통한 SDGs 달성 방안과 시사점 도출을 목표로 한다.

3.1.1. 남북한 SDGs 이행 개요

유엔 SDGs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서 우리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18년 2월 국가지속가능목표(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K-SDG)를 구축을 알렸고 12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수립하면서 ‘사회·경제·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4대 목표인 건강한 국토환경, 통합된 안심사회, 포용적 혁신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를 설정하고 14개의 전략과 50개의 이행과제를 구성하였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유엔 SDGs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내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K-SDGs는 5대 전략, 17개의 목표, 122개의 세부목표 그리고, 214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북한은 2016년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장기 경제계획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고 이 전략에서 유엔의 SDGs와 연계하고자 하였다(김기섭 et al., 2020). 북한은 유엔 SDGs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17개의 목표, 95개의 세부목표 그리고, 132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DPRK VNR, 2021).

3.1.2. SDG 7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 보장’의 중요성과 다른 SDGs와의 상호의존성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양적성장을 위한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며 자원 사용량의 증가를 예견한다. 북한에게 있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활용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공급 개선과 확대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은

경제성장을 위한 선결조건이 전력증산이라고 강조했고,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정책은 전력 문제 해결이라고 언급하였다. SDGs를 구성하는 17개의 목표 중 남북에너지 협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SDGs는 SDG 7 ‘모두가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접근’이다. SDG 7은 SDGs 중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경제·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빈곤, 기아, 성평등, 교육 등 다른 SDGs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2021년 7월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자발적 보고서(VNR)을 살펴보면 에너지를 다루는 SDG 7이 다른 SDGs들과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조진희·강우철, 2020). 다음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SDG 2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의 자족 실현’의 경우 북한 당국은 새 천년개발목표(MDG) 시절부터 매년 7백만 톤의 곡물생산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달성된 적은 없었다. 2018년 곡물 생산량은 4백95만 톤이었으며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북한 당국은 목표달성 실패의 이유로 자연재해, 농업물품의 부족 그리고 더딘 농업의 기계화를 지목하였다. 2019년 농업기술의 과학화와 생산성 향상 노력의 결과 10년의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생산량인 6백65만 톤을 생산했지만 지속적인 폭풍과 홍수로 2020년에는 5백52만 톤 정도의 생산량에 그치고 말았다. 북한 정부는 곡물 생산량 향상의 대책으로 농업의 기계화 추진, 품종 개량, 양어장과 온실재배 확대, 땅 개간을 통한 농사부지 확보, 그리고 곡물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전력 생산량(단위: 억)은 1990년 277kWh, 2000년 194kWh, 2010년 237kWh, 2019년 238kWh로 30년째 제자리이며 위와 같이 제시된 해결 방안들은 상당히 에너지 집약적인 것을 알 수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한 대북 지원 단체 대표는 ‘전력이 부족해 공장은 물론이고 양어장, 종묘장, 비닐하우스 운영도 상당 부분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정은은 2021년 2월 2차 전원 회의에서 ‘주요 공장, 기업소들과 농업부문에서는 전기를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줄 것을 애타게 요구하고 있으며 탄광, 광산들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단되는 애로사항이 존재한다’라고 언급했다(동아일보, 2021). 북한 당국은 위와 같은 방안을 실현하려면 전력증산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북한 농어촌 지역의 산재된 유휴부지를 활용한 풍력, 태양광발전으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이 현실성 있다. 북한의 양곡연도를 분석하면 전체 생산량의 15~20% 정도는 수확 후 탈곡·저장·가공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서 손실량이 발생한다고 한다(김관호, 2018). 남북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장치를 보급 받아 에너지난을 완화할 수 있다면 북한 당국의 곡물 생산량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곧 SDG 2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의 자족 실현’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SDG 3 ‘건강한 삶 보장과 모두를 위한 웰빙 증진’의 경우 북한은 완전한 무상의료시스템을 1960년에 갖추었고 행정구역별 의료시스템에 접근가능하며 실력 있는 의료진 양성을 위한 훈련기관이 갖추어져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신 의료시설의 건립 또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가속화되었는데 평양종합병원 건립 프로젝트가 실시되었으며 옥류어린이 병원, 류경 안과 및 치과 병원이 건립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진 역량 부족과 약품과 의료기기 생산 기지의 낮은 생산기술 그리고 필수약품에 대한 부족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약품, 백신 그리고 의료기기의 질은 WHO GMP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농촌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백신은 북한당국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협력을 통해서 백신을 공급받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SDG 3 달성을 위해서 물질적, 기술적 기반을 다지는 방안을 취할 것이라고 하였다. 시·도별로 거점 인민종합병원 건립과 의약품 생산기지의 현대화를 완성하겠다고 하였다. 또 다른 해결방안으로는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언급하였는데 원격의료, 응급의료체계 그리고 의료서비스 관리 체계의 도입을 선언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을 체계화시키겠다고 했다(DPRK VNR, 2021). 하지만 2019년에 출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남북 보건복지의 공적 의제 분석과 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는 현재

북한에는 백신이 부족해 영유아 대상 필수 면역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전염병 예방 및 관리가 열악한 수준이며 전력난으로 인해서 의료장비의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탈북한 내과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응급 환자가 들어오면 배전부에 부탁해 몇 시간만 전력을 부탁해야하며’, ‘영상 2~6도씨에 보관해야 하는 백신을 30도씨가 넘는 온도에 방치하게 돼 효과가 없다.’ 라고 증언하였다. 한국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에서는 냉장고가 없어서 아이스박스를 이용하며 대학병원에서도 전력이 끊겨 초음파 검사가 힘들다고 한다. 또한 난방시설이 없는 병원이 많아 입원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한다(한국일보, 2019). 이처럼 에너지난은 보건 의료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SDG 3 달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단순한 인도적인 의약품 지원에서 나아가 남북에너지 협력을 통해 전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 SDG 3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병원과 재생에너지 기술 협업의 긍정적인 예로 2018년 서울시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볼 수 있다. 이 병원은 수 열에너지 공급체계를 도입하여 매년 약 3.9만 mWh의 에너지 저감을 달성하였고 매년 약 1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 환경개선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경우 친환경 에너지 도입을 통해서 에너지사용절감을 추진하였는데 태양광과 같은 마이크로 그리드 전력 시스템을 병원에 통합하는 동시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하였다(데일리 메디, 2020). 우리나라 병원에서 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같이 북한도 송배전망의 보수 및 신규 설치할 여력은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마이크로 그리드 전력시스템을 적극 사용하는 것이 SDG 3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은 대기오염과 사망률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지만 대기에서 초미세먼지인 PM2.5의 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과 청정연료와 연소기술의 도입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SDG 3 달성에 있어서 대기오염은 중요한 세부사항이다. 북한 당국은 초미세먼지 PM2.5의 지속적인 증가는 확인이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WTO-세계보건기구가 2017년 발표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인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10만 명당 238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발표 하였다. 북한의 공기오염의 주요원인은 주 에너지원인 석탄과 갈탄 연소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다. 실제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 활동이 활발한 평양과 평안남북도의 경우 미세먼지(PM 10)과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안남도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에너지부문의 대기오염이 높았다. 이처럼 북한의 에너지 소비량이 우리나라의 1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는 남북한이 유사하다는 결론이다. 이것은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에너지원 중에서도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석탄, 갈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의 일반 가정에서도 난방과 취사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데 품질이 낮은 석탄과 나무 등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산화탄소 농도의 경우 남한보다 북한의 배출량이 1.5~4배 정도 높다고 한다. 사망률이 높은 것은 실내에서 취사할 때 쓰는 연료가 나무, 석탄같이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완전연소율이 낮기 때문이다. 2012년 유엔환경 계획 자료에 의하면 북한 가정에서는 주로 석탄과 나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 지역은 석탄 63%, 나무 28%, 농촌의 경우 나무 77%, 석탄이 19%이다. 이는 결국 산림의 황폐화로 이어진다. 나무를 주 연료로 사용하면 대기오염을 정화할 나무가 줄어들고 홍수의 피해 또한 증가한다. 김성일 교수에 의하면 1년에 6만 헥타르, 서울시 크기만큼의 숲이 북한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는 폐와 혈액에 유입돼 호흡기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사망률도 증가시킨다(BBC NEWS, 2019). 민생에너지 소비부문은 남북 에너지협력의 구도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야이며 북한 당국은 발전,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에너지 대책에 집중되었으며 가정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문으로 방치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19)은 2011년 우리나라에 정착한 350명의 탈북주민들의 민생부문 에너지 소비 실태를 조사·분석 한 결과에서도 가정부문 연료 배급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며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자체 조달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전체 조달되는 주요 연료는 나무의 비중이 높고, 무연탄, 갈탄 순이다. 남북 에너지협력을 통해 마이크로 그리드 전력 체계를

농촌 지역에 보급한다면 비효율적인 연료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북한의 SDG 3 달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며 산림황폐화 방지 또한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SDG 5 ‘성평등, 여성의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새터민이 전해준 북한 에너지 실태에서 인터뷰 내용은 ‘1990년대 이후 온수 사용은 불가능하고, 주택단열이 안되며, 병원과 학교에 갈 때도 직접 땀감을 가져왔으며, 식량이 있는 경우에도 취사 연료가 없어서 한 번에 여러 끼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윤순진, 2008). 또한 김춘이 환경운동 연합 사무총장은 ‘북한 여성들이 가정에서 조리 기구로 인한 화상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인권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전기신문, 2021).

북한의 SDG 4 ‘양질의 교육’의 경우 12년의 보편적 무상의무교육을 완성하였고 소학교 입학 전 과정인 유치원 1년의 등록률은 97.1%를 달성하였다. 15세와 24세 사이의 문맹률은 0%를 달성하였다. 북한 당국은 교육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개의 대학들의 실험실과 교실을 현대식으로 재건축하였고 평양교대 또한 높은 수준의 교사 양성을 위해서 재건축되었다.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을 병행하면서 시간제 교육(part-time study)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원격교육 시스템 도입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이 쉬워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육환경을 국제수준의 교육 발전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교육 내용의 혁신성이 낮고 교수법도 문제이다. 또한 고등 교육에 있어서 농촌과 도시에 격차가 크다. 북한 당국은 해결 방안으로 교육 체계의 개선을 언급하면서 원격교육 시스템의 확대를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 당국은 교육부에서 ‘물질적 그리고 기술적 개발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속적인 투자와 재생에너지 전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를 건설, 재건 그리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평양시의 경우, 도시 전반에 친환경 에너지기술을 도입하여 태양광 발전, 태양열, 풍력발전의 이용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편의시설, 학교, 가정, 미래 상점 등 공공기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한다(DPRK VNR, 2021). 북한은 일부 교육 기관에서 태양에너지로 전력 수요를 충당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 예로 평안남도 남포시의 남포 제1중학교에서는 컴퓨터 등 전자 장비를 교실에 설치하면서 필요한 전력 수요를 태양에너지로 충당한다고 한다(빙현지·이석기, 2017). 원격교육의 법제화와 확대 계획 그리고 시간제 교육과 같은 유연한 교육 방식의 도입은 더 많은 주민들의 교육 기회 참여가 예상된다. 따라서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원격교육은 에너지 집약적인 교육 방식인데 남북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이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SDG 4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은 모든 SDGs 중 SDG 7 ‘신뢰, 지속가능한 최신 에너지로의 접근성 제고’ 즉 에너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해결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였다. SDG 7은 5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하여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롭게 지속가능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한다. 저탄소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를 추진하면서 SDG 13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대응’ 달성에 기여하며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 기후 체제를 이행하는 역할을 한다(조진희·강우철, 2020).

북한의 에너지관리법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에너지 공급체계가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자국 내 부존자원에 의존하는 폐쇄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각한 에너지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북제재의 강화로 원유에 대한 수입과 석탄의 수출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외화 고갈로 인한 발전설비 노후화, 송배변전과 급전 시스템의 낙후화가 고조되고 있으며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서 2018년 북한 주민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0.57TOE로 1990년 1.2TOE보다 약 47% 감소한 수준이다(구갑우, 2020).

소중규모의 전력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수준의 평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가 활발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5년 이후 전력생산 시설이 늘어났으며 신규 수력댐들이 건설되었고, 규모는 총

950MW에 육박한다. 기술의 진보로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 용량이 늘어났고 전국 전력망에 대한 통합관리체계가 신설 되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LED 전등이 사업장과 가정에 보급되었다. 하지만 폭염과 가뭄은 2016년 이후 지속되었고 전력 생산에 문제를 일으켰다. 북한 당국은 시골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전기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북한당국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력 공급량을 늘리고 효율개선을 이루겠다고 하였지만 북한의 전력생산은 줄어들었다. 이는 계절적인 요인과 이상기후의 영향이 컸으며 일인당 발전량 또한 인구의 증가로 낮아졌다. 북한 당국은 청정 취사 기술 및 청정 연료 사용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낮은 수치이며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가정에서 전기나 가스 중앙 열공급 시스템을 사용하여 난방과 취사를 하는 비율은 2014년 도심에서 12.4%였다. 농촌에서는 난방이 0.5%였으며 취사는 2.4%에 불과했다. 청정연료 및 취사기술을 사용하는 인구도 2017년 국가적으로 10.3%에 불과한데, 도시는 15.8% 그리고 농촌은 1.5%로 집계되었다. 도심 대부분의 가정들은 석탄을 사용해서 취사와 난방을 하였으며 농촌 대부분의 가정들은 나무나 농업 잔류물을 이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청정 연료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에서는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의 사용은 증가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5년 14.5%였고 전세계 기준인 18%에 달성하지 못했으며 2019년에는 11.4%로 하락세를 보여주었다. 북한 당국은 재생에너지 장비와 기술의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태양광이 주로 사용된다. 2014년 875kWh의 하이브리드 재생에너지 전원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북한의 재생에너지 자원 지도가 구축되었다. 추가적으로 1200kWh급의 조류발전시스템과 300MW급의 조류발전 시스템을 건설 중이다. 북한 당국은 에너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네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첫째, 2021~2025 5개년 계획의 전력 생산량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의 비효율적인 전력 생산 방식을 개선하고 장비를 개선하며 신규 수력 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전력 생산지를 증설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킨다. 북한 당국은 에너지 수요를 자력갱생으로만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신규 수력발전 댐 건설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며 화력발전을 포함 시키고 원자력과 조류발전의 비중을 늘려가며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하는 전력 증산 계획을 발표하였다. 셋째, 국가경제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국가전력망통합관리체계의 완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로 에너지, 제로 탄소, 그리고 녹색건축기술을 건축분야에 적용시켜야 하며 주민들은 생활공간에서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청정 연료와 청정 취사 기술의 도입을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가정연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바이오매스 연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바이오 가스 시스템을 가정에 도입해야한다고 하였다. 북한 당국은 군수 부문이나 제철 등 전략 부문에 우선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선순위가 낮은 가계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 할 수 있었다. 북한 당국은 수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수력발전소를 적극적으로 증설한다는 기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DPRK VNR, 2021). 유엔산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가 공개한 ‘2019년 세계 소수력 발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소수력 발전 설비용량은 2019년 83.2MW로 2016년 추정치인 33MW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농촌지역은 마이크로그리드 기반의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북한의 에너지난을 경감시킬 수 있는 에너지 협력 방안이다. 나아가 남한과 북한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그리고 소수력 등 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1.3. 남북 에너지 협력 방안과 시사점

북한이 처음으로 제출한 VNR 보고서의 서론의 끝에는 북한 당국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를 실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단언한다고 쓰여 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SDGs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다자협력 추진을 확대할 것이라고 명시한 것은 북한이 SDGs 이행에 있어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SDGs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의 VNR은 SDGs 이행지표들이 상당히 누락되어 있다는 점과 이행지표가 있더라도 데이터 구축이 미완된 점은 향후 북한 데이터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최규빈·홍제환, 2021). 또한 SDGs 이행지표는 체제와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남북한이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는 통계체계인 만큼 한반도 SDGs의 개발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 협력 방안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정규승, 2021).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 기술 그리고 사회주의 특성상 내부 역량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개발협력을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에너지 분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송철중 et al., 2020). Lee and Pyun(2016)은 1950년부터 2000년까지 24만 개의 넘는 사례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해 양자 간 무역 및 대외무역의 증대가 무력분쟁을 낮추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밝혔다.

북한이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 개발협력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도 지속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중이므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통해서 SDGs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환경을 이룰 수 있다면 한반도에 평화 정착과 함께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남북한의 격차를 줄여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남북한 상호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지속적인 교류협력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긴장 완화,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2 ODA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3.2.1. ODA 동향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들은 국제평화, 경제적 공동번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차관이나 무·유상 원조 등의 방법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를 제공해오고 있다. 그러나, 자국이익을 우선시 하여 원조의 우선순위와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원조 기금 조달 측면에서의 ‘투명성’과 원조 사업이 수원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라는 측면의 ‘효과성’ 차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 번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반구 국가들은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핍박, 내란, 종교적 박해, 난민, 그리고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이로 인한 절대빈곤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2005년 개최된 파리협약에서 선언된 주요 내용 중에서는 “취약국가에 대한 공여국간 원조의 조화가 실시되어야 하며, 분야별, 국가별 건실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성과중심의 원조결과 관리체계 구축 및 개발 책임성을 강화해야함” 등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공여국 중심의 원조가 아닌 수여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능력을 고려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문제로 지적받은 원조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 체제 구축의 노력이 동원된 것이다.

해외원조 정책의 보다 광범위한 역할수행과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원조 정책의 수립과 향후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의 ODA 사업에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던 대북교류협력사업 기획 및 실행 계획을 구상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ODA

기조를 남북협력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3.2.2. 해외원조의 이론적 근거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 국제관계는 경쟁과 투쟁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홉스의 논리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이 패러다임 하에 ODA 사업은 국가이기주의의 한 기능으로 여겨지며 외교적 차원에서 자국의 이익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수원국의 사정이나 의견 보다는 공여국의 정치적 안전성, 교역에서 발생하는 이득, 안보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현실주의 학자들은 원조자금을 개도국의 경제발전자금으로 효과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원국들에게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수원국이 경제성장을 할 경우 원조공여국의 관점에서 ‘투자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이상주의 패러다임은 앞서 현실주의적 관점과 정 반대되는 것으로 신자유주의 내 세계화 흐름 속에서 단순히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원국과 공여국 상호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국제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ODA 규모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원조 투명성을 강조하는데, 수원국내의 소수 지배계층의 부정축재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비난하며 빈곤과 고통을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타자주의적 원조’가 되어야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시각은 OECD와 UN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들은 무상원조가 저금리의 차관보다 적절하다고 본다.

끝으로 구조주의 패러다임은 ODA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선진국들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종속을 제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오히려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비난한다. 공여국은 물론 국제기구들도 공여국의 이익을 위해 기존 재원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불필요하게 연장시키는 등 원조 효과성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북반구의 부유국으로부터 남반구의 빈민국에게 경제재화가 재분배될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ODA를 둘러싼 이론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나, 한 가지 공감대는 “경제적 안정과 성장의 부재 속에서 정부는 효과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어려우며, 정치적 혼란상태는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3.2.3. 한국의 ODA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원조 사업은 무상원조(코이카 전담)와 유상원조(한국수출입은행 EDCF)로 나누어져 있으며, 원조의 분절화에 대한 비난을 받는 지점이기도 하다.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중반 20~30% 수준에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50% 수준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개도국과의 교역과 투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ODA 확대는 우리와 개도국간 상호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장기적 투자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력 및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ODA 규모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DAC 회원국들의 양자 간 원조 중 무상원조(Grants) 대 유상원조(Grant equivalents of loans)의 평균비율은 2019년 기준 90:10으로서 무상원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대 유상원조의 비율은 67.3 : 32.7에 그치고 있어 우리의 ODA는 규모면에서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ODA사업 실행의 제도적 장치는 한국국제협력단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 개별 ODA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고 있으나, 다원화된 국제 ODA체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포괄한 원조이념과 철학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해외원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사항은 대북교류협력사업과의 연계성 문제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ODA 사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 긴장 완화, 북한 내 자원분배의 투명성 확보,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북 교류협력력강화 차원에서 대북지원 예산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국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연합이나 국제적십자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지원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3.2.4. 남북교류협력사업

한국은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990년 8월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남북협력기금’을 마련하였다.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남북교류협력지원금은 총 3조원으로, 16년도에 2조 9천억원이 집행된 이후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감소세였으나, 19년도부터 4천억원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경험기반 조성(무상원조) 기금은 2021년도 3월에 37억 집행되었고, 유상원조기금의 경우 5억 7천만원 집행되었다. 무상원조 기금이 확연히 크고 증감폭도 컸으며 유상원조 기금은 16년도부터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어오고 있다.

북한 내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긴급구호, 인권보호 및 원조정책의 일환으로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민족공동체 구현이라는 당위적인 측면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실행되어 왔다.

결론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의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화된 창구를 통합하고 정책기획, 조정, 통제 및 관리 등에서 조직혁신과 협력체제 정립 그리고 법/제도적 체계화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북지원과 해외원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총괄, 국민화합, 자문건의, 정보교류, 정책개발 및 홍보기능 등을 강화하여 정부 부처 간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IV. 아시아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상

4.1 아시아 슈퍼그리드를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남북 에너지 협력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고려한 에너지 협력 및 에너지 전환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슈퍼그리드의 개념 및 동아시아 슈퍼그리드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슈퍼그리드란 국가 간 이어진 대규모 전력망을 말하는 것으로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에서 생산된 전력자원을 에너지 수송 네트워크, 즉 슈퍼그리드를 통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다른 나라에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논의된 배경에는 한국, 일본, 중국같이 경제발전이 고도화된 에너지 다소비 국가와 러시아, 몽골 등 경제발전은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에너지원을 보유한 나라 간의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에 있다. 한국은 경제 선진국이면서도 자체 에너지 생산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렵고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에너지 다소비국가’이기 때문에 만약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실현된다면 한국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으로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세계 매장량의 약 17% 정도가 러시아 땅에 묻혀있으며, 수력발전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몽골의 경우, 넓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수는 3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바람이 강한 기후 특징을 가지고 있어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이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가진 나라들과 전력망을 구축해 전력을 나눠 쓸 수 있다면 한국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력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슈퍼그리드는 기업에게도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한국의 전력설비 기업을 비롯한 송·변전 시설, 광역 전력계통 등 관련기업들은 사업의 기회와 함께 유리한 환경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특히 국가 간 전력망이 확대됨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압 직류(HVDC)와 같은 분야의 경쟁력을 쌓을 수 있다. 직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지만 변압이 어려워 송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직류 변압이 효율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직류는 장거리 고압 송전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더불어 슈퍼그리드는 경제 산업 발전 효과 뿐 아니라 전력 생산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처음에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교역이 활성화 되면서 비용이 낮은 지역의 저렴한 전기를 수입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몽골 지역 전기료보다 2~4배 정도 저렴하며, 한국, 중국, 일본 등과 몽골, 시베리아 지역의 전기료는 최대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반면 전기료가 싸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는 에너지 수출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슈퍼그리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뿐 아니라 회원국 간 전력시장을 구축해 각국의 복리후생을 높이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력계통을 연계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는 영토 분쟁 등 세계 강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슈퍼그리드가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거대 협력 사업만큼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상충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한편, 현재에도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동북아 4개국은 국가 간 전력망 연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한국-러시아 간 전력망 연계 공동 연구 완료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국, 몽골과도 전력망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관련된 연구는 사안별로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집중되었다. 관련국의 정책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국이 처한 에너지환경 및 정책동향 분석,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관한 정치적, 정책적 입장, 그리고 향후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각국의 법 제도 측면의 고려 사항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유럽 슈퍼그리드 구축사업을 포함해서 남부 아프리카지역과 ASEAN 지역에서 다자간 전력망 연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관련국의 정부,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단체 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논의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국 정부간 협의회와 기업간 투자계약 체결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한 방법과 연계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에너지-환경 안보 확보 노력을 지역으로 확대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리 협정의 규정 사항을 실현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슈퍼그리드는 에너지-환경 안보이익에 머물러 있는 역내 국가들의 이익을 지역의 이익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에너지-환경 안보를 확보하려는 ‘공동의 그리고 지역의 책임’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파리 협정은 ‘상이한 국내 여건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 및 ‘공동이지만 차별의 책임’으로 하는 협약으로 국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상향식 형태의 규범이다. 그러나 지역적 차원의 동북아슈퍼그리드는 한·중·일 국가의 경제 및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에너지-환경 안보 확보를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으며 보다 실질적 차원의 평등성과 상보성을 기초로 기후체제에 대한 책임을 배분할 수 있다.

V. 결론

남북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도 코로나19 및 뉴노멀을 고려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 남북 에너지 협력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결론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뉴노멀이란 경제, 사회 등이 위기 이후 정착한 상태이다. 이 용어는 제1차 세계 대전, 2007-2008년 금융 위기, 9월 11일 공격, 2008-2012년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 및 기타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World Economic Forum, 2020.06.05.). 최근 COVID-19의 급속한 전 지구적 확산 과정은 그물망처럼 짜여진 오늘날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국제협력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넘나들던 상징적 국경들이 폐쇄적인 장벽으로 회귀하였으며, 세계는 끝을 알 수 없는 역성장과 장기적 침체의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글로벌 차원의 팬데믹이 약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이제 원하던 원하지 않건 코로나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코로나 위기는 뉴노멀 시대에 맞게 통념을 완전히 바꾸는 촉매제로 기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대체 사회상 역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뉴노멀 시대의 남북관계를 그려보기 전에 코로나 이후 북한의 상황을 톺아보고자 한다.

과거 감염병 발생 시와는 달리 COVID-19 사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관여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 비상방역체계 전환 1개월이 되는 시점인 2월 29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COVID-19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행동 지침을 하달한 것을 알 수 있다(김호홍, 2020). COVID-19로 당 정치국 회의가 비상 소집된 것은 북이 COVID-19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전면 폐쇄하는 등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북 의료체계가 감염병 등 전체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남북 보건의료협력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는 북한에서 먼저 인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남측의 손을 잡으며 현상을 타개하려는 모양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대화를 외면했던 북한이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와 북한은 올해 7월 남북 정상회담이 최근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았으며, 그 결과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북한이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다시 손을 내밀며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데는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심각해진 경제난, 특히 식량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식량과 비료 등 외부물자의 수입이 여의치 않은데다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곡물 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올해도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더욱 암담해진 상황이다.

정리하면, 팬데믹 상황에 더욱 취약한 북한에 대한 민족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에 뉴노멀 시대의 남북관계는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갈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2020)의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이 내집단 편향, 공포와 적대감을 넘어 갈등을 겪고 있는 집단 관계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집단이 동일한 운명을 공유한다고 인지할 때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집단을 공통적인 상위 집단의 일원으로 생각하게 된다. 한반도에 이를 대입 하면 민족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이며, 두 집단의 공통 상위 집단의 정체감이 현저 해지고 강화된다면 집단 간 협력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뉴노멀 시대의 남북 에너지 협력은 어떤 국면을 맞이할까? COVID-19은 지금까지 경제적, 사회문화적 장벽에 가로막혀 도입되지 못했던 혁신적 기술들을 일상에 과감히 도입하게 만드는 '극단적 사건(X-event)'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의 신기술이 사회적 변환의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해야만 한다. COVID-19가 촉발한 뉴노멀 사회의 도래는 지금까지 이론적, 기술적으로 구현되었지만 시

장이나 사회, 문화적 거부감에 가로막혀 확산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트렌드를 일상 영역에서 비로소 시도하게끔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윤정현, 2021). 뉴노멀 시대는 마지막 난관이었던 사회, 문화적으로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남한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북미간 대화 재개와 남북관계의 교착 국면을 벗어날 실마리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 중 하나가 남북 경험의 재활성화와 필요성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경험사업을 재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존의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 중심의 낡은 남북협력 모델이 과연 뉴노멀 시대의 변화 추세와 조응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남북 에너지 협력은 기존의 성장 중심적 개발 패러다임 속에서 설계된 협력 모델을 뉴노멀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전환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뉴노멀 시대는 기존에 논의가 지속되었던 분산 에너지의 실현을 앞당겼으며, 북한의 에너지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과 남한이 협력할 수 있는 기재로 활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분산에너지는 규모가 작고 에너지 사용 지역 인근에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다. 분산에너지 자원들은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전원시설을 건설할 때보다 전원의 입지를 확보하기 훨씬 용이하다. 입지의 확보는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수용성까지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분산에너지는 두 가지 모두에서 기존의 대단위 발전소 및 송전선을 건설하는 방식보다 수월하다. 특히 송·배전망을 신규로 건설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프라 건축비용과 운영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운영비용에는 장거리 송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도 포함된다. 또한 분산에너지는 말 그대로 전원이 소규모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중앙집중적인 전원시스템보다 전력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력난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뉴노멀은 이른바 '상시적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경제력의 차이나 정치체계의 성격에 따라 국가를 분류하는 시각이 가진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신, 새로운 위기에 대한 사회적 회복력(Resilience)이 높은 혁신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차이가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한반도 위기는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인식 재편의 방법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구갑우 (2020). ‘KEI 북한 환경리뷰,’ 2020-창간호, ISSN 2765-0316.
- 김기섭, 김지현, 박지윤, 차창훈, 김영재, 김태균, & 송영훈. (2020). “SDGs 측면에서 본 남북 한의 이행실태 비교연구”. 『국제정치연구』, 23(1), 75-109.
- 김윤성·윤성권·이상훈 (2018).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과제”. 『환경법과 정책』 21. 131-65.
- 김종수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관계 추진 방향”. 『세계지역연구논총』. 38(3), 219-244.
- 김호홍 (2020.04.08). “북한의 COVID-19 대응: 특징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통권 183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나용우 (2019).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변영을 위한 남북 에너지협력”. 『북한학연구』, 5(2), 60 - 97. <https://doi.org/10.34266/jnks.2019.5.2.60>.
- 『동아일보』 (2021.02.26.), 北진력생산 40년째 제자리… 김정은 “진기가 경제 발목” 연일 담달.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226/105622640/1>.
- 『데일리메디』 (2020.06.15.), 포스트 코로나 착수 대형병원들 화두 ‘에너지 절감’.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7129&thread=22r02>.
- 『매일경제』 (2021.07.27.). 북한, 코로나, 식량난에 ‘포위’...남북 관계로 국면 전환 노리나.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7/723691/>.
- 박경숙 (2012). “북한의 식량난 및 기근과 인구변동”.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127-156.
- 박주화·Eran Halperin, Nimrod Nir (2020). 코로나19를 통해 살펴본 남북화해 가능성. 통일연구원. CO 20-25.
- 부경진 (2015).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 수립 연구, 에너지공단·한국자원경제학회.
- 북방경제연구원 (2018), “북한 「강령 국제 녹색 시범구」 개발계획”, 1-6.
- 빙현지·이석기 (2017). 『북한 재생에너지 현황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 송철중·고혜진·이은솔·조보배·문경연·이지선·한기호 (2020). 『북한의 복지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연구』.
- 양문수 (2001).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매커니즘』.
- 양문수 (2015).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33-66.
- 『에너지데일리』 (2018.07.16.). “북한 풍력단지조성 중소규모 독립형 시스템 먼저 보급해야”,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747>.
- 윤순진 (2008). “북한 가정부문 에너지 이용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윤여창 외(공저),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 연구 1』. 서울대학교 출판부: 229-279.
- 윤정현 (2021). “COVID-10 이후, 뉴노멀과 미래사회변화”. 미래연구 포커스.
- 이석기·변학문·나혜선 (2018).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산업연구원.
- 이승욱 (2016).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특구전략: 영역화, 분권화, 그리고 중국식 개혁개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9권 제1호, 122-142.
- 『인더스트리뉴스』 (2018.06.08.). “북한 내 풍부한 풍력자원이 경험의 무대 된다”,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16>.
- 『인천투데이』 (2018.11.02.), “[창간특집]서해공동경제특구는 서해 물류 인프라 구축부터”,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95>.
- 장성호 (2014).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하는 것은 전력문제 해결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2014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5-27.
- 『전기신문』 (2021),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http://m.electimes.com/article.php?aid=1620032853216654097>
- 정규승 (2021). 『남북한 SDGs 지표(관련 통계) 통합을 위한 기초연구』
- 조동호 (2021).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평가”. 『한국경제포럼』. 제13권 제4호, 1-37.
- 『조선중앙통신』 (2020.02.2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 『조선중앙통신』 (2020.04.1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진행”.
- 『조선중앙통신』 (2020.07.0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 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 『조선중앙통신』 (2020.07.2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긴급소집: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할데 대한 결정 채택,”.

- 조진희·강우철 (202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본 북한 에너지 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 최규빈·홍재환 (2021). 『북한의 SDGs 이행 동향: ‘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 『통일뉴스』 (2016.02.01.). “북한, 2044년까지 재생에너지 활용해 500만kw 전력 생산 계획 수립”.
- 『투데이에너지』 (2020.01.02.). “[신년 기획] 양수발전, 신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 보완하다”.
- 『한국일보』 (2019.07.02.), “응급환자 실려와도 사정해야 전기공급’ 북한의 열악한 의료 현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11497027193>.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6)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 KDB산업은행 (2020). 『2020 북한의 산업 I』.
- Kim, G. H. (2018).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과 남북농업개발협력 방안”. I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rop Science Conference (17-17). The Korean Society of Crop Science.
- Lee, J.·Pyun, J. (2016) ‘Does Trade Integration Contribute to Peace?’.
- McCauley, D.·Ramasar, V.·Heffron, R. J.·Sovacool, B. K.·Mebratu, D.·Mundaca, L. (2019). Energy justice in the transition to low carbon energy systems: Exploring key themes in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Applied Energy. <https://doi.org/10.1016/j.apenergy.2018.10.005>
- ourworldindata.org
-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20(1), 327-344
- World Economic Forum (2020.06.05.).
-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6/theres-nothing-new-about-this-new-normal-heres-why/> (검색일: 2021.09.20.)

평화세삭

본 연구모임은 정치외교학, 북한학, 개발정책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포함된 모임으로 북한과의 환경협력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정치외교·북한학 전공자의 경우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 측면에서, 개발정책 전공자는 북한을 개도국 지원사업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등 다양한 시각의 공유가 특징이다. 여러 학문적 배경을 지닌 전공자들이 모여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한반도형의 환경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총 10회 연구모임 진행)

팀장 송정환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팀원 김선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팀원 김주현 연세대 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 석사

팀원 문예찬 KDI국제정책대학원 석사과정

팀원 황지은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한반도 환경협력 연구:산림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

1. 연구 목적

북한은 생산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서 산림을 인식했고 경제난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 식량부족 등의 문제로 산림 등 환경의 황폐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지난 평양공동선언 등에서 지금까지 남북 간 환경협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저희 모임의 구성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학, 통일학, 개발정책학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북한, 남북관계, 국제사회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정치외교학과 북한학을 전공한 사람이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환경협력을 바라보고, 개발정책학을 전공한 사람은 북한을 하나의 개도국으로 상정하여, 환경협력을 바라본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우리가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한반도형 환경협력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한반도 환경협력에 관한 선행연구는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져 논의되어왔다. 남북회담 의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관한 시사점을 전달하며 남북환경협력의 중요성을 제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남북관계가 국제사회로 회부된 현재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반도 환경협력 사례연구를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아,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저희 모임의 연구는 한반도 환경협력에 관한 모든 사례를 분석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환경협력 동향과 미래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각 사례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며, 지속가능한 한반도 환경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렇듯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른 접근법을 통해, 한반도 환경협력의 새로운 연구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환경문제는 전 세계에서 지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국가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해결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계획들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더 나은 한반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중심으로 시작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환경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의 남북 환경협력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추후 남북 환경협력 연구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1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술을 넘어 실무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남북환경협력의 의제 도출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지금까지의 남북교류협력의 한계를 분석

한 기존 연구와 달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 및 해외 NGO, 국제기구와 해외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반도 환경협력 사례를 분석한다. 구체적인 분석 사례로는 중앙정부의 경우, 환경부와 산림청, 통일부를 주도로 이뤄진 남북회담 중심의 남북환경협력과 2018년 이후 진행된 산림협력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환경협력을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왔다. 이 외에도 NGO와 국제기구, 개별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한 한반도 환경협력이 이루어졌으며, 국제기구와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의 형태로 대북지원을 진행해 분석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반도 환경협력 사례연구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이루어졌던 환경협력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북한의 환경정책과 법제,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환경 분야에 관한 북한의 인식과 요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한반도 환경협력이 북한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전개되었는지 분석한다.

II. 환경협력의 개념 및 현황

1. 북한의 환경인식

환경 관련 이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게 다루지고 있다. 본 절에서 환경 관련 이론을 살펴보는 목적은 북한 사회 전반에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고 남한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있다. 따라서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범위의 환경 관련 이론을 확인해볼 수 있는 광명 백과사전 14: 천문, 지구환경 (이하 광명백과사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 백과사전출판사에서 발간한 광명 백과사전은 ‘김정일상’을 수상하는 등 내부 공신력이 있는 도서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잘 반영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1) 환경의 구조와 범주

유엔환경계획의 경우 환경을 자연환경과 인간 환경(man and the environment)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환경은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여건들 가운데 자연을 제외한 일체의 모든 것을 뜻한다. 자연환경으로는 대기, 물, 토양, 생물적 환경(생산자·소비자·분해자)을 들고 있다. 인간환경으로는 인구, 주거, 건강, 생물생산체계, 산업, 에너지, 운송, 관광, 환경 교육과 공공인식, 평화·안전 환경을 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환경의 범주를 구분하는 이론적 연구는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환경을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으로 범주화하는 방식이 있다. 자연환경이란 인간의 생명 유지와 생활에 관련된 자연적 배경의 모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사회환경이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으로서 습관, 전통, 제도 등이라고 규정하는 식이다.¹³⁴⁾

광명백과사전에서도 환경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크게 개별요소환경과 지역환경으로 나누고 있다. 대기, 물, 토양과 같은 것을 개별 요소환경으로, 도시, 농촌, 산림과 같은 것을 지역환경으로 나눈다. 또한 지

134) 정대연 “환경의 구성요소와 그 체계”, 『환경영향평가』 제10권 제3호 (2001), p. 179.

역환경 내에서 자연요소와 사회요소를 분류하고 있는데, 변화된 자연요소와 상대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자연요소, 창조된 물질적 요소와 정신문화적 사회요소 등이다.

이 밖에도 공간의 크기와 지역적특성에 따라 지역환경, 지구환경, 우주환경, 외부환경, 내부환경, 도시환경, 농촌환경, 환경의 기능에 따라 자연환경, 사회환경으로, 환경의 요소에 따라 대기환경, 물환경, 토양환경 등 여러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이 바라보는 환경의 개념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환경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생물공학 일반이 아니라 세계의 주인이며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 즉 인류의 생존과 복리, 발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라고 설명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환경의 유형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환경’이며 ‘인간환경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 그 속에서 인간생활과 발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자연요소와 사회 요소들의 총체’라고 설명한다.

2. 자연환경의 오염과 해결 방안

광명백과사전에서는 대기, 물, 토양을 사람과 생물유기체에 있어서 3대 환경요소로 규정하고, 각 분야의 오염과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1) 대기환경

우선 대기환경의 경우 ‘사람들의 생산활동과정에서 생긴 오염물질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굴뚝과 같은 일정한 시설을 통하여 대기 중에 배출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대기 오염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온실 효과,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대기환경의 보호 방안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규제 관리를 강조한다. 북한 역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대기 중에 내보낼 수 있는 오염물질량을 규정해놓은 것이다.

이외에 눈에 띄는 것은 황사 현상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인데, 2000년대 들어 황사 현상이 동반된 저기압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황사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수림 조성을 들고 있다.

광명백과사전은 “현시기 당의 수림화, 원림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황사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며 “수림화, 원림화에서는 빨리 자라면서도 경제적 효과성과 환경보호적기능이 높은 아카시아 나무, 뽕나무, 방울나무, 백송과 같은 나무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풀치식효과와 함께 방풍효과, 먼지잡이 효과가 높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 물 환경

물 오염은 그 형태에 따라 화학적 오염, 생물학적 오염, 물리적오염으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다. 화학적 오염은 하천이나 호수 등에 들어오는 무기염류들과 유기물질 등 불순물에 의하여 물리화학적 조성도와 농도의 변화가 발생한 것, 생물학적 오염은 병원성균이나 바이러스가 많아지거나, 축적된 바이러스가 사람과 생물에 피해를 주는 오염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물리적 오염은 열오염이 기본적인 형태이며, 화력, 수력발전소에 의한 오염이라고 설명한다.

광명백과사전에서는 물환경 관리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경제적 요인과 함수 등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환경과 비교했을 때 물 환경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나 현재 북한의 대기오염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은 적었다.

3) 토양환경

광명백과사전에 의하면 토지는 농업생산의 기본수단이다. 따라서 자연자원인 동시에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이 되는 토지를 잘 관리하고 개량하며 토지 오염과 파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국토면적의 80%가 산으로 이뤄져 있는 북한의 경우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가 토지 관리라는 것이다.

광명백과사전은 토양오염에 대해 토양이 자연적 및 인위적인 오염물들의 영향을 받아 토양자체의 고유한 기능이 상실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며 주요 원인으로는 산업폐수와 폐설물, 도시생활폐수와 폐설물, 축산폐수와 생물잔해, 농약, 화학비료 등을 지적한다.

3. 북한의 법체계

북한의 환경법제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현재 북한의 법률체계를 확인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나눠 환경법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확인해보도록 한다.

1) 헌법

북한의 법은 성문법 형식의 헌법과 부문법,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은 모든 규범적 문건에 최고 효력을 갖고,¹³⁵⁾ 모든 법률의 기초로서 역할을 한다. 부문법과 규정은 헌법이 제시하는 방향에 맞게 내용을 구체화, 세분화된다. 따라서 모든 부문법 및 규정은 헌법의 내용에 부합해야 채택될 수 있고, 헌법이 정한 기준 안에서 시행된다.

헌법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만 수정 또는 보충할 수 있고, 여러 절차를 거쳐 채택된다.¹³⁶⁾ 우선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고 채택할 초안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가 먼저 심의한다. 이후 법안이 최고인민회의에 제출되면 초안낭독과 토론 등을 거친 후 거수가결 방법을 통해서 채택된다. 일반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절반이상이 찬성하면 채택되지만, 특히 헌법의 경우 대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해야만 수정 또는 보충된다.¹³⁷⁾

1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증보판)』(평양: 법률출판사, 2016), p. 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 제 45조, 헌법은 최고의 법적효력을 가진다. 모든 법문건은 헌법과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 이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에 관한 각주는 “법제정법”으로 표기한다.

136) 법제정법 제 9조,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 보충하거나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며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137) 법제정법 제 13조,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법안은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한다. 법제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그것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겠다는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14조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안심의를 보고, 초안낭독, 토론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대의원들에게 법초안을 미리 배포한 경우에는 법초안을 낭독하지 않을 수 있다. 심의 과정에 법초안에 대한 수정, 보충의견이 제기되면 그에 근거하여 정리한 다음 표결에 붙인다; 제 1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안을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2) 부문법

북한의 부문법은 일정 부문의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기본적인 법형식이다.¹³⁸⁾ 이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나 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 부문법과 중요부문법으로 구분된다.¹³⁹⁾ 최고인민회의는 부문법을 제정하고 수정·보충을 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인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신설되는 부문법안 및 규정안과 현행 부문법 및 규정의 수정·보충할 내용에 대해 심의와 채택의 권한을 갖는다. 또한 중요부문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¹⁴⁰⁾ 따라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제정하는 부문법 중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중요부분법과 승인을 받지 않는 부문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부문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고인민회의가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단독 결정으로는 제정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일반 부문법과 중요 부문법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¹⁴¹⁾ 중요부문법이 중요한 내용을 담은 부문법을 나타내는 것인지, 일반 부문법과 다른 형식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헌법과 법제정법에 중요부문법에 대해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 것으로 볼 때,¹⁴²⁾ 다른 법형식이 아닌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문법을 중요부문법으로 호칭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⁴³⁾

3) 규정

북한의 규정은 부문법을 더 구체화하고 법적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법형식으로 부문법의 하위규범으로 해석된다.¹⁴⁴⁾ 규정의 제정권한은 최고인민회의에 있지만,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일 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또한 내각에서도 국가관리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제정권한을 갖는다.¹⁴⁵⁾ 법제정법에 따르면 “내각은 부문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부문법에서 내각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헌법 제 125조에 규정된 내각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138) 법제정법 제 2조 2호,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부문법은 최고주권기관이 헌법에 기초하여 일정한 부문의 사회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기본적인 법형식이다.

139) 장소영,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p. 27.

1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증보판)』(평양: 법률출판사, 2016), pp. 15-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 91조 2호,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사회주의헌법 제 116조 2호,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분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이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에 관한 각주는 “사회주의헌법”으로 표기한다.

141) 이효원, “기획 특집_광복, 분단 70년 그리고 통일: 북한의 법률체계와 헌법의 특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5) p. 67.

142) 사회주의헌법 제 91조 3호,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분법을 승인한다; 법제정법 제 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채택한 중요부분법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43) 송인호, 최귀일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고찰- 북한의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 27권 제 1호(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p. 233; 송정환, “김정은 시대 특수경제시대 법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p. 40.

144) 법제정법 제 2조 3호, 규정은 부문법을 전국적범위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하거나 부문법을 제정할 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부문에서 법적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무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형식이다.

145) 사회주의헌법 제 125조 2호,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 헌법과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여 규정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정의 공포 형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했을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내각에서 채택된 규정에 대해서는 내각결정으로 공포된다. 법해석권 또한 제정한 기관이 갖는다.¹⁴⁶⁾

4. 환경관련 법제¹⁴⁷⁾

1) 김일성 시대: 환경법제 입법화

북한의 정권 수립 및 전쟁기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정책보다는 산림 및 건설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1960년대 사회주의 건설 도입기에서는 건설 과정에서의 환경오염과 파괴가 늘어나자 국토관리사업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¹⁴⁸⁾ 1970년대에는 환경파괴가 질적으로 심화되자 환경정책을 사회와 자연 전반을 고려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은 1976년 『자연개조 5대방침』(관개사업, 토지정리개량사업, 다락밭건설사업,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치산치수사업, 간석지개발사업)을 채택 한 이후 다음해 4월 29일 『토지법』 채택해 환경관련 법적기틀을 구체화했다.¹⁴⁹⁾ 김일성은 환경오염과 파괴로 인한 피해가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 제도의 문제로 보고 북한식 주체사상을 강조하며, 특히 1986년 4월 10일 국가행정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환경보호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통해 자연환경 보존과 자연보호구 특별보호구 등의 지정과 관리, 치산치수사업의 중요성을 부각하게 된다.¹⁵⁰⁾ 이후 1986년 『환경보호법』을 채택하면서 이전까지 『토지법』, 『인민보건법』,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오물청소규칙』 등이 환경관련 법제로 적용되었다.¹⁵¹⁾ 이후 정책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입법화하기 시작했다.

2) 김정일 시대: 환경법제 제도화

김정일 시대에는 환경관련 법이 제도화 됐다고 평가된다. 김정일은 1996년 10월 내각에 전문부서인 국토환경보호성을 설치하고, 같은 해 10월 23일을 국토환경보호절로 제정했다. 이후 『산림법』과 『도시경영법』을 수정·보충하고 『물자원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환경보호를 추진했다. 2000년대 들어 2005년 김정일 저작 “환경보호사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다”를 발표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대동강오염방지법』, 『독성물질취급규정』 등 오염규제관련 환경법을 신설했다. 또한 김정일은 2006년에는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을 2011년 『금강산국제관광특구 환경보호규정』도 새롭게 제정했다.

1990년대에는 환경이라는 큰 범위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체계를 잡아가는 시기였다. 2000년대에는 환

146) 송정환(2020), p. 41.

147) 최현아, “김정은 정권이후 환경분야 정책 변화 분석”『신진연구자 정책연구과제 보고서』(서울: 통일부, 2019), pp. 6-10.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또한 최현아(2019)에서 제시된 시기로 구분했다.

148) 한상운, “북한 환경법제의 최근 동향과 과제”, 『북한법연구』제 11호(통일과 북한법학회, 2008), p. 14.

149) 최현아(2019), p.6.

150) “어제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대기와 물, 토양, 생물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의 원칙과 방도를 새롭게 규제하였습니다. 환경보호법이 채택됨으로써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보다 훌륭한 자연환경을 보장하여주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보다 훌륭한 자연환경을 보장하여주며 후대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물려줄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환경보호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3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180.

151) 한상운(2008), p.15.

경을 보호를 위한 이행측면에서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시기로 판단된다.¹⁵²⁾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관련법이 지속적으로 수정·보충되고 있다.

3) 김정은 시대: 환경법제 체계화

김정은은 헌법개정과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외국투자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2012년 4월 27일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에게 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담화를 통해 토지관리 사업,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2022년 안에 북한의 모든 산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강하천 정리를 비롯한 물관리사업 강화, 도로의 현대화, 중량화, 고속화를 실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환경보호, 자연보호관리사업을 잘 하며, 지하자원을 망탕 개발하거나 지하자원개발에 무질서를 조성하지 말 것 등이 포함됐다.¹⁵³⁾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특기할 사항은 관광자원 개발과 이용 시에도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¹⁵⁴⁾ 김정은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특수경제지대에서도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개발 원칙 중 하나로 경제개발구와 그 주변의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돼있다. 해당 개발구에 알맞은 환경보호기준을 설정하고 당해 연도 환경보호계획을 실행하며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제개발구 환경보호규정』과 『라선경제무역지대 환경보호규정』 19조에 따르면 “각 개발구 내 개발, 건설을 하려는 기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발구 관리관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기업에 건설허가를 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⁵⁵⁾ 이와 함께 벌금의 부과 대상 행위유형 17가지를 열거하는 등 제재처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⁵⁶⁾

북한은 환경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법과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수정·보충을 통해 환경관련 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경제개발구에서의 자연생태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발전을 진행하고 있다.

〈표1〉 북한의 환경관련 법제

시기	법/규정	채택연도	규제내용
김일성 시대 (1948-1994)	토지법	1977	토지소유권, 국토건설총계획, 토지보호와 토지건설, 토지관리와 감독에 관한 조항들 규정
	환경보호법	1986	환경보호사업의 기본원칙과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데 대하여 규정

152) 최현아(2019), p. 7.

153) 최현아(2019), p. 9.〈재인용〉

154) 최현아(2019), p. 9.

1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증보판)』(평양: 법률출판사, 2016), p. 3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 :〈대외경제부문〉』(평양: 법률출판사, 2014), p. 528.

156) 최현아(2019), p. 10.

	산림법	1992	산림자원의 범주,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자원 이용 및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항목들을 규제
	도시경영법	1992	건물관리, 상하수도, 난방시설운영, 도시도로, 하처정리, 원림조성,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조항규
	지하자원법	1993	지하자원의 탐사개발이용의 규율과 질서 수립, 지하자원 개발과정에 국토환경, 생활환경, 동식물의 생태환경 파괴금지 규정
	문화유물보호법	1994	문화유물보전,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 등에 대한 규정
김정일 시대 (1994-2011)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	1995	천연기념물을 보호관리해 나라의 자연풍치 조성, 나라의 명승지를 잘 보호관리해 자연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선 선정 등에 대한 규정
	물자원법	1997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이용에 대한 지도통제강화, 법을 어겼을 경우 법적책임 규정
	바다오염방지법	1997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의 규율과 질서 수립, 바다 수질과 자원보호에 대한 규정
	국토환경보호단속법	1998	국토환경보호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범위반자의 법적책임에 대한 규정 포함
	공중위생법	1998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 제정
	국토계획법	2002	국토건설에서 농경지를 침범하지 않으며 산림조성과 강하천정리를 토지보호의 중요한 사업으로 지정하는 데에 대한 문제, 도시 계획관련 문제, 환경피해를 막고 개선관련 문제, 국토계획작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제
	하천법	2002	국가관리하천, 지방관리하천들의 건설, 보호, 정리, 이용문제, 하천건설과 정리순서와 방법을 규제
	환경영향평가법	2005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원칙, 환경영향문건의 작성과 신청, 심의, 결정 집행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
	대동강오염방지법	2005	대동강의 수질과 생태환경보호, 대동강유역의 원림화를 진행을 통한 호안정리와 퇴적감탕처리, 오물, 물품제거, 수질 조사와 과학연구를 강화하는 데에 관한 조항들 규제
	독성물질취급규정	2006	독성물질에 대한 금지 및 제한절차와 취급방법 포함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2006	자연환경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 감독통제 관련 규정
	폐기폐설물취급법	2007	일반 폐설물과 독성폐기물에 대한통제, 폐설물관리에 대하여 규정
	자연보호구법	2009	자연보호구구의 설정과 조사, 자연보호구지역 설정 및 법적 의무와 책임관계 규정

	금강산국제관광 특구 환경보호 규정	2011	자연환경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 방지, 감독통제 관련 규정
김정은 시대 (2012-현재)	재생에너지법	2013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개발 및 리용계획, 리용의 장려, 물질기술적토대, 지도통제 등에 관련한 규정
	경제개발구 환경보호규정	2014	자연환경 보존과 조성을 위한 대책, 보호구 설정, 환경영향 평가, 환경오염방지, 폐기폐설물의 취급처리, 감독통제 관련 규정
	라선경제무역지대 환경보호규정	2014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자연환경 보전과 조성,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절차와 규제

출처: 최현아, “김정은 정권이후 환경분야 정책 변화 분석” 『신진연구자 정책연구과제 보고서』(서울: 통일부, 2019), pp. 7-9.

5. 김정은 시대 북한의 환경 정책

1) 김정은 시대 산림관련 신년사 내용

2011년 12월 17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김정은이 실질적인 후계자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는 주체 100년에 해당한다. 신년사는 북한의 정책 방향을 북한주민,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김일성 시대는 여섯 번 산림관련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김정일 시대는 17년 동안 9번의 신년사에서 산림조성의 중요성을 말했다.

2011년 11월 김정은 시대로 접어들었다. 2012년 신년사는 신년공동사설로 대체했으며, 2013년부터 김정은 시대의 신년사가 시작되었다. 2013년 신년사에서는 토지정리사업을 통한 토지개간을 장려했다. 이는 산림복구와는 반대되는 정책이었다.

2013년 신년사(일부 발췌)

축산과 수산, 과수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더욱 풍족하게 하여야 합니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세포등판개간전투장으로 용약 달려간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은 올해전투에서 새로운 기적과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여 당의 대자연개조구상¹⁵⁷⁾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까.

2014년 신년사는 2013년에 강조한 토지개간에서 발전하였다. 여기서는 산림을 비롯한 지하자원과 해양자원 등을 보호하고 산림 복구를 주장하였다.

157) NK TECH, 북한의 토지 정리 사업(검색일: 2021. 09. 03.)

http://www.nktech.net/inform/nkt_briefing/nkt_briefing_v.jsp?record_no=19 이하 내용은 NK TECH 홈페이지에 있는 북한의 토지 정리 사업의 내용을 직접 인용한 것임.

2014년 신년사(일부 발췌)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여나가며 나무심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여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합니다.(밑줄-필자)

2015년에 넘어오면서 김정은 정권에서 산림 복구 확대 및 보호 등의 환경사업을 과학적, 책임적으로 해야 함을 신년사를 통해 강조하였다.

2015년 신년사(일부 발췌)

산림복구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는것과 함께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고 강하천정리를 정상화하며 환경보호사업을 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밑줄-필자)

2015년에 이어 2016년 신년사에서는 산림 복구 확대 및 보호 등의 환경사업을 과학적, 책임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16년 신년사(일부 발췌)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본격적으로 벌여야 합니다.도시와 농촌, 일터와 마을들을 알뜰하게 꾸리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대기와 강하천,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밑줄-필자)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부터 식량의 자급자족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북한은 “밀식재배”, “두벌농사” 등 소위 “주체농법”을 강조해 왔다.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농법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 “기계화 농법”이다. 농업기계화를 이루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토지정리사업”을 들 수 있다. 토지정리사업은 기계화를 위한 선결조건일 뿐만 아니라 경지면적의 확대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효과도 있다. 북한은 1976년 10월에 “자연개조 5대 방침”을 발표하였는데 이 방침에서 자연개조사업의 일환으로 “토지정리사업”이 제시되었다. 근래 들어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지정리사업은 자연개조 5대방침과 1981년 10월 발표된 “4대 자연개조방침”을 이어 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른 것이다. 1998년 7월에 시작된 대자연개조사업은 그해 5월 4일, 김 위원장이 최전연 군부대 시찰 길에 나서는 도중 강원도 창도군 대백리를 현지지도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김일성 시대의 주된 토지정리사업의 내용은 간석지 개간이 주를 이루었으나 김정일 시대에는 계단식 논밭과 야산을 개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 이에 부차적으로 논두렁을 제거하여 논 면적을 확대하는 사업 등 소규모로 분할된 뚝 논밭을 정비하여 규모화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감자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자 재배면적을 늘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자 서식조건으로 적합한 고랭지의 경사지대가 많은 강원도를 시작으로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에서 토지정리사업이 실시되어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6123정보의 새 땅이 생겼으며 151만 여개의 뚝 논밭들이 557,594개의 규격화된 논밭으로 정리되었으며 9만km에 달하던 논두렁이 5만 3천km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북한의 토지정리사업에는 “조선컴퓨터센터”에서 개발한 건설계획 작성 컴퓨터 프로그램 ‘천지개벽’이 도입되어 많은 재원과 자재, 인력을 절약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한다. ‘천지개벽’은 논 면적, 대상별 논밭 정리예산, 토사량 운반계획 등 토지정리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미리 작성해 공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앞으로 전국적인 토지정리 설계와 계획 작성을 앞당기고 과학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기대를 모이고 있다.”고 평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의 교시로 추진되고 있는 토지정리사업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재해석 하는 방식으로 ‘시대적 요구’에 맞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해 김정일 위원장이 나름대로의 차별성과 자신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제기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토지정리사업으로 인한 손실도 지적되고 있다. 무리한 실적위주의 공사 진행과 경사지 등에 대한 마구잡이식 개간으로 산림 황폐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현재 자재난과 연료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장비조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7년 역시 환경보호를 요점으로 하는 내용이 신년사에 등장한다. 여기서는 국토 관리에 모두가 나서야 함을 강조하며, 계획적인 환경보호사업을 통해 국토를 가꿔나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7년 신년사(일부 발췌)

국토관리사업에 온 나라가 떨쳐나서야 합니다. 도들에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꾸리고 산림복구전투를 근기있게 밀고나가며 강하천관리와 도로보수,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야 합니다.(밀줄-필자)

2018년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 남북관계가 진전할 수 있다는 해이기도 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전후로 평화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2018년 신년사에서는 전후 복구건설을 예로 들면서 산림복구를 지속해서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18년 신년사(일부 발췌)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 것처럼 전당,전군,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모든 부문들에서 수림화,원림화,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밀고나가며 평양시와 도,시,군소재지들,일터와 마을들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고 정상유지,정상관리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밀줄-필자)

2019년 신년사는 북한이 2018년 남한과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사업에서 남북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산림복구와 환경오염 방지를 주장했으며, 지난 2018년 남한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의 첫걸음을 떤 것을 주장하였다. 2020년 신년사는 생략되었으며, 2021년 신년사는 북한주민에게 친필 연하장으로 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2019년 신년사(일부 발췌)

산림복구전투 2단계 과업을 적극 추진하며 원림록화와 도시경영, 도로관리사업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었습니다.(밀줄-필자)

2) 김정은 시대 환경정책

북한은 환경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환경을 인식하고 활용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는 산림복구전투가 단순히 벌거숭이

로 된 산을 푸른 산으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실지 쓸모있는 산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¹⁵⁸⁾와 같이 북한의 각종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환경보호법을 두차례에 걸쳐 개정하면서 환경 관련 내용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 외에도 대기오염방지법, 재생에너지법, 공원,유원지관리법 등 관련 법의 제정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라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철저히 해야한다 언급하였으며, 2022년까지 북한의 모든 산이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것을 지시했다.¹⁵⁹⁾ 또한, 김정은은 “산림복구전투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며 내나라, 내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 마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 직접 언급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적 사업으로서 특징은 환경관련 교육과 과학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월 21일에 진행된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 부문 일군회의’에서는 각 지역 양묘장에서 나무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수준을 높이고 산림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산림복구전투를 위한 수종 및 생육조건에 과학기술적 개선 등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보급실의 운영과 관련 산림과학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국제협력의 측면에서도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람사르협약,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가입,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에 금강산 등록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¹⁶⁰⁾

이와같이 김정은이 집권한 북한은 이전시기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특히 경제발전의 도구로서 환경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특히 환경 관련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산림조성 및 환경보호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과학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대북제재라는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분야로환경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6. 북한의 환경분야 국제교류¹⁶¹⁾

1) 생물다양성

가. 국제협력 현황 및 북한의 참여

-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협약(CBD), 람사르

158) 봄철 나무심기·산림복구 동참 독려 2020년 3월 2일 노동신문

159) 최현아, 「남북한 산림협력 방향과 과제: 국제사회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통일정책연구』 27권 2호, 2018.

160) 한상운, 『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 구축(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161) 문예찬, 이현출(2021)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

협약,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등이 대표적인

- 북한은 앞서 언급한 국제사회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에는 금강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으로 선정되며,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WNBR)의 일원이 됨
-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환경협력과 함께 국외전문가의 환경정책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최현아, 2019a)
- 생물다양성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SDG 15(육상 생태계 보호)와 연계되며 산림협력과 함께 논의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님
- 특히, 북한이 생물다양성과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습지의 경우, 그 기능을 생물다양성보호, 물정화, 기후조절,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조절 등으로 보고 있음(리경심 외, 2018)
- 이러한 특성은 SDG 14(해양생태계), SDG 15(육상 생태계), SDG 6(깨끗한 물과 위생), SDG 13(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국제사회 의제와 연계될 수 있음

나. 한반도 생물다양성 협력을 위한 발전방향

① 생물다양성과 국제협력 도출

- 남북관계 교착 및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는 남북의 독자적인 교류협력 보다는 이미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생물다양성협약(CBD),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습지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보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특히, 조선자연보호연맹은 2020년 서해안 지역을 새로운 람사르 습지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으며, 이 외에도 습지들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도 관심이 많음
- 또한, 북한은 람사르협약에서 54곳의 습지 현황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와의 소통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의지를 보임
-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습지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강조하는 북한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평화산림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한 접근이 가능할 것임

② 생물다양성과 평화산림이니셔티브

- 대한민국 산림청은 지난 2018년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를 제안했으며, PFI는 남북한과 같이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은 접경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는 산림협력임
-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습지들 중 산림과 습지가 결합한 산림습지인 경우가 있음(한강하구 장항습지, 북한 철원습지 등)
- 북한은 산림습지에 관해, 물이 주변환경과 거기서 사는 동식물들을 조절하는 근본요인으로 되는 지역

으로 정의(리경심 외, 2018)

- 30개로 분류한 습지유형 중 무림목니탄지, 산림화된 니탄지 등이 산림습지라 할 수 있음
- 습지 및 생물다양성은 이미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주요 의제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한반도 국경갈등 관리의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에 기여

③ 생물다양성과 남북산림협력과의 연계

- 국제사회는 SDGs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며, 산림의 경우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 해결 등 다양한 SDGs와 연계되어 있음
- 남북산림협력 역시 생물다양성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생물다양성 협력을 준비해야 할 것임
- 생물다양성의 경우,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음
- 북한이 습지와 생물다양성보호, 물정화, 기후조절,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조절 등을 연계하여 논의하고 있는 만큼, SDG 14(해양생태계), SDG 15(육상 생태계), SDG 6(깨끗한 물과 위생), SDG 13(기후변화 대응)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사회 의제와 연계될 수 있음

2) 산림

가. 산림분야 국제협력의 주요특징

- 산림분야 국제협력은 OECD DAC 회원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특히, 유엔산림전략계획과 지구산림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엔 환경 분야 협약과 연계
- 산림분야 국제협력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통해 범지구적 합의 도출에 기여
- 산림분야 국제개발협력은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과 산림 의제를 연계시키며 확장성이 발견되고 있음
- 즉, 산림협력을 이행하는 데 있어 산림 자체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짐

〈표2〉산림분야 국제개발협력 주요 의제 및 연계성 현황

지구 산림목표	주요 의제	연계성 방안		
		SDGs	국제 파트너십	주요 공여기관
Goal 1	기후변화 해결	SDG 13(기후변화)	유엔산림포럼 기후변화협약	노르웨이, 독일 등
Goal 2	생계유지 기여	SDG 2(식량안보) SDG 6(깨끗한 물) SDG 8(경제성장)	유엔산림포럼 생물다양성협약	스웨덴, 핀란드 UN 등

Goal 3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SDG 7(에너지)	유엔산림포럼 생물다양성협약	프랑스, 영국 등
Goal 4	산림관리를 위한 자원 확보	SDG 1(빈곤종식) SDG 3(보건의료) SDG 8(경제성장) SDG 17(파트너십)	유엔산림포럼	UN, EU 기관 등
Goal 5	거버넌스 강화	SDG 2(식량안보) SDG 7(에너지) SDG 11(도시발전) SDG 16(평화)	유엔산림포럼	UN, EU 기관 등
Goal 6	파트너십 강화	SDG 5(성 평등) SDG 11(도시발전) SDG 12(소비 및 생산) SDG 17(파트너십)	유엔산림포럼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UN, EU 기관 등

*자료: UN(2019). *GLOBAL FOREST GOALS AND TARGETS OF THE UN STRATEGIC PLAN FOR FORESTS 2030*. New York: UN.

나. 대북지원 사례

- 이러한 특성은 국제사회의 산림분야 대북지원을 통해서도 나타남
- 북한에 임농복합경영이 도입된 2003년을 기준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산림지원에서도 산림 의제와 다른 의제와의 연계를 통한 확장에 초점을 맞춤
- 북한에서의 임농복합경영은 스위스 개발협력청(SDC)과 UNDP가 함께 시범농장을 운영한 것이 시초이며, 본격적인 시행은 2003년 시범사업이 착수되며 이루어졌음(김경민 외 2019)
- 임농복합경영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생물다양성협약(CBD) 등의 다양한 국제 파트너십과 연계되며 다양한 지역에서 산림보호와 함께 농업 생산성 제고, 식량안보 확보 등의 의제와 함께 논의 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번(빈곤퇴치), 2번(기아종식), 5번(양성평등), 15번(육상생태계 보존) 등의 달성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이루어짐
-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12월 까지 이루어진,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임농복합경영 지원 사업 (Technical support for agroforestry development in lowland landscapes for improved food security)은 FAO가 40만 달러(한화 약 4억 5천만 원)를 지원하였고 11개의 시범모델을 개발 하며 양묘장을 조성, 약 180만 개의 묘목(seedling)을 생산하였고 약 14만 그루의 나무를 심음
- 임농복합경영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
- 이 외에도 FAO는 개별국가와 협력하여 대북 산림지원을 계획하였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스웨덴 개발협력청(Sida)과 협력하여 북한의 산림경관복원 사업(Forest and Landscape Restoration)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40만 달러(한화 약 4억 5천만 원) 미만의 예산을 투입(FAO 2019)

- 산림경관복원 사업은 산림황폐화로 인한 생계 및 식량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산림 조성을 통한 빈곤퇴치에 기여
- OECD DAC 회원국의 경우, 스위스는 지속적인 대북 산림지원을 이행
- 경사지 관리를 통한 임농복합경영을 추진하였으며, 산림 조성을 통해 식량안보 확보를 도출에 초점
- 스위스의 대표적인 대북지원 사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 8년 간 총 478만 프랑(한화 약 59억 원)을 지원하여 산림 관련 의제를 식량안보, 기후변화, 환경 등과 연계하여 확장

〈표3〉국제사회의 산림분야 대북지원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액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임농복합경영 지원 사업 (Technical support for agroforestry development in lowland landscapes for improved food security)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2016.8- 2018.12	40만 달러 (USD)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 (Forest and Landscape Restoration Mechanism)	스웨덴 개발협력청 (Sida) 및 FAO Multi-Partner Support Mechanism	2016- 2018	40만 달러 (USD) 미만
경사지 관리 (Sloping Land Management)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2013.1 - 2014.12	897,000 프랑(CHF)
북한 임농복합경영 전략 (DPRK: ICRAF: Natl. Agroforestry Strategy)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2014.2- 2015.12	160,000 프랑(CHF)
경사지 관리 (Sloping Land Management)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2015.4- 2017.3	1,213,000 프랑(CHF)
지속가능한 생계 및 재난 완화 (Sustainable Livelihood and Disaster Mitigation)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2017.2- 2020.12	2,510,000 프랑(CHF)

자료: FAO, Sida, SDC 자료를 토대로 정리.

III. 산림협력 사례

1. 남북 정부 간 협력 사례

본 절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산림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0년 6월 15일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산림협력의 기본틀이 만들어졌다. 이후 우리 정부는 산림협력을 위해 북한과 여러차례 회담을 통해 합의서, 합의문, 공동보도문 등 여러가지 합의를 했다.

남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합의서, 합의문, 공동보도문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구분된다. 합의서의

경우, 남북이 상호 간 합의사항을 공식적으로 합의한 문서로, 체결된 합의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 또는 공포하며,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한다(통일부, 2015). 일반적으로 합의문이나 공동보도문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만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지만, 남북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문서라는 것은 분명하다(안득기,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 분야에 대해 남북이 합의한 합의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산림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서’는 합의서, 합의문, 공동보도문으로, 남북 회담에서 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문서를 총칭한다. 남북산림협력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의 남북산림협력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남북산림협력에 관한 기존의 추진현황과 한계를 검토하고 남북산림협력 발전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 남북산림협력 현황

1)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제 4항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¹⁶²⁾ 정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00년에 3회, 2001년 3회, 2002년 14회 등 총 20차례의 경제분야 회담을 개최했다.¹⁶³⁾ 이 중 남북산림협력과 관련된 회의는 총 2회 진행했다. 그 결과 1개의 합의문과 1개의 공동보도문을 도출해 냈다.

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됐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회의에 임했다. 정부는 임진강수해방지 사업을 위한 공동조사를 10월 중 실시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9월 중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¹⁶⁴⁾ 그러나 북한은 임진강수해방지 공동조사가 빠른 시일 내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실무협의회 회의는 경의선 임시도로 완공이후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진강 상류 기상 수문 자료를 우리정부에 통보하고, 임진강 유역 치산치수를 위한 묘목 제공을 요청했다. 남북 북은 수차례 접촉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율한 결과 남과 북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 중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10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했다.¹⁶⁵⁾

162) 『6.15 남북공동선언』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163) 통일부, 『통일백서 2003』(서울: 통일부, 2003), p. 89.

164) 통일부(2003), pp. 90-91.

16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 3.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홍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북측은 남측에 임진강 상류의 기상 수문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해 주며 남측은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북측에 제공한다.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나.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2002년 10월 30일부터 2002년 11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됐다.¹⁶⁶⁾ 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정부는 11월 중으로 임진강수해방지를 위한 현지조사를 학수해 2003년 6월 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임진강 유역현황에 대한 자료를 교환하고자 했다. 더불어 임진강 상류지역의 기상·수문자료 제공과 묘목제공의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조림지역의 토양 등에 대한 공동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현지조사를 공동조사와 단독조사로 분류해 공동조사는 남북공동으로 상대방지역을 조사하고, 이후 조사는 자신의 지역을 각자 조사하는 단독조사를 주장했다. 또한 묘목제공에 대해서는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우리 정부에서 제공하고 그 중 일부를 11월 중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남과 북은 공동조사문제, 기상·수문자료 통보문제, 홍수예보시설 설치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은 조율됐었다. 하지만 묘목제공 문제와 관련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합의서 대신에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의를 종료하게 됐다.¹⁶⁷⁾

2) 노무현 정부

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는 2004년 3월 2일부터 2004년 3월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정부와 북한은 임진강수해방지 사업은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를 채택한 후 회의를 종료했다. 또한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게 됐다.¹⁶⁸⁾

166)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성공단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동시에 개최됐다. 따라서 10월 중 개성에서 개최한다는 것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사항을 남북간 협의를 통해 평양으로 개최 장소를 변경해 진행됐다.

167) 통일부(2003), p 116. 한편, 묘목제공과 관련해 우리정부는 공동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묘목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합의한 후 구체적인 제공시기,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정부의 묘목제공이 어렵다면 현재 북한의 임진강 유역 10개 시·군 지역에 설치돼 있는 양묘장 운영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서로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168)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당면 대책을 문서교환으로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한 쌍방지역의 현지조사를 2004년 4월부터 진행한다.
 - ① 현지조사는 단독조사와 공동조사로 나누어 진행하되 단독조사는 2004년 4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며 단독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안으로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 ② 단독조사는 조사항목이 확정되는 데 따라 각기 자기측 지역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그 결과를 상호 교환하고 공동조사시에 확인한다. 남과 북은 단독조사 착수 10일전에 북측은 기상·수문 등 남측이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며, 남측은 3개월간 북측의 단독조사 가능한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고 홍수예보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상수문망 형성 및 통보체계수립안을 통보한다.
 - ③ 공동조사는 각기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전문가, 지원인원 등을 포함하여 15명 범위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사전합의된 쌍방지점들을 북측지역과 남측지역 순서로 각각 7일 동안 현지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남과 북은 공동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자기측 지역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공동조사 착수 전에 해결하도록 하며 조사와 관련한 자료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지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채택된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후속조치로 진행됐으며, 2004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됐다.¹⁶⁹⁾ 이번 회의에서는 단독조사 항목, 북한의 사전자료 제공목록, 우리정부 측의 현지 조사용 기자재 제공 목록, 홍수예보시설 설치와 관련한 통보체계 등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남북은 수석대표접촉과 실무대표접촉 결과를 토대로 2개항의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다.

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는 2005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남북간 농업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협력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안 등을 제시했다.¹⁷⁰⁾ 또한 남북 당국간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협력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공동영농단지 조성, 산림녹화 협력사업, 농업 전문인력 및 기술교류, 남북 상호보완적 협력사업 공동연구 등의 협력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북한은 이 회담이 농업분야에서 당국간 처음 진행되는 회담인 만큼 우선 농업협력사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 내용부터 협의·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종자 생산·가공·보관시설 현대화 및 육묘 공업화, 비료·농약·농기계 등 물자 및 시설 제공, 축산·과수·잠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주장했다. 특히 우리정부가 남북공동 협력사업으로 제기한 남북공동영농단지 조성·운영 방안이 양측간 핵심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북한은 동사안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독립조항으로 요구한 ‘현대적인 종자생산 및 가공·처리·보관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수용하지만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적 협동농장 조성·운영’과 ‘우리측의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지역을 방문할 것’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간 진행된 회담에서 우리정부와 북한은 전체회의 2회와 위원장 접촉 2회 및 위원접촉 4회 등 총 8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끝에 시범적 협동농장 운영, 농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7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으로 채택하게 된다.¹⁷¹⁾

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은 2007년 11월 14일

2. 남과 북은 현지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협의회에 제출하며, 실무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홍수예보시설 설치 및 묘목 제공 등 구체적인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보고한다.

3.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69) 통일부, 『통일백서 2005』(서울: 통일부, 2005), p. 67.

170) 통일부, 『통일백서 2006』(서울: 통일부, 2006), p. 70.

171) 통일부(2006), p. 70.

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됐다. 제1차 남북총리회담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행하기 위한 후속 회담으로써, 산림협력에 관한 내용 역시 다루어졌다.

남북총리회담에서 나타난 산림협력에 관한 합의 내용은 경제협력의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부분에서 산림분야가 다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이며, 합의를 도출하며 남북산림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는 2007년 남북정상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전체회의 2회, 위원장 및 위원급 접촉과 분야별 실무접촉을 병행하며 구체적인 합의문을 도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산림 분야의 경우,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와 함께 다루어졌으며, 양묘장 조성 및 이용,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생태계보존과 환경오염저감 등 환경보호 협력의 적극적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지난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사업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했으며, 환경오염 저감, 생태계 보호 등 산림과 관련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2008년부터 산림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바.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는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 및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남북산림협력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우선, 남과 북은 양묘생산능력과 조림능력강화를 위한 산림녹화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당면하여 사리원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2008년 3월 중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산림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조사와 구제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남측이 농약, 설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2008년 상반기 중 개성 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며, 남북산림협력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다.

3)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핵·미사일 위협 등 북핵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¹⁷²⁾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는 북한이 두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하기도 했다.¹⁷³⁾ 2017년 6월 30일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이 최우선 순위임을 확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72) 통일부, 『통일백서 2018』(서울: 통일부, 2018), p. 14.

173) 통일부(2018), p. 17. 문재인 정부(2017) 당시 북한의 주요 도발 및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다.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 재개를 지지했다.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6일 독일 쾰른 재단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인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다.¹⁷⁴⁾ 베를린 구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이며, 핵과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하고 있음을 말했다.¹⁷⁵⁾

베를린 구상 등을 문재인인의 한반도정책으로 정리하여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비전으로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회담 등에 임하고 있다.

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 27일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과 오후 2차례 회담과 만찬을 진행했다. 남북은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했다. 또한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을 발표하였고, 이는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와 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를 합의했다. 이후 정상회담의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북측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¹⁷⁶⁾

문재인 정부(2017년) 출범 전후 북한의 주요 도발 및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날짜	주요내용
2.12.	북한, ‘북극성-2형’탄도미사일 발사
5.14.	북한, ‘화성-12형’탄도미사일 발사
5.21.	북한, ‘북극성-2형’탄도미사일 발사
6.2.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56호 채택
7.4.	북한, ‘화성-14형’탄도미사일 발사
7.28.	북한, ‘화성-14형’탄도미사일 발사
8.5.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8.29.	북한, ‘화성-12형’탄도미사일 발사
9.3.	북한, 6차 핵실험 실시
9.11.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9.15.	북한, ‘화성-12형’탄도미사일 발사
11.6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
11.29.	북한, ‘화성-15형’탄도미사일 발사
12.11.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
12.22.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174) 통일부(2018), pp. 14-15.

175) 통일부(2018), p. 15.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다음과 같다.

-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험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중략)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입니다.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어려워졌습니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략)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벽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176)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 p. 1.

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은 2018년 6월 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 수석대표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와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10.4선언의 협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다. 10·4 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 산림협력분과회의, 오는 가을 북측 예술단 남측 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개최날짜와 장소를 차후 문서교환을 통해 확정하자고 합의했다.¹⁷⁷⁾

남북의 산림협력은 1999년부터 양묘장 지원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작했으나,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이 되었다. 2015년 재개되었으나, 201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다시 중단됐다.¹⁷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후속 회담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으로 2016년부터 끊어진 남북산림협력의 재개를 도모했다.

다. 제1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제1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은 2018년 7월 4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되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이 진행되었다.¹⁷⁹⁾ 양묘장 현대화와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 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상호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상호 협력과 산림 조성과 보호와 같은 산림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합의하였다.¹⁸⁰⁾

라.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은 북측 평양에서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다. 2018년 9월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냈다. 남과 북이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을 바탕으로 하여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는데, 여기서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적극 추진 및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¹⁸¹⁾

마.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제2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은 2018년 10월 22일 북측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개최된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은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진행 및 북측 양묘장 현대화를 위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으며, 산불방지 공동대응과 사방사업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과학기술 공동토론회 개최 등을 협의할

177) 통일부,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 설명자료 p. 2.

178) 통일부, p. 7.

179)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2018.07.04.)

180)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2018.07.04.)

181) 9월 평양공동선언(2018.09.19.)

것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¹⁸²⁾

2. 해외 및 국내 민간단체 주도 협력 사례

1) 해외민간단체 협력

가. 개요 및 배경

- (배경) 북한은 생산에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로서 산림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에너지부족, 식량부족 등의 문제는 소위 북한 산림의 ‘민등산’ 현상을 일으키고 있음
- 이러한 산림황폐화 현상으로 인해 북한은 지속적으로 ‘산림복구전투’ 등 산림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중이나,
- 경제난 -> 에너지부족 -> 산림황폐화의 악순환고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 따라서, 북한의 산림복원을 위한 협력은 매우 중요, 다만 남북 산림협력은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산림협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에 관련 사례를 탐구하여 남북 산림 협력의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나. 방법

- o 기본적으로 UN OCHA(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FTS(Financial Tracking Service, 재정추적서비스)를 활용하여 국제사회 각 주체별 대북협력 현황을 파악
- o 협력내용 중 환경 및 산림협력 사례를 특정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주체, 구체적 내용 등 심층조사 실시

다. 결과

- o 환경 및 산림협력 개요
 - 김정은 집권 이후 현재까지 총 16번의 대북 환경 및 산림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우리나라의 지원을 제외한 총 15번의 국제 대북협력 진행

연번	지원연도	지원주체	기관
1	2021	스위스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2	2021	스위스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3	2021	스위스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4	2020	스위스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5	2020	대한민국	국제적십자사 북한

182)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2018.10.22.)

6	2020	스위스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7	2020	스위스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8	2020	독일	German Red Cross
9	2019	스위스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10	2019	독일	German Red Cross
11	2019	독일	Deutsche Welthungerhilfe e.V. (German Agro Action)
12	2019	독일	Deutsche Welthungerhilfe e.V. (German Agro Action)
13	2015	스웨덴	Concern Worldwide
14	2015	스위스	Private (individuals & organizations)
15	2015	스웨덴	Concern Worldwide
16	2012	노르웨이	Norwegian Red Cross

- (지원국가) 15회 중 스위스가 8회 지원으로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독일(4회), 스웨덴(2회), 노르웨이(1회) 순
- (지원주체)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개발협력청, 독일은 저먼 아그로액션, 독일적십자가 주도적인 기관으로 운영했으며, 그 외 컨선월드와이드 등 국제 NGO가 운영주체로 참여

o 환경 및 산림협력 내용

지원연도	지원주체	기관	지원내용
2021	스위스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황해남북도 홍수에 대응한 지속적 생계 및 재해위험감소 프로그램(Sustainable Livelihood and Disaster MitigationProgramm)
2021	스위스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황해남북도 홍수에 대응한 지속적 생계 및 재해위험감소 프로그램(Sustainable Livelihood and Disaster MitigationProgramm)
2021	스위스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CFPA(방재기관협회로 파악됨) 평양
2020	스위스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지속적 생계 및 재해위험감소 프로그램(Sustainable Livelihood and Disaster MitigationProgramm)2020년
2020	스위스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황해남북도 홍수에 대응한 지속적 생계 및 재해위험감소 프로그램(Sustainable Livelihood and Disaster MitigationProgramm)
2020	스위스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황해남북도 홍수에 대응한 지속적 생계 및 재해위험감소 프로그램(Sustainable Livelihood and Disaster MitigationProgramm)

2020	독일	German Red Cross	재난위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2019	스위스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지속가능 생활 및 재난 완화
2019	독일	German Red Cross	재난 감소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2019	독일	Deutsche Welthungerhilfe e.V. (German Agro Action)	평안남북도, 강원지역 등 농촌지역의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인도주의지원
2019	독일	Deutsche Welthungerhilfe e.V. (German Agro Action)	평안남북도, 강원지역 등 농촌지역의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인도주의지원
2015	스웨덴	Concern Worldwide	농촌지역 식수 및 환경보호
2015	스위스	Private (individuals & organizations)	경사진 구역의 농산물 보호능력 향상
2015	스웨덴	Concern Worldwide	농촌지역 식수 및 환경보호
2012	노르웨이	Norwegian Red Cross	기후변화에 적응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 다만, 인도주의적 지원만을 추적하는 시스템인만큼, 대부분이 홍수 및 태풍 등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관련 내용인 것으로 파악
- 해당 리스트에서 2015년 스위스의 개별 단체 및 개인이 지원한 ‘경사진 구역의 농산물 보호능력 향상’ 지원이 관련 협력사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조사 시도했지만, 관련자료 부족으로 구체적인 사항 확인 불가

라. 한스자이델재단의 대북환경협력

- 독일 정치재단인 한스자이델의 대북환경협력 사례를 대안으로 조사

o 한스자이델재단 배경

- 1967년 설립되었으며, 정치교육 및 민주주의 교육 등을 진행하는 독일의 정치재단으로, 독일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1987년부터 활동 실시
- 북한 관련 활동은 2003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 경제역량 강화 프로그램, 무역 등의 분야의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
- 최근에는 환경분야에 집중하여 국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진행중에 있음

o 한스자이델재단의 대북 환경협력

- 2009년부터 역량강화를 중점으로 대북 환경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평양과 라선지역에서 우선 실시
- 2014년부터는 EU의 지원을 받아 “지속가능한 임업 훈련센터 설립을 통한 시골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한스자이델재단 자체 재원을 통한 산림협력 지속중

- 2015년부터는 “북한 습지의 이용 및 보존”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현재 진행중
- 문덕, 온천, 금강산, 통천, 금야만, 라선 등의 지역에서 람사르 습지 관련 서베이 및 생물다양성 관련 활동 진행중



그림 2016년 국토환경성 워크숍



그림 2011년 해외 트레이닝 프로그램

- 앞서 말했듯 한스자이델은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대북협력 프로젝트 진행중으로 신뢰구축을 통한 해외 트레이닝, 학생교육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

마. 시사점

○ 역량강화

- 단순한 일회성 지원프로그램보다 북한의 환경보호 및 산림복구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의 프로젝트 추진 필요
- 현 정부의 그린뉴딜 프로젝트로 토대로 산림청, 과기정통부와의 협력프로그램 추진 가능성 모색 필요

○ 인도적지원

- 북한의 재난 및 재해등으로 인한 복구사업 등 관련 인도적지원 필요성 지속 추진 및 가능 방안 모

색 필요

-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직접지원이 아닌 해외기구를 활용한 우회적 지원 가능성 모색(스위스 개발협력청, 독일 아그로 액션, 한스자이델 등)

2) 민간단체 대북 산림협력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산림복구 지원 활동은 ‘평화의 숲’이라는 민간단체가 1999년부터 지원하면서 시작하였다. 산림복구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7년에는 약 20여 개 민간단체가 연계하여 만든 ‘겨레의 숲’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현재까지 약 1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진행되었다.¹⁸³⁾

민간단체의 산림협력 주요 분야

양묘사업 : 북한의 자립적 양묘 생산기반인 양묘장 건설·운영 지원 및 기술 전수, 노지양묘와 시설양묘로 구분해 실시, 종자관리시설 건립

조림사업 : 황폐산지 복구를 위한 조림 및 사방조림사업 시범실시, 시범단지 조림, 유실수단지 운영, 북한산림 생태조사, 남북공동나무심기 행사 등 추진

산림병해충방제사업 : 건전 생태계 회복 및 산림황폐화 확대 저지

국민 참여 확대사업 : 남북 공동 나무심기 행사와 국민캠페인, 모금 실시 ¹⁸⁴⁾

〈표 69〉 양묘장 현대화 및 생산능력 제고 사업

연도	지역	추진경과/ 지원 내용	사업결과	주체
2003년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온실 1동 증축, 전력시설 보수 및 양묘자재 지원	낮, 낙엽송, 해송 파종 및 이식 양묘온실 1동 신축(495㎡) 및 태양광발전 시설 보수 양묘현황 점검 및 지도(8회)	평화의숲
2005년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시설조성, 양묘물자 지원, 기술지도	부지 3ha 노지 2ha 온실 300평 태양광, 관정, 관리시설	평화의숲
2007년	개성시 개풍군	3월 : 물자전달, 관리동 및 전력시설 공사 진행 5월 : 준공식 진행	관리동 건축, 전력시설 조정 파종: 잣, 밤 등 2,300kg 유묘식재: 상수리, 자작 28만 본 준공식, 남측 200명 참가, 공동식수 진행	우리민족 서로돕기

183) 김중선 외, “북한 환경기술 연구 현황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방안”, 정책연구 (2014) p.70.

184) 안선경, “겨레의 숲의 대북 산림협력사업-추진 과정과 과제”, 북한농업동향 제12권 제4호(2011), p. 4.

	함북 회령시	4월 : 복측 자체로 파종 실시 10월 : 양묘현황 점검	파종: 낙엽송, 속성성장 백양, 아카시아, 기름밤나무 등	겨레의숲
	평양 순안	시설조성, 양묘물자 지원, 기술지도	부지 10ha 노지 9ha 온실 600평, 태양광, 관정, 관리시설	겨레의숲
2008년	황해북도 중화군	시설조성, 양묘물자 지원, 기술지도	부지 12ha 노지 10ha 온실 600평, 태양광, 관수, 관리시설	겨레의숲
	황해북도 상원군	시설조성, 양묘물자 지원, 기술지도	부지 10ha 노지 9ha 온실 600평, 국선활용, 관수, 관리시설	늘푸른삼천
	개성시 개풍	시설조성, 양묘물자 지원, 기술지도	부지 6ha 노지 5.5ha 온실 300평, 태양광, 관정, 관리시설	우리민족 서로돕기, 경기도
	함북 나선시	6월 : 지원물자 전달 및 양묘 온실 시설공사 10월 : 양묘현황 점검	양묘온실건축자재 및 양묘 자재 지원	겨레의숲
2009년	평양시 상원군	2월 : 실무접촉, 합의서 작성 3월 : 현지답사 및 조성계획 협의, 지원 물자 반출 5~6월 : 기술진 방북, 공동으로 온실 및 관리동 시설공사 진행 10월 : 준공식 진행	파종: 상수리, 밤 1,000kg 시설조정 : 온실 2동, 관리사 1동 준공식, 남측 60여명 참가	늘푸른삼천
	평양시 삼석구역	2월 : 실무접촉, 합의서 작성 3월 : 현지답사 및 조성계획협의 7~8월 : 지원물자 반출 9월, 기술진방북, 공동으로 온실 및 관리동 시설공사 진행 9월, 착공행사 진행	부지 10ha 노지 9ha 온실 300평, 태양광, 관정, 관리시설 양묘온실, 관리동 건축 착공행사, 남측 100여명 참가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
	함경북도 나선	양묘물자 지원	부지 12ha/ 온실 120평	겨레의숲
	함경북도 회령	양묘물자 지원	부지 15ha/ 온실 120평	겨레의숲

*“북한 환경기술 연구현황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방안”, “(사)겨레의 숲 활동 성과와 과제”(내부자료)를 취합해 재구성한 내용.

〈표 70〉 조림사업

연도	지역	추진경과/ 지원 내용	사업결과	주체
2007년	금강산	5월 : 사업협의 6월 : 조림설계 조사	시범조림 67ha (금강산 양묘장 생산묘목 23만 본 활용-소나무, 잣나무 등) 고성군 50km 조림설계조사 협의	평화의 숲

	개성지역	개성: 3월, 묘목 지원	개성지역 100여ha 조림 (물푸레, 백합 등 17만 본 조림)	우리민족 서로돕기
	개성지역		묘목지원 40ha 물량 (12만 본)	사랑의연탄 나눔운동
2008년	금강산	3~4월 : 100ha전지전정, 관리 작업, 40km 식재지 준비 및 신규조림 5월~8월 : 도로포장 및 병해충 방제작업	밤나무단지 130ha 조성 100ha 관리 작업(전지전정, 보식, 병해충방제) 신규 40ha 조림지준비, 묘목 식재 조림지 현황 점검 및 지도(20 회) ¹⁸⁵⁾	평화의 숲
2008년	개성지역		묘목지원 100ha 물량 (물푸레, 백 합 등 17만 본 지원)	우리민족 서로돕기
2009년	평양 용악산 등		시범조림 100ha (상수리, 잣나무 등 30만 본 지원)	겨레의 숲
2009년	개성지역		묘목지원 75ha 물량 (잣나무, 백합 등 등 25만 본 지원)	우리민족 서로돕기
2010년	황해북도		묘목지원 250ha 물량 (소나무, 잣 나무, 아까시, 오리나무 등 78만 본)	겨레의 숲
2014년~ 2017년	평안남도 대동 군 상서리 대동 학술림 중심	종자, 묘목, 비료, 휴대용 토양분석기, 양수 펌프, 그늘막 등 지원 대동학술림 경영 과정 에서 현지 담당자가 양묘장을 직접 관리 및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2016년 단나무(아로니아) 1t 수확 해 지역 주민과 분배	한스자이멜재 단

*“북한 환경기술 연구현황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방안”, “(사)겨레의 숲 활동 성과와 과제”(내부자료),
“남북한 산림협력 방향과 과제”를 취합해 재구성한 내용.

〈표 71〉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연도	추진 경과	사업결과	주체
2007년	현장방문 3회 (피해조사 1회, 공동 방제 1회, 방제결과 확인 1회) 물자 지원 2회	방제 지역 : 용악산, 대성산, 력포구역 등 약제 지원 : 솔잎혹파리 140ha, 잣나무넓적잎 벌 1,000ha 방제 방제 효과 : 임목고사율 40% 이상 감소	겨레의숲, MBC
2008년~ 2009년	현장방문 4회 (현장조사, 방제지도 및 결과 확인) 물자지원 4회	방제지역 : 용악산, 력포구역 등 약제 지원 : 솔잎혹파리 3100ha, 솔나방, 잣나 무넓적잎벌 1,000ha 방제 방제효과 : 확인된 곳은 임목고사율 30% 이상 감소	겨레의숲, MBC

185) 추후 확인 필요

IV. 산림협력의 한계 및 과제

1. 국제정치적 상황의 한계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다. 정치경제적 압박을 통해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대북제재는 UN, EU, 미국, 한국 등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행되고 있다. 대북제재는 본래 무기 개발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품목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포괄적 제재로 전환되어 북한산 물품의 수입 및 북한 노동자의 해외 근로 역시 제한되고 있다.

대북제재가 산림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비 유통과 관련되어 있다. 산림 산업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산림협력에 필요한 장비들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은 제재 위반 사항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남북회담에서도 산림협력 이행에 관한 큰 기대로 이어지지 않았다.¹⁸⁶⁾ 장비 없이는 원활한 산림복구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북제재는 남북산림협력에서의 주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의 양묘장 설치에 특정 지역에 집약적으로 이루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는 운송용 장비가 필요하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남측에서는 장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¹⁸⁷⁾ 전문가들 역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남북산림협력 이행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¹⁸⁸⁾

다만 이러한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남북산림협력이 추진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는 UN으로부터 개풍양묘장 조상사업에 필요한 152개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물품은 연동 및 단동용 양묘온실, 양묘기자재, 공사장비 및 작업 공구 등이며 전체 사업비는 22억7,500만원이다.¹⁸⁹⁾ 한편, 유엔은 인도적 지원에 한해 대북제재 면제 조치(Humanitarian Exemption)를 승인한다. 개풍양묘장 사업 승인 사례는 국제사회로부터 인도협력사업의 정당성을 인증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림 지원은 북한 주민의 거주지, 식량 안보 등과 연계되며 인도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향후 남북산림협력의 과제는 “어떻게 대북제재 면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제재 면제는 일반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즉, 남북산림협력과 인도적 의제 간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산림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산림협력이 다양한 분야의 발전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가령 남북산림협력은 본질적으로 SDG 15번(육상생태계 보전)과 관련되어 있지만, 산림문제 해결을 통해 빈곤 해결(SDG 1), 식량안보 강화(SDG 2), 에너지 문제 해결(SDG 7), 거주지 조성(SDG 11), 기후변화 대응(SDG 13)

186)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은 “북남 산림협력분과 회담에서 기대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187) “‘기대 갖지 않겠다’... ‘대북 제재’에 꼬이는 남북 협력”.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894285_30187.html
 (최종검색일: 2020.11.03.)

188)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제사회 제재의 틀 안에서 진행되니까 북한으로서는 남북 합의 이행속도와 협력의 범위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 밝혔다.

189) 경기도 보도자료. “남북교류협력사업 물고 트이나? ... ‘경기도 개풍양묘장 조성 사업’ 9년만 재개 가능성 열려”.

등 다양한 SDGs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SDGs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1. 지속가능성 부족 (정치적 상황에 좌우)

남북관계 경색은 산림협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실례로 과거 △2009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교류 협력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이 개최됐으나 구체적인 산림협력을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렇듯 산림협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따른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회성사업이 아닌 북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 지원돼야 한다. 2000년대 부터 남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북한 산림복구를 위해 양묘장 조성사업과 묘목 및 농자재 지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산림정보의 획득 △임업기술 교류 △향후 본격적인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한 경험축적 등에 기여했다. 그러나 산림 병해충 방제의 경우 대부분 방제약제 지원에 그쳤다. 당시 남한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산림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북한 현지관리자가 직접 산림병해충을 관리하고 방제할 수 있는 능력배양은 같이 이뤄지지 못했다. 북한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관리에 필요한 역량강화 사업이 같이 이뤄져야한다.

2. 북한 수요의 한계

북한은 앞서 살펴보았듯, 김정일 집권 시기인 1996년부터 산림과 환경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산림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담화를 통해 토지관리사업뿐 아니라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으며, 2022년까지 북한 모든 산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것을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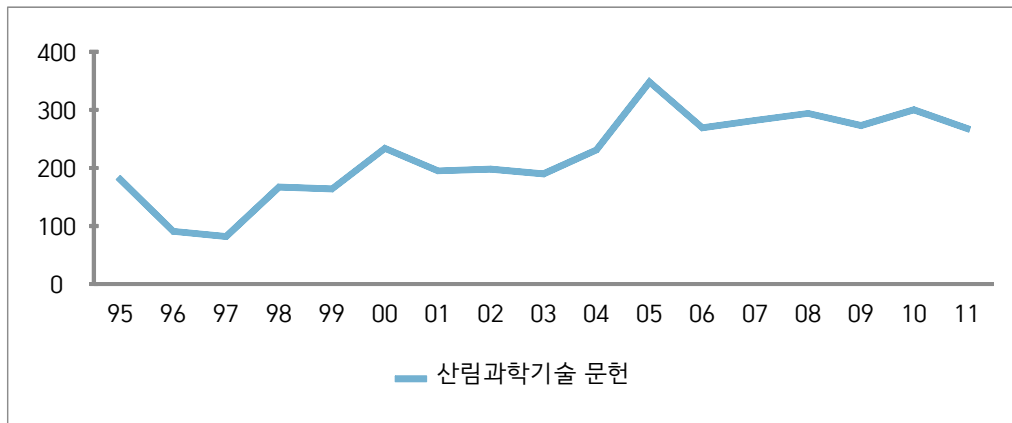
김정은 집권 시기 환경관련 정책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북한이 관광자원개발과 이용에서도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경제개발구 환경보호규정’(2014년 제정)과 ‘라선경제무역지대 환경보호규정’(2014년 제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북한은 ‘재생에네르기법’(2013년) 등을 제정하며, 환경을 보다 폭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정권 초기부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특히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다르지 않은데, 관련 문헌을 살펴본 결과 기후 및 대기, 수질 등의 분야보다도 산림분야에서 북한은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림계획뿐 아니라 산림복원, 산림보호 등 세 부분분야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2000년부터 산림과학기술에 관련한 연구문헌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북한의 「산림과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지질 및 지리과학」 등의 학술문헌을 살펴본 결과, “주요 수종들의 기후변화완화능력평가”, “동해안지대에서 몇가지 아열대수종들의 재배

가능성평가와 예측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림3] 북한의 산림과학기술 연구문헌(건)



『로동신문』에서도 북한의 산림과 관련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데, “산림복구전투승리의 새로운 진격로를”¹⁹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인 산림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¹⁹¹⁾ 등 특히 산림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기사가 다수 언급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 보호부문 일군회의 진행”¹⁹²⁾ 등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 관련 논의를 지속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북한이 UN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에 발표한 SDGs 17개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 및 계획을 정리해둔 자발적 국가리뷰(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를 통해서 역시 북한의 환경보호 및 산림과 관련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SDGs 목표 15.(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토지황폐화 방지, 생물다양성 유지)는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으로, 해당 보고서에서 북한은 ‘국가 숲 조성정책’, ‘지속가능한 숲 관리의 강화’를 계획으로 내세웠다. 특히, ‘생태계와 숲,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하이테크 연구와 지식 보급’ 역시 계획 중 하나로 언급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숲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제적이고 가치가 높은 수종의 도입을 통한 숲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산림보호를 단순히 식량난과 에너지난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보호와 토지 황폐화 방지, 생물다양성 보존 뿐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존 남북 산림협력은 ‘양묘장 조성’, ‘산림조성’ 등 식량난 및 에너지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협력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협력의 성과 없이 중단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식량 및 에너지난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두고 하나의 도구로서 과학기술의 이용에 대한 논의였다는 점에서 기존 관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북한의 수요를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남북 산림협력의 방향 역시 단순히 식량난과 에너지난의 해결

190) 『로동신문』 2019년 1월 3일 “산림복구전투승리의 새로운 진격로를”

191) 『로동신문』 2019년 2월 28일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인 산림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192) 『로동신문』 2019년 2월 15일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 보호부문 일군회의 진행”

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산림 및 녹지 복구를 통한 관광사업의 개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북한의 수요에 맞는 적절한 협력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은 ‘치산치수’라는 슬로건을 통해 평양공원의 수림화 및 원림화 등 조경수 관련 정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변화된 정책에 적합한 형태의 맞춤형 산림협력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존 협력이 단순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보다 ‘개발협력’의 측면에서 북한의 수요에 맞으며, 남북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참고문헌

- 김경민·김은희·임중빈·김명길(2019). “북한 임농복합경영 추진 현황 및 연구 동향.” 『NIFoS 국제산림정책토포픽』 서울 :국립산림과학원.
- 김태근 외. (2018). 한반도 보호지역 기초자료 구축연구. 국립공원연구원 보고서.
- 리경심 외. (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습지목록. 평양: 공업출판사.
- 문예찬·이현출. (2021). 남북 산림협력의 방향과 과제: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모색. 분쟁해결연구, 19(1).
- 박은주. (2020). 남북 환경협력의 현황과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25(3).
- 송인호·최귀일.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고찰- 북한의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 27권 제 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송정환. “김정은 시대 특수경제시대 법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 안득기. (2013).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안정성에 관한 연구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5(1), 113-142.
- 윤철남 외. (2019). 우리 나라 생물권보호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 장소영.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3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성. (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습지보호사업. RAMSAR COP 13 발표자료
- 최현아. “김정은 정권이후 환경분야 정책 변화 분석”. 『신진연구자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서울: 통일부. 2019.
- 최현아. (2018). 남북한 산림협력 방향과 과제: 국제사회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통일정책연구, 27(2).
- 최현아. (2019a). 김정은 시대 환경관련 활동과 협력 방안: 습지 생물다양성 보전 대내외 활동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8(2).
- 최현아. (2019b). 김정은 정권이후 환경분야 정책 변화 분석.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통일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 설명자료.
- 통일부. (2015). 남북회담 용어집.
- 통일부. 『남북회담 용어집』. 서울: 통일부. 2015.
- 통일부.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3.
- 통일부.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5.
- 통일부.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6.
- 통일부.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8.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 한상운. “북한 환경법제의 최근 동향과 과제”. 『북한법연구』 제 11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2008.
- FAO(2019). Forest and Landscape Restoration Mechanism. Rome: FAO.
- SDC. “Nachhaltige Waldnutzung - Beitrag zu Klimaschutz und Armutsreduktion” Retrieved January 13, 2021, from <https://www.eda.admin.ch/deza/de/home/themen/klimawandel/>

wald-und-landnutzung.html.

Sida(2016).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Secure Food for a Growing World and end Hunger. Stockholm: Sida.

UN(2019). GLOBAL FOREST GOALS AND TARGETS OF THE UN STRATEGIC PLAN FOR FORESTS

2030. New York: UN.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합의문」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공동보도문」
-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공동보도문」
- 『로동신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 :대외경제부문』 평양: 법률출판사. 201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중보판)』 평양: 법률출판사. 2016.
- 『제1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 『6.15 남북공동선언』
- 『9월 평양공동선언』

향후 연구활용 계획

환경문제는 전 세계에서 지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국가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해결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계획들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더 나은 한반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중심으로 시작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환경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의 남북 환경 협력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추후 남북 환경 협력 연구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1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술을 넘어 실무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